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북

예산·정책분석을 위한 통계 자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 법 정 책 담 당 관]

목 차

기획행정위원회

1. 주민등록인구 ····· 9
2. 지역별 인구증감 ····· 11
3. 평균연령 ····· 13
4. 출생아 수 ····· 15
5. 합계출산율 ····· 17
6. 사망자 수 ····· 20
7. 자살률 ····· 24
8. 외국인 등록인구 ····· 26
9. 취업자 수 ····· 30
10. 인구 천 명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 ····· 32
11.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 34
12. 주민 1인당 자체수입 및 세부담 현황 ····· 38
13.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 ····· 40
14. 주민자치회 수····· 44
15. 실질 학비 순부담액 수준 ····· 46
16. 균형발전지표 ····· 49

목 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

1. 농가 규모 및 구조 ····· 55

2. 농업 경영형태 ····· 58

3. 가축사육 현황 ····· 62

4. 농가경제 현황 ····· 64

5. 2025년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 ····· 65

6. 의료분야 관련 ····· 69

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71

8. 2026년 고령자 통계 ····· 74

9. 노인장기요양 현황 ····· 77

10. 장애인 등록현황 ····· 80

11. 보육 관련 현황 ····· 82

12. 폐기물 발생 현황 ····· 85

13. 폐기물 처리 현황 ····· 87

14. 상·하수도 현황 ····· 92

목 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1. 취업자 통계 ····· 97
2. 고용률 · 실업률 통계 ····· 100
3. 상용직 비율 ····· 109
4.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110
5. 1인당 경제지표 ····· 112
6. 창업기업 및 가젤기업 통계 ····· 118
7. 시도별 제조업체 현황 ····· 122
8. 폐업 법인사업자 현황 ····· 124
9. 시도별 연구개발비 통계 ····· 126
10. 신재생에너지 생산 통계 ····· 128
11. 건설수주액 통계 ····· 131
12. 주택보급률 및 주거환경 통계 ····· 133
13. 미분양 주택 수 ····· 140
14. 도로포장률 통계 ····· 142

목 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1.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통계 ····· 147

2. 문화재 관련 통계 ····· 151

3. 안전지수 통계 ····· 155

4. 안전관리 통계 ····· 158

5. 화재관련 통계 ····· 160

6. 체육시설 통계 ····· 163

7. 자연재난 발생 현황 ····· 166

8. 지진 관련 ····· 168

목 차

교육위원회

1. 학생수 ····· 173

2. 학급당 학생수 ····· 174

3. 전북 학교의 소규모화 ····· 176

4. 교원 구성 변화 ····· 179

5. 이주배경 학생 ····· 181

6. 직업계고 ····· 183

7. 특수교육 ····· 186

8. 학생 정신건강 ····· 188

9. 학업중단 ····· 190

10. 학교 시설 ····· 192

예산·정책분석을 위한

통계 자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기획행정위원회



1. 주민등록인구

[표 1] 주민등록인구 (2000~2026.9.)

(단위: 명)

	2000년	2010년	2020년	2026년 9월	증감율 (2000~2026.9.)
전체	47,732,558	50,515,666	51,829,023	51,082,431	7.0%
서울	10,311,314	10,312,545	9,668,465	9,279,861	△10.0%
전남광주	-	-	-	3,154,398	△9.9%
부산	3,796,506	3,567,910	3,391,946	3,228,188	△15.0%
대구	2,524,253	2,511,676	2,418,346	2,345,828	△7.1%
인천	2,545,769	2,758,296	2,942,828	3,068,328	20.5%
광주	1,371,909	1,454,636	1,450,062	-	-
대전	1,385,606	1,503,664	1,463,882	1,443,122	4.2%
울산	1,040,225	1,126,298	1,136,017	1,086,077	4.4%
세종	-	-	355,831	390,585	9.8%
경기	9,219,343	11,786,622	13,427,014	13,777,186	49.4%
강원	1,554,688	1,529,818	1,542,840	1,506,701	△3.1%
충북	1,497,513	1,549,528	1,600,837	1,601,942	7.0%
충남	1,921,604	2,075,514	2,121,029	2,139,558	11.3%
전북	**1,999,255**	**1,868,963**	**1,804,104**	**1,716,229**	**△14.2%**
전남	2,130,614	1,918,485	1,851,549	-	-
경북	2,797,178	2,689,920	2,639,422	2,491,506	△10.9%
경남	3,094,413	3,290,536	3,340,216	3,190,549	3.1%
제주	542,368	571,255	674,635	662,373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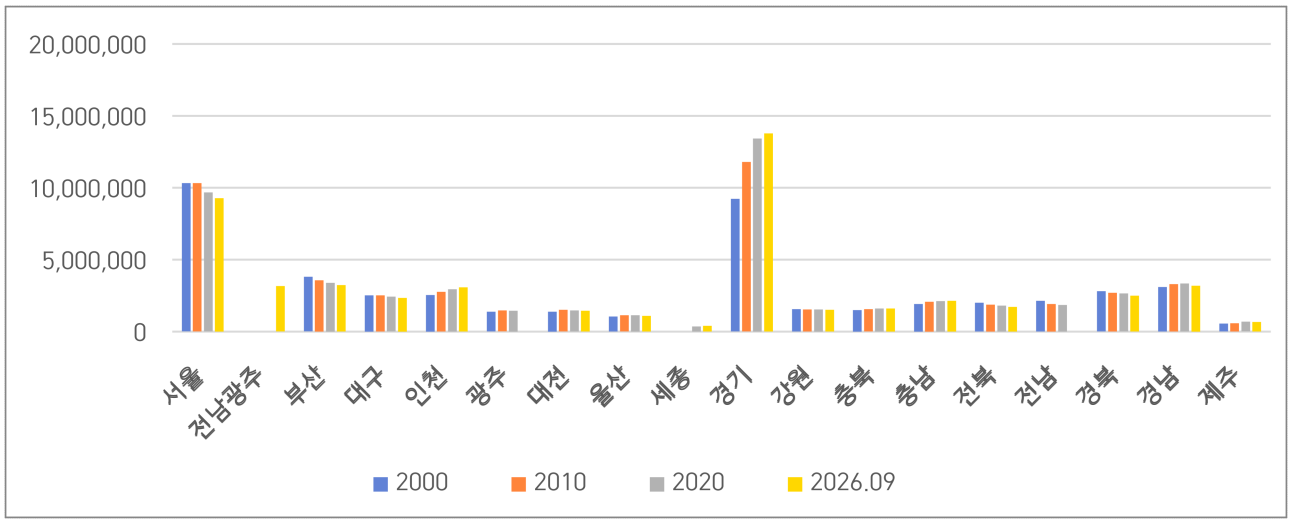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 전남광주의 2000~2026.9. 증감률(△9.9%)은 2000년 당시 광주광역시(1,371,909명)와 전라남도(2,130,614명)의 인구 합계(3,502,523명)를 기준으로 산출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증감률(9.8%)은 시 출범 이후 통계 비교를 위해 2020년 대비 2026년 9월 기준 증감률을 산출하여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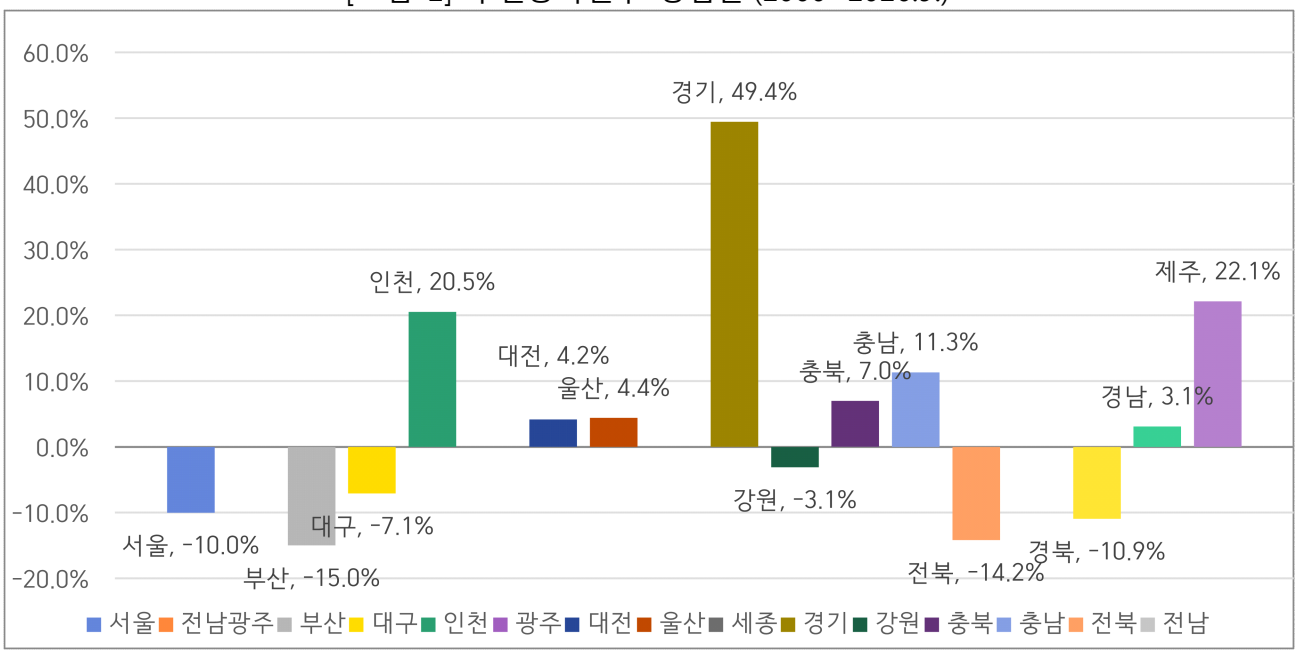
[그림 1] 주민등록인구 추이 (2000~2026.9.)

(단위: 명)



<출처: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그림 2] 주민등록인구 증감률 (2000~2026.9.)



○ **26년간 28만 명 감소, 타 시도 대비 높은 인구 감소율 기록**

- 전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00년 199만 9,255명(약 200만 명)에서 2026년 9월 171만 6,229명으로 28만 3,026명(△14.2%)이 급감하였으며, 동기간 전국 인구가 7.0% 증가(4,773만 명→5,108만 명)한 것과 정반대로 부산(△15.0%)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두 번째이자 도(道)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나타냄

○ **충청·영남권 등 타 도 지역과의 성장 격차 심화 및 전국 점유 비중 축소**

- 인접한 충남(+11.3%), 충북(+7.0%), 경남(+3.1%), 제주(+22.1%) 등 충청권·경남·제주는 증가, 강원·경북·전남은 감소를 기록한 것과 달리, 전북은 매 주기마다 약 6만~13만 명 수준으로 인구가 지속 유출·자연감소하여 전국 인구 점유율 역시 2000년 4.19%에서 2026년 9월 3.36%로 대폭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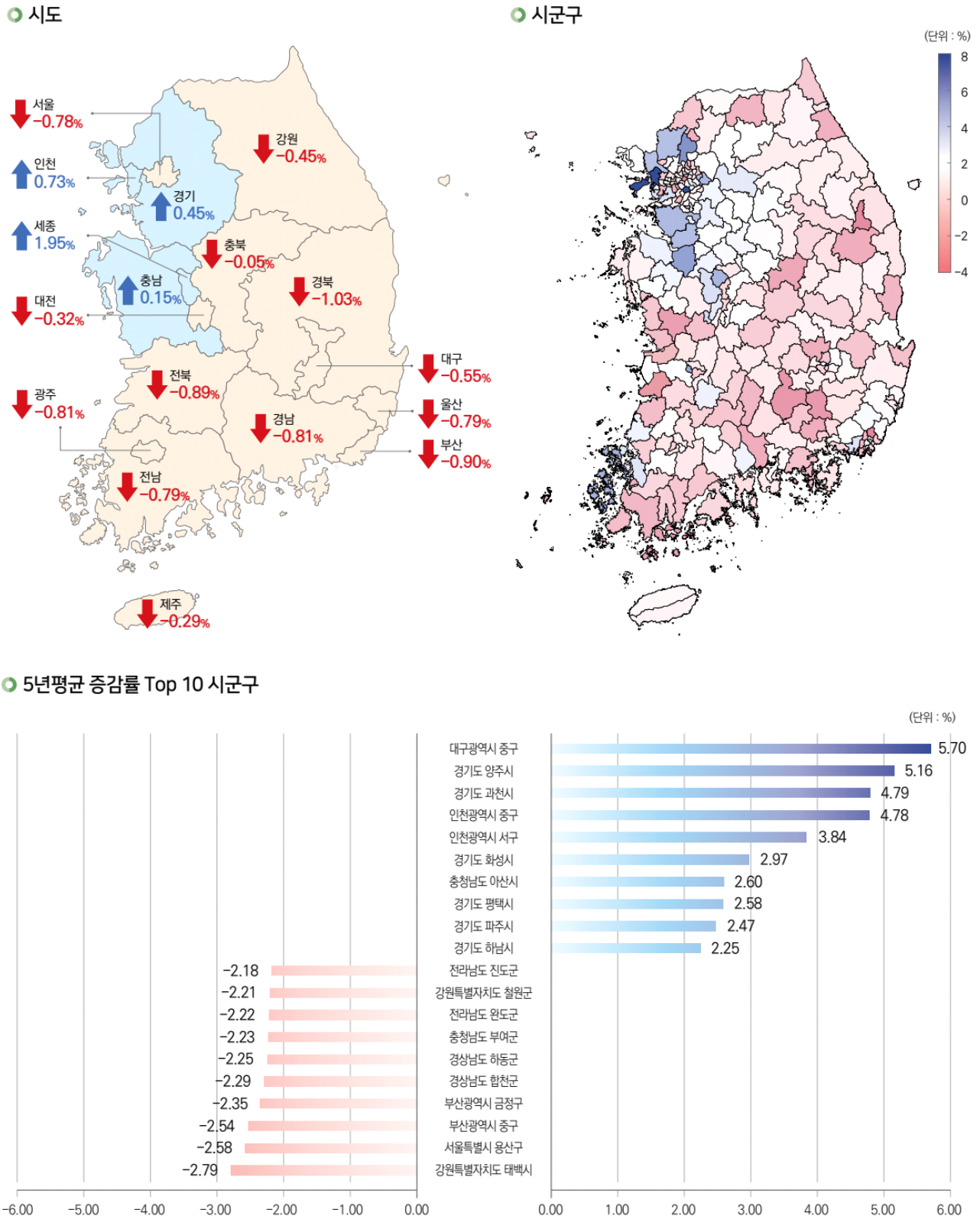
※ 전남·광주의 경우 2026년 9월 기준 '전남광주' 통합 데이터 315만 4,398명으로 단일 집계됨

○ **'170만 선 근접' 임계점 직면과 생활인구 유치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가속화되는 초고령화와 청년층 역외 유출로 인해 '170만 명' 선 근접을 목전에 두고 있음. 단순 주민등록 정주인구 늘리기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복합 산단·신산업 기반 일자리 확충 및 외국인·체류형 생활인구를 적극 유입하는 종합적 인구 방어 전략이 요구됨

2. 지역별 인구증감

[그림 3] 지역별 인구증감 (최근 5년 평균 증감률 기준)



<출처: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

[표 2] 전북 시·군별 인구수 및 증감 추이 (2000~2026.9.)

(단위: 명)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26년 9월	증감율 (2000~2026.9.)
전북	1,999,255	1,868,963	1,804,104	1,716,229	△14.2%
전주시	620,521	641,525	657,432	618,328	△0.4%
군산시	277,491	272,601	267,859	255,575	△7.9%
익산시	334,324	307,289	282,276	266,458	△20.3%
정읍시	152,022	122,000	108,508	100,531	△33.9%
남원시	103,571	87,775	80,662	73,452	△29.1%
김제시	115,865	94,346	82,450	81,522	△29.6%
완주군	84,009	85,119	91,609	100,719	19.9%
진안군	31,273	27,543	25,394	25,006	△20.0%
무주군	29,207	25,578	24,036	23,499	△19.5%
장수군	30,051	23,386	22,085	21,183	△29.5%
임실군	37,514	30,593	27,314	25,344	△32.4%
순창군	34,587	30,209	27,810	27,666	△20.0%
고창군	74,104	60,861	54,529	49,996	△32.5%
부안군	74,716	60,138	52,140	46,950	△37.2%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주민등록인구(시도/시/군/구)>

○ **도내 14개 시·군 중 완주군 유일 증가와 10만 인구 돌파 달성**

- 2000년 대비 2026년 9월 기준 도내 14개 시·군 중 완주군만 유일하게 19.9%(8만 4,009명 → 10만 719명)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며 10만 군민 시대를 공식 개막한 반면, 나머지 13개 시·군은 일제히 인구 감소세를 면치 못하는 극단적인 시·군 간 성장 양극화가 나타남

○ **익산·군산 등 주요 거점도시의 대규모 인구 유출과 전북 중심축 약화 대응 필요**

- 3대 도시 중 전주시(△0.4%)는 비교적 유지했으나, 주요 산업·교통 거점인 익산시가 26년간 6만 7천여 명(△20.3%), 군산시가 2만 2천여 명(△7.9%) 감소하며 중추 도시권의 인구 흡인력이 크게 저하된 만큼, 권역별 핵심 거점도시 육성과 취약 군 지역 생활인구 인프라 확충을 연계한 균형발전 특례 전략이 시급히 요구됨

3. 평균연령

[표 3] 평균연령 (2016~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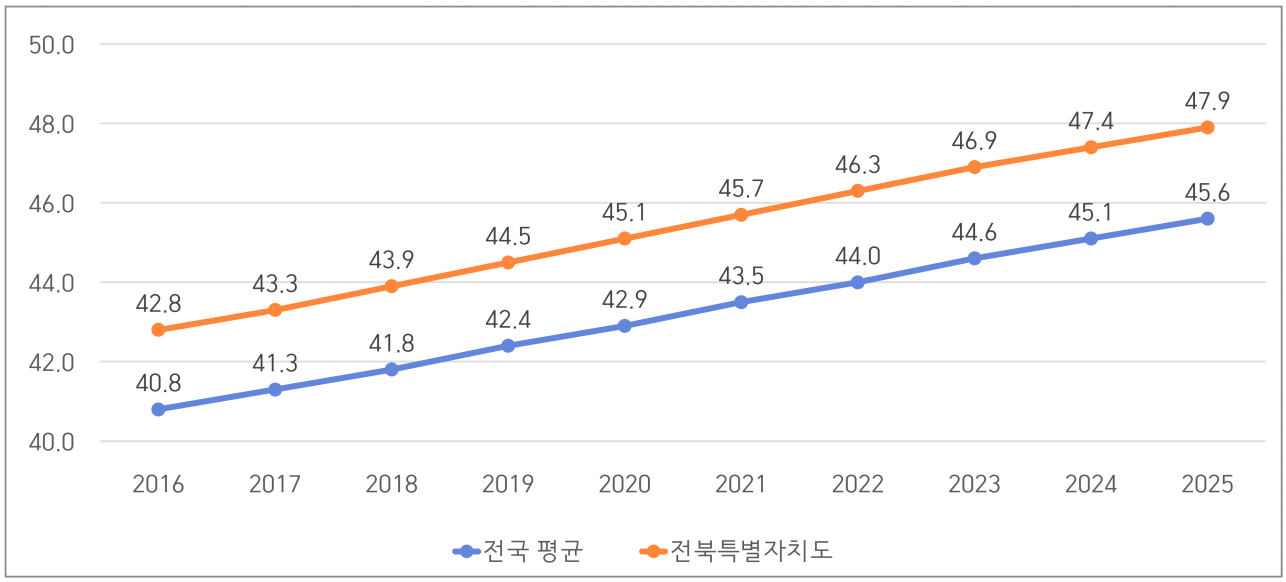
(단위: 세)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국	40.8	41.3	41.8	42.4	42.9	43.5	44.0	44.6	45.1	45.6
서울	41.0	41.5	41.9	42.4	42.9	43.4	43.9	44.4	44.8	45.3
부산	42.6	43.1	43.6	44.2	44.8	45.3	45.9	46.4	47.0	47.5
대구	41.0	41.6	42.1	42.7	43.3	43.9	44.5	45.2	45.8	46.3
인천	39.9	40.4	41.0	41.5	42.2	42.7	43.2	43.8	44.3	44.7
광주	39.1	39.6	40.1	40.7	41.3	41.8	42.3	42.9	43.6	44.2
대전	39.1	39.6	40.2	40.8	41.4	42.0	42.5	43.0	43.5	44.0
울산	38.9	39.6	40.2	40.8	41.5	42.2	42.9	43.6	44.3	44.9
세종	36.1	36.1	36.2	36.5	36.9	37.4	37.7	38.2	38.8	39.3
경기	39.3	39.8	40.3	40.8	41.3	41.9	42.4	43.0	43.6	44.1
강원	43.1	43.7	44.3	44.9	45.5	46.1	46.6	47.1	47.7	48.2
충북	41.4	41.9	42.4	42.9	43.5	44.2	44.7	45.1	45.6	46.0
충남	41.5	41.9	42.3	42.8	43.5	44.1	44.6	45.0	45.5	45.9
전북	**42.8**	**43.3**	**43.9**	**44.5**	**45.1**	**45.7**	**46.3**	**46.9**	**47.4**	**47.9**
전남	44.4	45.0	45.4	45.9	46.5	47.1	47.7	48.1	48.6	49.0
경북	43.4	43.9	44.4	45.0	45.7	46.3	46.9	47.4	48.0	48.5
경남	41.2	41.8	42.3	42.9	43.6	44.3	45.0	45.6	46.3	46.9
제주	40.4	40.8	41.1	41.6	42.1	42.6	43.1	43.8	44.4	45.1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평균연령(시도/시/군/구)>

[그림 4] 전국, 전북 평균연령 추이 (2016~2025)

(단위: 세)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주민등록인구(시도/시/군/구)>

○ **전국 평균 웃도는 가파른 고령화 속 전국 상위권(4위)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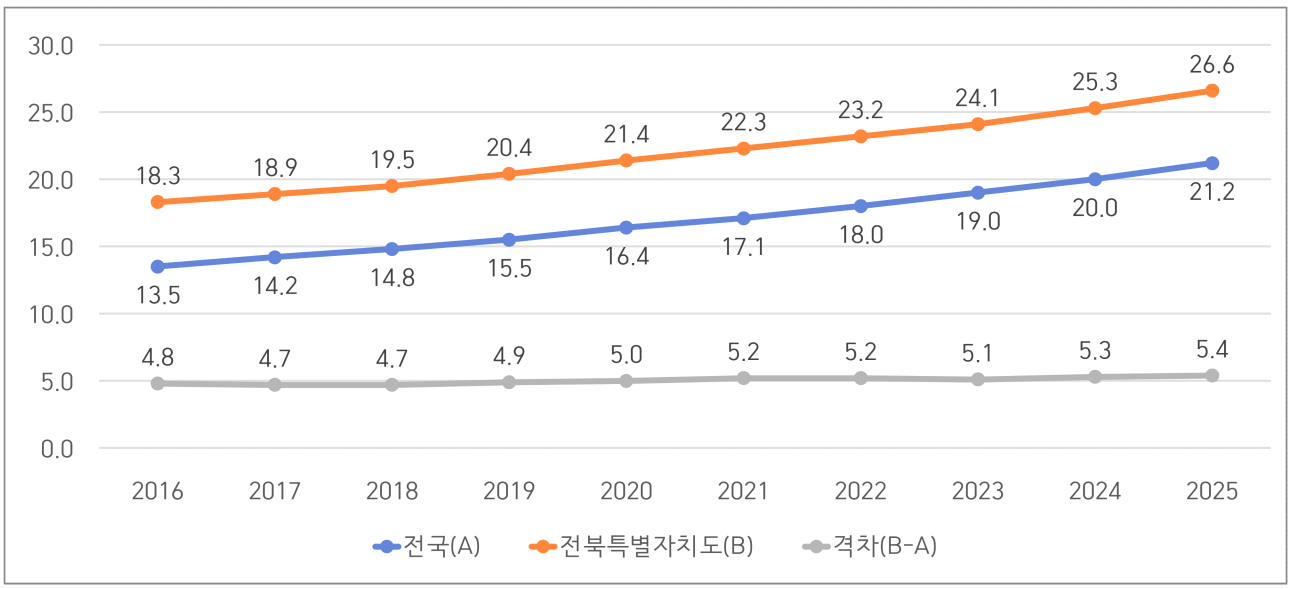
- 전북의 평균연령은 10년간 5.1세(42.8세→47.9세) 상승해 전국 상승폭(4.8세)을 웃돌았고, 전국 평균과의 격차도 2.3세로 벌어지며 전남·경북·강원에 이어 전국 4위의 고령 지자체 위치를 굳히고 있음

○ **수도권·인접 대도시 대비 극심한 연령 격차와 지역 생산 활력 약화**

- 2025년 기준 가장 젊은 세종(39.3세)과 8.6세, 수도권·인접 대도시(경기 44.1세, 광주 44.2세)와도 약 4세 격차를 보여 청년층 역외 유출 누적으로 인한 생산성과 도시 활력 저하가 뚜렷함

[그림 5] 전국, 전북 고령화율 및 격차 (2016~2025)

(단위: %)



<출처: 행정안전부(주민과),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 **전국 대비 5년 앞선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파른 상승세**

- 전북의 고령화율은 2016년 18.3%에서 2025년 26.6%로 급상승하며 전국(21.2%)이 2024년에야 진입한 초고령사회(20% 이상)를 무려 5년 앞선 2019년(20.4%)에 조기 돌파함

○ **전국과의 격차 지속 확대에 따른 복지재정 압박 대응 시급**

- 전국 평균과의 격차 또한 2016년 4.8%p에서 2025년 5.4%p로 꾸준히 확대되며 노령화 속도 차이가 심화되고 있어, 급증하는 노인 돌봄·의료비 부담에 대응한 전북형 복지재정 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4. 출생아 수

[표 4] 출생아 수 (2016~202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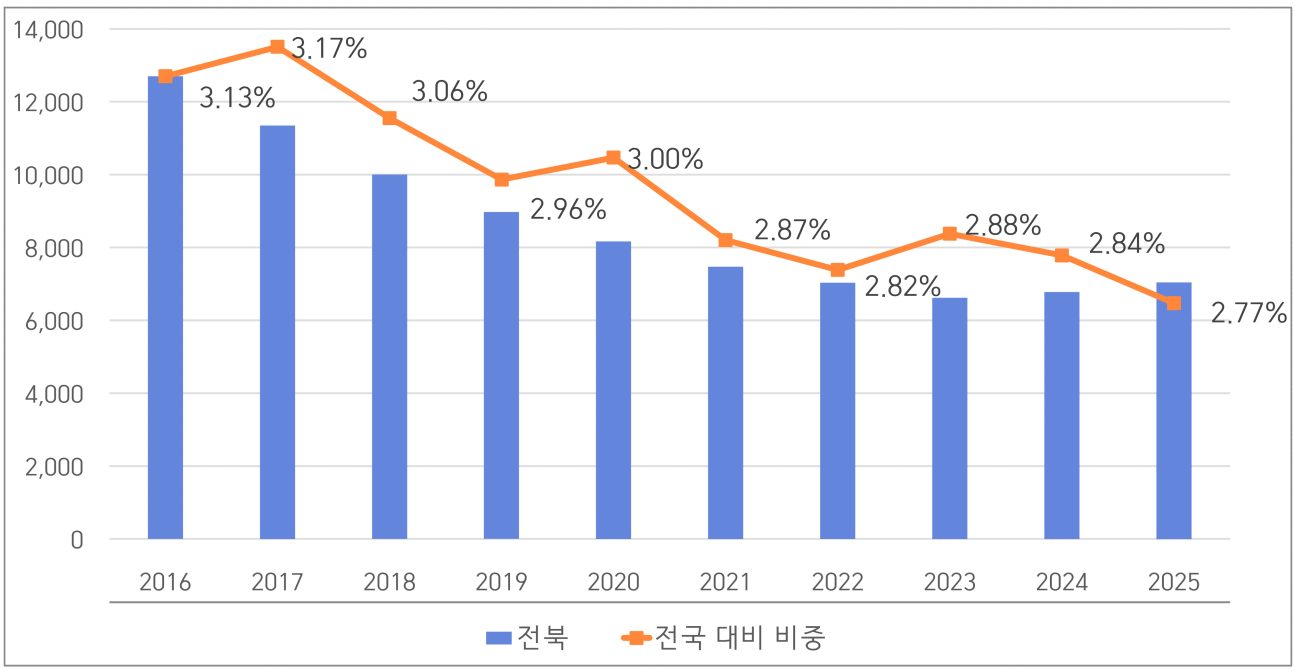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감소인원
전국	406,243	357,771	326,822	302,676	272,337	260,562	249,186	230,028	238,317	254,341	151,902
서울	75,536	65,389	58,074	53,673	47,445	45,531	42,602	39,456	41,605	45,516	30,020
부산	24,906	21,480	19,152	17,049	15,058	14,446	14,134	12,866	13,063	14,010	10,896
대구	18,298	15,946	14,400	13,233	11,193	10,661	10,134	9,410	10,103	10,819	7,479
인천	23,609	20,445	20,087	18,522	16,040	14,947	14,464	13,659	15,236	16,581	7,028
광주	11,580	10,120	9,105	8,364	7,318	7,956	7,446	6,172	6,034	6,495	5,085
대전	12,436	10,851	9,337	8,410	7,481	7,414	7,677	7,194	7,266	7,673	4,763
울산	10,910	9,381	8,149	7,539	6,617	6,127	5,399	5,082	5,282	5,574	5,336
세종	3,297	3,504	3,703	3,819	3,468	3,570	3,209	2,761	2,895	2,954	343
경기	105,643	94,088	88,175	83,198	77,737	76,139	75,323	68,817	71,285	76,309	29,334
강원	10,058	8,958	8,351	8,283	7,835	7,357	7,278	6,688	6,592	6,677	3,381
충북	12,742	11,394	10,586	9,333	8,607	8,190	7,452	7,580	7,540	8,229	4,513
충남	17,302	15,670	14,380	13,228	11,950	10,984	10,221	9,436	9,855	10,242	7,060
전북	**12,698**	**11,348**	**10,001**	**8,971**	**8,165**	**7,475**	**7,032**	**6,622**	**6,780**	**7,045**	**5,653**
전남	13,980	12,354	11,238	10,832	9,738	8,430	7,888	7,828	8,225	8,719	5,261
경북	20,616	17,957	16,079	14,472	12,873	12,045	11,311	10,186	10,333	10,417	10,199
경남	27,138	23,849	21,224	19,250	16,823	15,562	14,017	13,049	13,067	13,802	13,336
제주	5,494	5,037	4,781	4,500	3,989	3,728	3,599	3,222	3,156	3,279	2,215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출생아수(시도/시/군/구)>

※ 감소인원: 2016년 대비 2025년 감소 출생아 수

[그림 6] 전북 출생아 수 추이 및 전국 대비 비중 (2016~2025)

(단위: 명)



○ **10년간 출생아 수 44.5% 급감 및 전국 점유 비중 지속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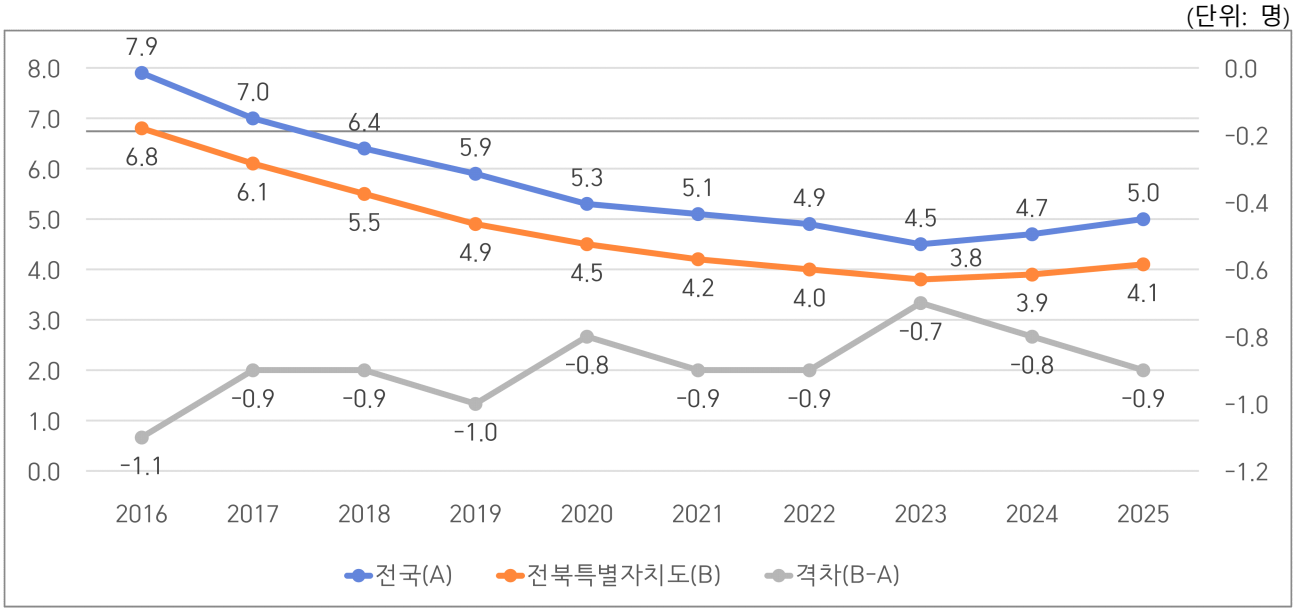
- 전북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 1만 2,698명에서 2025년 7,045명으로 5,653명(△44.5%) 급감해 전국 평균 감소율(△37.4%)을 웃돌았으며, 전국 내 출생아 점유 비중 역시 3.13%에서 2.77%로 축소됨

○ **2년 연속 반등세 시현에도 타 시·도 대비 취약한 회복 탄력성**

- 2023년 최저치(6,622명) 이후 2025년 7,045명으로 반등(+6.4%)했으나, 동기간 전국 반등 폭(+10.6%) 및 인접 충·남권(전남 8,719명, 충남 1만 242명)의 회복력에 미치지 못해 비중 하락세를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 7] 전국, 전북 조출생률(천 명당) 및 격차 (2016~2025)

(단위: 명)



<출처: 국가데이터처,「인구동향조사-출생편」>

※ 조출생률(천명당 명) =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 ÷ 당해 연도 연앙인구) × 1,000

○ **전국 평균을 지속 밑도는 조출생률과 구조적 청년 모수 결손 심화**

- 전북의 조출생률은 2016년 6.8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급감하며 10년 연속 전국 평균(2025년 5.0명)을 0.7~1.1명 하회하고 있음

○ **가임 청년인구 유출 누적에 따른 출생 기반의 구조적 약화**

- 최근 출생아 수의 소폭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조출생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것은, 급격한 초고령화와 가임기 청년층의 지속적인 역외 유출로 인해 전체 인구 대비 아기를 낳을 청년 모수 기반 자체가 구조적으로 축소되었음을 방증함

5. 합계출산율

[표 5] 시도별 합계출산율 (2016~2025)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1.172	1.052	0.977	0.918	0.837	0.808	0.778	0.721	0.748	0.799
서울	0.940	0.836	0.761	0.717	0.642	0.626	0.593	0.552	0.581	0.632
부산	1.095	0.976	0.899	0.827	0.747	0.728	0.723	0.664	0.683	0.739
대구	1.186	1.067	0.987	0.932	0.807	0.785	0.757	0.702	0.754	0.806
인천	1.144	1.007	1.006	0.940	0.829	0.778	0.747	0.694	0.762	0.818
광주	1.168	1.053	0.972	0.913	0.811	0.896	0.844	0.706	0.699	0.759
대전	1.192	1.075	0.952	0.883	0.805	0.810	0.842	0.787	0.792	0.830
울산	1.418	1.261	1.131	1.084	0.984	0.940	0.848	0.814	0.859	0.919
세종	1.821	1.668	1.566	1.472	1.277	1.277	1.121	0.971	1.028	1.061
경기	1.194	1.069	1.002	0.943	0.878	0.853	0.839	0.766	0.789	0.840
강원	1.237	1.123	1.067	1.082	1.036	0.979	0.968	0.893	0.889	0.911
충북	1.358	1.235	1.172	1.050	0.983	0.949	0.871	0.886	0.882	0.960
충남	1.395	1.276	1.186	1.112	1.029	0.963	0.909	0.842	0.883	0.921
전북	**1.251**	**1.151**	**1.044**	**0.971**	**0.909**	**0.850**	**0.817**	**0.780**	**0.808**	**0.847**
전남	1.466	1.325	1.240	1.234	1.145	1.017	0.969	0.972	1.028	1.094
경북	1.396	1.256	1.167	1.089	1.003	0.966	0.930	0.860	0.897	0.927
경남	1.358	1.227	1.122	1.046	0.945	0.903	0.838	0.799	0.820	0.880
제주	1.432	1.305	1.220	1.145	1.021	0.951	0.919	0.827	0.826	0.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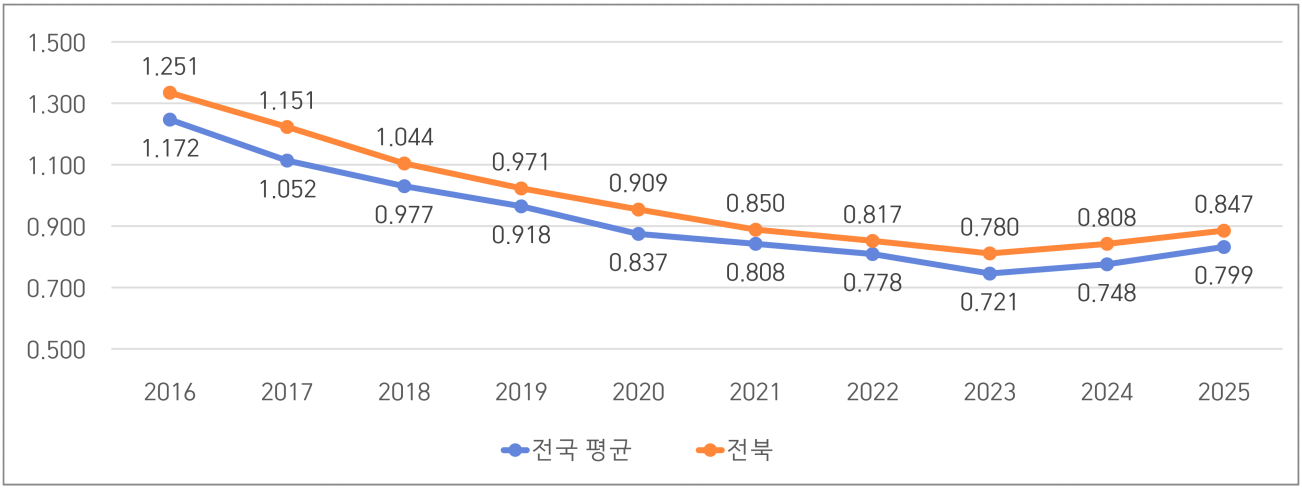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시도/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명) = 특정 연도의 15~49세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총합

※ 전체 인구를 분모로 하는 조출생률과 달리 연령구조의 영향을 배제하여 지역 간 출산력 수준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표준 지표임

[그림 8] 전국 평균 및 전북 합계출산율 추이 (2016~2025)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 **전국 평균 상회 지속 속 격차 축소세 및 반등 한계**

-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80명까지 하락 후 2025년 0.847명으로 2년 연속 반등하여 전국 평균(0.799명)을 웃돌고 있으나, 전국과의 격차는 2016년 +0.079명에서 +0.048명으로 점차 좁혀지는 추세임

○ **비수도권 도(道) 단위 최하위권 수준의 취약한 출산력**

- 2025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에 그쳤으며, 전남(1.094명), 충남·북, 경남·북 등 대다수 비수도권 도 지역이 0.9~1.0명대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도 단위에서 경기(0.840명)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권에 머물러 상대적 수준이 취약함

○ **합계출산율 착시 극복과 가임 인구 이탈 방어 중심 패러다임 전환**

- 전국 평균을 소폭 상회함에도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이 최하위권에 머무는 근본 원인은 가임기 여성 및 청년층의 지속적인 타 시·도 이동에 따른 부모 세대 기반 약화에 기인하므로, 단순 일회성 현금 지원을 탈피해 양질의 일자리와 가족 친화적 정주·돌봄 인프라 확충 등 청년층 지역 이탈을 방어하는 종합 대책이 시급함

[표 6] 전북 시·군 합계출산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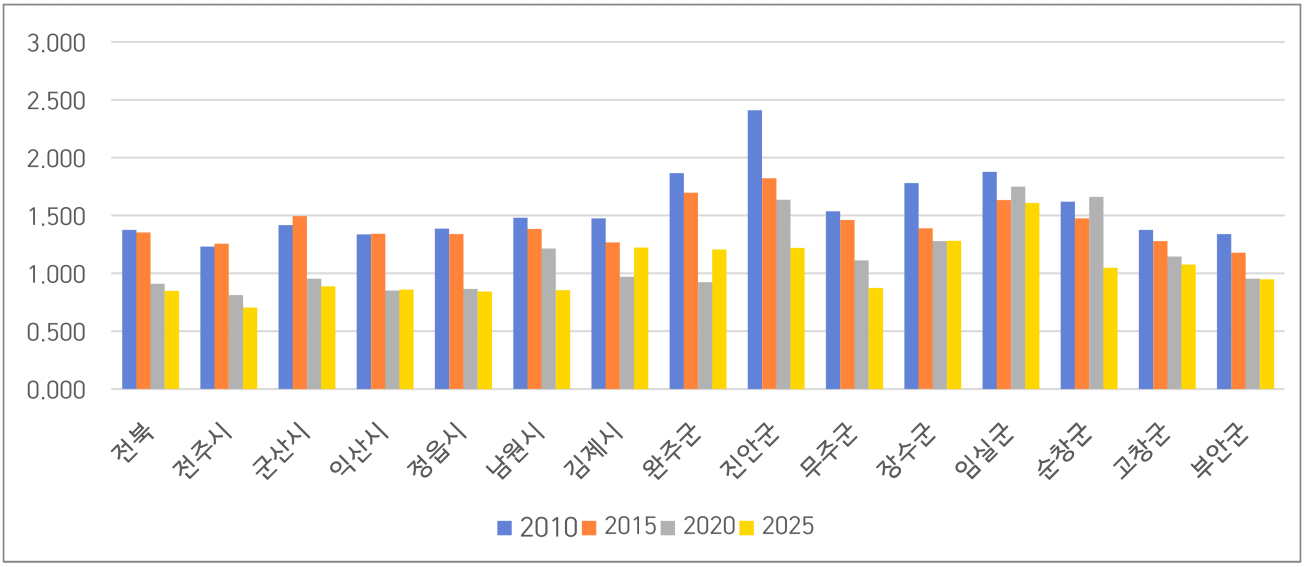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구분	2010	2015	2020	2025
전북	**1.374**	**1.352**	**0.909**	**0.847**
전주시	1.230	1.255	0.811	0.705
군산시	1.416	1.495	0.954	0.887
익산시	1.337	1.341	0.851	0.860
정읍시	1.386	1.338	0.866	0.844
남원시	1.480	1.383	1.215	0.853
김제시	1.474	1.268	0.969	1.224
완주군	1.866	1.697	0.923	1.205
진안군	2.410	1.821	1.637	1.221
무주군	1.537	1.460	1.111	0.874
장수군	1.780	1.388	1.279	1.282
임실군	1.877	1.634	1.749	1.608
순창군	1.620	1.475	1.660	1.049
고창군	1.376	1.278	1.145	1.076
부안군	1.340	1.178	0.953	0.947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시도/시/군/구)>

[그림 9] 전북 시·군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 **15년간 출산율 급락세 지속 및 '1.0명 선' 붕괴의 고착화**

- 전북 전체 합계출산율은 2010년 1.374명에서 2025년 0.847명으로 15년간 0.527명(△38.4%) 급감하며 1.0명 선이 붕괴된 심각한 초저출생 기조가 장기화되는 흐름임

○ **도내 인구 최대 도시(약 36%) '전주시(0.705명)'의 초저출생과 도 전체 회복 제약**

- 도내 가임기 청년 인구와 전체 출생아의 과반을 점유하는 전주시가 0.705명으로 도내 최저치에 머물러 전북 전체 출산율 견인을 가로막는 최대 구조적 병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군 단위(1.2~1.6명) 선전과 3대 거점도시(0.7~0.8명대) 간 극심한 내부 양극화**

- 임실(1.608명), 장수(1.282명), 김제·진안·완주 등 농촌 및 정주 유입 지역은 1.2명 이상을 유지·회복한 반면, 3대 도시권(전주 0.705명, 익산·군산 0.8명대)은 극도로 침체되어 있어 시·군 맞춤형 청년 정착 및 보육 특화 정책이 절실함

6. 사망자 수

[표 7] 전국 사망자 수 (2016~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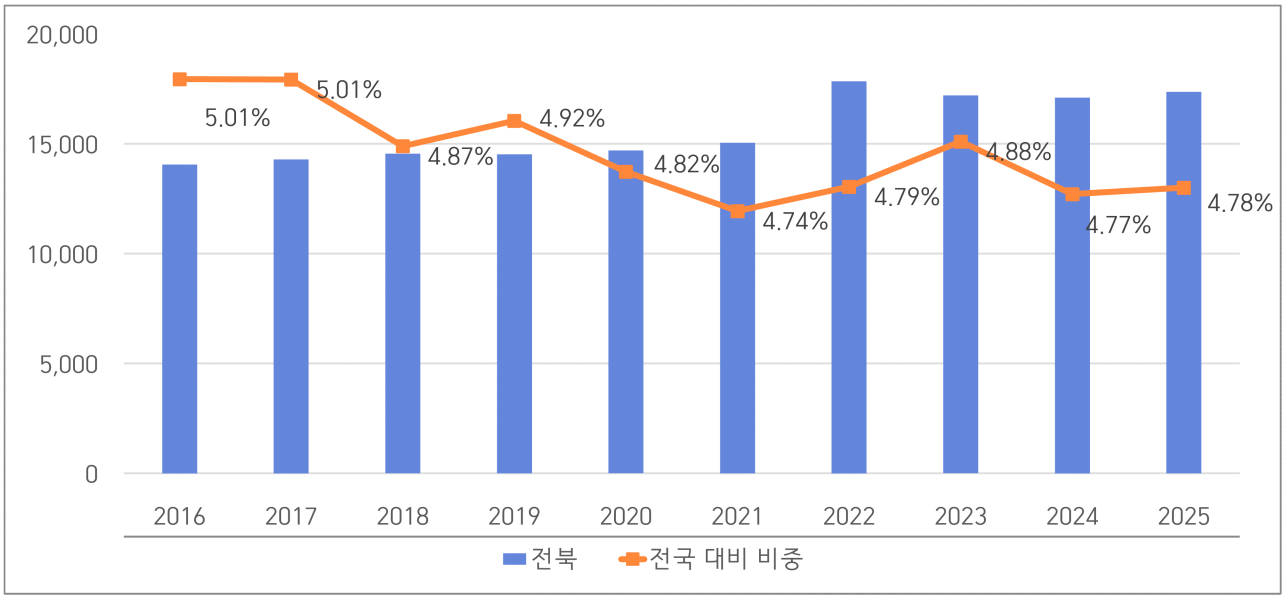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280,827	285,534	298,820	295,110	304,948	317,680	372,939	352,511	358,569	362,968
서울	43,540	42,932	45,219	43,829	45,522	48,798	55,296	51,446	52,725	52,535
부산	21,074	21,434	22,570	22,260	22,950	23,531	27,713	26,303	26,816	27,137
대구	13,502	13,629	14,070	13,752	14,460	14,560	17,592	16,556	16,775	17,279
인천	14,119	14,290	15,316	15,131	15,689	16,493	18,957	18,242	18,827	19,134
광주	7,247	7,560	7,781	7,635	7,785	7,981	9,350	8,866	9,136	9,180
대전	6,958	7,029	7,403	7,502	7,572	7,889	9,302	8,677	8,842	9,184
울산	4,947	4,886	5,349	5,268	5,302	5,493	6,369	6,076	6,343	6,427
세종	1,065	1,159	1,259	1,221	1,317	1,354	1,678	1,595	1,646	1,636
경기	55,215	56,852	60,050	60,568	62,794	67,399	79,010	74,949	76,479	77,976
강원	11,437	11,545	11,976	11,906	12,182	12,749	15,086	14,224	14,413	14,550
충북	10,787	11,104	11,334	11,363	11,594	11,941	14,108	13,463	13,489	13,837
충남	14,600	15,321	15,802	15,596	16,022	16,326	19,719	18,781	18,811	18,802
전북	**14,062**	**14,295**	**14,552**	**14,525**	**14,691**	**15,049**	**17,852**	**17,201**	**17,110**	**17,368**
전남	16,561	16,848	17,219	16,787	17,436	17,568	20,876	19,786	20,108	19,884
경북	20,978	21,278	22,289	21,703	22,799	22,928	27,840	25,283	25,298	26,126
경남	21,193	21,634	22,719	22,105	22,881	23,392	27,385	26,386	26,849	27,252
제주	3,542	3,738	3,912	3,959	3,952	4,229	4,806	4,677	4,902	4,661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시도/성/연령(각세)별 사망자수>

[그림 10] 전북 사망자 수 및 전국 대비 비중 (2016~2025)

(단위: 명)



○ **사망자 수 2022년 이후 1만 7천 명대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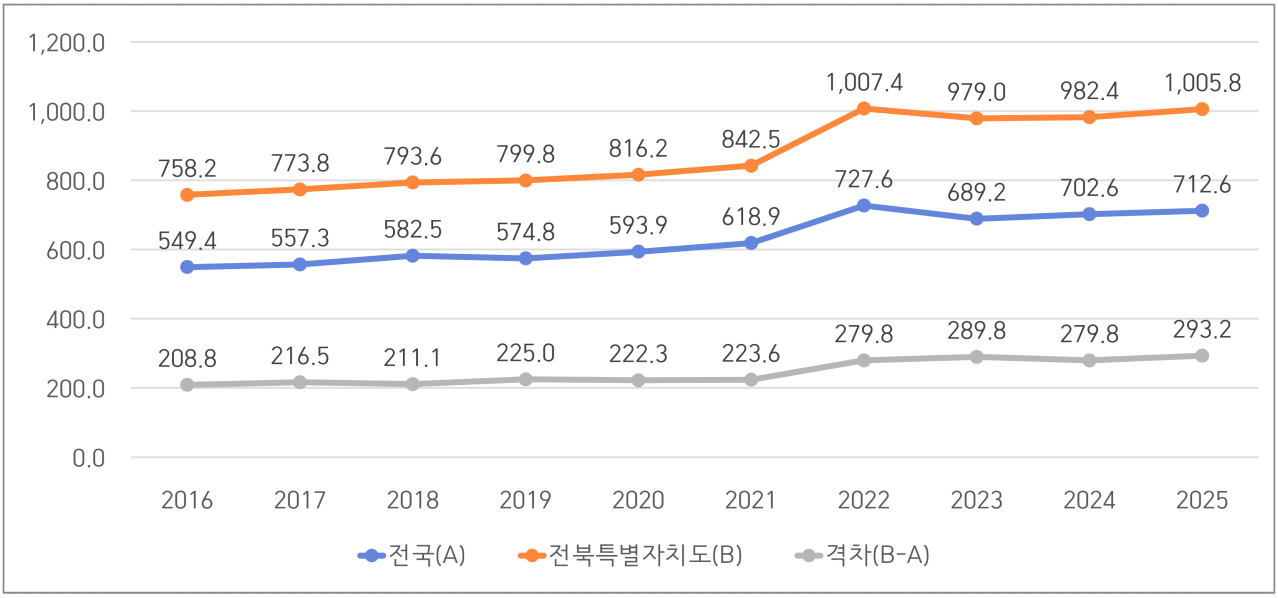
- 전북의 연간 사망자 수는 2016년 1만 4,062명에서 2025년 1만 7,368명으로 10년간 3,306명(+23.51%)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충격이 극에 달했던 2022년(1만 7,852명) 이후에도 연간 1만 7천 명대를 꾸준히 웃돌며 구조적인 고령층 사망 규모 확대가 지속되는 양상임

○ **출생아 대비 2.5배에 달하는 심각한 자연감소 직면**

- 2025년 기준 전북의 연간 사망자(1만 7,368명)는 출생아 수(7,045명)의 약 2.5배에 달해 한 해에만 1만 명 이상의 가파른 자연감소(-10,323명)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생애주기별 정주 환경 개선 등 광역 차원의 종합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

[그림 11] 전국, 전북 조사망률(십만명당) 및 격차 (2016~2025)

(단위: 명)



<출처: 국가데이터처,「인구동향조사」, 시도/성/연령(5세)별 사망률(1996~)>

[표 8] 전국, 전북 장래인구 추이 및 증감률 (2030~2050)

(단위: 명)

구분	2030	2035	2040	2045	2050	증감률
전국	51,305,713	50,824,868	50,059,218	48,835,031	47,106,960	**-8.18%**
전북특별자치도	**1,694,330**	**1,647,826**	**1,599,735**	**1,545,226**	**1,479,628**	**-12.67%**

<출처: 국가데이터처,「장래인구추계」, 추계인구/시도>
※ 중위 추계 기준

○ **전국 상회 조사망률의 1,000명 안팎 유지 및 장래인구 감소 가속화**

- 전북의 사망률은 2016년 758.2명에서 2025년 1,005.8명으로 급등해 인구 십만 명당 1,000명 선을 돌파했으며, 전국 평균(712.6명)을 상시 209~293명 이상 크게 웃도는 고(高)사망 기조를 보이고 있음
- 전국과의 격차 역시 2016년 208.8명에서 2025년 293.2명으로 더욱 확대되어, 가속화되는 초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급증이 출생아 감소와 맞물려 도내 인구 자연감소를 한층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높은 자연감소세는 미래 인구 추계에도 직접 반영되어, 전북의 인구는 2030년 169.4만 명에서 2050년 147.9만 명으로 -12.67%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동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8.18%)을 4.49%p 초과하는 수치로, 초고령·고사망 구조의 조기 차단 없이는 150만 인구 저지선 붕괴가 불가피함을 시사함

[표 9] 전북 시·군 사망자 수 (2010~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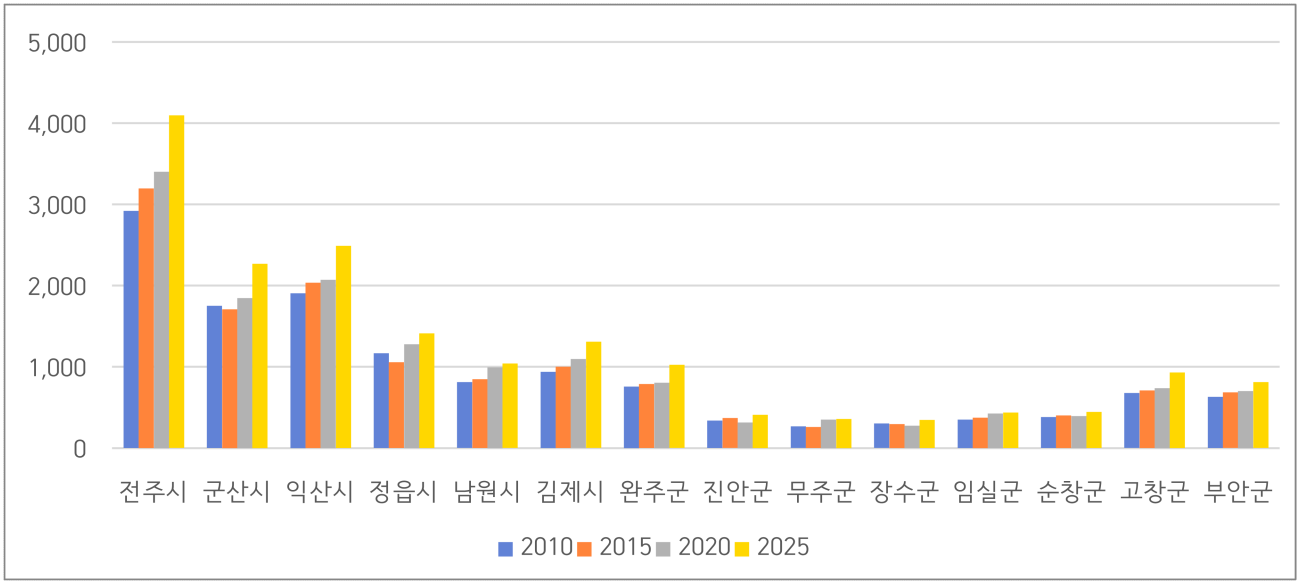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0	2015	2020	2025
전북	**13,188**	**13,721**	**14,691**	**17,368**
전주시	2,919	3,197	3,403	4,095
군산시	1,751	1,709	1,847	2,270
익산시	1,907	2,036	2,071	2,489
정읍시	1,166	1,056	1,278	1,412
남원시	810	846	994	1,039
김제시	938	1,000	1,094	1,307
완주군	758	787	804	1,023
진안군	337	368	314	409
무주군	265	258	351	359
장수군	301	295	275	345
임실군	350	375	426	436
순창군	381	401	394	444
고창군	676	709	738	930
부안군	629	684	702	810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5세)별 사망자수(1997~), 사망률(1998~)>

[그림 12] 전북 시·군 사망자 수 추이 (2010~2025)

(단위: 명)



○ **14개 시·군 전역의 전방위적 사망자 급증세 지속**

- 전북 전체 사망자 수는 2010년 1만 3,188명에서 2025년 1만 7,368명으로 15년간 4,180명(+31.70%)이 급증하였으며, 14개 시·군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사망자 규모가 확대되어 도 전역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중심 도시권(전주·군산·익산) 중심의 사망자 규모 집중**

- 도내 3대 중추 도시(전주·군산·익산)의 2025년 사망자 합계는 8,854명으로 도 전체의 절반 이상(50.98%)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시는 2010년 2,919명에서 2025년 4,095명으로 40.29% 급증해 도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거점 도시의 고령화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방증함

○ **군 단위 고령화 위험 누적 및 광역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 농산어촌 군 지역 또한 완주(1,023명)와 고창(930명)을 필두로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음. 거점도시의 노인 전문 의료 수요 대응과 더불어 의료 취약 군 지역의 공공 보건의료 및 돌봄 연계망을 대폭 확충하는 균형적 보건 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7. 자살률

[표 10]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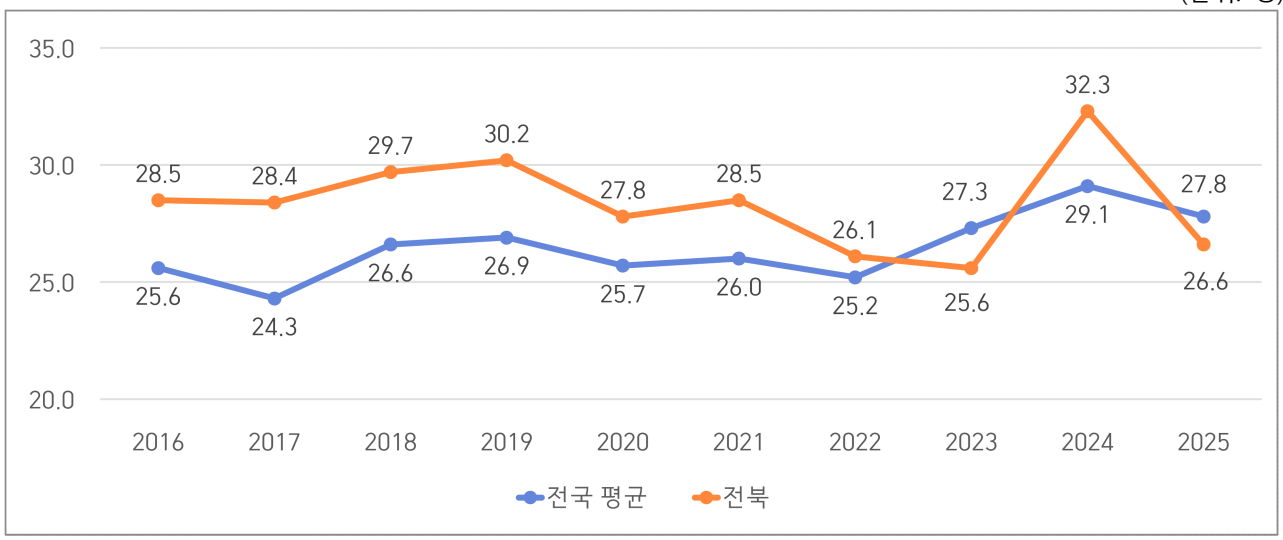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25.6	24.3	26.6	26.9	25.7	26.0	25.2	27.3	29.1	27.8
서울	23.0	21.3	22.5	22.5	22.7	22.6	21.4	23.2	24.1	23.0
부산	27.2	26.3	27.9	30.1	27.4	27.7	27.3	29.1	30.3	29.9
대구	24.2	24.9	26.8	28.7	26.1	26.3	27.0	28.1	29.4	29.3
인천	26.5	24.0	27.9	25.9	26.5	25.9	25.8	28.8	31.2	28.9
광주	23.2	22.6	25.7	23.9	22.6	26.4	25.0	27.3	29.9	27.8
대전	24.8	22.5	28.3	28.7	27.2	29.3	25.7	26.4	31.2	30.9
울산	23.5	24.4	27.1	28.2	26.4	28.5	26.3	32.7	29.2	27.3
세종	23.9	17.7	26.0	22.4	18.4	19.0	23.3	20.0	23.0	18.7
경기	23.0	22.9	24.2	25.4	23.7	23.6	23.1	25.1	28.2	26.9
강원	32.2	30.6	33.1	33.3	33.2	32.7	33.1	34.7	34.3	31.8
충북	32.8	28.2	31.1	31.1	27.1	31.8	29.0	33.3	31.8	31.6
충남	32.1	31.7	35.5	35.2	34.7	32.2	33.2	36.5	34.8	35.7
전북	**28.5**	**28.4**	**29.7**	**30.2**	**27.8**	**28.5**	**26.1**	**25.6**	**32.3**	**26.6**
전남	29.7	25.1	28.0	25.4	28.5	30.2	26.6	29.2	34.5	29.6
경북	28.8	26.0	29.6	29.4	28.6	29.0	26.8	30.5	31.6	29.7
경남	27.2	24.9	28.9	28.0	25.3	26.3	26.7	28.5	28.5	28.5
제주	24.0	26.7	30.6	31.7	30.0	26.1	26.0	30.5	36.3	34.8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인구십만명당 자살률(시도/시/군/구)>

[그림 13] 전국 및 전북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추이 (2016~2025)

(단위: 명)



○ **전국 평균을 밑도는 자살률 하향 안정세 및 전국 15위 기록**

- 2025년 기준 전북의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으로 전국 평균(27.8명)보다 1.2명 낮게 나타났으며, 17개 시·도 중 서울(23.0명), 세종(18.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전국 15위)을 기록함
- 장기 시계열상 2016년(28.5명) 대비 완만한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적 연도별 변동성이 존재하는 만큼 위기 개입 및 정신건강 안전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2024년 복합적 위기 충격(경제 침체·사회적 고립) 극복과 가파른 회복력 시현**

- 2024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곤궁과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누적된 사회적 고립감의 본격화, 유명인 사망에 따른 모방 효과 등이 복합 작용하여 전국 자살률이 29.1명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이에 따라 전북 역시 32.3명까지 일시적으로 치솟으며 위험 징후를 보였으나, 2025년 들어 1년 만에 5.7명 급감(-17.65%)한 26.6명으로 빠르게 안정화되며 위기 상황에 대한 지역 내 보건·정신건강 대응 등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도(道) 단위 지자체 최저 수준 달성 및 고령·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망 강화 필요**

- 충남(35.7명), 제주(34.8명), 강원(31.8명), 충북(31.6명), 전남(29.6명) 등 대다수 도(道) 단위 지자체가 30명 안팎의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전북은 도 단위 최저치를 기록함
- 다만, 높은 초고령화율과 독거노인 증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누적된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형 마음건강 지원' 등 농어촌 밀착형 정신건강 인프라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됨

8. 외국인 등록인구

[표 11] 장기체류 합법외국인 등록인구(2016~2025)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1,530,539	1,583,099	1,687,733	1,731,803	1,610,323	1,569,836	1,688,855	1,881,921	2,042,017	2,159,052
서울	408,346	410,612	430,486	428,525	385,902	365,132	378,182	397,153	413,317	425,401
부산	48,358	49,653	52,566	52,722	46,764	45,729	49,434	56,194	63,290	68,436
대구	30,680	31,049	32,985	35,332	32,617	31,976	34,584	38,637	42,249	45,467
인천	78,347	85,384	94,211	101,320	97,838	98,578	107,699	121,948	132,766	140,513
광주	23,163	25,028	26,830	28,070	25,628	25,960	28,846	31,579	32,732	34,528
대전	19,932	20,450	21,358	22,296	19,989	20,328	23,632	26,643	29,629	31,749
울산	30,323	27,330	26,710	27,087	24,347	23,057	24,570	30,131	34,168	36,542
세종	4,646	5,262	6,148	7,015	6,385	6,208	6,713	7,210	7,627	7,977
경기	508,095	536,759	580,733	598,639	572,592	563,435	596,922	655,062	706,858	733,241
강원	18,505	19,885	21,393	22,345	20,627	20,710	24,100	27,504	30,218	33,621
충북	44,402	47,250	51,430	53,368	50,172	50,006	56,398	64,975	72,719	78,513
충남	77,218	84,590	91,151	95,135	89,460	89,065	101,049	117,778	130,880	141,188
전북	**30,596**	**32,001**	**34,874**	**36,638**	**34,790**	**33,843**	**38,658**	**44,334**	**48,090**	**53,284**
전남	34,931	34,446	36,371	38,057	36,322	36,135	42,719	53,058	61,238	69,749
경북	58,386	61,114	65,189	66,699	60,662	59,821	66,694	77,306	87,465	98,904
경남	92,261	87,557	87,126	89,368	80,049	76,046	83,960	103,581	117,270	127,901
제주	22,350	24,729	28,172	29,187	26,179	23,807	24,695	28,828	31,501	32,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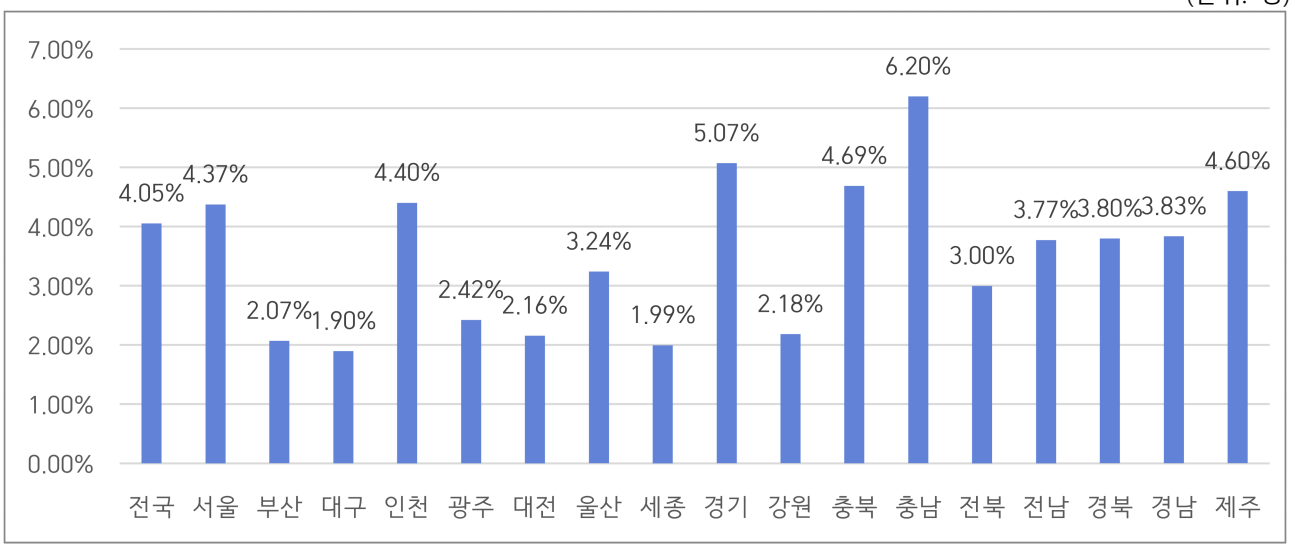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시군구별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및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 현황>

※ 90일 이하 일시 체류하는 '단기체류자(관광·방문 등)' 및 지자체별 통계가 공표되지 않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은 집계에서 제외함

※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에 따라 시·군에 주소를 두고 90일을 초과하여 상주하는 '실질적 합법 체류 인구(등록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만을 기준으로 집계함

[그림 14]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2025)

(단위: 명)



○ **전국 증가세를 1.8배 상회하는 합법체류 외국인 유입(+74.15%)과 5만 명 돌파**

- 전북의 합법 체류 외국인 인구(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는 2016년 3만 596명에서 2025년 5만 3,284명으로 10년간 2만 2,688명(+74.15%)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41.07%: 153.1만 명→215.9만 명)을 1.8배가량 웃도는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함
-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3만 3,843명) 이후 4년 만에 57.44%(+1만 9,441명) 급증하여 2025년 기준 도내 거주 외국인 규모가 5만 명 선을 완전히 상회함

○ **총인구 대비 3.00% 점유와 농축산·제조업 일손 공백의 실질적 대체**

- 2025년 기준 전북의 전체 인구(내국인+합법체류외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은 3.00%를 기록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정주·경제적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
- 이는 내국인 인구의 자연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내 농축수산업 및 제조업·산업단지 현장의 노동력 공백을 외국인 및 동포 인력이 실질적으로 지탱하며 지역 경제의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방증함

○ **도 단위 하위권(강원 제외 시 최저) 수준의 외국인 비율(3.00%)과 정주형 비자 확대 과제**

- 가파른 양적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외국인 규모(5만 3,284명)는 경기(73.3만 명), 충남(14.1만 명), 경남(12.8만 명), 경북(9.9만 명), 충북(7.9만 명), 전남(7.0만 명) 등 타 주요 도(道) 단위 지자체에 비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특히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3.00%) 역시 충남(6.20%), 경기(5.07%), 충북(4.69%), 제주(4.60%), 경남(3.83%), 경북(3.80%), 전남(3.77%) 등 비수도권 주요 도(道)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 따라서 단순 단기 계절근로 위주의 유입 정책을 탈피하여, 지역특화형 비자(F-2-R) 확대 및 다문화 가족·우수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종합 정주 생태계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

[표 12] 전북 시·군 등록외국인 현황 (2010~2025)

(단위: 명)

구분	2010	2015	2020	2025
전북	**20,152**	**26,194**	**31,288**	**49,077**
전주시	5,010	5,929	8,745	11,233
군산시	3,565	5,533	5,792	10,307
익산시	3,484	4,308	4,714	7,268
정읍시	1,512	2,160	2,731	3,783
남원시	788	944	953	1,543
김제시	1,211	1,897	1,876	3,564
완주군	2,210	2,241	3,226	5,334
진안군	274	310	336	620
무주군	186	250	216	375
장수군	265	404	351	514
임실군	348	360	290	464
순창군	294	363	354	499
고창군	546	851	895	2,081
부안군	459	644	809	1,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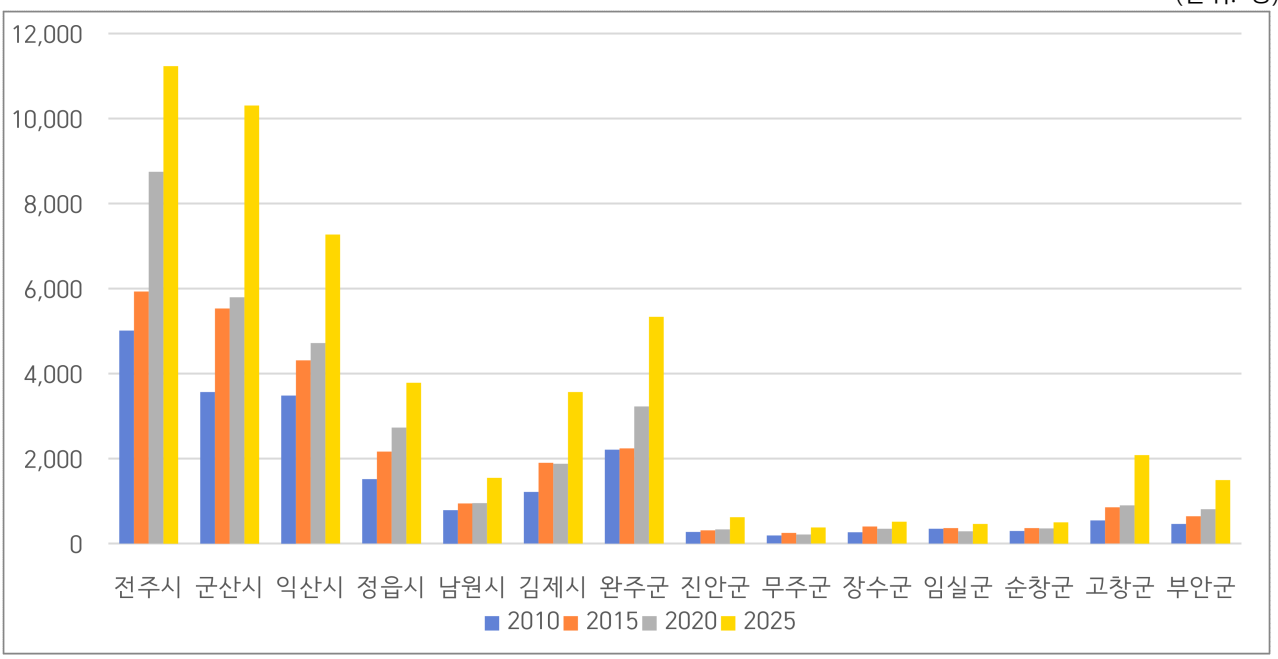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시군구별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 본 통계는 시·군 단위 자료 미제공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 및 '단기체류자(90일 이하)'를 제외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각 시·군에 정식 등록된 '등록외국인'만을 집계함

※ 이에 따라 앞선 전북 합법 체류 인구(53,284명, 등록외국인+거소신고인)와 수치상 차이가 발생함

[그림 15] 전북 시·군 외국인 등록인구 추이 (2010~2025)

(단위: 명)



○ **15년간 2.4배 폭증 및 전 시·군 전방위적 외국인 유입 가속화**

- 전북의 등록외국인 수는 2010년 2만 152명에서 2025년 4만 9,077명으로 15년간 2만 8,925명(+143.53%) 급증하였으며, 14개 시·군 전역에서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내국인 인구 감소를 상쇄하는 핵심 생산·정주 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임

○ **주력 산업·산단 거점(전주·군산·익산·완주) 중심의 과반 집중 지속**

- 2025년 기준 전주시(1만 1,233명)와 군산시(1만 307명)가 나란히 1만 명을 돌파하고 익산시(7,268명)와 완주군(5,334명)이 그 뒤를 이으며, 산업단지와 교육·일자리 인프라가 집중된 상위 4개 시·군이 도 전체 외국인의 약 69.57%(3만 4,142명)를 흡수하는 뚜렷한 도시권 쏠림 현상을 나타냄

○ **농어촌 군 지역(고창·부안 등)의 급격한 수요 팽창과 지역특화형 정착 지원 시급**

- 농어업 인력난이 심화된 고창군(546명→2,081명, +281.14%)과 부안군(459명→1,492명, +225.05%) 등 군 단위에서도 외국인 규모가 3~4배 이상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어, 단순 계절근로 공급을 넘어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및 언어·주거·가족 정착 지원 등 다문화 포용 정책의 체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됨

9.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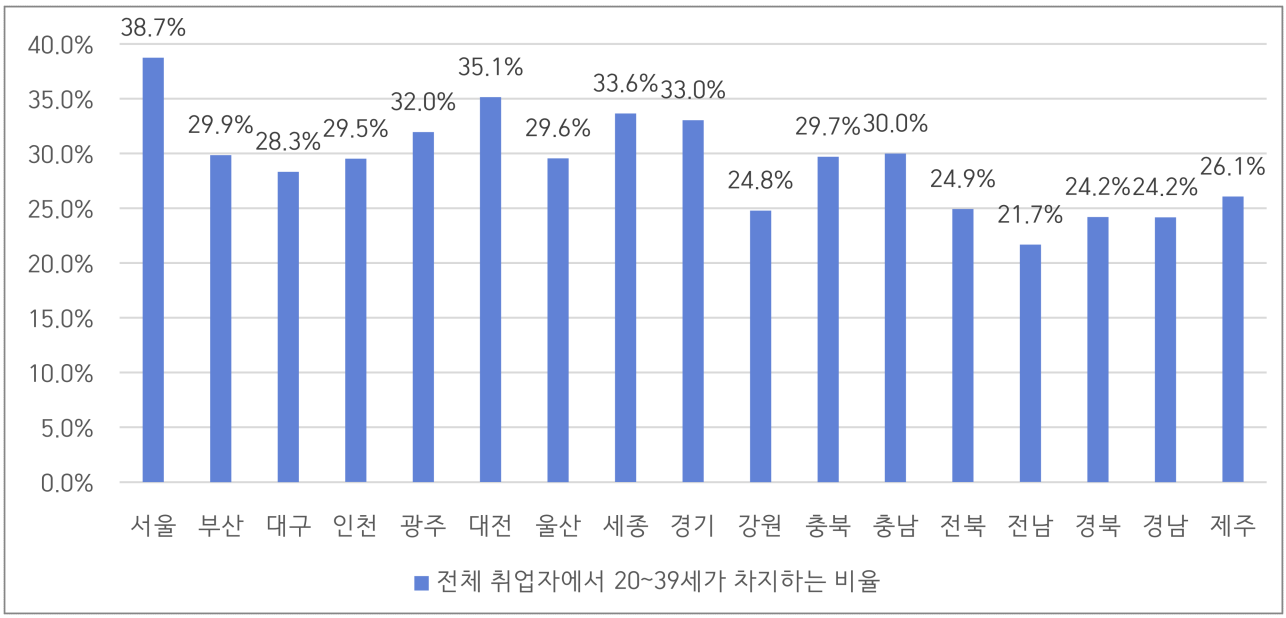
[표 13] 전체 및 20~39세 취업자 수 (2025)

(단위: 천명)

구분	전체 취업자 수(A)	20~39세 취업자 수(B)	비율(B/A)
전체	28,769	8,991	31.3%
서울특별시	5,198	2,014	38.7%
부산광역시	1,698	507	29.9%
대구광역시	1,214	344	28.3%
인천광역시	1,715	548	32.0%
광주광역시	776	229	29.5%
대전광역시	811	285	35.1%
울산광역시	575	170	29.6%
세종특별자치시	211	71	33.6%
경기도	7,788	2,573	33.0%
강원특별자치도	855	212	24.8%
충청북도	976	290	29.7%
충청남도	1,297	389	30.0%
전북특별자치도	**979**	**244**	**24.9%**
전라남도	997	216	21.7%
경상북도	1,479	358	24.2%
경상남도	1,799	435	24.2%
제주특별자치도	403	105	26.1%

<출처: 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 행정구역(시도)/성/연령별 취업자>

[그림 16] 전체 취업자에서 20~39세가 차지하는 비율 (2025)



○ **전국 평균을 대폭 밑도는 청년 취업자 비중과 고용 시장의 고령화 심화**

- 2025년 전북의 전체 취업자(97만 9천 명) 중 20~39세 청년 취업자는 24만 4천 명으로 24.9%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31.3%)보다 6.4%p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전체 취업자의 4분의 3 이상이 40대 이상 중장년 및 고령층으로 채워져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적 노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줌

○ **수도권·대도시권 대비 극심한 청년 일자리 격차와 도 단위 하위권 고착**

- 서울(38.7%), 대전(35.1%), 세종(33.6%), 경기(33.0%) 등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가 30%대 중후반의 높은 청년 고용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충북(29.7%), 충남(30.0%) 등 인근 충청권에도 크게 뒤처진 채 전남(21.7%), 경북·경남(24.2%), 강원(24.8%)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양질의 청년 선호 일자리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함

○ **청년층 역외 유출 방지 및 신산업 연계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급**

- 낮은 청년 취업자 비중은 단순한 고용 지표의 부진을 넘어 앞서 확인된 출생아 수 감소 및 인구 자연감소를 직접적으로 촉발하는 근본 원인이므로, 이차전지·바이오·피지컬AI 등 전북 미래 전략산업과 지역 대학을 연계하여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조속히 확충하는 전방위적 청년 고용 정책이 요구됨

10. 인구 천 명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

[표 14] 인구 천 명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2016~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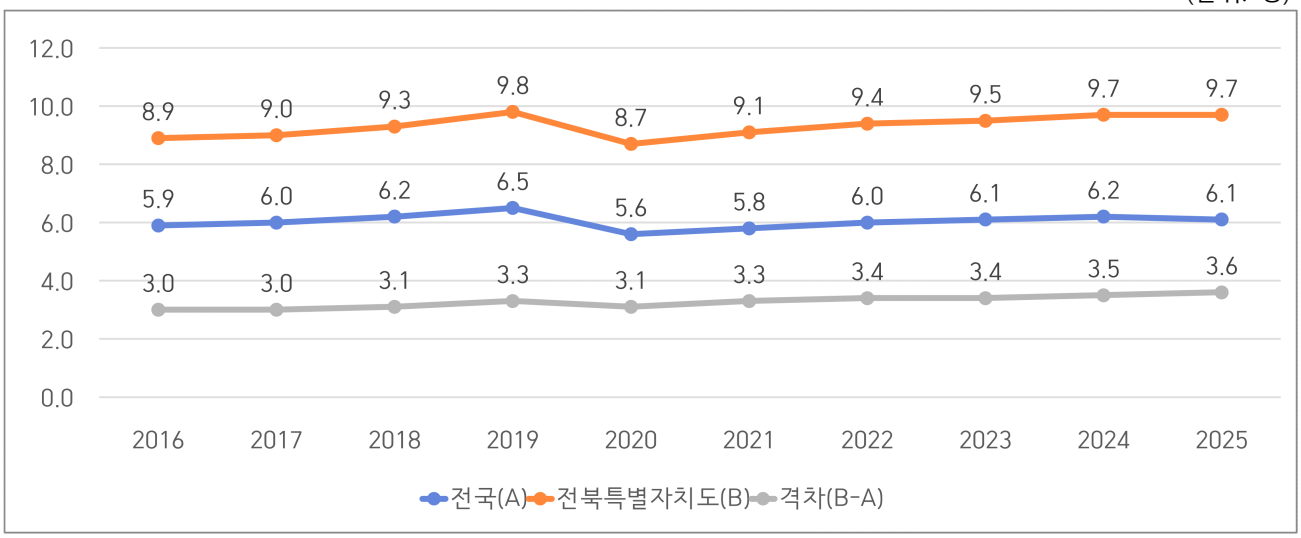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5.9	6.0	6.2	6.5	5.6	5.8	6.0	6.1	6.2	6.1
서울	5.0	5.1	5.2	5.4	4.7	4.9	5.0	5.2	5.2	5.2
부산	5.1	5.3	5.5	5.7	4.9	5.1	5.2	5.3	5.7	5.7
대구	4.9	5.1	5.2	5.5	4.5	4.7	4.8	5.0	5.1	5.1
인천	4.7	4.7	4.9	5.3	4.6	4.7	4.9	4.9	4.9	4.8
광주	5.0	5.2	5.5	5.8	5.1	5.3	5.5	5.6	5.6	5.6
대전	4.8	5.0	5.2	5.4	4.6	4.8	5.0	5.0	5.0	5.0
울산	5.1	5.2	5.5	5.8	5.0	5.2	5.4	5.5	5.6	5.6
세종	6.2	5.9	6.1	6.3	5.0	4.9	4.9	5.1	5.1	5.1
경기	3.9	4.0	4.2	4.4	3.8	4.0	4.1	4.2	4.2	4.2
강원	11.1	11.4	12.1	12.5	10.4	10.9	11.0	11.1	11.3	11.4
충북	8.3	8.4	8.7	9.2	8.1	8.4	8.6	8.7	8.7	8.7
충남	8.1	8.2	8.6	9.1	7.8	8.2	8.4	8.5	8.6	8.5
전북	**8.9**	**9.0**	**9.3**	**9.8**	**8.7**	**9.1**	**9.4**	**9.5**	**9.7**	**9.7**
전남	10.8	11.0	11.5	12.1	10.9	11.3	11.7	11.9	11.9	12.1
경북	9.4	9.7	10.0	10.4	9.1	9.3	9.6	9.6	9.7	9.7
경남	6.8	7.0	7.4	7.6	6.6	6.8	7.1	7.2	7.3	7.3
제주	8.4	8.4	8.8	9.0	7.6	7.7	7.7	7.8	8.0	8.1

<출처: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인구 천명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현원(시도)>

[그림 17] 전국, 전북 인구 천 명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 및 격차(2016~2025)

(단위: 명)



[표 15] 전국, 전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2016~2025)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303,401	310,654	322,862	337,084	292,182	301,930	308,879	313,296	315,205	313,924
전북	**16,535**	**16,644**	**17,042**	**17,811**	**15,639**	**16,244**	**16,547**	**16,729**	**16,783**	**16,707**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시도별 총괄 현원>

※ 2020년 공무원 현원의 감소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2020. 4. 1.)에 따라 지방직 통계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 데 기인함

○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공무원 비율과 10년간 격차 확대세 지속**

- 전북의 인구 천 명당 지방공무원 현원은 2016년 8.9명에서 2025년 9.7명으로 증가하여 전국 평균(6.1명)을 상시 3명 이상 크게 웃돌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 역시 +3.0명에서 +3.6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수도권·대도시 대비 2배 수준이나 농어촌 도(道) 단위 대비 적정 수준 유지**

- 과밀 대도시권인 경기(4.2명), 서울·인천(4.8~5.2명)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나, 전남(12.1명), 강원(11.4명) 등 유사한 지리적 여건의 비수도권 도 단위 지자체와 비교 시에는 유사한 지리적 여건의 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방증함

○ **10년간 현원 동결 수준(+1.04%) 실증과 인구 감소 영향이 일부 작용함에 따른 현장 정원 유지 필요**

- 전북의 지방공무원 절대 현원은 2016년 16,535명에서 2025년 16,707명으로 10년간 순증 인원이 172명(+1.04%)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3.47%)을 밑돌며 사실상 정체·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음(2020년 소방직 국가직 전환 제외분 반영)
- 따라서 주민 1인당(천 명당) 공무원 지표의 상승은 공무원의 실질 증원이 아닌 도내 총인구 급감에 따른 분모 축소의 '통계적 착시'에 기인함
-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및 광역 농촌 지역의 관리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보다는 현장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필수 인력 체계 검토가 바람직함

11.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표 16] 예산기준 주요 재정지표 값 (202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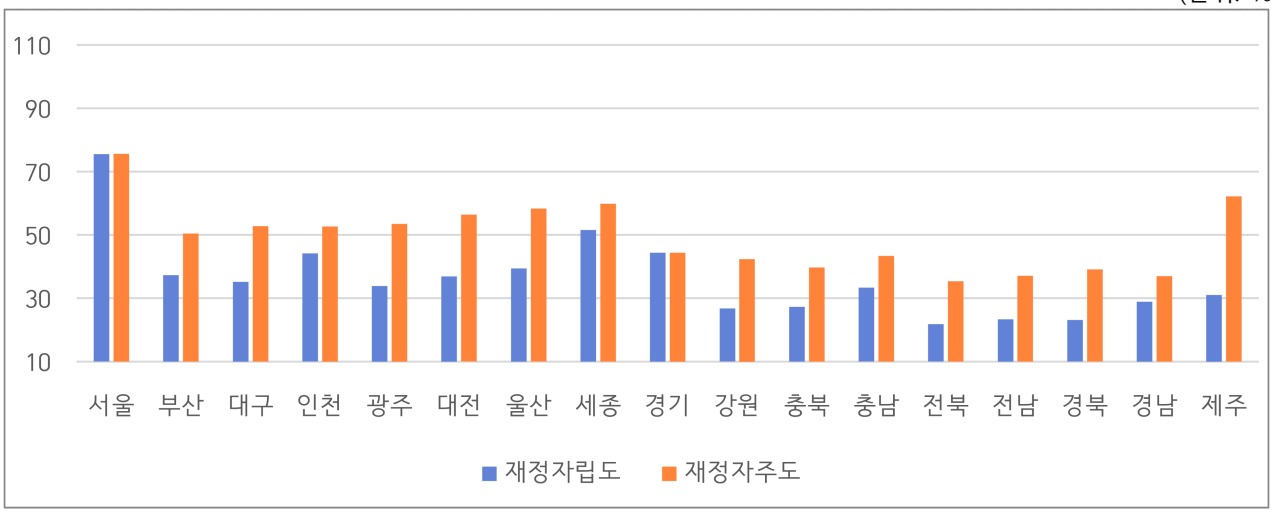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재원비율 (지방세+세외수입)	지방보조금비율	통합재정수지	자체사업비율
전국	31.24	50.54	-	1.44	-3.56	29.54
서울특별시	75.52	75.63	76.8	2.00	-0.67	48.34
부산광역시	37.30	50.46	39.1	0.58	-2.98	33.48
대구광역시	35.19	52.79	37.0	1.01	-3.35	32.61
인천광역시	44.15	52.70	46.1	0.66	-5.40	37.67
광주광역시	33.89	53.51	35.5	1.30	-0.42	31.54
대전광역시	36.92	56.38	38.5	0.99	-2.87	38.59
울산광역시	39.44	58.31	41.2	1.43	-2.27	36.79
세종특별자치시	51.56	59.87	52.8	2.11	-4.76	33.71
경기도	44.40	44.42	47.8	0.53	-1.30	38.08
강원특별자치도	26.75	42.40	28.5	1.01	-1.41	25.80
충청북도	27.29	39.74	29.2	0.60	-2.70	26.33
충청남도	33.33	43.37	35.1	0.74	-2.19	27.16
전북특별자치도	**21.81**	**35.37**	**23.2**	**1.01**	**-2.51**	**22.13**
전라남도	23.36	37.10	24.6	0.53	-1.96	25.28
경상북도	23.12	39.10	24.9	0.65	-1.19	24.00
경상남도	28.93	36.99	30.9	0.41	0.50	24.28
제주특별자치도	31.07	62.19	32.4	6.14	-6.84	36.95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시「한눈에보는 지방재정(예산기준)>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이며, 자체재원비율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통합예산 기준임
※ 당해 연도 본예산(당초예산) 기준으로 최종 결산 기준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전국 자체재원비율은 지방재정365 공시 기준에 따라 전국 통합 집계값이 미제공되어 미기재함
※ 통합재정수지비율 = [세입 - (세출 +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차입금 및 채무상환,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의 건전성 지표임)

[그림 18]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2026)

(단위: %)



○ **재정자립도(21.81%)와 재정자주도(35.37%)의 전국 최하위 수준 직면**

- 2026년 본예산 기준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1.81%로 전국 평균(31.24%)을 9.43%p 밑돌며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일반재원(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해 자율적 집행 여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35.37%로 전국 평균(50.54%)에 크게 미달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자체 세원 발굴의 한계와 함께 정책적 가용 재원의 재량권이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음을 나타냄

○ **자체사업비율 최하위(22.13%)와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의 한계**

- 전북의 자체사업비율은 22.13%로 전국 평균(29.54%)보다 7.41%p 낮고 서울(48.34%), 대전(38.59%), 경기(38.08%) 등 수도권·대도시권은 물론 타 도 단위(강원 25.80%, 충북 26.33%, 충남 27.16%) 대비 가장 낮게 형성됨
- 이는 전체 세출 예산 중 중앙정부 복지·개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필수 매칭(지방비 부담) 비중이 높아, 지자체 고유의 지역 현안 해결이나 전략 산업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독자적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은 실태를 방증함

○ **통합재정수지 적자(-2.51%) 관리와 자주재원 확충 기반 마련 필요**

- 전북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51%로 전국 평균(-3.56%)보다는 적자 폭이 다소 완화된 상태이나, 재정수입 기반(자체재원비율 23.2%)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지목됨
- 인접 지역(전남 자립도 23.36%·자주도 37.10%, 경북 23.12%·39.10%)과 비교해도 재정 체력이 가장 열세에 있는 만큼, 전북특별법상의 재정 분권 특례를 구체화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낙후도 반영 비율 확대 등 실질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표 17] 전북 시·군 예산기준 주요 재정지표 값 (202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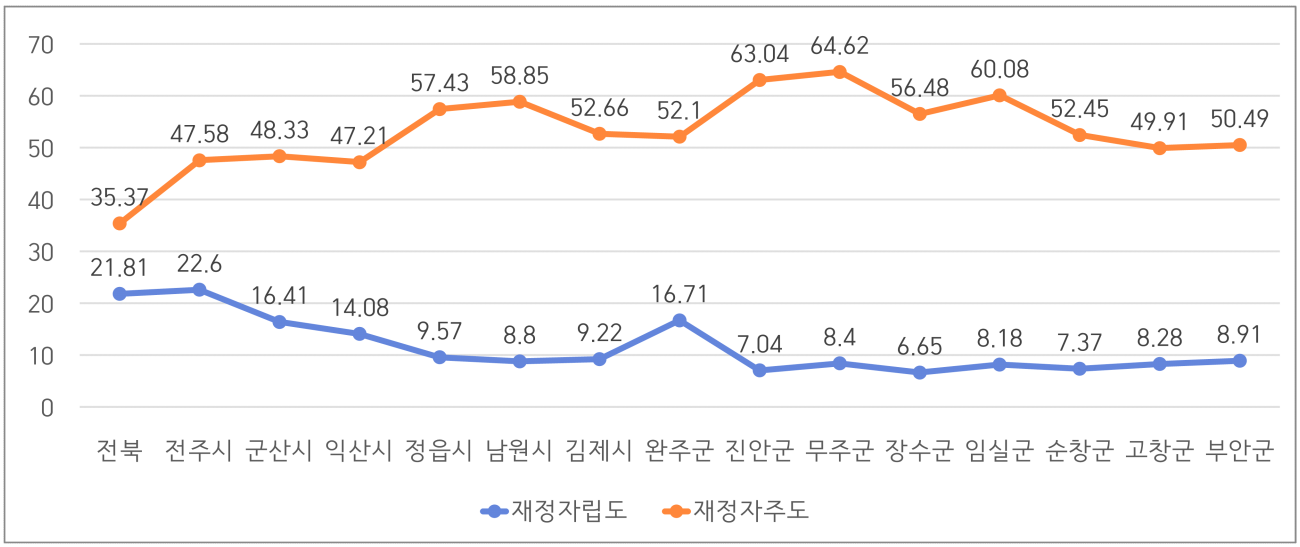
구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재원비율 (지방세+세외수입)	지방보조금비율	통합재정수지	자체사업비율
본청	21.81	35.37	23.2	1.01	-2.51	22.13
전주시	22.6	47.58	22.6	0.74	-1.43	18.15
군산시	16.41	48.33	16.4	0.88	-6.74	20.32
익산시	14.08	47.21	14.1	1.71	-4.23	20.62
정읍시	9.57	57.43	9.6	2.38	-3.62	23.91
남원시	8.8	58.85	8.8	2.64	-1.26	25.37
김제시	9.22	52.66	9.2	2.48	-2.45	22.01
완주군	16.71	52.1	16.7	1.65	-3.34	27.16
진안군	7.04	63.04	7	2.69	-5.28	24.51
무주군	8.4	64.62	8.4	2.51	-1.71	25.44
장수군	6.65	56.48	6.7	3.69	-3.39	22.93
임실군	8.18	60.08	8.2	3.7	-2.12	24.46
순창군	7.37	52.45	7.4	3.62	-4.47	24.6
고창군	8.28	49.91	8.3	2.37	-3.02	23.12
부안군	8.91	50.49	8.9	2.46	-5.17	24.03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시 「한눈에보는 지방재정(예산기준)>

※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이며, 자체재원비율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통합예산 기준임
※ 당해 연도 본예산(당초예산) 기준으로 최종 결산 기준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통합재정수지비율 = [세입 - (세출 +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차입금 및 채무상환,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의 건전성 지표임)

[그림 19] 전북 시·군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단위: %)



○ **시·군 간 자체 세원 격차 심화와 군 지역의 한 자릿수 자립도 고착**

- 2026년 본예산 기준 도내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주시(22.60%), 완주군(16.71%), 군산시(16.41%) 순으로 나타나 산업·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 반면 장수군(6.65%), 진안군(7.04%), 순창군(7.37%) 등 동부권을 비롯한 10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및 7개 군)은 자립도가 10% 미만에 머물러 있어, 도내 기초지자체 대다수가 자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만으로는 법정 필수 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세원 편차를 보임

○ **지방교부세 기반의 높은 재정자주도(50~64%대)와 도 본청-시·군 간 괴리**

-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군 지역의 경우 보통교부세 등 일반재원의 비중이 커지면서 재정자주도는 무주군(64.62%), 진안군(63.04%), 임실군(60.08%) 등 50~60%대 중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북 평균 수치(35.37%)에 비해 기초 시·군의 자주도(47~64%대)가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지표상 역전이 발생하며, 이는 광역 차원의 전략적 가용 재원 제약과 기초단체의 교부세 의존형 재정 구조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됨

○ **전 시·군 통합재정수지 적자 편성과 중추도시 전주의 역설적 자체사업 위축**

- 14개 시·군 전체가 -1.26%(남원시)에서 -6.74%(군산시)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로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연도 세입 대비 세출 초과 구조가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자체사업비율의 경우,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중추도시 전주시(18.15%)가 군산시(20.32%), 익산시(20.62%)는 물론 완주군(27.16%), 무주군(25.44%) 등 군 지역보다도 현저히 낮아 도내 14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함
- 이는 대도시일수록 인구 집중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영유아 보육·기초연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의무 매칭(시비 분담)' 부담이 집중되어, 겉보기 재정자립도와 달리 실질적인 가용 예산이 법정 의무지출에 우선 잠식당하는 재정 구조적 역설에 기인함
- 결과적으로 도내 거점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중앙부처 보조사업 대응에 예산이 묶여,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순수 자체사업 투자 여력이 제약받고 있음을 나타냄

12. 주민 1인당 자체수입 및 세부담 현황

[표 18] 주민 1인당 자체수입 및 세부담 현황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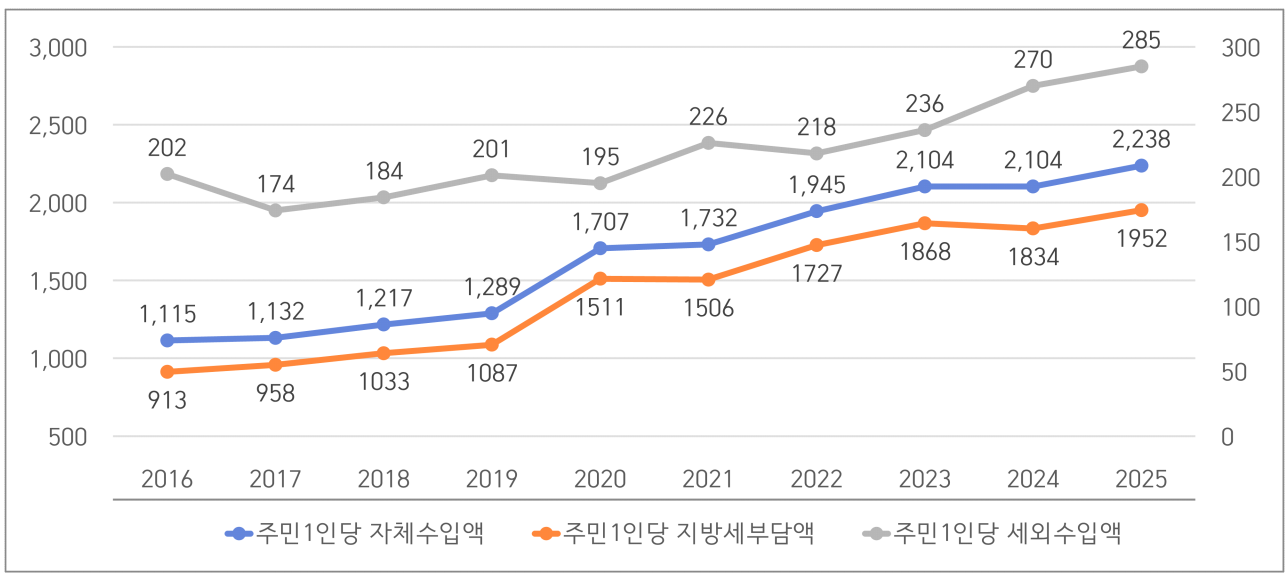
(단위: 천 원)

구분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A+B)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A)	주민1인당 세외수입액 (B)
전국	2,514	2,247	267
서울특별시	3230	2,946	284
부산광역시	2,127	1,984	142
대구광역시	1,961	1,814	146
인천광역시	2,282	2,011	271
광주광역시	2,028	1,862	167
대전광역시	1,868	1,711	156
울산광역시	2,409	2,154	254
세종특별자치시	2,345	2,169	176
경기도	2,435	2,166	270
강원특별자치도	2,508	2,025	483
충청북도	2,397	2,146	250
충청남도	2,708	2,430	279
전북특별자치도	**2,238**	**1,952**	**285**
전라남도	2,563	2,235	328
경상북도	2,405	2,086	319
경상남도	2,347	2,010	337
제주특별자치도	3,168	2,881	288

<출처: 지방재정 365(지방재정지표)>

[그림 20] 전북 주민 1인당 자체수입 및 세부담 현황 (2016~2025)

(단위: 천 원)



○ **전국 도(道) 단위 최하위의 자체수입액과 취약한 세원**

- 2025년 전북의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223만 8천 원으로 전국 평균(251만 4천 원)을 크게 밑돌며, 9개 도(道) 단위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최하위 수준을 기록함. 특히 자체수입의 핵심인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역시 195만 2천 원에 그쳐 도 단위 중 유일하게 200만 원 선을 밑돌아, 소비 위축에 따른 전북의 열악한 세원 현실을 여실히 보여줌

○ **10년간 2배 급증에도 타 시·도 대비 취약한 세수 창출력과 인구 감소 착시**

- 전북의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2016년 111만 5천 원에서 2025년 223만 8천 원으로, 지방세부담액은 91만 3천 원에서 195만 2천 원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임.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는 자체 세수 확충의 실질적 결실이라기보다는 도내 인구의 급격한 유출·감소로 인해 분모가 줄어들며 발생한 통계적 착시 효과가 크며, 타 시·도와의 절대적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못하고 있음

○ **세외수입 비중 한계 극복 및 특별자치도 특례 연계 자주재정 확충 시급**

-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은 28만 5천 원으로 전국 평균(26만 7천 원)을 소폭 웃돌고 있으나, 강원(48만 3천 원), 경남·북(31~33만 원대) 등과 비교할 때 공유재산 활용 및 사용료 수익 기반이 여전히 취약함. 취약한 지방세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공유재산 적극 개발 및 공공시설 수수료 체계 현실화 등 세외수입원을 다각화하고, 실질적인 자주재원 확충 기반을 다져야 함

13.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

[표 19]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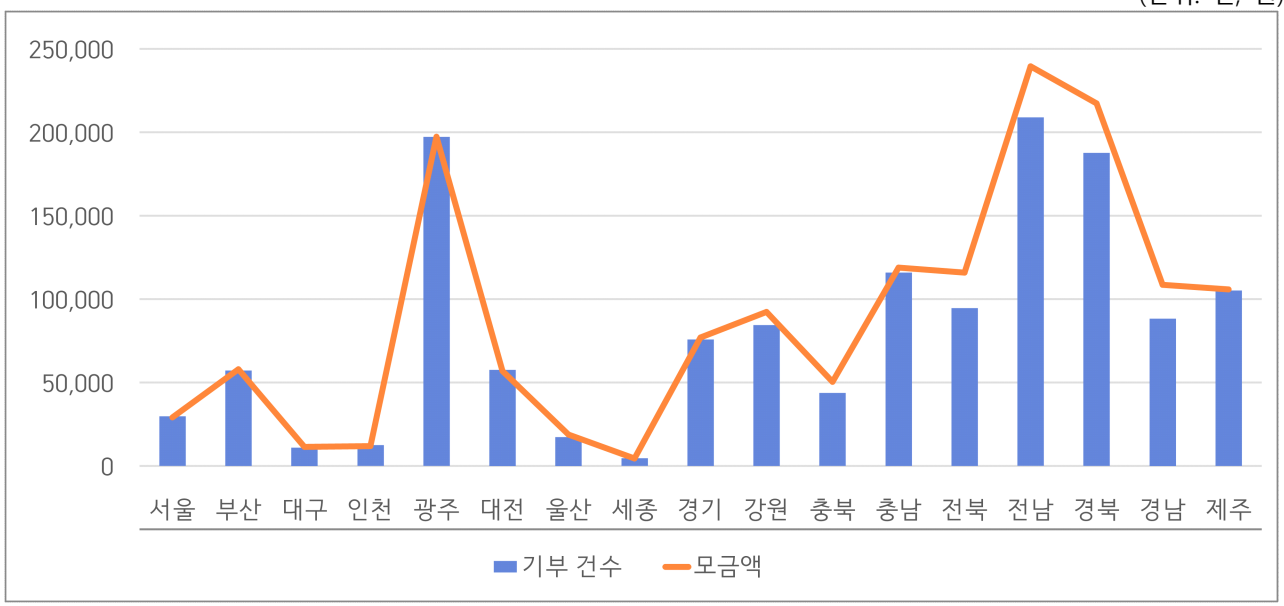
(단위: 건, 원)

구분	기부 건수	비율	순위	모금액	비율	순위
서울특별시	29,714	2.1%	13	2,912,523,990	1.9%	13
부산광역시	57,214	4.1%	11	5,801,202,006	3.8%	10
대구광역시	11,028	0.8%	16	1,146,893,900	0.8%	16
인천광역시	12,447	0.9%	15	1,193,809,268	0.8%	15
광주광역시	197,256	14.2%	2	19,739,708,281	13.0%	3
대전광역시	57,649	4.1%	10	5,695,200,102	3.8%	11
울산광역시	17,340	1.2%	14	1,884,600,934	1.2%	14
세종특별자치시	4,593	0.3%	17	452,595,600	0.3%	17
경기도	75,819	5.4%	9	7,705,579,746	5.1%	9
강원특별자치도	84,435	6.1%	8	9,237,904,142	6.1%	8
충청북도	43,742	3.1%	12	5,045,511,494	3.3%	12
충청남도	115,939	8.3%	4	11,894,263,969	7.9%	4
전북특별자치도	**94,646**	**6.8%**	**6**	**11,594,456,568**	**7.7%**	**5**
전라남도	208,877	15.0%	1	23,961,462,347	15.8%	1
경상북도	187,649	13.5%	3	21,739,343,750	14.4%	2
경상남도	88,322	6.3%	7	10,862,882,173	7.2%	6
제주특별자치도	105,180	7.6%	5	10,588,038,370	7.0%	7

<출처: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그림 21]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 및 모금액 현황 (2025)

(단위: 건, 원)



○ **115억 원대 모금 달성 및 전국 상위권(5위) 진입을 통한 독자적 입지 확보**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약 115억 9,446만 원(점유율 7.7%)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5위, 기부 건수는 9만 4,646건(점유율 6.8%)으로 6위를 기록하며 제도 안착과 함께 전국 상위권의 우수한 모금 성과를 거둠

○ **높은 건당 평균 기부액과 인접 선두권 지자체 대비 모금 격차**

- 전북의 건당 평균 기부액은 약 12만 2,500원으로 경남(약 12만 3,000원)에 이어 전국 2위이며, 전국 평균(약 10만 9천 원)을 약 1만 4천 원 웃돎
- 다만 모금액 1~3위인 전남(약 239억 6천만 원, 20.9만 건), 경북(약 217억 4천만 원, 18.8만 건), 광주(약 197억 4천만 원, 19.7만 건)와 비교하면 전북의 모금액은 이들의 48~59% 수준이고, 기부 건수도 절반 안팎(9.5만 건)여서 기부 참여 저변 확대가 과제임

○ **기부자 재참여 유인을 위한 매력적 답례품 발굴 및 기금사업 차별화 필요**

- 인구 규모와 재정력이 취약한 도의 여건상 기부금 유치가 중요한 만큼, 기부 건수 확대를 위해 전북 농수특산물 및 체험·관광형 답례품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다변화하고, 모금된 기금을 청년 정착·취약계층 복지 등 주민 체감형 목적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기부 만족도와 재기부율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요구됨

[표 20] 전북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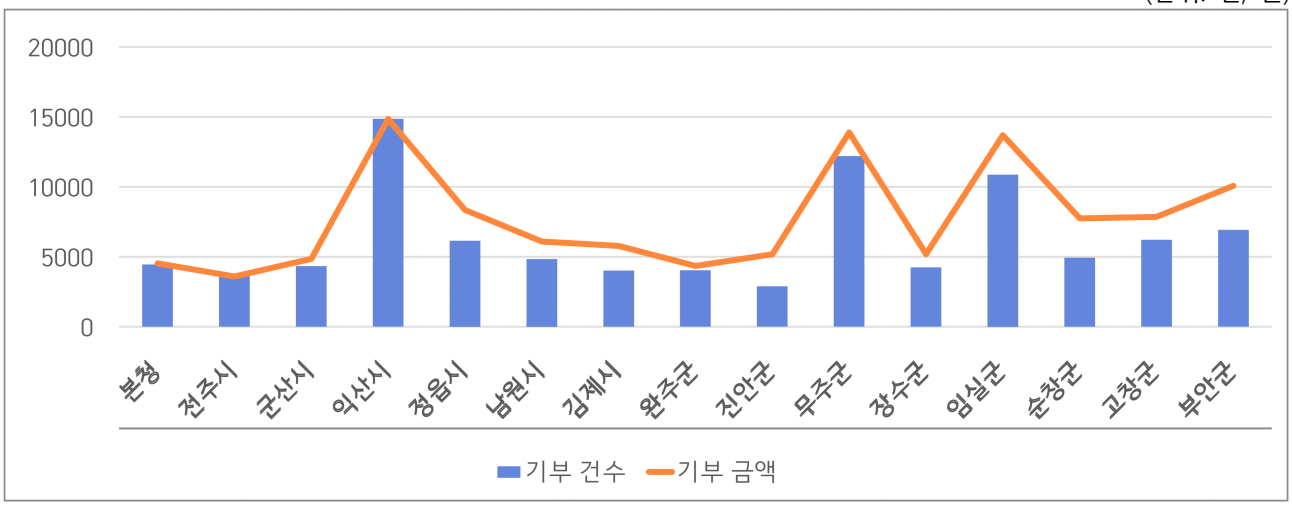
(단위: 건, 원)

시군명	기부 건수	기부 금액	답례품 제공 건수
본청	4,449	452,540,800	3,285
전주시	3,715	358,908,800	2,141
군산시	4,331	484,834,000	3,500
익산시	14,855	1,484,823,700	13,452
정읍시	6,153	834,088,934	6,390
남원시	4,848	608,935,200	5,217
김제시	4,012	577,262,400	4,071
완주군	4,028	434,171,100	3,498
진안군	2,883	517,498,134	5,352
무주군	12,194	1,388,001,600	13,501
장수군	4,235	518,713,500	6,995
임실군	10,885	1,368,468,900	13,784
순창군	4,930	774,226,800	8,483
고창군	6,209	784,827,000	5,969
부안군	6,919	1,007,155,700	11,496
계	94,646	11,594,456,568	107,134

<출처: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그림 22] 전북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 및 모금액 현황 (2025)

(단위: 건, 원)



○ **시·군 간 모금 양극화 속 4대 선도 시·군(익산·무주·임실·부안)의 10억 원 돌파 견인**

- 익산시(14.8억 원, 1만 4,855건)를 필두로 무주군(13.9억 원), 임실군(13.7억 원), 부안군(10.1억 원) 등 상위 4개 시·군이 각각 10억 원 이상을 유치하며 도내 전체 모금액의 45.27%(약 52억 5천만 원)를 견인하는 뚜렷한 선도 효과를 나타냄

○ **도 본청 및 대도시권(전주·군산)의 상대적 부진과 인구 규모 역전 현상**

- 도내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전주시(3.6억 원, 3,715건)가 14개 시·군 중 최하위 모금액에 머무르고 군산시(4.8억 원)와 도 본청(4.5억 원) 또한 5억 원 미만에 그치는 등 일부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강세하는 역전 양상을 띰

○ **답례품 경쟁력 기반의 농산어촌 선전과 도 차원의 광역 홍보·기금사업 모델 확산 필요**

- 지역 대표 특산물 중심의 답례품 경쟁력을 갖춘 무주·임실 등 일부 군 지역이 10억 원 이상의 모금 성과를 거두며 선전한 반면, 도 본청 및 대도시권은 3~4억 원대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모금 동력이 약한 상태임
- 따라서 도시권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체험형 답례품 발굴과 함께, 시·군 개별 홍보의 한계를 넘어 도 차원의 통합 마케팅망을 구축하고 기부 효능감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광역 연계형 특화 기금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14. 주민자치회 수

[표 21] 주민자치회 수 (2019~2025)

(단위: 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408	626	1,013	1,385	1,316	1,313	1,463
서울특별시	144	171	200	268	214	166	216
부산광역시	10	10	10	23	10	7	10
대구광역시	6	6	6	6	6	6	6
인천광역시	34	70	90	142	142	142	146
광주광역시	21	32	32	65	49	80	96
대전광역시	18	21	48	50	53	53	53
울산광역시	4	4	7	13	15	15	15
세종특별자치시	4	10	20	22	22	24	24
경기도	47	104	209	325	309	291	318
강원특별자치도	29	42	48	40	67	47	71
충청북도	3	3	11	27	27	27	27
충청남도	45	64	91	107	92	91	93
전북특별자치도	**2**	**3**	**5**	**12**	**12**	**17**	**21**
전라남도	15	28	54	58	60	78	89
경상북도	2	10	28	29	29	30	30
경상남도	24	48	154	198	209	231	240
제주특별자치도	-	-	-	-	-	8	8

<출처: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

[표 22] 주민자치회 전환 현황 및 전환율 비교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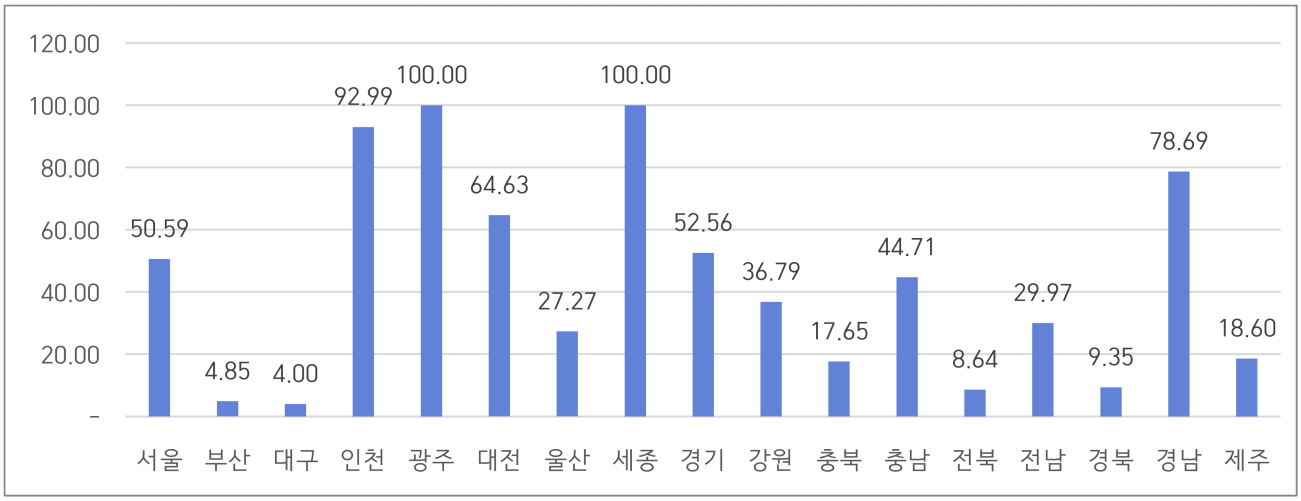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전체 읍·면·동 (A)	주민자치회 설치 수 (B)	주민자치회 전환율 (B/A × 100)
전국	3,565	1,463	41.00
서울특별시	427	216	50.59
부산광역시	206	10	4.85
대구광역시	150	6	4.00
인천광역시	157	146	92.99
광주광역시	96	96	100.00
대전광역시	82	53	64.63
울산광역시	55	15	27.27
세종특별자치시	24	24	100.00
경기도	605	318	52.56
강원특별자치도	193	71	36.79
충청북도	153	27	17.65
충청남도	208	93	44.71
전북특별자치도	**243**	**21**	**8.64**
전라남도	297	89	29.97
경상북도	321	30	9.35
경상남도	305	240	78.69
제주특별자치도	43	8	18.60

<출처: 2026 행정안전통계연보>

[그림 23] 주민자치회 전환율 (2025)

(단위: %)



○ **도(道) 단위 최하위 수준의 주민자치회 전환율(8.64%)**

- 2025년 기준 전북의 전체 243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곳은 21개로 전환율 8.64%를 기록함
- 이는 세종(100%), 광주(100%), 인천(92.99%) 등 특·광역시뿐만 아니라 경남(78.69%), 충남(44.71%), 강원(36.79%), 전남(29.97%) 등 여타 도 단위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며 도 단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부산(4.85%)과 대구(4.00%)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권으로, 행정구역 규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전환 보급이 타 시·도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 **연도별 점진적 확대(2개→21개)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확산세 대비 격차 지속**

- 동 기간 전국 합계가 408개에서 1,463개로 3.6배 확대되는 동안 전북은 10.5배 늘어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경남(24개→240개, 10.0배)과 유사하고 전남(15개→89개, 5.9배)·충남(45개→93개, 2.1배)보다 빠른 수준임. 다만 2019년 기저가 2개에 불과해 2025년 현재 전국 점유 비중은 1.44%(읍·면·동 비중 6.8%)에 그치고, 전환율도 8.64%로 전국 평균(41.04%)과 약 32%p 격차가 지속됨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유인책 마련 필요**

- 풀뿌리 주민참여 활성화와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별 전환 컨설팅 지원 등 단계적 전환을 견인할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됨

15. 실질 학비 순부담액 수준

[표 23] 대학 등록금 (2023~2025)

(단위: 원)

구분	2023	2024	2025
전국	5,680,343	5,684,796	5,908,396
서울특별시	4,485,564	4,466,300	4,665,724
부산광역시	5,809,939	5,950,026	6,182,570
대구광역시	5,823,962	6,001,436	6,175,593
인천광역시	6,238,538	6,244,857	6,516,338
광주광역시	5,901,365	5,997,012	6,071,774
대전광역시	6,282,677	6,285,384	6,472,943
울산광역시	7,195,452	7,198,187	7,580,772
세종특별자치시	8,399,506	8,415,500	8,855,636
경기도	7,662,883	7,689,255	8,076,005
강원특별자치도	6,461,612	6,530,419	6,742,010
충청북도	6,244,560	6,237,546	6,439,982
충청남도	6,831,411	6,849,704	7,162,771
전북특별자치도	**5,818,284**	**5,757,025**	**5,912,957**
전라남도	5,154,213	5,202,201	5,362,393
경상북도	6,768,540	6,782,503	7,069,421
경상남도	5,491,118	5,279,114	5,357,800
제주특별자치도	4,247,553	4,259,725	4,283,722

<출처: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대학평균등록금 현황)>

※ 대상 학교는 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등을 포함함
※ 대학평균 등록금 산출 방식: [전체 학과(학과별·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학년별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 [전체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

[표 24] 재학생 1인당 장학금 (2023~2025)

(단위: 원)

구분	2023	2024	2025
전국	3,272,368	3,268,867	3,494,434
서울특별시	2,596,760	2,612,805	2,765,376
부산광역시	3,514,277	3,511,381	3,758,715
대구광역시	3,449,666	3,450,080	3,617,948
인천광역시	3,318,409	3,238,854	3,511,544
광주광역시	3,708,801	3,732,546	4,050,701
대전광역시	3,647,950	3,618,359	3,911,180
울산광역시	3,753,626	3,728,895	4,094,841
세종특별자치시	3,646,623	3,648,454	3,968,848
경기도	3,674,655	3,559,392	3,821,179
강원특별자치도	3,433,650	3,466,219	3,740,959
충청북도	3,701,819	3,678,951	3,957,338
충청남도	3,842,929	3,801,768	4,037,272
전북특별자치도	**3,420,170**	**3,441,950**	**3,693,269**
전라남도	3,640,335	3,847,616	4,073,540
경상북도	4,065,507	4,148,342	4,502,042
경상남도	3,410,806	3,426,985	3,717,555
제주특별자치도	2,791,419	2,935,677	3,011,535

<출처: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재학생 1인당 장학금)>

※ 대상 학교는 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등을 포함함
※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산출 방식: (교내장학금합+교외장학금합)/재학생수

[표 25] 전국 시·도별 실질 등록금 부담액 및 장학금 수혜율 (2025)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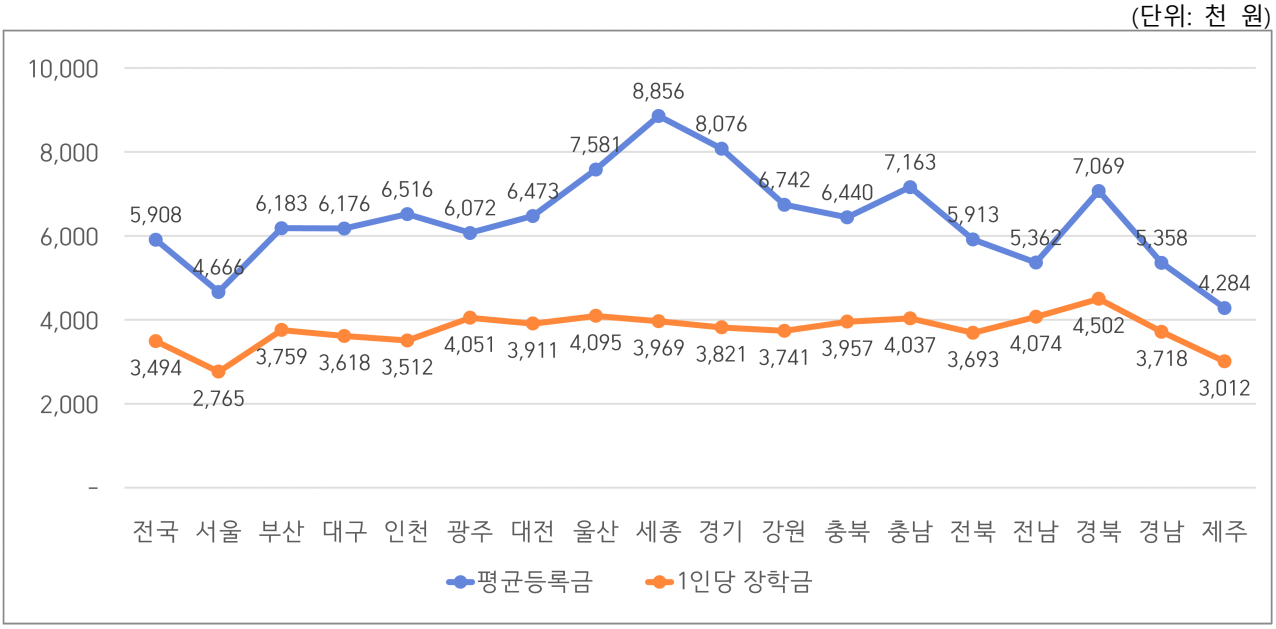
구분	평균등록금(A)	1인당 장학금(B)	실질 등록금 부담액	장학금 수혜율
전국	5,908,396	3,494,434	2,413,962	59.14
서울	4,665,724	2,765,376	1,900,348	59.27
부산	6,182,570	3,758,715	2,423,855	60.80
대구	6,175,593	3,617,948	2,557,645	58.58
인천	6,516,338	3,511,544	3,004,795	53.89
광주	6,071,774	4,050,701	2,021,073	66.71
대전	6,472,943	3,911,180	2,561,763	60.42
울산	7,580,772	4,094,841	3,485,931	54.02
세종	8,855,636	3,968,848	4,886,789	44.82
경기	8,076,005	3,821,179	4,254,827	47.32
강원	6,742,010	3,740,959	3,001,051	55.49
충북	6,439,982	3,957,338	2,482,644	61.45
충남	7,162,771	4,037,272	3,125,499	56.36
전북	**5,912,957**	**3,693,269**	**2,219,688**	**62.46**
전남	5,362,393	4,073,540	1,288,853	75.96
경북	7,069,421	4,502,042	2,567,379	63.68
경남	5,357,800	3,717,555	1,640,245	69.39
제주	4,283,722	3,011,535	1,272,187	70.30

<출처: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대학평균등록금 현황, 재학생 1인당 장학금)>

※ 실질 등록금 부담액=A-B, 장학금 수혜율=(B/A)×100)

[그림 24] 전국 시·도별 대학 평균등록금 및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2025)

(단위: 천 원)



○ **전국 평균보다 낮은, 중간 이하 수준의 실질 등록금 순부담액(222만 원)**

- 2025년 전북의 실질 등록금 부담액(순부담액)은 221만 9,688원으로 전국 평균(241만 3,962원) 대비 약 19만 4천 원 낮으며, 세종(488.7만 원), 경기(425.5만 원), 충남(312.5만 원) 등 타 시·도 대비 학비 순부담 규모가 현저히 낮게 형성되어 있음

○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장학금 수혜율(62.5%)과 3개년 수혜액 확대세**

- 전북의 2025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은 62.46%로 전국 평균(59.14%)을 3.32%p 상회하며,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액 또한 2023년 342만 원, 2024년 344.2만 원, 2025년 369.3만 원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함

- 그 결과 공시 등록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통한 실질 학비 경감 효과가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함

○ **인근 남부권 대비 실질부담 격차 해소와 '전북형 RISE 정주 장학체계' 연계 필요**

- 양호한 전국 대비 지표 이면에는 전남(실질부담 128.9만 원, 수혜율 75.96%), 경남(164.0만 원, 69.39%), 광주(202.1만 원, 66.71%) 등 인접 호남·남부권 대비 여전히 1인당 순부담액(222.0만 원)이 높고 장학금 수혜율(62.46%)이 낮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특히 전북의 취약한 1인당 자체수입 및 주민 소득 기반을 감안할 때 가계가 느끼는 교육비 체감 압박은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단순 등록금 완화를 넘어, 2025년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농생명·이차전지·바이오 등 지역 주력 전략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긴밀히 연계하여, 졸업 후 도내 취업·정주를 조건으로 학비를 파격 지원하는 '전북형 인재양성·정주 장학모델'을 확충함으로써 학생 실질 순부담액을 인접 남부권 수준으로 경감시켜야 함

16. 균형발전지표

[표 26] 균형발전지표 (핵심·객관지표)

순번	부문	지표명	단위	**전북**	전국	기준년도
1	핵심지표	최근 5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	**-0.60**	-	(2020~2024)년
2	핵심지표	재정자립도 3개년 평균	%	**22.61**	40.47	(2022~2024)년
3	인구	인구증감률	%	**-0.70**	0.06	2024년
4	인구	합계출산율	가임여성 1명당 명	**0.81**	0.75	2024년
5	인구	조사망률	1천명당 명	**9.82**	7.03	2024년
6	인구	인구총조사 외국인수	명	**57,688**	2,042,744	2024년
7	인구	노령화지수	1백명당 명	**247.50**	186.70	2024년
8	인구	청년층순이동률	%	**-2.70**	-	2024년
9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비스권역내 영유아인구 비율	%	**83.73**	85.50	2024년
10	교육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	**55.09**	53.65	2024년
11	교육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	**59.70**	62.80	2024년
12	교육	인구 만명당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수	개소	**0.50**	0.75	2024년
13	주거및교통	노후주택비율	%	**34.40**	25.80	2023년
14	주거및교통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9.89**	26.38	2023년
15	문화여가	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57**	59.10	2024년
16	문화여가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	**11.69**	19.88	2024년
17	문화여가	지자체 예산 중 문화예산 비율	%	**5.08**	4.03	2025년
18	안전	소방서 접근성	km	**8.62**	8.31	2024년
19	안전	경찰서 접근성	km	**4.60**	5.60	2024년
20	안전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수	주민수/구조구급대원1명	**1,376**	2,567	2023년
21	안전	119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수	주민수/119안전센터1개	**31,905**	45,380	2023년
22	안전	지진옥외대피소 접근성	km	**3.17**	4.49	2024년
23	생활환경	하수도보급률	%	**92**	95.40	2023년

24	생활환경	생활권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56.20**	67.35	2024년
25	생활환경	행정구역면적당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톤/km²	**23,652.01**	36,741.44	2022년
26	생활환경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	**54.04**	58.71	2023년
27	생활환경	행정구역면적 대비 공원면적비	%	**0.48**	0.70	2024년
28	생활환경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kg/명	**353.16**	325.09	2023년
29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7.21**	4.79	2023년
30	보건복지	지자체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	%	**30.90**	37.10	2022년
31	보건복지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개소/십만명	**20.70**	16.30	2022년
32	보건복지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	**83.44**	89.89	2024년
33	보건복지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12.98**	16.50	2024년
34	생산·분배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비중	%	**29.26**	34.99	2024년
35	산업일자리	사업체수 증감률(최근 3개년)	%	**1.79**	1.36	(2021~2023)년
36	산업일자리	종사자수 증감률(최근 3개년)	%	**0.50**	1.03	(2021~2023)년
37	산업일자리	경제활동참가율	%	**65.40**	64.50	2024년
38	산업일자리	연구개발인력당 연구개발비	천원/연구개발인력1명	**239,162.15**	316,822.31	2023년
39	산업일자리	창업기업수 증감률(최근 3개년)	%	**1.84**	-6.54	(2021~2023)년
40	산업일자리	지식기반제조업 입지계수 3개년 평균	종사자기준	**0.43**	-	(2021~2023)년
41	산업일자리	지식기반서비스업 입지계수 3개년 평균	종사자기준	**0.64**	-	(2021~2023)년
42	생산·분배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 백만원	**63,751,865**	2,411,863,556	2023년
43	생산·분배	지역내 무역거래량	단위 : 백만달러	**11,815**	1,315,376	2024년
44	생산·분배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단위 : 천원	**20,394**	23,202	2023년
45	물가·재정	소비자물가상승률	%	**2.30**	2.30	2024년
46	물가·재정	지가변동률	%	**0.49**	2.15	2024년
47	물가·재정	재정자립도	%	**23.58**	41.62	2024년

<출처: NABIS 균형발전지표, 균형발전지표 총괄: 지방시대위원회 균형성장지원과>

※ 전국 수치가 공란(-)인 지표(최근 5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청년층 순이동률, 지식기반제조·서비스업 입지계수)는 지표 산출 기준상 전국(전국=0 또는 전국=1.00)을 기준점으로 삼아 지역 간 상대비교만 제공되거나 미제공된 항목임

※ 입지계수는 전국 대비 전북의 집적도를 의미하며, 1.00 초과 시 전국 대비 특화, 1.00 미만 시 열세를 나타냄

※ 안전 분야(소방서·경찰서·대피소) 접근성(km)은 거리가 짧을수록, 1인당(1개소당) 담당 주민 수는 적을수록 공공서비스 여건이 양호함을 의미함, 외국인 수는 등록외국인+거소신고+미등록 포함함

○ **심화되는 인구 유출·초고령화와 구조적 재정력 취약의 악순환 지속**

- 전북은 최근 5년 연평균 인구증감률(-0.60%)과 청년층 순이동률(-2.70%) 모두 뚜렷한 감소·유출세를 보이고 있어 생산가능인구의 역외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령화지수는 247.50으로 고령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7.21%, 전국 4.79%) 등 복지 수요는 과다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23.58%(전국 41.62%)에 불과하여 자체 세원만으로는 급증하는 법정 의무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함

○ **미래 신산업 인프라 열세 속 창업 중심의 자생적 산업 생태계 태동**

- 지식기반제조업(0.43) 및 지식기반서비스업(0.64) 입지계수가 전국 기준(1.00)에 크게 미달하고, 연구개발인력당 R&D 투자액(2.39억 원, 전국 3.17억 원)도 열세에 머물러 고부가가치 미래 지식산업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
- 그러나 전국적인 창업 위축세(-6.54%) 속에서도 전북의 최근 3개년 창업기업수 증감률은 +1.84%로 반등하고 사업체수 증감률(1.79%, 전국 1.36%)도 양호하여, 전국적인 창업 위축(-6.54%) 속에서도 지식기반제조·서비스업 입지계수가 낮아 향후 고부가가치 기술창업으로의 질적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함

○ **정주·의료 인프라 공백 극복과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확충 시급**

- 대중교통 분담률(9.89%, 전국 26.38%)과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34.40%, 전국 25.80%)이 취약하고, 응급의료시설(83.44%) 및 병원(12.98%) 서비스권역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아 도민의 기본적 이동·정주·의료 기본권 보장이 시급한 상태임
- 따라서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24~2033)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시설별 도보 5~15분, 차량 10~30분 이내 접근)을 지향하되, 인구과소지역은 방침이 제시한 수요응답형 교통 등 전달 체계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북특별법상의 균형발전 특례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하여 동부권 등 인구과소지역 중심의 거점 의료·복합정주망을 조속히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토대로 마을시설 도보 10분(750m), 지역거점시설 차량 20분(10km)으로 측정

예산·정책분석을 위한

통계 자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1. 농가 규모 및 구조

가. 농가 및 농가인구

[표 1] 2025년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시도별)

(단위: 가구, 명, %)

구분	농가			농가인구		
	2020	2025	증감률	계	남자	여자
소 계	1,035,193	1,241,730	20.0	2,506,639	1,258,628	1,248,011
서울	8,418	16,741	98.9	39,320	19,924	19,396
부산	11,967	15,928	33.1	34,628	17,410	17,218
대구	28,580	35,993	25.9	76,354	38,859	37,495
인천	13,239	17,705	33.7	38,687	19,394	19,293
광주	16,676	22,770	36.5	48,433	24,410	24,023
대전	13,491	18,830	39.6	40,521	20,861	19,660
울산	15,284	18,710	22.4	39,834	20,108	19,726
세종	7,163	9,237	29.0	20,539	10,310	10,229
경기	120,979	152,886	26.4	348,956	177,086	171,870
강원	67,436	78,899	17.0	158,786	81,001	77,785
충북	66,425	82,075	23.6	164,318	83,786	80,532
충남	122,142	135,745	11.1	267,151	133,619	133,532
전북	**93,305**	**108,315**	**16.1**	**206,922**	**103,694**	**103,228**
전남	136,972	154,423	12.7	286,735	140,231	146,504
경북	161,983	189,203	16.8	362,065	182,677	179,388
경남	120,768	146,117	21.0	284,366	140,055	144,311
제주	30,365	38,153	25.6	89,024	45,203	43,821

※ 출처 : 국가데이터처「농림어업총조사」,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표 2] 연도별 농가호수(1995~2025년)

(단위: 가구)

구 분	1995년	2005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 국	1,500,745	1,272,908	1,031,210	1,022,797	999,022	973,707	1,241,819
전 북	**152,275**	**121,749**	**90,862**	**90,455**	**90,003**	**87,718**	**108,326**
점유율	10.1%	9.6%	8.8%	8.8%	9.0%	9.0%	8.7%

※ 출처 : 국가데이터처「농림어업총조사」

[표 3] 연도별 농가인구(1995~2025년)

(단위: 명)

구 분	1995년	2005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 국	4,851,080	3,433,573	2,215,498	2,216,626	2,088,781	2,003,520	2,506,670
전 북	485,276	318,998	188,689	183,295	179,162	171,859	206,933
점유율	10.0%	9.3	8.5%	8.5%	8.6%	8.6%	8.3%

※ 출처 : 국가데이터처「농림어업총조사」

나. 농가 경영주 고령화율

[표 4] 2025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전국)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5	1,242 (100.0)	14 (1.1)	55 (4.4)	195 (15.7)	431 (34.7)	548 (44.1)
남 자	928 (100.0)	11 (1.2)	42 (4.5)	150 (16.2)	341 (36.7)	385 (41.5)
여 자	314 (100.0)	3 (0.9)	13 (4.1)	45 (14.2)	90 (28.9)	163 (51.9)
증 감	207	1	-7	-8	83	137
증감률	20.0%	10.2%	-11.5%	-3.7%	23.9%	33.3%

※ 출처 : 국가데이터처,「농림어업총조사」/ 주: 증감·증감률은 2020년 대비

[표 5] 연도별 농가 경영주 고령화율(전북)

(단위: 호,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영주 고령화율	63.7%	66.6%	69.3%	72.1%	65.2%
65세이상 농가수	57,858	60,230	62,350	63,215	70,670
전체 농가수	90,862	90,455	90,003	87,718	108,326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경영주 고령화율 시·도 단위별

다. 통계분석

○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전북 농가는 108,315가구, 농가인구는 206,922명으로 각각 전국의 8.7%, 8.3%를 차지함. 2020년 대비 농가 수는 16.1% 늘었으나 전국 증가율(20.0%)보다 3.9%p 낮아, 17개 시·도 중 충남(11.1%)·전남(12.7%)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율이 낮음[표 1]

○ 다만 2025년 조사부터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가 조사 대상 명부[1]에 새로 반영되면서,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던 소규모·부업 농가가 대거 포함되었음. 따라서 2025년의 증가를 실제로 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2021~2024년을 보면 전북 농가는 90,862가구에서 87,718가구로 3.5%, 농가인구는 188,689명에서 171,859명으로 8.9% 줄어 감소 추세가 이어졌음. 2025년 수치는 조사 기준이 바뀐 값이므로 이전 연도와 직접 비교하지 않아야 함[표 2·3]

○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는 구조적으로 심해지고 있음. 전국 농가 경영주의 78.8%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만 44.1%인 반면, 40세 미만은 1.1%(1만 4천 가구)에 불과함. 전북의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2021년 63.7%에서 2024년 72.1%로 3년간 8.4%p 높아졌음. 2025년에는 65.2%로 낮아졌으나, 이는 조사 대상이 넓어진 영향일 뿐 고령화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없음[표 4·5]

○ 따라서 청년농 유입·경영승계 지원과 고령농의 은퇴·농지 이양을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조사 기준이 바뀌면 크게 달라지는 비율(고령화율)보다 40세 미만 경영주 수, 농지 이양 면적 등 실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책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1)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부터 농지대장(농지 소유·이용 현황 장부)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조사할 농가 목록(조사 대상 명부)을 확대함에 따라, 종전 조사에서 빠져 있던 소규모·부업 농가가 새로 포함됨. 따라서 2024년 이전 수치와 단순 비교에 유의해야 함(통계청)

2. 농업 경영형태

가. 전 · 겸업별 농가

[표 1] 전·겸업별 농가현황(전국)

(단위: 가구)

행정 구역별	전체농가			전업농가			겸업농가		
	2005	2015	2025	2005	2015	2025	2005	2015	2025
전국	1,272,908	1,088,518	1,241,730	796,220	598,466	759,447	476,688	490,052	482,283
서울	3,496	3,911	16,741	1,305	1,174	6,501	2,191	2,737	10,240
부산	8,712	8,068	15,928	4,296	3,631	7,939	4,416	4,437	7,989
대구	16,292	16,571	35,993	7,983	7,251	19,247	8,309	9,320	16,746
인천	14,569	13,081	17,705	7,934	5,893	8,480	6,635	7,188	9,225
광주	14,050	12,036	22,770	7,258	5,709	12,185	6,792	6,327	10,585
대전	8,657	9,428	18,830	3,672	3,635	8,627	4,985	5,793	10,203
울산	11,980	12,385	18,710	6,252	5,094	9,884	5,728	7,291	8,826
세종	-	6,571	9,237	-	3,413	4,454	-	3,158	4,783
경기	141,503	126,679	152,886	70,513	53,322	78,192	70,990	73,357	74,694
강원	75,790	73,082	78,899	46,090	37,246	42,700	29,700	35,836	36,199
충북	85,723	74,611	82,075	55,479	41,405	52,191	30,244	33,206	29,884
충남	163,197	132,008	135,745	100,727	73,818	89,269	62,470	58,190	46,476
전북	**121,749**	**100,362**	**108,315**	**86,184**	**60,098**	**70,041**	**35,565**	**40,264**	**38,274**
전남	198,764	150,141	154,423	132,851	89,086	102,777	65,913	61,055	51,646
경북	216,128	184,642	189,203	153,123	118,897	134,195	63,005	65,745	55,008
경남	156,080	131,455	146,117	96,168	75,463	93,366	59,912	55,992	52,751
제주	36,218	33,487	38,153	16,385	13,331	19,399	19,833	20,156	18,754

※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5 농가경제조사」 농림어업총조사

[표 2] 전·겸업별 농가현황(전북)

(단위: 호)

구분	전체농가	전업농가[1]		겸업농가[2]		
		농가수	비율(%)	소계	1종*	2종*
2025년	108,315	70,041	64.7%	38,274	10,649	27,625
2015년	100,362	60,098	59.9%	40,264	18,312	21,952
2005년	121,749	86,184	70.8%	35,565	14,101	21,464

1) 전업농가: 연간 30일 이상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2) 겸업농가: 연간 30일 이상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1종 겸업농가: 농업 수입> 농업 외 수입
*2종 겸업농가: 농업 외 수입> 농업 수입
※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5 농가경제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나. 통계분석

○ 2025년 전북의 전업농가는 70,041가구로 전체 농가의 64.7%임. 전국 평균(61.2%)보다 3.5%p 높아 경북(70.9%)·전남(66.6%)·충남(65.8%)에 이어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높음[표 1]

○ 겸업농가 38,274가구 중 농업 외 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많은 2종 겸업농가는 27,625가구(72.2%)로, 농업 수입이 더 많은 1종 겸업농가(10,649가구, 27.8%)의 약 2.6배임. 즉 겸업농가 대부분은 농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음[표 2]

○ 전업농가 비중이 높다는 것은 농가소득이 농산물 가격과 작황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뜻임.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가격안정 지원 등 경영 안정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2종 겸업농가는 전업농가와 지원 수요가 다르므로, 직불금·교육 등의 사업 대상을 설계할 때 구분할 필요가 있음

다. 경지면적

[표 1] 연도별 경지면적(전국)

(단위: ha)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소계	1,546,716	1,528,237	1,512,144	1,504,614	1,499,910
	논	780,439	775,639	763,989	761,011	755,951
	밭	766,277	752,597	748,155	743,603	743,958
전북	소계	191,600	190,410	189,147	188,388	187,971
	논	123,903	123,820	121,553	121,610	121,226
	밭	67,697	66,589	67,594	66,778	66,745
전남	소계	281,076	277,095	274,435	273,506	272,982
	논	167,298	165,770	163,687	161,877	160,764
	밭	113,777	111,325	110,747	111,628	112,217
경북	소계	249,272	246,429	243,936	235,889	235,217
	논	102,399	102,302	100,586	97,926	97,006
	밭	146,873	144,126	143,349	137,962	138,211
경남	소계	138,184	136,294	134,738	134,242	133,925
	논	65,490	64,641	64,873	65,279	64,594
	밭	72,693	71,653	69,864	68,963	69,331
제주	소계	56,355	55,957	55,605	55,366	55,255
	논	13	12	12	12	12
	밭	56,341	55,945	55,592	55,354	55,243

※ 출처 : 국가데이터처,「농업면적조사」, 전국(도별) 논밭별 경지면적

[표 2] 2025년 시·군별 경지면적(전북)

(단위: ha)

구분	경지면적(계)	논	밭	구분	경지면적(계)	논	밭
전주시	4,730.55	2,468.11	2,262.44	진안군	6,492.11	1,803.29	4,688.82
군산시	13,694.55	12,097.69	1,596.86	무주군	4,680.61	745.12	3,935.49
익산시	**22,293.95**	17,330.78	4,963.17	장수군	6,622.27	2,819.48	3,802.78
정읍시	**21,191.25**	14,336.12	6,855.12	임실군	7,051.3	4,019.35	3,031.95
남원시	14,164.03	10,033.95	4,130.08	순창군	9,546.9	5,969.34	3,577.57
김제시	**26,200.76**	20,609.84	5,590.92	**고창군**	**23,452.15**	12,362.17	11,089.98
완주군	10,281.41	3,485.77	6,795.64	부안군	17,569.4	13,145.03	4,424.37

※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5 농업면적조사」, 시군별 논밭별 경지면적

라. 통계분석

○ 2025년 전북의 경지면적은 187,971ha로 전국(1,499,911ha)의 12.5%를 차지함. 2021년보다 1.9%(3,630ha) 줄어 해마다 약 900ha씩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전국(-3.0%)·경북(-5.6%)·경남(-3.1%)·전남(-2.9%)보다는 감소 폭이 작음[표 1]

○ 전북은 경지 가운데 논이 64.5%로 전국(50.4%)보다 14.1%p 높아, 쌀 수급·가격 정책과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구조임. 최근 4년간 논 면적은 2.2% 줄어 밭(-1.4%)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표 1]

○ 시·군별로는 김제(26,201ha, 13.9%)·고창(23,452ha)·익산(22,294ha)·정읍(21,191ha) 4개 시·군이 **도 전체 경지의 절반을(49.5%) 차지함**. 논 비중은 군산(88.3%)·김제(78.7%)·익산(77.7%) 등 서부 평야지역이 높고, 무주(15.9%)·진안(27.8%)·완주(33.9%) 등 동부 산간지역은 밭이 중심임. 따라서 논 타작물 전환, 밭 기반정비 등의 사업은 권역별 특성에 맞게 차등 설계할 필요가 있음[표 2]

마. 영농형태

[표 1] 경영형태별 시도별 농가(2025년)

(단위: 가구)

구분	합계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기타작물	축산
전국	1,241,730	450,976	180,767	254,126	62,243	212,078	9,325	21,382	12,864	37,969
서울	16,741	4,236	4,930	3,266	814	2,438	203	578	180	96
부산	15,928	3,976	1,642	5,311	224	3,870	169	428	211	97
대구	35,993	9,961	3,031	8,546	1,721	10,562	306	853	501	512
인천	17,705	7,250	5,117	2,838	468	1,403	93	179	124	233
광주	22,770	10,693	2,455	3,908	324	3,628	150	1,150	231	231
대전	18,830	4,488	4,096	4,002	1,831	3,469	199	450	140	155
울산	18,710	6,038	2,947	4,888	287	3,362	116	169	219	684
세종	9,237	3,649	1,359	1,068	671	1,651	60	308	82	389
경기	152,886	58,500	32,865	27,400	10,531	12,848	811	3,522	1,307	5,102
강원	78,899	13,977	27,546	19,975	7,220	5,014	900	790	569	2,908
충북	82,075	23,815	16,323	12,987	8,081	14,965	860	1,321	736	2,987
충남	135,745	67,987	17,213	23,715	8,708	9,834	628	1,473	1,483	4,704
전북	**108,315**	**52,696**	**14,086**	**19,787**	**4,939**	**9,134**	**605**	**2,548**	**862**	**3,658**
전남	154,423	69,108	14,975	35,447	3,465	19,992	1,121	3,670	1,815	4,830
경북	189,203	61,392	16,606	32,906	8,543	58,230	1,576	1,233	1,975	6,742
경남	146,117	53,193	11,891	39,183	4,064	28,110	1,423	2,355	1,774	4,124
제주	38,153	17	3,685	8,899	352	23,568	105	355	655	517

※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5 농가경제조사」,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바. 통계분석

○ 2025년 전북 농가 가운데 논벼 농가는 52,696가구(48.7%)로 전국(36.3%)보다 12.4%p 높으며, 17개 시·도 중 충남(50.1%) 다음으로 높음. 반면 과수 농가 비중은 8.4%로 전국(17.1%)의 절반 수준임[표 1]

○ 전북 농가는 전국 농가의 8.7%인데, 화초·관상작물 농가(2,548가구)는 전국의 11.9%, 축산 농가(3,658가구)는 전국의 9.6%를 차지해 전북의 특화 분야로 볼 수 있음. 반면 채소·산나물(도내 비중 18.3%, 전국 20.5%)과 식량작물(13.0%, 전국 14.6%)은 도내 비중이 전국보다 다소 낮음[표 1]

○ 쌀 한 가지 작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쌀값이 떨어질 때 도내 농가소득 전체를 끌어내리는 위험 요인이 됨. 따라서 논에 콩·가루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타작물 전환과 고소득 원예·특화작목으로의 전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가축사육 현황

가. 사육현황

[표 1] 2025년 가축 사육현황

(단위: 가구, 마리)

	전국(A)		전북특별자치도(B)	
	농가수	마리수	농가수	마리수
계	91,294	208,492,426	10,011	38,537,856
한·육우	77,372	3,334,022	8,314	417,721
젖소	5,313	374,842	414	30,460
돼지	5,383	10,791,561	635	1,235,951
닭	2,827	187,070,026	556	35,285,672
오리	399	6,921,975	92	1,568,052

*주: 닭·오리는 닭 3,000수 이상, 오리 2,000수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작성
※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5 가축동향조사」 4/4분기(12월1일 기준)

[표 2] 2025년 가축사육 점유율(전북)

(단위: 가구, 마리)

	농가수(호)	사육두수(마리수)	전국 대비 점유율(%)		
계	10,011	38,537,856	전국	208,492,426두의	18.48%
한육우	8,314	417,721	전국	3,334,022두의	12.53%
젖소	414	30,460	전국	374,842두의	8.13%
돼지	635	1,235,951	전국	10,791,561두의	11.45%
닭	556	35,285,672	전국	187,070,026두의	18.86%
오리	92	1,568,052	전국	6,921,975두의	22.65%

*주: 닭·오리는 닭 3,000수 이상, 오리 2,000수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작성
※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5 가축동향조사」 4/4분기(12월1일 기준) 자료 재편집

나. 통계분석

○ 2025년 말 전북의 가축 사육 농가는 10,011호로 전국의 11.0%, 사육 마릿수는 3,854만 마리로 전국의 18.5%를 차지함. 축종별 점유율은 오리 22.7%, 닭 18.9%, 한·육우 12.5%, 돼지 11.5%, 젖소 8.1% 순으로 특히 가금류 비중이 높음[표 1·2]

○ 농가 1호당 사육 규모는 한·육우가 50두로 전국 평균(43두)보다 16.6% 많아 규모화가 진행된 반면, 돼지(1,946두)·닭(6만 3천 수)·오리(1만 7천 수)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작은 수준임[표 1]

○ 전국 오리·닭의 약 5분의 1을 전북에서 기르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도내 피해가 커질 수 있음. 따라서 방역 예산과 살처분 보상 재원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하며, 밀집 사육에 따른 악취·가축분뇨 처리 등 축산환경 개선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함

4. 농가경제 현황

가. 농가소득 및 부채

[표 1] 소득 종류별 농가소득(2021년~2025년)

(단위: 천원, %)

구 분(전국)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감률		전북
						구성비	('24/'23)	('25/'24)	2025년
농 가 소 득	47,759	46,153	50,828	50,597	54,667	100.0	-0.5	8.0	54,801
- 농 업 소 득	12,961	9,485	11,143	9,576	11,707	21.4	-14.1	22.3	9,795
- 농 업 외 소 득	17,884	19,202	19,999	20,147	19,639	35.9	0.7	-2.5	19,399
- 이 전 소 득	14,809	15,245	17,188	18,240	19,895	36.4	6.1	9.1	23,210
- 비 경 상 소 득	2,105	2,221	2,497	2,634	3,427	6.3	5.5	30.1	2,397

※ 출처 :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표 2] 연도별 농가의 자산 및 부채(전국)

(단위: 천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감률		전북
						구성비	('24/'23)	('25/'24)	2025년
농 가 자 산	585,676	616,467	608,043	616,185	662,852	100.0	1.3	7.6	484,226
- 고 정 자 산[1]	498,298	528,665	516,289	513,500	550,222	83.0	-0.5	7.2	372,825
- 유 동 자 산[2]	87,377	87,802	91,754	102,685	112,630	17.0	11.9	9.7	111,400
농 가 부 채	36,592	35,022	41,581	45,016	47,713	100.0	8.3	6.0	50,912
- 농 업 용	13,646	12,476	15,735	16,811	18,712	39.2	6.8	11.3	15,783
- 가 계 용	11,650	11,397	11,568	12,030	11,254	23.6	4.0	-6.5	12,013
- 겸업·기타용	11,297	11,149	14,278	16,175	17,747	37.2	13.3	9.7	23,116

※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5 농가경제조사」

1) 고정자산: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물, 대식물, 무형자산

2) 유동자산: 당좌자산(현금, 예·적금(정기) 등 금융자산), 재고자산(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소동물 등)

나. 통계분석

○ 2025년 전국 농가의 평균 소득은 5,467만원으로 전년(5,060만원)보다 8.0%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2021년(4,776만원)과 비교하면 4년간 14.5%(연평균 3.4%) 증가함. 2025년의 증가는 쌀·축산물 가격이 회복되면서 농업소득이 1,171만원으로 22.3% 늘어난 영향이 컸음. 이전소득(+9.1%)과 비경상소득(+30.1%)도 늘었으나 농업외소득은 2.5% 감소함[표 1]

○ 농업소득은 2021년 1,296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26.8%)으로 크게 줄었다가, 2023년에 늘고 2024년에 다시 958만원(-14.1%)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크게 오르내렸음. 2025년에도 2021년보다 9.7% 낮아, 농산물 가격과 경영비에 따라 소득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구조임. 그 결과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7.1%에서 2025년 21.4%로 5.7%p 낮아짐[표 1]

○ 반면 공익직불금·기초연금 등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은 1,481만원에서 1,990만원으로 4년간 34.3% 늘어, 같은 기간 농가소득 증가분(691만원)의 73.6%를 차지함. 이전소득 비중도 31.0%에서 36.4%로 높아져 농업외소득(35.9%)을 넘어서는 가장 큰 소득원이 됨. 공적 지원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있으므로, 농업 자체의 수익성을 높이는 경영안정·소득작목 지원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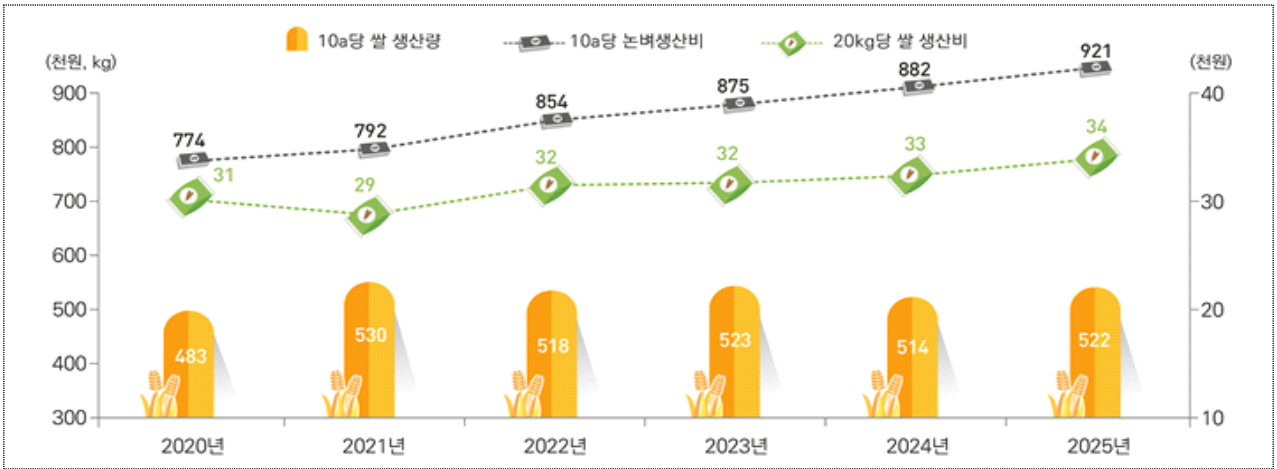
○ 2025년 전국 농가의 평균 자산은 6억 6,285만원(+7.6%), 부채는 4,771만원(+6.0%)임. 부채 증가는 농업용 부채(+11.3%)와 겸업·기타용 부채(+9.7%)가 이끌었고, 가계용 부채는 6.5% 줄었음. 2021년과 비교하면 부채는 30.4% 늘어 자산 증가율(13.2%)의 2배를 넘음[표 2]

○ 전북 농가는 2025년 자산(4억 8,423만원)이 전국 평균의 73.1% 수준에 그치는 반면, 부채(5,091만원)는 전국 평균보다 많음. 이에 따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5%로 전국(7.2%)보다 높아, 정책자금 금리 인하·상환 유예 등 부채 관리 지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5. 2025년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

가. 논벼(쌀) 생산비

[그림 1] 연도별 논벼(쌀) 생산비 추이



[표 1] 논벼(쌀) 생산비(전국)

(단위: 원, %, kg)

구 분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증 감	증감률
▪ 10a당 논벼 생산비	882,310	921,395	39,085	4.4
◦ 직접생산비	596,639	623,517	26,878	4.5
- 종 묘 비	32,522	33,630	1,108	3.4
- 비 료 비	66,735	71,333	4,598	6.9
- 농 약 비	43,443	45,104	1,661	3.8
- 농구비, 영농시설비	41,652	43,153	1,501	3.6
- 노 동 비	192,160	204,769	12,609	6.6
- 위탁영농비	157,923	160,891	2,968	1.9
- 기 타[1]	62,203	64,636	2,433	3.9
◦ 간접생산비	285,672	297,878	12,207	4.3
- 토지용역비	267,934	280,283	12,349	4.6
- 자본용역비	17,737	17,595	-143	-0.8
▪ 20kg당 쌀 생산비	32,907	33,976	1,069	3.2
▪ 10a당 쌀 생산량[2]	514	522	9	1.7

주: 1) 기타: 기타재료비, 수도광열비, 조세 및 기타비용, 생산관리비
2) 국가데이터처 농작물생산조사(kg)

나. 통계분석

○ 2025년 10a(약 300평)당 논벼 생산비는 921,395원으로 전년보다 4.4%(39,085원) 늘었음. 늘어난 금액의 32.3%는 노동비(+12,609원), 31.6%는 토지용역비(+12,349원)에서 비롯되었으며, 항목별 상승률은 비료비(6.9%)가 가장 높았음. 반면 쌀 20kg당 생산비는 3.2% 증가에 그쳤는데, 10a당 쌀 생산량이 522kg으로 1.7% 늘어 단위당 비용 상승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임[표 1]

○ 10a당 논벼 생산비는 2020년 77.4만원에서 2025년 92.1만원으로 5년간 19.0%(연평균 3.5%) 올라 생산비 상승이 계속되고 있음. 생산비의 39.7%를 차지하는 노동비·위탁영농비(농작업을 남에게 맡기는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동영농(들녘경영체)·농작업 대행 지원을 확대하고, 비료·농약 등 농자재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그림 1]

다. 지역별 생산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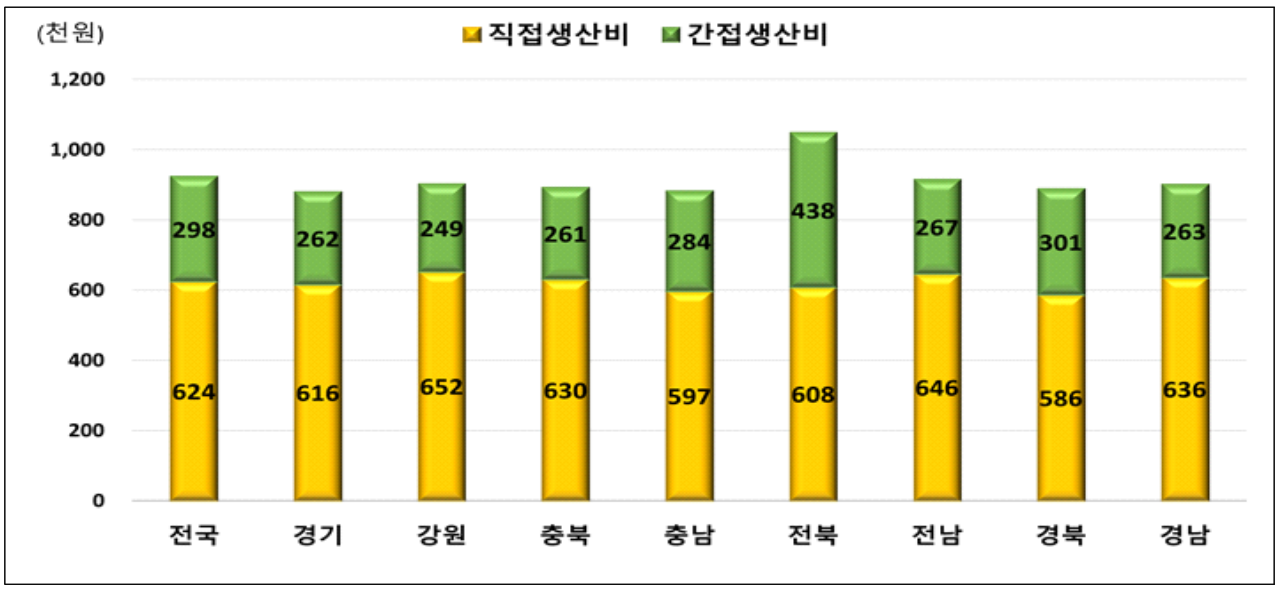
[표 1] 2025년 지역별 논벼(쌀) 생산비

(단위: 천원)

구 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10a당 논벼 생산비	921	878	901	892	881	1,046	913	887	899
◦ 직접생산비	624	616	652	630	597	608	646	586	636
- 종묘비	34	24	34	39	22	47	33	21	64
- 비료비	71	74	87	74	71	75	75	63	64
- 농약비	45	37	44	40	43	61	47	41	42
- 농구비, 영농시설비	43	38	56	30	38	27	61	51	40
- 노동비	205	222	205	205	188	195	201	199	232
- 위탁영농비	161	166	172	190	169	131	146	169	142
- 기 타[1)]	65	56	54	52	66	72	85	43	51
◦ 간접생산비	298	262	249	261	284	438	267	301	263
- 토지용역비	280	246	230	246	267	423	247	283	245
- 자본용역비	18	15	18	15	17	16	20	18	18

주: 1) 기타: 기타재료비, 수도광열비, 조세 및 기타비용, 생산관리비
※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5 논벼(쌀)생산비조사」

[그림 1] 2025년 지역별 논벼(쌀) 생산비



라. 통계분석

○ 2025년 전북의 **10a당 논벼 생산비**는 **104.6만원**으로 **9개 도 중 가장 높음.** 전국 평균(92.1만원)보다 12.5만원(13.6%), 가장 낮은 충남(88.1만원)보다 16.5만원 많음[표 1, 그림 1]

○ 쌀 생산비는 종자·비료·농약·노동 등 농사에 직접 드는 "직접생산비"와, 농지·자본을 사용하는 대가인 "간접생산비"로 나눠짐. **전북의 직접생산비(60.8만원)는** 전국(62.4만원)보다 오히려 **1.6만원 적지만, 간접생산비(43.8만원)는** 전국(29.8만원)보다 **47.0% 많음**. 즉 전북 **생산비**가 **전국보다 높은** 것은 전적으로 **간접생산비** 때문임. 특히 농지 사용료인 **토지용역비**(42.3만원)가 전국(28.0만원)보다 51.1% **많아** 생산비의 40.4%를 차지함(전국 30.4%)[표 1]

○ **직접생산비**를 항목별로 보면 **농약비(6.1만원)는 9개 도 중** 가장 **높고 종묘비(4.7만원)**는 경남 다음으로 **높음**. 반면 **농구비·영농시설비**(2.7만원)는 가장 **낮고, 위탁영농비**(13.1만원)도 전국(16.1만원)보다 **적음**. 농약·종묘 등 자재비는 절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표 1]

○ 토지용역비는 빌린 농지의 임차료와, 자기 농지를 남에게 빌려주었다면 받았을 임대료를 더한 비용임[2]. 따라서 전북 **쌀 생산비 부담**의 **핵심은 높은 농지 임차료** 수준이라 할 수 있음. 평야지역 임차농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지은행 장기임대 확대**, 지역별 **임차료 수준 점검** 등 농지 정책 차원의 대응과 함께, 생산비 대비 쌀값 수준을 고려한 **소득 보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토지용역비는 남의 농지를 빌려 실제로 낸 임차료(지불임차료)와 자기 농지를 쓴 대가를 그 지역 임차료 수준으로 계산한 금액(자가토지용역비)을 더한 비용임. 자가토지용역비는 실제 지출이 아니라 자기 땅을 다른 데 빌려주지 않고 직접 써서 포기한 수입을 비용으로 반영한 것임

6. 의료분야 관련

가. 의료기관 및 인력

[표 1] 시도별 의료기관 현황 (2024년)

(단위: 개)

구분	합계	상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약국
소계	**103,308**	**378**	**1,412**	**1,342**	**263**	**36,685**	**19,383**	**15,317**	**3,481**	**25,047**
서울	24,887	58	225	107	13	10,103	4,938	3,743	39	5,661
부산	7,274	29	143	160	23	2,652	1,356	1,175	33	1,703
대구	5,555	19	92	71	16	2,035	959	929	42	1,392
인천	5,099	21	59	62	17	1,831	1,019	740	63	1,287
광주	3,046	25	80	60	9	1,066	656	404	17	729
대전	3,125	10	48	45	7	1,139	562	522	19	773
울산	1,859	9	31	36	6	643	388	280	24	442
세종	622	2	3	3	1	229	100	103	18	163
경기	23,516	72	294	285	53	8,373	4,787	3,509	325	5,818
강원	2,686	16	36	32	9	816	443	382	244	708
충북	2,926	13	39	36	12	934	479	418	268	727
충남	3,840	13	47	66	17	1,139	634	537	402	985
전북	**3,926**	**13**	**56**	**74**	**11**	**1,226**	**609**	**542**	**403**	**992**
전남	3,467	26	72	79	11	962	522	384	566	845
경북	4,514	21	50	103	26	1,317	705	639	538	1,115
경남	5,600	25	129	113	30	1,721	977	810	414	1,381
제주	1,366	6	8	10	2	499	249	200	66	326

주) 공공보건의료기관 :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건강보험통계」, '25년 현황은 '26.11월 중 발표 예정

[표 2] 인구 1만 명당 의료인력(전북)

(단위: 명)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2025년	**3,553**	**981**	**912**	**10,358**	**1,475**	**1,924**	**367**
인구 1만명 당*	20.6	5.7	5.3	60.1	8.6	11.2	2.1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연앙인구(명)기준
※ 출처 : 「2026 통계로 본 전북특별자치도」 자료 재구성

나. 의료시설

[표 3] 2025년 시·군별 의료시설(전북)

(단위: 개)

구분	병상수		소아청소년과 의원수		분만실 수		요양병원수	
		인구대비[1]		인구대비[2]		인구대비[3]		인구대비[4]
전북자치도	**28,037**	**16.3**	**68**	**27.5**	**39**	**12.5**	**72**	**15.7**
전주시	10,376	16.5	32	30.4	24	12.1	32	26.6
군산시	4,450	17.3	9	31.7	5	9.4	8	13.5
익산시	4,286	16.1	2	24.0	6	12.3	8	11.7
정읍시	2,251	22.3	2	16.0	1	6.8	4	12.0
남원시	1,470	19.7	3	21.0	1	9.2	4	27.6
김제시	1,516	18.6	7	33.0	1	9.4	3	10.2
완주군	726	7.2	-	41.4	-	-	3	11.5
진안군[5]	103	4.3	-	-	-	-	-	-
무주군	95	4.2	-	-	-	-	1	11.1
장수군	22	1.1	-	-	-	-	-	-
임실군	276	10.8	-	-	-	-	1	9.4
순창군	476	17.2	-	-	-	-	1	9.4
고창군	1,089	21.6	-	-	1	75	5	16.9
부안군	901	19.0	1	20.5	-	-	2	7.3

주1) 시군구별 입원실현황, 병상수 / 주민등록 연앙인구(1천명당) 대비
주2) 시군구별 표시과목별 의원현황, 소아청소년과 수 / 0~19세 연앙인구(10만명당) 대비
주3) 시군구별 특수진료실 현황, 분만실 수 / 15~49세 여성 연앙인구(10만명당) 대비
주4) 시군구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요양병원수 / 65세이상 인구(10만명당) 대비
주5) 진안군 동부병원 145병상 미포함(2008년 1월부터 휴업 중)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25.07.기준), 「2026 통계로 본 전북특별자치도」 자료참고

다. 통계분석

○ 2024년 전북의 의료기관은 3,926개로 전국의 3.8%임. 이 중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403개(10.3%)로, 전국 평균 비중(3.4%)의 3배에 달함.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의 의료를 공공부문이 상당 부분 맡고 있는 구조임[표 1]

○ 2025년 전북의 인구 1만 명당 의사는 20.6명, 간호사는 60.1명임[표 2]. 그러나 의료자원이 전주에 몰려 있어 도내 병상의 37.0%,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47.1%(32개), 분만실의 61.5%(24개)가 전주시에 있음[표 3]

○ 장수(인구 1천 명당 병상 1.1개)·무주(4.2개)·진안(4.3개)은 병상이 매우 부족함. 8개 군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부안 1곳뿐이고, 분만실은 고창을 제외한 7개 군에 없음. 동부 산간지역의 응급·분만·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확보, 거점 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 권역별 대책이 필요함[표 3]

7.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 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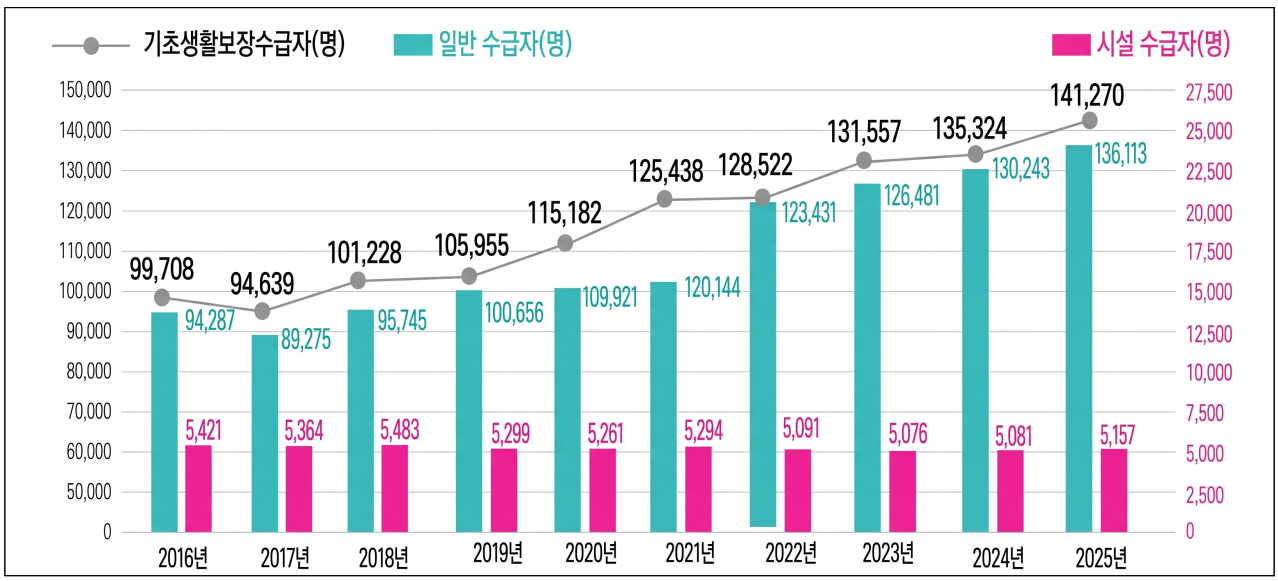
[표 1]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전북)

(단위: 명)

구 분	소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2021년	125,438	120,144	5,294
2022년	128,522	123,431	5,091
2023년	131,557	126,481	5,076
2024년	135,324	130,243	5,081
2025년	141,270	136,113	5,157

※ 출처 : 보건복지부,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그림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전북)



[표 2] 2025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단위: 명, 가구, %)

구 분	소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전국	2,013,319	2,836,706 (100%)	2,013,319	2,732,235 (96.3%)	104,471 (3.7%)
전북	**97,275**	**141,270 (100%)**	**97,275**	**136,113 (96.3%)**	**5,157 (3.7%)**

* 수급자수 : 일반수급자 + 시설수급자, 가구 총계는 시설수급자 제외

※ 출처 : 보건복지부,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표 3] 2025년 시·군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단위: 명)

구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구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전주시	45,360	44,406	954	**진안군**	1,798	1,692	106
군산시	20,955	20,313	642	**무주군**	1,515	1,445	70
익산시	24,924	23,573	1,351	**장수군**	1,439	1,395	44
정읍시	9,524	9,180	344	**임실군**	2,250	2,162	88
남원시	7,155	6,849	306	**순창군**	2,036	1,916	120
김제시	8,717	8,488	229	**고창군**	4,100	3,861	239
완주군	7,707	7,154	553	**부안군**	3,790	3,679	111

※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나. 통계분석

○ 전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5년 141,270명으로 2021년(125,438명)보다 12.6%(연평균 3.0%) 늘었음. 특히 2025년에는 전년보다 4.4%(5,946명) 늘어 최근 5년 중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2016년(99,708명)과 비교하면 9년간 41.7% 증가함[표 1, 그림 1]

○ 수급자 중 일반수급자는 96.3%(136,113명), 복지시설에 사는 시설수급자는 3.7%(5,157명)로 전국과 구성비가 같음. 가구당 수급자 수는 1.45명으로 전국(1.36명)보다 다소 많음[표 2]

○ 시·군별로는 전주(45,360명, 32.1%)·익산(24,924명, 17.6%)·군산(20,955명) 3개 시에 수급자의 64.6%가 몰려 있음[표 3]. 수급자가 늘면 생계·의료 급여의 지방비 부담도 함께 늘어나므로, 2027년 예산 심사 시 도비 부담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 지역별 · 급여별 현황

[표 1] 지역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급률(2025년)

(단위: 명,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급자수	2,836,706	465,567	256,393	171,240	198,136	105,181	85,158	49,702	10,202
수급률(%)	5.5	5.0	7.9	7.3	6.5	7.6	5.9	4.6	2.6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급자수	548,929	93,005	88,525	104,938	141,270	116,311	165,842	196,024	40,283
수급률(%)	4.0	6.2	5.5	4.9	8.2	6.5	6.6	6.1	6.1

* 수급률 = (지역의 수급자수/ 지역 주민등록인구통계) x 100, 지역의 수급자수 : 시설수급자 포함
※ 출처 : 보건복지부,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표 2] 급여별 수급자 현황(2025년)

(단위: 명)

구분	소 계*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가구	인원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전국	2,117,790	2,836,706	1,488,204	1,850,688	1,242,623	1,547,174	1,957,665	2,663,945	208,945	306,577
전북	102,432	141,270	73,169	93,875	60,614	78,622	91,040	128,578	11,872	17,955

* 총 가구수 및 인원은 시설수급자 포함, 각 급여별 중복을 제외한 숫자임
※ 출처 : 보건복지부,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라. 통계분석

○ 2025년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83만 7천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수급률)은 5.5%임. 17개 시·도 중 전북이 8.2%로 가장 높고 부산(7.9%)·광주(7.6%)가 뒤를 이으며, 세종(2.6%)이 가장 낮음. 전북의 수급률은 전국 평균의 약 1.5배로, 도민 100명 중 8명꼴로 수급자임[표 1]

○ 급여별 수급자는 전국 기준 생계급여 185만명(149만 가구), 의료급여 155만명(124만 가구), 주거급여 266만명(196만 가구), 교육급여 31만명(21만 가구)임. 한 사람이 여러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어 급여별 인원의 합은 전체 수급자 수보다 많음. 전북은 수급자 중 생계급여(66.5%, 전국 65.2%)·의료급여(55.7%, 전국 54.5%)·교육급여(12.7%, 전국 10.8%) 수급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고, 주거급여(91.0%)는 전국(93.9%)보다 낮음[표 2]

○ 전북은 수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생계·의료급여 비중도 높아, 일하기 어려운 고령·장애 수급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일자리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과 함께 돌봄·의료를 연계한 복지 전달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보조율 상향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2026년 고령자 통계

가. 인구 · 가구

[표 1]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생산연령인구 100명단 명, 유소년인구 100명당 명)

	총인구	65세 이상	비중[1]	노년부양비[2]	노령화지수[3]
2010	49,554	5,366	10.8	14.8	67.2
2020	51,836	8,152	15.7	21.8	129.3
2026	**51,609**	**11,125**	**21.6**	**31.3**	**222.7**
2030	51,306	12,980	25.3	38.0	312.0
2035	50,825	15,208	29.9	47.7	406.7
2040	50,059	17,151	34.3	59.1	442.2
2050	47,107	18,908	40.1	77.3	504.0
2060	42,302	18,682	44.2	90.3	636.9
2072	36,222	17,271	47.7	104.2	726.8

※ 출처 : 국가데이터처,「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주 : 1) 비중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표 2] 고령자 가구

(단위: 천 가구, %)

구분	총가구	고령자 가구[1]	비중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부부	구성비	부부+미혼자녀	구성비	부(모)+미혼자녀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기타	구성비
2010	17,495	2,923	16.7	985	33.7	286	9.8	149	5.1	991	33.9	512	17.5
2020	20,731	4,640	22.4	1,610	34.7	443	9.6	259	5.6	1,618	34.9	710	15.3
2026	**22,598**	**6,507**	**28.8**	**2,282**	**35.1**	**593**	**9.1**	**363**	**5.6**	**2,476**	**38.0**	**793**	**12.2**
2030	23,349	7,694	33.0	2,728	35.5	667	8.7	427	5.5	3,004	39.0	868	11.3
2035	24,020	9,151	38.1	3,269	35.7	753	8.2	509	5.6	3,642	39.8	979	10.7
2038	24,274	10,025	41.3	3,578	35.7	808	8.1	562	5.6	4,022	40.1	1,055	10.5
2040	24,358	10,491	43.1	3,736	35.6	828	7.9	589	5.6	4,236	40.4	1,102	10.5
2045	24,221	11,291	46.6	3,978	35.2	847	7.5	639	5.7	4,632	41.0	1,196	10.6
2052	23,277	11,788	50.6	4,050	34.4	841	7.1	672	5.7	4,961	42.1	1,265	10.7

※ 출처: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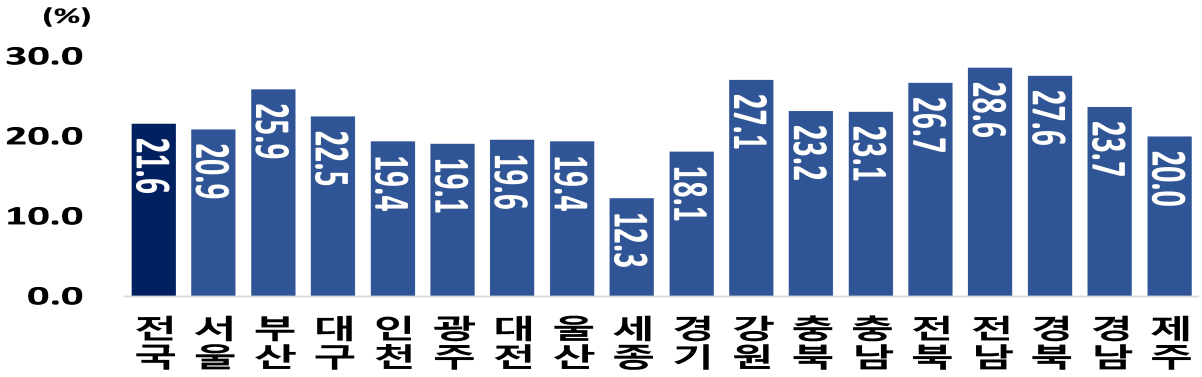
[표 3]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2026	고령인구 비중	순위	2028	고령인구 비중	순위	2038	고령인구 비중	순위	2052	고령인구 비중	순위
전국	11,125	21.6		12,125	23.6		16,492	32.7		18,861	40.8	
서울	1,942	20.9	10	2,080	22.6	10	2,669	30.3	14	2,950	37.2	16
부산	831	25.9	5	887	28.1	5	1,065	36.6	6	1,068	43.6	8
대구	521	22.5	9	565	24.8	9	733	34.8	7	762	42.5	10
인천	596	19.4	13	666	21.6	13	964	30.8	12	1,161	39.2	12
광주	274	19.1	15	297	20.9	15	406	30.4	13	458	38.8	13
대전	285	19.6	12	310	21.5	14	419	30.3	14	472	37.8	14
울산	210	19.4	14	235	22.0	11	336	34.2	10	361	43.7	7
세종	50	12.3	17	57	13.5	17	98	20.2	17	157	29.3	17
경기	2,545	18.1	16	2,843	20.1	16	4,229	29.1	16	5,176	37.5	15
강원	411	27.1	3	447	29.5	3	596	39.2	3	677	47.1	4
충북	379	23.2	7	414	25.3	7	570	34.8	8	667	43.2	9
충남	515	23.1	8	560	25.0	8	780	34.3	9	955	43.7	6
전북	**463**	**26.7**	**4**	**494**	**28.8**	**4**	**628**	**38.8**	**4**	**680**	**46.9**	**5**
전남	498	28.6	1	528	30.6	1	672	40.8	1	742	49.6	1
경북	709	27.6	2	763	30.0	2	988	40.7	2	1,071	49.4	2
경남	761	23.7	6	831	26.2	6	1,125	37.8	5	1,241	47.8	3
제주	135	20.0	11	149	21.9	12	213	31.5	11	263	40.9	11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그림 1]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2026)



출처: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나. 통계분석

○ 2026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112만 5천명으로 총인구의 21.6%를 차지함.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본격화되었으며, 이 비중은 2050년 40.1%, 2072년 47.7%까지 높아질 전망임[표 1]

○ 일하는 연령대인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노년부양비)는 2026년 31.3명에서 2050년 77.3명, 2072년 104.2명으로 늘어날 전망임. 0~14세 유소년 100명당 고령인구(노령화지수)도 222.7명에서 2072년 726.8명으로 3배 이상 높아질 전망임[표 1]

○ 고령자 가구는 2026년 650만 7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8%이며, 이 중 1인 가구가 38.0%(247만 6천 가구)로 가장 많음. 고령 1인 가구는 2052년 496만 1천 가구로 지금의 약 2배가 될 전망이어서, 돌봄·안부 확인·고독사 예방 수요가 크게 늘 것임[표 2]

○ **전북의 고령인구 비중**은 2026년 26.7%로 전남(28.6%)·경북(27.6%)·강원(27.1%)에 이어 **전국 4위**이며, **전국 평균보다 5.1%p 높음**. 2038년 38.8%, 2052년 46.9%로 높아져 **도민 2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전망임[표 3, 그림 1]

○ 전북의 고령인구는 **2026년 46만 3천명**에서 **2052년 68만명**으로 **46.9% 늘어날 전망**임[표 3]. 장기요양·방문돌봄·노인일자리 등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고령화 관련 **의무지출 증가분**을 **반영**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9. 노인장기요양 현황

가. 장기요양 현황

[표 1] 연도별 65세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성별	전체인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65세 이상 비율(%)
2021	전국	계	52,928,662	8,912,785	16.8
		남자	26,456,123	3,888,204	14.7
		여자	26,472,539	5,024,581	19.0
	전북특별자치도	계	1,815,272	398,057	21.9
		남자	904,298	168,999	18.7
		여자	910,974	229,058	25.1
2022	전국	계	52,932,270	9,377,049	17.7
		남자	26,456,527	4,118,281	15.6
		여자	26,475,743	5,258,768	19.9
	전북특별자치도	계	1,803,057	412,029	22.9
		남자	898,833	176,589	19.6
		여자	904,224	235,440	26.0
2023	전국	계	52,970,096	9,858,810	18.6
		남자	26,478,201	4,353,285	16.4
		여자	26,491,895	5,505,525	20.8
	전북특별자치도	계	1,793,348	424,881	23.7
		남자	894,723	183,253	20.5
		여자	898,625	241,628	26.9
2024	전국	계	52,999,168	10,399,813	19.6
		남자	26,488,612	4,613,166	17.4
		여자	26,510,556	5,786,647	21.8
	전북특별자치도	계	1,781,177	441,269	24.8
		남자	889,640	191,853	21.6
		여자	891,537	249,416	28.0
2025	**전국**	계	53,022,467	11,002,949	20.8
		남자	26,489,290	4,901,935	18.5
		여자	26,533,177	6,101,014	23.0
	전북특별자치도	계	**1,771,908**	**461,345**	**26.0**
		남자	**885,729**	**202,261**	**22.8**
		여자	**886,179**	**259,084**	**29.2**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연도별 65세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표 2] 연도별 노인장기요양 현황(전북)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75,665	78,151	80,915	82,327	83,947
남자	20,686	21,490	22,577	23,462	24,454
여자	54,979	56,661	58,338	58,865	59,493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통계」

[표 3] 2025년 노인장기요양 자격별·연령별 인정자 현황(전북)

(단위: 명)

구분	소 계			일반			감경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합계	65,911	1,695	64,216	23,095	322	22,773	31,839	494	31,345	974	7	967	10,003	872	9,131
남자	18,308	980	17,328	7,209	153	7,056	7,545	271	7,274	216	6	210	3,338	550	2,788
여자	47,603	715	46,888	15,886	169	15,717	24,294	223	24,071	758	1	757	6,665	322	6,343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통계」

[표 4] 급여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전북)

(단위: 개)

급여종류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436	1,450	1,514	1,517	1,515
방문요양	877	885	922	926	906
방문목욕	650	673	687	693	667
방문간호	56	52	59	54	58
주야간보호	313	335	354	370	378
단기보호	2	1	1	1	1
복지용구	134	138	152	151	150
노인요양시설	180	189	194	194	196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68	63	57	57	58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통계」

나. 통계분석

○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받는 인구(의료보장 적용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398,057명에서 2025년 461,345명으로 4년간 15.9% 늘었음. 같은 기간 전체 인구는 2.4% 줄어 65세 이상 비율이 21.9%에서 26.0%로 4.1%p 높아졌으며, 이는 전국(20.8%)보다 5.2%p 높은 수준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표 1]

○ 2025년 전북 여성의 65세 이상 비율은 29.2%로 남성(22.8%)보다 6.4%p 높고, 65세 이상 인구의 56.2%가 여성임.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길어 고령 여성 1인 가구와 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음[표 1]

○ 전북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는 2025년 83,947명으로 2021년(75,665명)보다 10.9% 늘었으며, 이 중 여성이 70.9%(59,493명)임. 65세 이상 인구 대비 신청자 비율은 2021~2023년 19.0%에서 2025년 18.2%로 다소 낮아졌는데, 비교적 건강한 60대 후반 인구가 새로 고령층에 들어온 영향으로 보임. 신청자 수 자체는 매년 늘고 있음[표 1·2]

○ 2025년 장기요양 인정자는 65,911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64,216명)은 도내 65세 이상 인구의 13.9%에 해당함. 여성 고령자의 인정 비율은 18.1%로 남성(8.6%)의 약 2배임[표 1·3]

○ 인정자를 자격별로 보면[3],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감경 대상자가 48.3%로 가장 많고, 기초생활수급자(15.2%)와 의료급여 수급자(1.5%)를 합하면 본인부담 감면 대상이 65.0%에 이름. 본인부담금을 모두 내는 일반 대상자는 35.0%에 그쳐 공공 재정 의존도가 높은 구조임[표 3]

○ 장기요양기관은 2025년 1,515개로 2021년(1,436개)보다 5.5% 늘었으나, 2024년(1,517개)보다는 2개 줄어 증가세가 멈춤. 주야간보호기관은 313개에서 378개로 4년간 20.8% 늘었지만, 2025년 방문요양(-2.2%)·방문목욕(-3.8%) 기관은 전년보다 줄었음. 65세 이상 인구가 4년간 15.9% 늘어난 것에 비해 기관 증가율(5.5%)은 크게 낮음[표 4]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인정자) 선정은 노인성 질병 여부 등 건강 상태를 핵심 요건으로 하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분류는 2026년 기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질병 종류나 중증도와 무관하게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만을 기준으로 산정됨.

○ 고령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서비스 공급 기반 확충이 더딘 만큼, 시·군별 서비스 공급 격차를 분석하여 군 지역의 농촌형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처우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본인부담 감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을 2027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해야 함

10. 장애인 등록현황

가. 등록 현황

[표 1] 전국 장애인 등록 현황(2025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명)	384,934	173,871	130,970	153,635	68,816	71,212	50,990	13,002	591,698	98,676	96,199	132,909	127,760	133,180	176,183	186,926	36,800
비율(%)	14.6	6.6	5.0	5.8	2.6	2.7	1.9	0.5	22.5	3.8	3.7	5.1	4.9	5.1	6.7	7.1	1.4

※ 출처 : 보건복지부, 「2025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

[표 2] 연도별 장애인 등록현황(전북)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132,010	131,544	129,964	128,993	127,760
지체	62,896	61,834	60,255	58,933	57,443
뇌병변	11,696	11,243	10,876	10,683	10,454
시각	11,185	11,019	10,829	10,641	10,445
청각·언어	21,608	22,260	22,521	22,914	23,241
안면	122	124	124	126	123
신장	3,486	3,640	3,778	3,908	4,068
심장	155	158	146	147	138
호흡기	353	346	328	314	311
간	488	508	521	530	559
장루·요루	644	676	683	694	708
뇌전증	426	415	408	406	396
지적	12,642	12,806	12,835	12,936	13,021
자폐성	933	1,060	1,210	1,379	1,497
정신	5,476	5,455	5,450	5,382	5,356

※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 재편집

[표 3] 2025년 장애정도 현황(전북)

(단위: 명)

구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전국	577,213	386,445	963,658	947,782	716,321	1,664,103	1,524,995	1,102,766	2,627,761
전북	**26,731**	**19,352**	**46,083**	**43,825**	**37,852**	**81,677**	**70,556**	**57,204**	**127,760**

※ 출처 : 보건복지부, 「2025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

[표 4] 2025년 연령별 장애인 등록 현황(전북)

(단위: 명)

구분	나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전북	**소계**	**46,083**	**81,677**	**127,760**
	0~9	967	256	1,223
	10~19	2,483	357	2,840
	20~29	2,996	548	3,544
	30~39	3,291	1,065	4,356
	40~49	4,554	3,761	8,315
	50~59	7,685	9,196	16,881
	60~64	4,864	7,629	12,493
	65~69	5,126	10,168	15,294
	70~74	4,151	10,352	14,503
	75~79	3,788	12,118	15,906
	80~84	3,080	11,755	14,835
	85~89	2,022	9,329	11,351
	90~94	858	4,201	5,060
	95~99	193	853	1,046
	100~	24	89	113

※ 출처 : 보건복지부, 「2025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 재편집

나. 통계분석

○ 2025년 전북의 등록장애인은 127,760명으로 전국(262만 8천명)의 4.9%임. 도 인구 대비로는 약 7.4%로 도민 100명 중 7명꼴이며, 전국 평균(약 5.1%)보다 높음[표 1]

○ 등록장애인은 2021년 132,010명에서 2025년 127,760명으로 3.2% 줄었음. 지체(-8.7%)·뇌병변(-10.6%)·시각(-6.6%) 장애는 줄어든 반면, 자폐성(+60.5%)·신장(+16.7%)·청각·언어(+7.6%)·지적(+3.0%) 장애는 늘어 장애 유형의 구성이 바뀌고 있음[표 2]

○ 장애 정도별로는 심한 장애가 46,083명(36.1%)으로 전국(36.7%)과 비슷하며, 성별로는 남성이 55.2%를 차지함[표 3]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78,108명(61.1%), 80세 이상이 25.4%로 장애인 고령화가 뚜렷함. 19세 이하 장애아동은 4,063명으로 많지 않으나, 이 중 84.9%가 심한 장애에 해당함. 따라서 고령 장애인 돌봄과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지원, 특히 빠르게 늘고 있는 자폐성 장애 대응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표 4]

11. 보육 관련 현황

[표 1] 시·도별 어린이집 현황(2025년)

2025. 12. 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4,010	1,278	992	1,556	785	826	535	286	8,030	779	837	1,272	856	869	1,162	1,613	378
비율(%)	15.4	4.9	3.8	6.0	3.0	3.2	2.1	1.1	30.8	3.0	3.2	4.9	3.3	3.3	4.5	6.2	1.5

※ 출처: 교육부, 「2025 보육통계」

[표 2] 어린이집 연도별 운영 현황

2025. 12. 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국	33,246	30,923	28,954	27,387	26,064
전북	1,115	1,024	944	902	856

※ 출처: 교육부, 「2025 보육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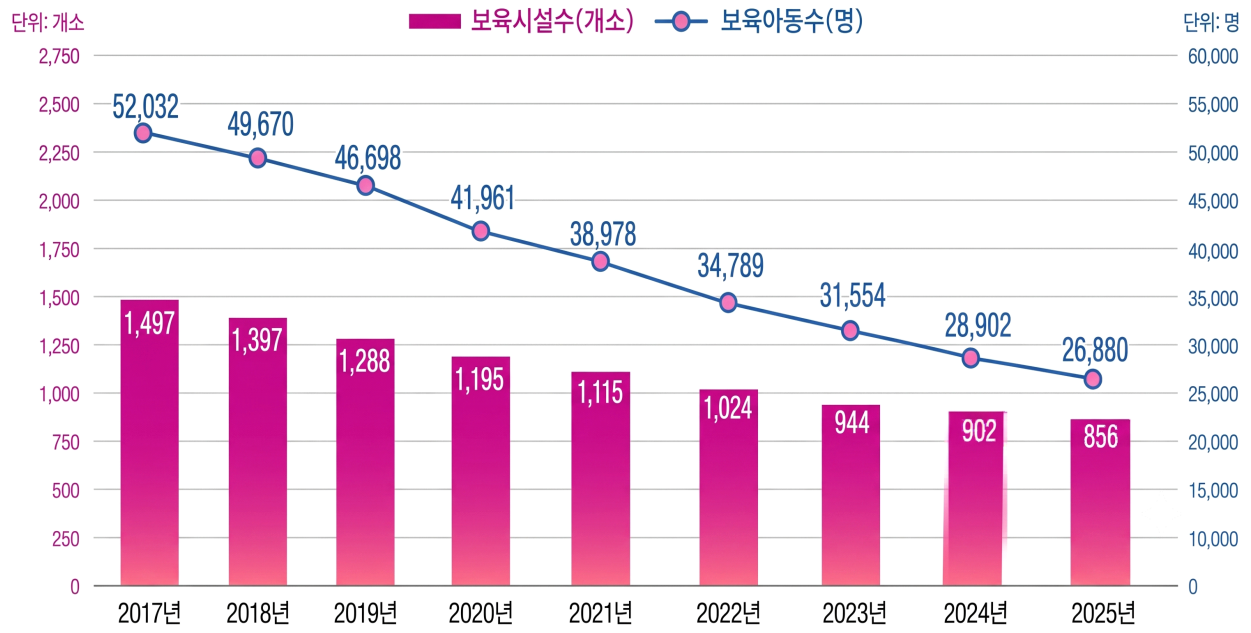
[표 3]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 (2025년)

2025. 12. 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소계	856	161	112	62	260	230	0	31
전주시	343	45	34	8	132	111	0	13
군산시	129	29	18	7	38	31	0	6
익산시	133	24	17	9	36	42	0	5
정읍시	45	7	10	3	12	12	0	1
남원시	45	7	8	4	13	13	0	0
김제시	31	11	4	6	3	7	0	0
완주군	58	15	10	4	19	7	0	3
진안군	6	2	0	4	0	0	0	0
무주군	6	4	0	1	1	0	0	0
장수군	7	2	4	0	0	1	0	0
임실군	9	0	1	7	0	0	0	1
순창군	9	6	1	2	0	0	0	0
고창군	18	4	5	5	0	3	0	1
부안군	17	5	0	2	6	3	0	1

※ 출처: 교육부, 「2025 보육통계」

[그림 1] 전북자치도 연도별 보육시설·보육아동 현황 (2017~25년)



출처: 「2026년 통계로 본 전북특별자치도」

가. 통계분석

○ 2025년 말 전국 어린이집은 26,064개소로 경기(8,030개소, 30.8%)가 가장 많고 세종(286개소, 1.1%)이 가장 적음. 전북은 856개소로 전국의 3.3%를 차지함[표 1]

○ 전북 어린이집은 2021년 1,115개소에서 2025년 856개소로 4년간 23.2%(259개소) 줄어, 전국 감소율(21.6%)보다 1.6%p 더 많이 줄었음. 2025년에도 전년보다 5.1%(46개소) 감소함[표 2]

○ 보육아동 수는 2017년 52,032명에서 2025년 26,880명으로 8년간 48.3% 줄어 절반 수준이 됨. 같은 기간 어린이집은 1,497개소에서 856개소로 42.8% 줄어, 아동이 어린이집보다 빠르게 줄었으며 어린이집 1곳당 아동 수는 34.8명에서 31.4명으로 줄었음. 정원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는 악순환이 우려됨[그림 1]

○ 시·군별로는 전주(343개소, 40.1%)와 군산·익산을 합한 3개 시에 어린이집의 70.7%가 몰려 있는 반면, 진안·무주(각 6개소), 장수(7개소), 임실·순창(각 9개소)은 10개소도 되지 않음. 유형별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57.2%(490개소), 국공립이 18.8%(161개소)이며, 직장어린이집은 3.6%(31개소)에 불과함[표 3]

○ 저출생에 따른 폐원이 군 지역의 보육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국공립 전환, 거점형 공공보육 확충 등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폐기물 발생 현황

가. 폐기물 현황

[표 1] 지역별·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 (2024년)

(단위: 만톤/년, %)

구분	'24년도 전체 발생량		생활 폐기물	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전체 발생량	구성비(%)					
소계	**17,953**	**100.0**	**1,705**	**672**	**8,376**	**6,552**	**649**
서울	1,410	7.9	289	94	104	910	12
부산	689	3.8	91	60	146	370	22
대구	371	2.1	76	19	98	162	16
인천	1,118	6.2	86	58	462	482	31
광주	222	1.2	47	8	48	113	6
대전	315	1.8	49	5	76	179	6
울산	717	4.0	35	7	401	209	65
세종	92	0.5	11	2	42	30	7
경기	3,777	21.0	434	218	1,273	1,698	154
강원	596	3.3	62	16	248	262	8
충북	725	4.0	62	23	286	297	56
충남	1,981	11.0	81	33	1,431	376	59
전북	**709**	**4.0**	**62**	**15**	**326**	**273**	**34**
전남	2,058	11.5	69	24	1,653	272	40
경북	1,855	10.3	94	33	1,224	415	88
경남	1,168	6.5	113	49	531	431	43
제주	151	0.8	44	7	25	74	2

※ 출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표 2] 연도별 전체 폐기물 발생량 변화

(단위: 만톤/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	18,149	19,546	19,738	18,645	17,619	17,953
전북	728	708	729	721	700	709

※ 출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나. 생활폐기물 현황

[표 3]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전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량(톤/일)	1,624.4	1,725.2	1,693.6	1,613.8	1,704.0
1일 1인당 발생량(kg/인·일)	0.86	0.95	0.95	0.85	0.96

※ 출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26년 통계로 본 전북특별자치도」 참고

[표 4] 2024년 시·군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구분	발생량(톤/일)	1일 1인당 발생량(kg/인·일)
전주시	620.4	1.02
군산시	272.8	0.94
익산시	258.5	0.93
정읍시	98.5	1.00
남원시	77.0	0.91
김제시	76.9	0.87
완주군	89.1	0.89
진안군	22.1	0.88
무주군	20.5	1.56
장수군	32.9	0.56
임실군	14.6	0.75
순창군	20.6	0.97
고창군	51.3	0.99
부안군	48.7	0.99

※ 출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26년 통계로 본 전북특별자치도」 참고

다. 통계분석

○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7,953만톤이며, 경기(3,777만톤)·전남(2,058만톤)·충남(1,981만톤) 3개 시·도가 전체의 43.5%를 차지함. 전북은 709만톤으로 전국의 4.0%(17개 시·도 중 10위)임. 종류별로는 공장 등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46.0%로 가장 많고, 건설폐기물 38.5%, 생활폐기물 8.7% 순임[표 1]

○ 전북의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728만톤에서 2024년 709만톤으로 5년간 2.6% 줄어, 전국 감소율(1.1%)보다 감소 폭이 컸음. 다만 2023년 700만톤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는 전년보다 1.3% 늘었음[표 2]

○ 2024년 **전북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1,704톤**으로 전년보다 5.6% 늘었으며, 1인당 하루 발생량은 0.96kg임[표 3]. 시·군별로는 **전주(하루 620.4톤)가 도 전체의 36.4%를 차지**하며, **1인당 발생량**은 관광객 등 유동인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무주(1.56kg)가 가장 많고 장수(0.56kg)가 가장 적음**[표 4]

○ 2030년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소각·재활용 없이 그대로 매립) 금지[4]에 대비하여, 시·군별 소각·재활용 처리시설 확충 계획과 광역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1인당 발생량이 많은 지역의 감량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폐기물 처리 현황

가. 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표 1] 연도별 폐기물 처리방법 변화(전국)

(단위: 만톤/년,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계	18,149 (100.0)	19,546 (100.0)	19,738 (100.0)	18,645 (100.0)	17,619 (100.0)	17,953 (100.0)
재활용	15,708 (86.5)	17,076 (87.4)	17,161 (86.9)	16,188 (86.8)	15,150 (86.0)	15,391 (85.7)
소 각	948 (5.2)	1,015 (5.2)	979 (5.0)	977 (5.2)	990 (5.6)	1,005 (5.6)
매 립	1,114 (6.1)	1,002 (5.1)	1,046 (5.3)	944 (5.1)	888 (5.0)	966 (5.4)
기 타	379 (2.1)	453 (2.3)	552 (2.8)	537 (2.9)	591 (3.4)	591 (3.3)

※ 출처 : 한국환경공단,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 변화 / ( )는 구성비

※ 생활계·사업장배출시설계·건설·지정폐기물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7) : 생활폐기물은 소각·재활용을 거친 후 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 가능, 비수도권은 2030. 1. 1. 시행

[표 2] 연도별 생활(가정)폐기물 처리방법 변화(전국)

(단위: 만톤/년,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계	1,676 (100.0)	1,730 (100.0)	1,675 (100.0)	1,675 (100.0)	1,669 (100.0)	1,705 (100.0)
재활용	945 (56.4)	976 (56.4)	916 (54.7)	953 (56.9)	979 (58.6)	1,019 (59.8)
소 각	478 (28.5)	506 (29.2)	501 (29.9)	494 (29.5)	498 (29.8)	509 (29.9)
매 립	247 (14.7)	242 (14.0)	248 (14.8)	211 (12.6)	178 (10.7)	168 (9.9)
기 타	6 (0.4)	6 (0.3)	11 (0.6)	17 (1.0)	14 (0.9)	9 (0.5)

※ 출처 : 한국환경공단,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생활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 변화 / ( )는 구성비

[표 3] 시·도별 생활(가정)폐기물 처리방법(2024년)

(단위: 만톤/년, %)

구 분	발생량	재활용률	소각률	매립률
전국	1,704.5	59.8	29.9	9.9
서울	289.4	61.7	30.9	7.4
부산	91.5	83.5	13.7	2.8
대구	75.6	61.2	12.0	26.8
인천	86.0	62.6	28.5	8.9
광주	46.9	88.4	2.6	7.5
대전	48.8	68.3	19.2	12.0
울산	34.8	48.3	45.1	6.6
세종	10.8	55.1	44.9	0.0
경기	433.8	62.4	30.4	6.3
강원	61.9	50.2	31.2	15.5
충북	61.9	45.8	44.2	9.5
충남	81.1	41.0	46.0	13.0
전북	62.2	51.9	39.5	8.5
전남	68.6	48.4	26.3	24.0
경북	94.1	55.4	35.6	8.7
경남	113.1	48.4	33.4	18.2
제주	44.2	68.6	29.3	2.0

※ 출처 : 한국환경공단,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시·도 생활(가정)폐기물 재구성 / 처리율 = 처리방법별 처리량 ÷ 발생량 × 100

※ 기타(중간처분 등) 처리 비율은 생략하여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생활폐기물 배출방식별 처리 현황

[표 4] 배출방식별 생활(가정)폐기물 발생량(2024년)

(단위: 톤/년, %)

배출방식	전북 발생량	전북 구성비	전국 발생량	전국 구성비
계	621,947.5	100.0	17,045,141.1	100.0
종량제 방식 등 혼합배출	309,408.5	49.7	8,430,183.8	49.5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108,704.1	17.5	4,130,075.2	24.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203,834.9	32.8	4,484,882.1	26.3

※ 출처 : 한국환경공단,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시·도 생활(가정)폐기물 재구성

[표 5] 종량제 방식 등 혼합배출 폐기물의 처리방법(2024년)

(단위: 톤/년, %)

처리방법	전북 처리량	전북 비율	전국 처리량	전국 비율
계	309,408.5	100.0	8,430,183.8	100.0
재활용	20,198.2	6.5	1,850,143.2	21.9
소 각	239,000.8	77.2	4,918,079.2	58.3
매 립	50,209.5	16.2	1,616,447.2	19.2

※ 출처 : 한국환경공단,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시·도 생활(가정)폐기물 재구성 / 기타 처리량은 생략

다.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표 6] 전북 공공소각시설 현황(2024년)

(단위: 톤/일, 톤/년)

시·군	시설명	시설용량	2024년 처리량
전주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310.0	81,134.0
군산시	군산시폐자원에너지화시설	220.0	63,868.7
익산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160.0	47,985.0
장수군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2.0	4,187.9
고창군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5.0	6,977.5
전북 계	5개소	727.0	204,153.1
전국 계	178개소	19,410.3	4,908,539.5

※ 출처 : 한국환경공단,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공공소각시설 현황

[표 7] 전북 공공매립시설 현황(2024년)

(단위: ㎥, %, 톤/년)

시·군	시설명	매립용량	잔여 매립용량	잔여율	2024년 매립량	사용기간
전주시	전주권광역매립장(2단계)	990,000	244,000	24.6	36,000.0	2006-2028
전주시	전주권광역매립장(1단계)	1,925,000	0	0.0	-	1997-
군산시	군산시폐기물매립장	3,342,600	511,977	15.3	33,824.1	1996-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2단계)	154,676	121,229	78.4	7,487.5	2019-2036
정읍시	공공매립시설(3공구)	212,435	212,435	100.0	-	1998-2031
정읍시	공공매립시설(2공구)	261,708	13,252	5.1	9,853.0	2007-2024
정읍시	공공매립시설(1공구)	219,849	0	0.0	-	1998-2007
남원시	대산매립장(2공구)	266,251	121,088.3	45.5	16,160.5	2022-2031
남원시	대산매립장(1공구)	712,810	0	0.0	-	2002-2022
완주군	비봉매립장	44,000	10,560	24.0	-	1996-
진안군	폐기물종합처리장	270,000	82,619.7	30.6	9,573.6	1997-2046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280,000	23,587	8.4	3,611.0	2003-2026
장수군	폐기물 매립시설	110,000	37,176	33.8	5,043.8	2018-2036
임실군	농촌폐기물처리시설	168,789	54,798.5	32.5	476.1	1996-2047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4단계)	28,000	28,000	100.0	-	2015-
고창군	매립시설	230,922	47,968	20.8	1,819.3	2002-2036
부안군	부안군 환경센터	186,000	-27,157	초과	-	2006-2024
전북 계	**15개 소**	**9,403,040**	**1,481,533.5**	**15.8**	**123,848.9**	**-**
전국 계	**213개소**	**452,976,544**	**157,314,101.5**	**34.7**	**3,498,783.3**	**-**

※ 출처 : 한국환경공단,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공공매립시설 현황 재구성 / 매립용량은 사용개시 신고 용량, 잔여율 = 잔여 매립용량 ÷ 매립용량 × 100

※ 사용기간 종료연도가 없는 시설은 원자료에 "미정"으로 표기됨 / 부안군 환경센터는 기매립량이 신고 용량을 초과함

라. 통계분석

○ 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 17,953만톤 중 85.7%가 재활용되었고, 소각 5.6%, 매립 5.4% 순임. 이 가운데 생활(가정)폐기물(1,705만톤)은 재활용 59.8%, 소각 29.9%, 매립 9.9%로 처리되었으며, 매립률은 2019년 14.7%에서 5년간 4.8%p 낮아졌음[표 1·2]

○ 전북의 생활(가정)폐기물은 62.2만톤으로 전국의 3.6%임. 재활용률은 51.9%로 전국(59.8%)보다 7.9%p 낮아 17개 시·도 중 11위인 반면, 소각률은 39.5%로 전국(29.9%)보다 9.6%p 높아 5위임. 매립률은 8.5%로 전국(9.9%)보다 낮음. 재활용률은 광주(88.4%)·부산(83.5%)이 가장 높고 충남(41.0%)이 가장 낮음[표 3]

○ 전북의 재활용률이 낮은 것은 분리배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임. 생활(가정)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비중은 17.5%로 전국(24.2%)보다 6.7%p 낮음. 또한 종량제 봉투 등으로 혼합배출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되는 비율은 6.5%로 전국(21.9%)의 3분의 1 수준이며, 77.2%가 소각되고 16.2%가 매립됨. 반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32.8%가 분리배출되고 99.7%가 재활용되어 전국(97.3%)보다 높음[표 4·5]

○ 전북의 공공소각시설은 전주·군산·익산·장수·고창 5곳(하루 727톤, 전국 용량의 3.7%)뿐이며, 나머지 9개 시·군에는 없음. 2024년 처리량은 20만 4천 톤으로 하루 평균 약 559톤을 처리해, 시설용량 대비 약 77%를 가동하였음[표 6]

○ 전북 공공매립시설 15곳의 잔여 매립용량은 148만㎥로 전체 용량의 15.8%만 남아, 전국(34.7%)의 절반에 못 미침. 2024년 매립량(연 21.6만㎥)이 이어지면 단순 계산으로 약 7년 뒤 가득 차게 됨. 시설별로는 부안군 환경센터가 이미 신고 용량을 넘었고, 정읍 2공구와 부안은 사용기간이 2024년에 끝났으며, 무주는 2026년에 끝날 예정임[표 7]

○ 2030년부터 비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소각·재활용 없이 그대로 매립)이 금지되면[5], 전북에서 혼합배출 후 그대로 매립되던 연 5만톤(하루 약 138톤)을 소각·재활용으로 돌려야 함. 단순 계산으로는 공공소각시설의 여유 용량(하루 약 168톤)으로 감당할 수 있으나, 시설이 5개 시·군에 몰려 있어 시·군 간 반입 협약과 광역 처리체계가 전제되어야 함. 분리배출 개선을 통한 재활용률 제고, 소각시설 광역화, 잔여 용량이 적은 매립시설의 순환이용·정비 계획을 함께 점검하고 2027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7)(2026. 3. 26.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발생한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음. 시행일은 서울·인천·경기 2026년 1월 1일, 그 밖의 지역(전북 포함) 2030년 1월 1일임(산간·오지·도서 지역, 재난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는 예외) ※ 협잡물 : 재활용·소각 과정에서 걸러져 나오는 이물질

14. 상·하수도 현황

가. 상·하수도 보급률

[표 1] 연도별 상·하수도 보급률(전북)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수도 보급률(%)	전북	99.6	99.7	99.8	99.8	99.8
	전국 (도평균)	99.3 (98.8)	99.4 (98.9)	99.4 (99.0)	99.5 (99.0)	99.5 (99.1)
하수도 보급률(%)	전북	89.7	90.5	91.7	92.0	92.3
	전국 (도평균)	94.5 (90.9)	94.8 (91.3)	95.1 (92.0)	95.4 (92.5)	95.6 (92.9)

※ 출처 : 한국환경공단,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 자료참고

[표 2]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2024년)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하수처리 인구	하수도 보급률(%)
소계	1,782,485	1,543,718	92.3
전주시	646,172	642,667	99.5
군산시	267,461	241,068	92.2
익산시	274,396	185,064	95.5
정읍시	105,422	92,559	87.8
남원시	76,972	68,394	88.9
김제시	83,921	58,706	70.2
완주군	103,737	77,641	87.3
진안군	24,651	21,254	86.2
무주군	23,366	15,995	80.0
장수군	21,109	18,732	89.2
임실군	26,003	18,654	71.7
순창군	27,294	18,455	68.5
고창군	52,683	42,140	80.1
부안군	49,298	42,389	89.5

※ 출처 : 한국환경공단,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2026년 통계로 본 전북자치도」 참고

나. 통계분석

○ 2024년 전북의 상수도 보급률은 99.8%로 전국(99.5%)보다 높음. 반면 하수도 보급률은 92.3%로 전국(95.6%)보다 3.3%p 낮고 도 지역 평균(92.9%)에도 미치지 못함. 다만 2020년(89.7%) 이후 4년간 2.6%p 높아지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표 1]

○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은 전주(99.5%)·익산(95.5%)·군산(92.2%) 등 도시지역은 높지만, 순창(68.5%)·김제(70.2%)·임실(71.7%)은 70% 안팎에 머물고 무주(80.0%)·고창(80.1%)도 낮은 편임. 농어촌 지역의 하수관로·마을하수도 확충과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함[표 2]

예산·정책분석을 위한

통계 자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1. 취업자 통계

가. 취업자 현황

[표 1] 연령대별 취업자 현황(전국), 2016. ~ 2025.

(단위 : 천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26,409	26,725	26,822	27,123	26,904	27,273	28,089	28,416	28,576	28,769
15~19	244	247	205	198	162	171	179	163	144	136
20~29	3,664	3,660	3,699	3,747	3,601	3,706	3,818	3,736	3,612	3,442
30~39	5,672	5,643	5,582	5,529	5,364	5,257	5,303	5,357	5,447	5,549
40~49	6,832	6,783	6,666	6,504	6,346	6,311	6,314	6,260	6,179	6,129
50~59	6,150	6,302	6,346	6,444	6,356	6,422	6,618	6,678	6,705	6,679
60이상	3,848	4,090	4,324	4,701	5,076	5,406	5,858	6,223	6,489	6,834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취업자 현황(전국), 2016. ~ 2025.

(단위 : 천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26,409	26,725	26,822	27,123	26,904	27,273	28,089	28,416	28,576	28,769
서울	5,146	5,152	5,080	5,086	5,051	5,055	5,113	5,174	5,228	5,198
부산	1,686	1,685	1,657	1,676	1,640	1,657	1,679	1,691	1,688	1,698
대구	1,247	1,239	1,226	1,219	1,184	1,217	1,228	1,247	1,215	1,214
인천	1,520	1,533	1,575	1,581	1,560	1,563	1,614	1,655	1,696	1,715
광주	730	744	749	750	748	745	750	769	744	776
대전	774	764	759	772	780	785	794	797	789	811
울산	576	584	574	571	560	555	566	572	572	575
세종	-	129	148	168	180	185	197	208	210	211
경기	6,504	6,685	6,790	6,952	6,909	7,150	7,597	7,653	7,732	7,788
강원	749	790	789	811	795	809	818	841	844	855
충북	845	861	876	880	890	897	926	939	951	976
충남	1,226	1,140	1,179	1,196	1,176	1,193	1,226	1,248	1,264	1,297
전북	**940**	**921**	**915**	**928**	**932**	**953**	**968**	**983**	**988**	**979**
전남	964	957	961	974	974	985	1,010	1,019	1,004	997
경북	1,443	1,447	1,427	1,430	1,418	1,410	1,462	1,462	1,462	1,479
경남	1,704	1,723	1,746	1,749	1,729	1,732	1,740	1,760	1,758	1,799
제주	355	374	372	382	378	383	402	401	400	403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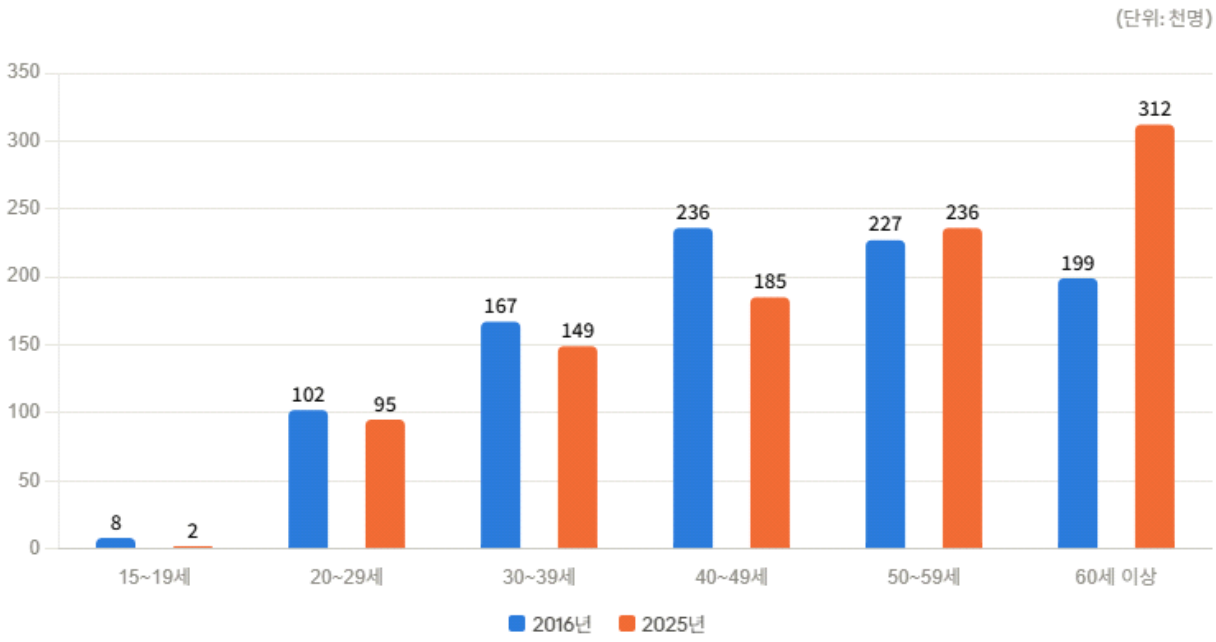
[표 3] 연령대별 취업자 현황(전북), 2016. ~ 2025.

(단위 : 천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940	921	915	928	932	953	968	983	988	979
15~19	8	4	4	4	3	5	6	4	3	2
20~29	102	101	96	97	90	101	104	103	98	95
30~39	167	161	159	153	149	140	138	143	143	149
40~49	236	230	222	214	206	206	205	195	189	185
50~59	227	223	221	224	225	222	225	233	242	236
60이상	199	201	213	236	258	278	291	305	313	312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시도/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그림 1] 전북 연령대별 취업자 현황(2016, 2025 비교)



나. 통계 분석

○ 지난 10년간 전국 취업자는 2016년 2,640만 9천 명에서 2025년 2,876만 9천 명으로 236만 명(8.9%)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취업자가 전년 대비 21만 9천 명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5년까지 증가 추세임.

○ 전국 연령대별 취업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연령대에 따라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임. 60세 이상 취업자는 384만 8천 명에서 683만 4천 명으로 298만 6천 명(77.6%)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는 683만 2천 명에서 612만 9천 명으로 70만 3천 명(10.3%) 감소하였음.

○ 2016년 대비 2025년 전국 청년층인 20대 취업자는 366만 4천 명에서 344만 2천 명으로 22만 2천 명(6.1%) 감소하였으며, 30대 취업자도 567만 2천 명에서 554만 9천 명으로 12만 3천 명(2.2%) 감소하였음.

○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는 전국적으로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기대수명 증가**, 노후 소득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 참여 수요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도 60대 취업자 증가 요인 중 하나이나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전북의 청년층인 20대 취업자는 2016년 10만 2천 명에서 2025년 9만 5천 명으로 7천 명(6.9%) 감소하였으며, 30대 취업자는 16만 7천 명에서 14만 9천 명으로 1만 8천 명(10.8%) 감소하면서 **전국 대비(2.2%)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의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 9천 명에서 31만 2천 명으로 11만 3천 명(56.8%) 대폭 증가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저출생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함께, 청년층의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청년층의 지역 이탈은 지역 내 노동력 감소와 기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전북의 **청년층 취업을 위해서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형성과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 주력산업 및 미래산업의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과 연계한 청년 인력 채용, 지역 정착 지원** 등을 통해 **20~30대 취업자의 지역 내 고용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률·실업률 통계

가. 고용률 현황

[표 1] 고용률 현황(전국), 2016.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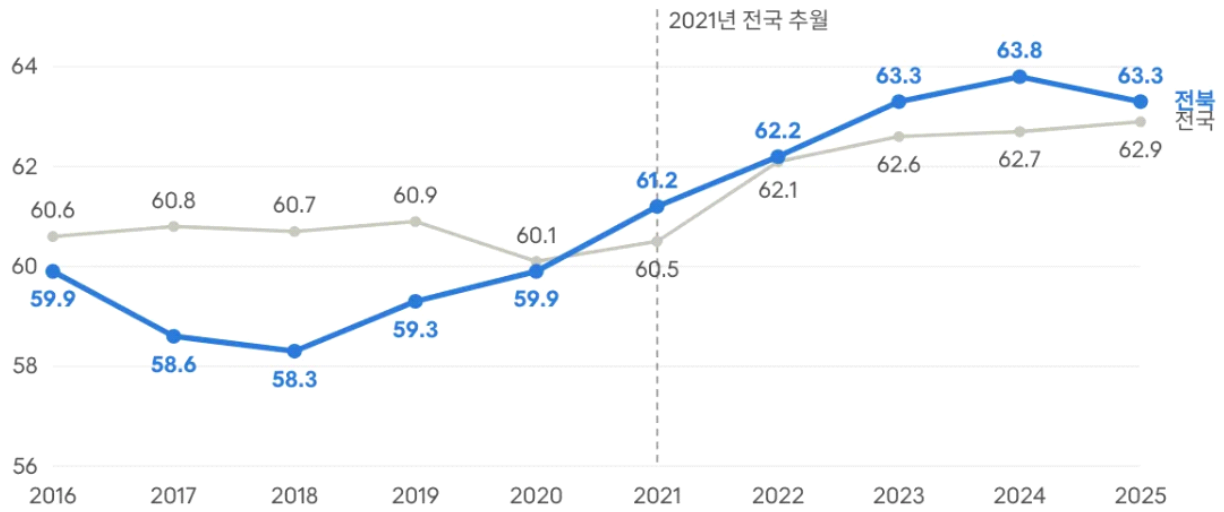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60.6	60.8	60.7	60.9	60.1	60.5	62.1	62.6	62.7	62.9
서울	60.0	60.2	59.6	60.0	59.3	59.2	60.4	61.1	61.7	61.5
부산	56.2	56.3	55.7	56.6	55.6	56.2	57.1	57.7	57.8	58.4
대구	59.3	58.8	58.2	57.9	56.6	58.2	59.1	59.8	58.0	58.0
인천	61.8	61.7	62.9	62.5	61.3	61.3	62.7	63.1	63.5	63.3
광주	58.1	59.0	59.4	59.3	58.7	58.2	58.6	60.1	60.6	60.8
대전	59.7	58.9	58.7	59.8	60.7	60.9	61.6	61.6	60.6	62.0
울산	59.0	59.8	59.0	59.1	58.1	57.7	59.2	59.7	59.8	59.9
세종	-	61.2	61.8	62.5	62.7	62.6	63.7	64.6	65.2	64.6
경기	61.7	62.1	62.0	61.9	60.3	61.1	63.9	64.0	64.1	63.8
강원	58.2	61.0	60.7	62.3	60.8	61.4	61.8	63.3	63.5	64.4
충북	62.0	62.6	63.3	62.9	63.2	63.3	64.9	65.4	65.9	67.2
충남	61.7	62.3	63.5	63.7	62.4	63.0	64.3	64.8	64.8	65.5
전북	**59.9**	**58.6**	**58.3**	**59.3**	**59.9**	**61.2**	**62.2**	**63.3**	**63.8**	**63.3**
전남	62.7	62.1	62.4	63.4	63.9	64.6	66.3	66.9	66.1	65.6
경북	62.4	62.5	61.6	61.7	61.1	61.0	62.9	63.5	64.0	64.8
경남	60.6	60.9	61.4	61.3	60.6	60.7	61.1	62.0	62.1	63.3
제주	69.3	70.9	68.4	68.4	67.1	67.4	69.9	69.2	69.3	69.8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 고용률 현황 비교(전국, 전북 / 2016. ~ 2025.)

(단위 : %)



나. 고용률 통계 분석

○ 전북의 고용률은 2016년 59.9%에서 2025년 63.3%로 3.4%p 상승하여, 같은 기간 전국 상승폭(2.3%)보다 1.1%p 올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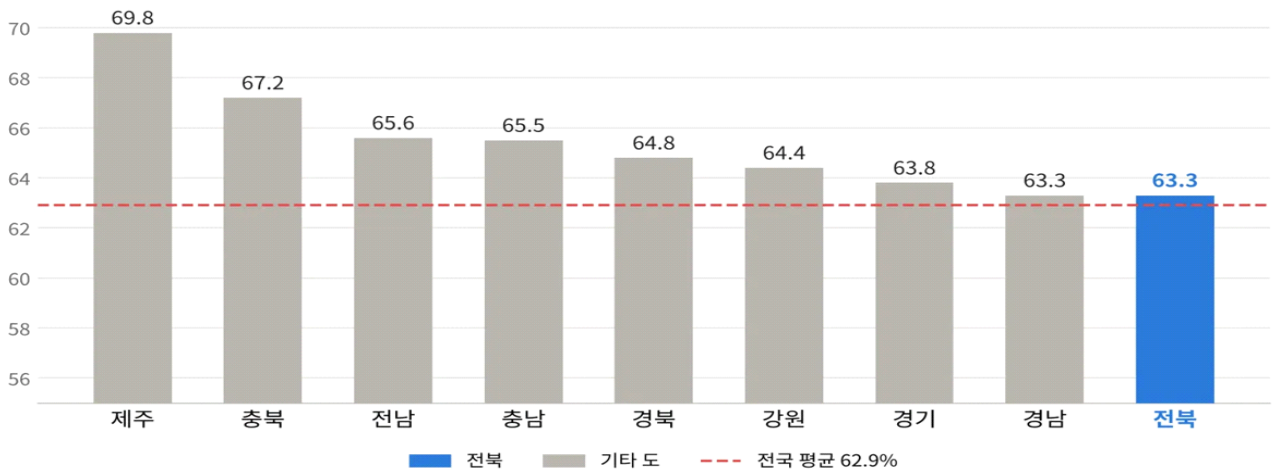
○ 2016~2018년에는 59.9%에서 58.3%로 1.6%p 하락하며 전국과의 격차가 -2.4%까지 벌어졌으나, 2018년 58.3%를 저점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2021년 61.2%로 전국 평균(60.5%)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전년대비 0.5%로 하락한 63.3%를 기록하였으나 전국 평균(62.9%)보다 높음.

○ 다만 2025년에는 63.3%로 전년 대비 0.5%p 하락하여 **2018년 이후 7년 만에 하락 전환함.**

○ 도 지역 중 **2025년에 고용률이 하락한 곳은 전북·전남(각 -0.5%)과 경기(-0.3%)뿐임.**

[그림 2] 2025년 도 지역별 고용률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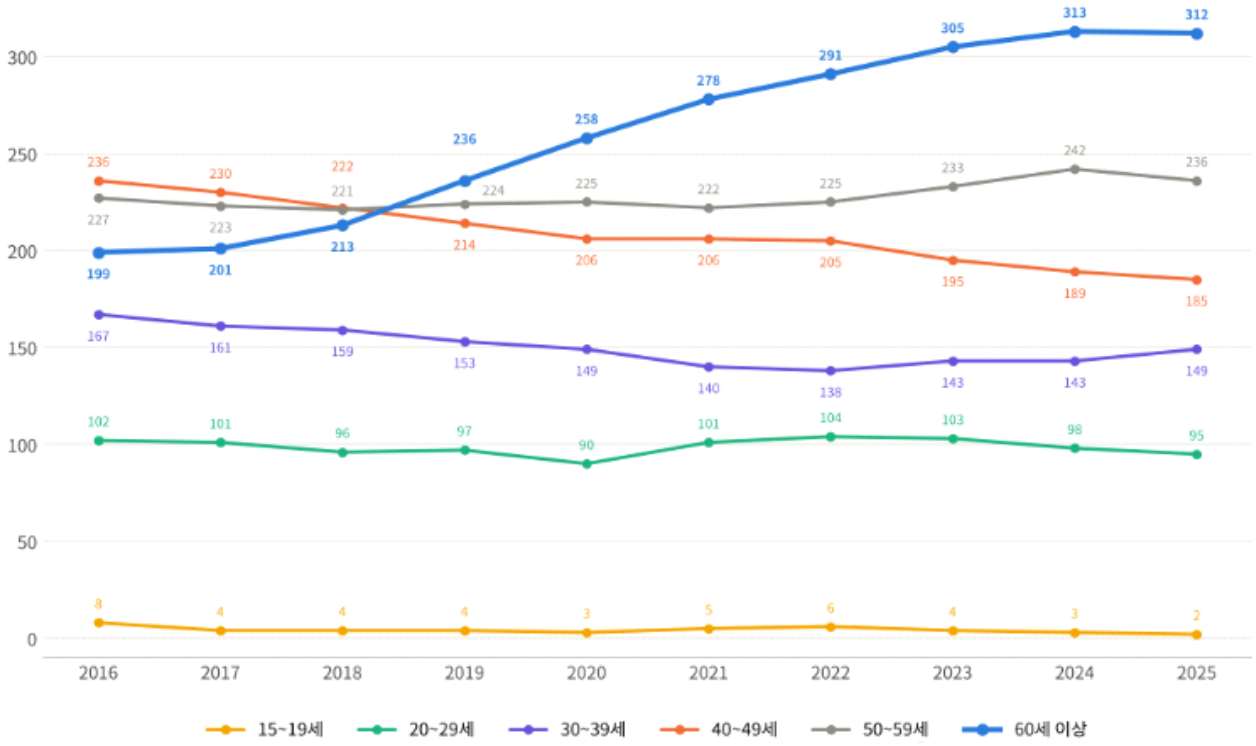


○ 2025년 전북의 고용률(63.3%)은 17개 시도 중 인천과 경남과 같은 9위이지만, **9개 도 지역간 비교에서는 경남과 함께 같은 가장 낮은 순위임.**

○ 도 지역 1위 제주(69.8%)와 6.5%p, 충북(67.2%)과 3.9%p, 같은 **호남권인 전남(65.6%)과 2.3%p 차이가 남.**

[그림 3] 전북 연령별 취업자 현황(2016. ~ 2025.) 비교

(단위 : 천명)



○ 전북의 **고용률이 상승**한 이유는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에 따른 고령층 취업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북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6년 19만 9천 명에서 2025년에는 31만 2천 명으로 11만 3천 명(56.8%)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증가**(3만 9천 명)의 **약 2.9배에 달함.**

○ 또한 청년·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가 아닌 고령층 취업 증가가 다른 연령대의 감소를 메우며 나타난 결과이며, 고령층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등 단기·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높은 만큼, **고용률 수치만으로는 전북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청년층 유출 방지와 핵심 근로층(20~40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일자리 대책 마련이 필요함.**

다. 실업률 현황

[표 2] 실업률 현황(전국), 2016.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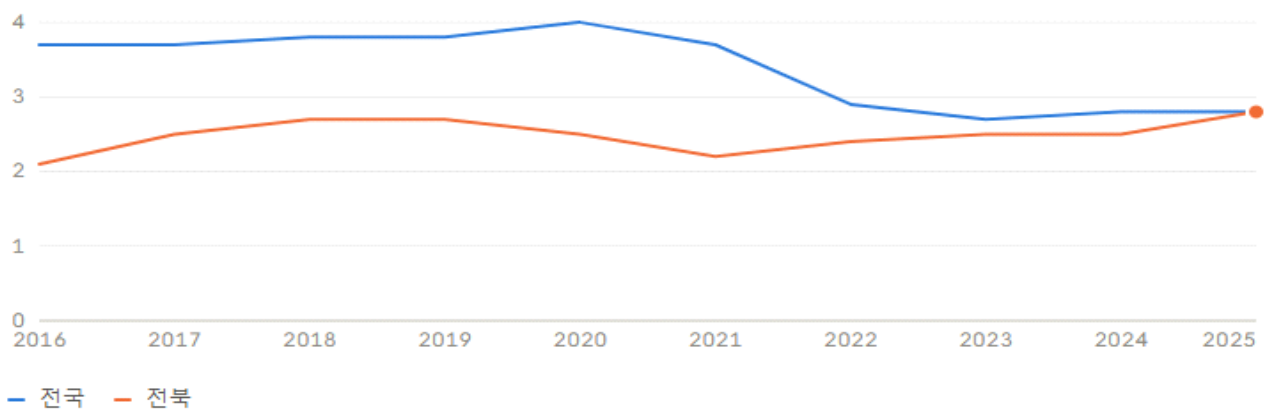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3.7	3.7	3.8	3.8	4.0	3.7	2.9	2.7	2.8	2.8
서울	4.2	4.5	4.8	4.4	4.6	4.8	3.4	2.7	3.0	3.4
부산	3.9	4.6	4.1	3.7	4.2	3.4	3.0	3.1	3.0	2.8
대구	4.1	4.0	4.4	3.7	3.9	3.7	2.9	3.1	3.4	3.3
인천	4.9	4.6	4.3	4.4	4.6	4.0	3.3	3.2	3.3	3.2
광주	3.1	2.9	3.8	3.7	3.9	3.6	2.9	2.5	3.0	3.3
대전	3.2	3.4	4.2	4.2	4.4	3.3	2.4	2.8	3.0	2.9
울산	3.8	3.5	4.6	4.2	4.2	3.6	3.2	3.4	3.7	2.3
세종	-	2.3	2.3	2.7	2.8	2.1	2.0	2.0	1.9	2.4
경기	3.9	3.9	3.8	3.8	4.0	3.7	2.7	2.6	2.6	2.7
강원	2.8	2.6	2.9	3.6	3.9	3.6	3.2	2.8	2.8	2.6
충북	2.6	2.2	2.4	3.1	3.2	2.5	2.5	2.3	2.2	1.7
충남	3.2	2.8	3.1	2.9	3.5	2.3	2.3	2.6	2.9	2.7
전북	**2.1**	**2.5**	**2.7**	**2.7**	**2.5**	**2.2**	**2.4**	**2.5**	**2.5**	**2.8**
전남	3.0	3.2	2.8	2.6	2.4	2.3	2.2	2.2	2.7	3.0
경북	3.2	2.8	4.1	3.9	4.0	3.2	2.5	2.6	2.5	2.6
경남	3.3	2.9	3.0	3.8	4.0	4.1	3.3	2.5	2.3	2.0
제주	2.2	1.9	2.0	2.1	2.5	3.1	2.1	1.9	2.3	2.2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실업률 현황 비교(전국, 전북 2016 ~ 2025.)

(단위 : %)



라. 실업률 통계 분석

○ 전북 실업률은 2025년 2.8%로 지난 10년 중 최고치이며, 2021년 저점(2.2%)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6년 1.6%였던 실업률이 전국 평균 수준임. **지난 10년 기간 전국 평균 실업률은 0.9%p 하락했으나 전북은 0.7%p 상승하였면서 상승폭은 전국에서 가장 컸음.**

○ 전북은 2016년 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으나 2025년에는 실업률이 7번째로 높은 지역임. 전국 고용 여건이 개선되는 동안 전북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2021년 이후 실업률이 0.6%p 오른 만큼 전북은 **일자리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취업자 수, 고용 유지율)를 분석이 필요하며,** 단기·공공 일자리 비중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착 사업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청년 고용률 통계

가. 청년(15세~29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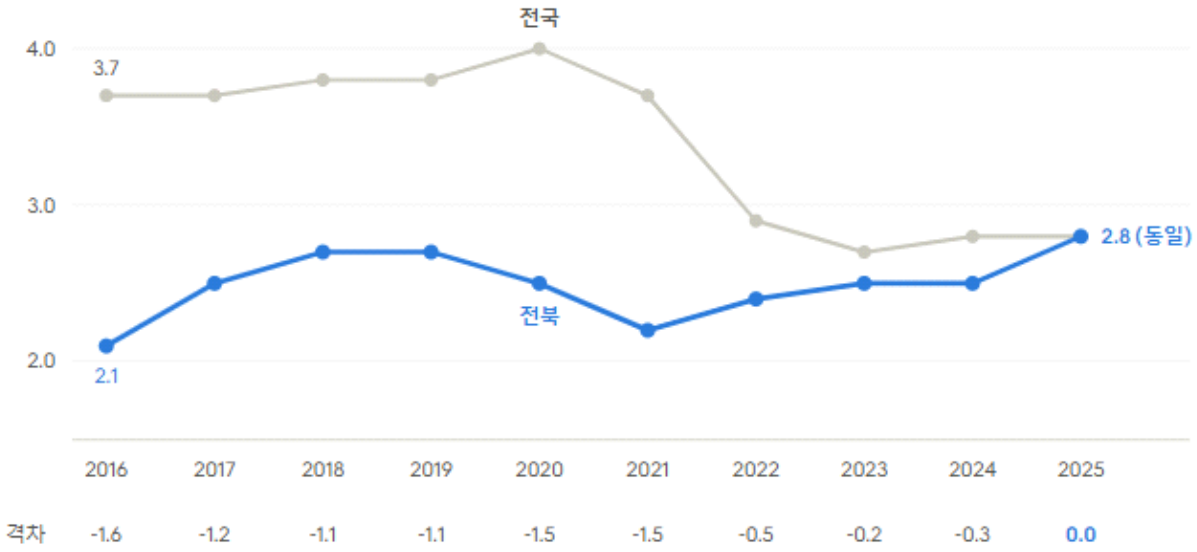
[표 1] 전국 청년고용률, 2016. ~ 2025.

(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41.7	42.1	42.7	43.5	42.2	44.2	46.6	46.5	46.1	45.0
서울	44.6	45.3	46.1	47.5	46.6	50.5	51.5	51.8	51.2	49.1
부산	40.3	41.2	40.4	42.9	40.5	41.2	42.0	43.9	46.1	44.1
대구	38.3	35.2	36.3	39.8	37.8	42.6	41.3	42.3	37.5	39.4
인천	44.4	45.1	47.9	48.8	46.8	46.9	50.6	49.2	47.4	44.8
광주	34.1	36.3	39.4	39.6	39.6	37.3	38.8	38.9	38.1	37.2
대전	41.1	40.2	38.1	40.6	44.7	45.0	48.0	44.4	43.4	45.0
울산	38.7	40.9	40.4	39.1	37.6	36.5	40.5	40.3	40.2	42.3
세종	-	37.5	38.1	35.1	36.6	35.1	33.9	33.1	36.2	33.6
경기	44.0	44.8	45.3	45.4	43.1	45.5	50.0	49.9	49.5	46.6
강원	35.6	41.2	42.4	42.4	40.8	40.2	40.0	43.6	48.1	44.8
충북	42.0	43.4	45.5	43.5	43.4	46.2	49.4	47.9	47.9	48.5
충남	42.5	40.4	43.7	45.1	42.0	42.4	45.2	44.7	44.2	46.4
전북	**33.8**	**32.7**	**31.7**	**32.7**	**31.5**	**36.5**	**38.6**	**38.8**	**38.0**	**38.0**
전남	36.7	35.8	36.6	37.4	37.9	37.2	40.1	39.4	41.2	42.8
경북	40.0	39.4	37.3	38.7	38.0	38.7	42.1	39.2	41.3	43.0
경남	40.0	39.0	38.7	39.3	37.7	39.4	39.9	39.0	36.5	38.1
제주	46.5	47.8	45.9	43.7	41.6	42.6	47.5	46.4	42.1	43.1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 청년고용률 현황 비교 (전국, 전북 2016. ~ 2025.)



나. 청년 고용률 통계분석

○ 2016~2020년 전국 평균 청년(15세~29세) 고용률은 41.7%에서 42.2%로 완만히 상승하였으나 전북은 33.8%에서 31.5%로 하락하여 격차가 크게 벌어짐.

○ 2020~2023년 전북 청년 고용률은 31.5에서 38.8%로 7.3%p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전국 평균도 4.3%p 상승하여 격차는 7.7%p로 남음.

○ 2024~2025년 전북은 38.0%로 유지했지만, 전국 평균이 하락에 따른 격차 축소(−7.0%p)는 전북의 청년 정책 개선이 아닌 전국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전북 청년 고용률 상승은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효과가 크며**, 청년 취업자 수는 2016~2025년 전북 청년 인구는 32.7만 명에서 25.6만 명(-21.7%)으로 전국(-15.1%)보다 빠르게 감소함.

○ 고용률 상승은 일자리가 늘어서가 아니라, **청년 인구가 취업자보다 빠르게 줄어 나타난 수치상 개선**에 가까우며, **청년 유출과 청년 일자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정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30대 고용률

[표 1] 전국 30대 고용률, 2016.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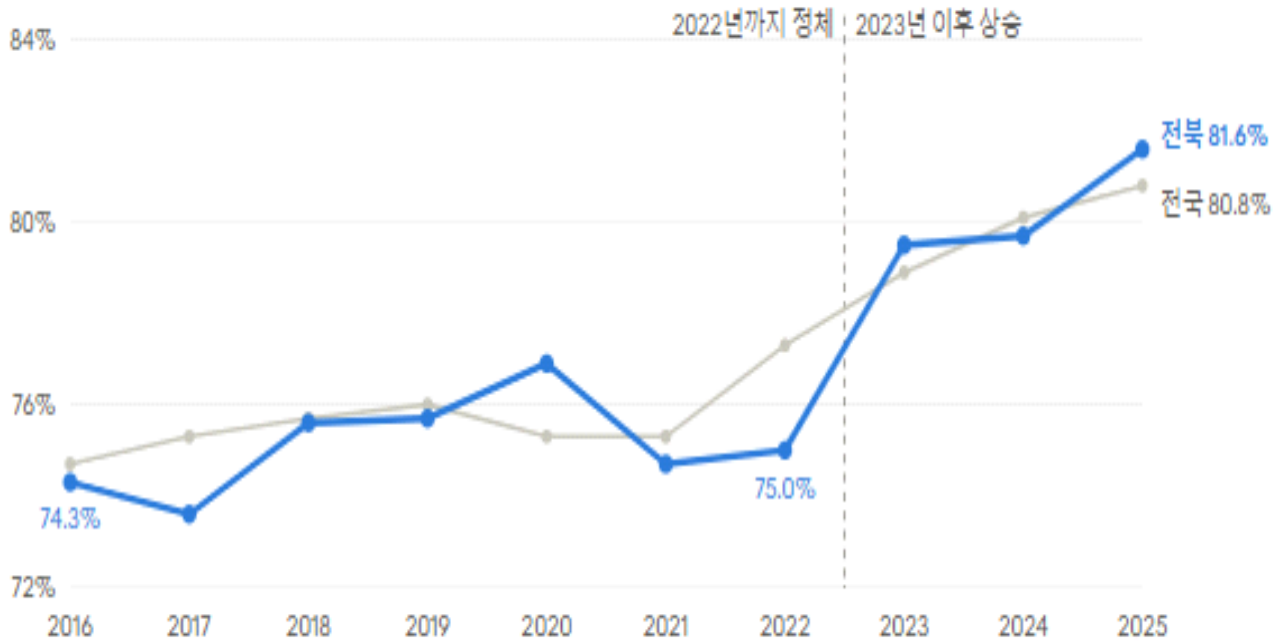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74.7	75.3	75.7	76.0	75.3	75.3	77.3	78.9	80.1	80.8
서울	75.6	77.7	77.2	78.0	76.8	77.3	80.0	81.8	84.4	83.7
부산	73.6	75.1	73.4	74.5	70.7	72.0	74.7	77.4	77.6	78.0
대구	77.3	73.6	70.3	69.4	71.2	76.8	77.3	76.4	74.6	74.3
인천	74.8	74.6	76.1	77.9	75.9	75.2	76.1	76.7	78.0	80.1
광주	74.2	73.2	74.2	75.1	71.8	71.9	71.8	76.5	77.1	76.6
대전	73.4	73.6	74.7	76.3	77.4	77.8	78.9	80.8	79.4	81.4
울산	70.7	73.8	74.1	73.3	72.6	72.3	73.2	74.5	73.9	77.7
세종	-	73.9	75.2	75.8	78.6	76.8	78.3	79.9	80.7	82.8
경기	75.4	75.0	76.2	75.5	75.5	75.8	78.0	79.1	80.6	81.0
강원	75.1	74.7	73.0	75.8	74.4	75.5	76.5	79.1	80.4	81.2
충북	76.6	76.7	76.7	78.3	79.0	75.3	76.7	79.9	79.1	82.2
충남	74.9	79.1	77.3	74.9	75.1	76.9	79.8	79.6	79.0	81.0
전북	**74.3**	**73.6**	**75.6**	**75.7**	**76.9**	**74.7**	**75.0**	**79.5**	**79.7**	**81.6**
전남	73.3	73.6	76.2	76.8	77.4	76.5	77.8	79.6	78.4	78.4
경북	72.5	73.4	74.6	75.3	72.1	69.2	74.3	75.0	75.8	78.6
경남	69.9	71.3	74.4	77.6	75.2	71.3	71.5	75.1	77.7	79.3
제주	80.6	85.1	82.8	77.7	77.0	78.1	84.0	83.4	83.1	82.8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 30대 고용률 현황 비교 (전국, 전북 2016. ~ 2025.)

(단위 : %)



[표 2] 전국 30대 인구, 2016.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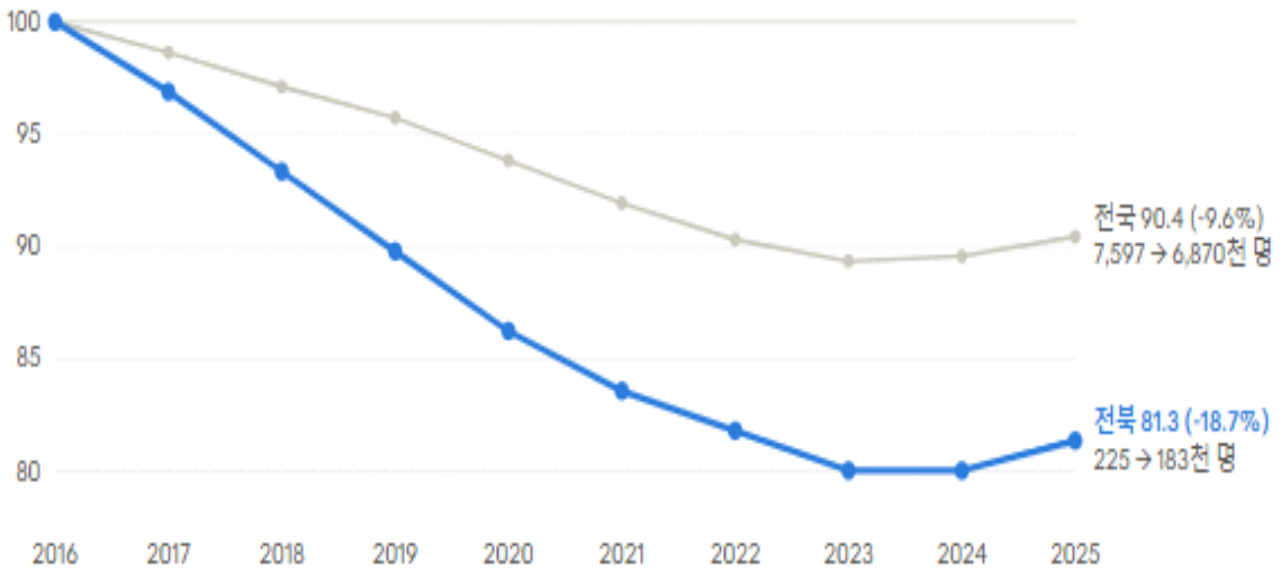
(단위 : 천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7,597	7,494	7,378	7,273	7,128	6,984	6,860	6,787	6,803	6,870
서울	1,614	1,579	1,546	1,510	1,493	1,480	1,451	1,449	1,460	1,474
부산	477	466	452	436	419	408	399	394	392	392
대구	335	328	320	313	302	291	283	280	283	285
인천	455	450	442	436	425	411	409	417	428	436
광주	222	215	208	203	198	193	189	186	185	185
대전	223	218	212	205	198	195	195	198	203	209
울산	182	179	173	167	161	154	146	141	139	138
세종	-	49	55	61	64	62	62	63	62	61
경기	1,992	1,988	1,986	2,006	1,996	1,984	1,978	1,955	1,960	1,983
강원	176	172	168	164	160	158	154	153	155	157
충북	217	215	211	210	207	203	202	201	205	211
충남	348	307	307	304	296	287	281	278	283	291
전북	**225**	**218**	**210**	**202**	**194**	**188**	**184**	**180**	**180**	**183**
전남	214	209	202	194	184	177	168	162	160	160
경북	347	340	331	321	310	297	288	277	273	273
경남	483	475	465	451	433	410	389	369	357	355
제주	87	88	89	90	88	86	84	82	80	79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 30대 인구 현황 비교 (전국, 전북 2016. ~ 2025.)

(단위 : 천명)



라. 30대 고용률 통계분석

○ 전국 30대 고용률은 2016년 74.7%에서 2025년 80.8%로 6.1%p 상승하였으며, 특히 2022년 이후 상승세가 두드러짐. 2025년에는 80.8%를 기록해 분석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전북의 30대 고용률은 2016년 74.3%에서 2025년 81.6%로 7.3%p 상승하여 전국 상승 폭을 1.2%p 상회함. 2016년에는 전국보다 0.4%p 낮았으나, 2025년에는 전국보다 0.8%p 수준으로 개선됨.

○ 전북의 30대 인구 감소가 전국보다 빠르게 진행됨. 2016~2025년 **전국 30대 인구는 9.6% 감소한 반면, 전북은 18.7% 감소함**. 전북의 감소율이 **전국보다 약 1.9배 높아** 지역의 핵심 **생산연령층인 30대 인구 기반**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상승함. 전북의 30대 고용률은 2016년 74.3%에서 2025년 81.6%로 7.3%p 상승함. 전북의 30대 고용률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지만, **연도별 변동 폭이 전국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고용 여건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상용직 비율

가. 최근 10년간 상용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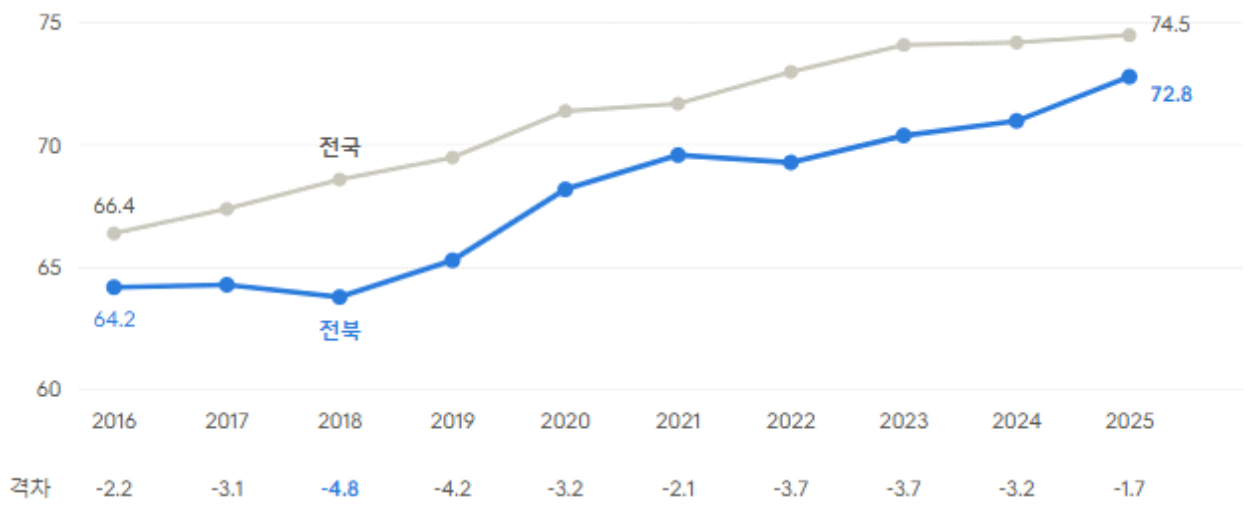
[표 1] 전국 상용직 비중, 2016. ~ 2025.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66.4	67.4	68.6	69.5	71.4	71.7	73.0	74.1	74.2	74.5
서울	64.3	65.6	66.0	68.1	71.1	72.2	73.6	76.2	75.8	76.2
부산	62.3	64.3	68.4	70.9	70.6	68.8	67.4	67.7	70.0	72.4
대구	61.3	64.5	65.8	69.4	71.2	71.5	72.5	72.0	74.5	74.8
인천	61.8	63.6	65.0	65.4	67.6	69.2	70.8	71.6	73.0	74.7
광주	67.3	67.3	68.4	70.8	71.9	71.6	73.5	73.6	73.6	72.5
대전	67.3	70.5	70.3	72.0	71.9	72.4	75.8	77.4	74.9	74.2
울산	73.0	71.8	71.0	72.5	73.9	76.1	76.3	77.1	75.7	76.1
세종	-	77.9	80.7	82.2	84.9	86.2	86.7	87.2	86.3	86.4
경기	69.1	69.7	71.0	70.7	72.9	72.9	74.7	76.1	75.7	75.9
강원	67.4	66.2	66.3	67.3	68.8	66.0	68.7	67.5	69.8	68.3
충북	68.6	69.6	72.2	72.5	72.0	72.7	73.7	75.5	73.5	73.0
충남	71.4	69.2	72.8	73.6	73.3	75.1	75.3	74.5	77.7	77.0
전북	**64.2**	**64.3**	**63.8**	**65.3**	**68.2**	**69.5**	**69.3**	**70.3**	**71.0**	**72.8**
전남	60.1	61.0	61.9	62.8	64.5	64.8	65.9	65.4	64.8	64.2
경북	67.8	68.6	69.5	69.8	71.5	71.3	70.8	70.8	69.8	71.6
경남	70.9	71.7	72.6	71.7	73.2	72.2	74.1	74.9	74.8	74.5
제주	59.0	60.8	61.8	61.6	66.6	69.2	68.9	70.6	70.8	69.7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 상용직 비교 현황(전국, 전북 2016. ~ 2025.)



나. 통계 분석

○ **전북의 상용직 비중은** 2016년 64.2%(전국 66.4%) → 2025년 72.8%(전국 74.5%)로 상승하였으나 **전국 평균 수준에는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함.

○ 2018년에는 63.8%로 **전국 평균 격차가 -4.8%p로 가장 커졌으며,** 2018~2019년에는 **17개 시도 중 하위권(15위)임**. 2025년 전국평균 격차는 -1.7%p로 좁혀지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함**.

○ 상용직 근로자는 전국 평균과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상용직 일자리 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전북의 일자리 사업 성과는 채용 건수가 아닌 상용직 근로자 채용 등 평가 지표 전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계약직 및 일용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북 차원의 인센티브 도입 등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가. 최근 10년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표 1]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2016.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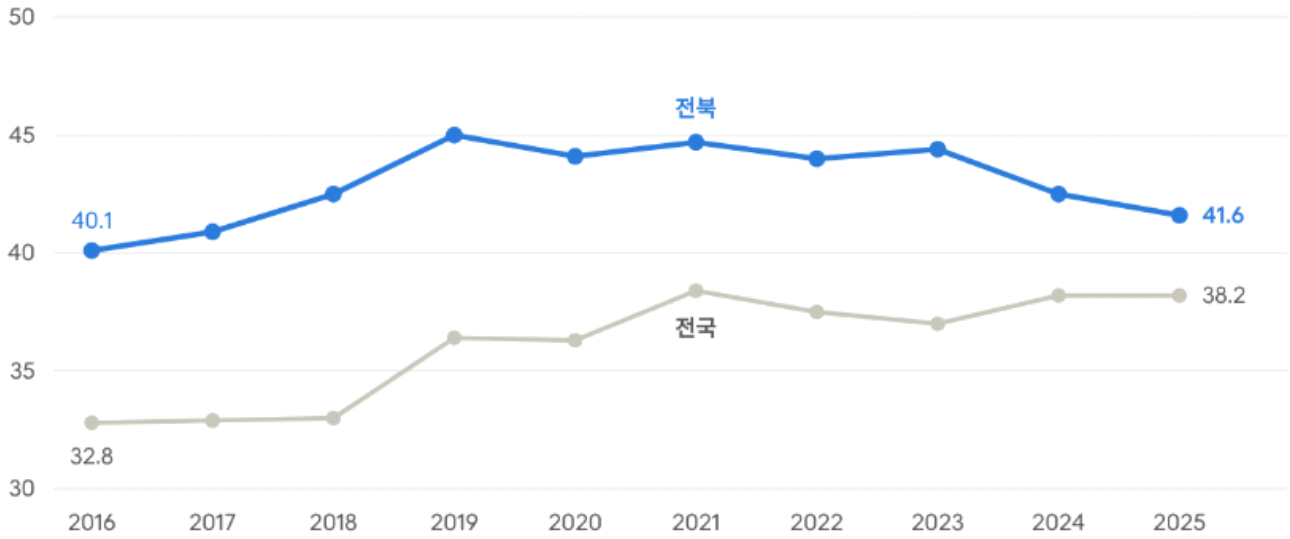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32.8	32.9	33.0	36.4	36.3	38.4	37.5	37.0	38.2	38.2
서울	32.3	33.9	33.5	36.1	35.0	38.5	37.0	34.9	38.3	38.4
부산	32.5	33.2	31.3	36.0	38.0	41.1	42.2	42.6	42.3	40.0
대구	32.9	32.1	30.8	33.8	36.1	38.3	38.1	39.5	37.9	38.7
인천	33.0	31.4	32.0	36.9	34.7	37.1	38.7	36.4	39.0	38.5
광주	33.7	36.9	35.5	37.0	40.8	40.0	37.7	38.3	38.5	43.9
대전	35.1	32.6	38.4	41.7	39.7	40.8	38.9	36.4	39.5	40.1
울산	30.0	29.1	31.9	32.3	34.3	34.9	34.9	34.6	35.9	36.2
세종	-	31.5	28.7	25.4	28.1	26.7	31.4	30.9	27.7	29.9
경기	30.6	30.4	31.3	35.6	35.0	37.1	35.0	33.5	34.9	33.9
강원	46.3	46.5	43.3	43.3	45.8	47.5	46.9	50.5	47.5	52.0
충북	34.7	33.1	33.7	36.9	34.5	38.6	40.1	37.9	40.1	39.3
충남	33.7	33.8	35.8	37.3	37.6	35.7	36.6	37.4	36.7	39.8
전북	**40.1**	**40.9**	**42.5**	**45.0**	**44.1**	**44.7**	**44.0**	**44.4**	**42.5**	**41.6**
전남	38.8	38.0	36.5	39.1	39.4	41.3	40.9	46.3	46.2	49.9
경북	32.3	33.1	30.5	34.9	34.4	35.2	37.6	37.9	40.3	39.5
경남	28.6	27.0	27.4	32.4	35.3	38.6	34.9	38.0	38.0	37.6
제주	39.3	39.1	39.1	44.6	43.8	41.0	43.0	40.8	39.0	40.9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 비상용직 비교 현황(전국, 전북 2016. ~ 2025.)

(단위 : %)



나. 통계 분석

○ 전북은 비정규직 비중이 장기간 전국 평균을 웃돌아 고용의 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2016~2025년 10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상회했으며, **2019년에는 45.0%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전북의 고용구조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 전국과의 격차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2016~2018년 전국 비정규직 비중은 32.8~33.0%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전북은 40.1%에서 42.5%로 2.4%p 상승함.** 이에 따라 **전국과의 격차도 7.3%에서 9.5%로 확대**되어, 지역 고용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비정규직 비중은 41.6%로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 38.2%보다 3.4%p 높음.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전북보다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원(52.0%), 전남(49.9%), 광주(43.9%) 등 3개 시·도 밖에 없음. 비중이 일부 감소했더라도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과 고용 지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규직 전환과 고용 유지,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1인당 경제지표

가-1. 최근10년간 1인당 연간 개인소득

[표 1] 1인당 연간 개인소득[1], 2015. ~ 2024.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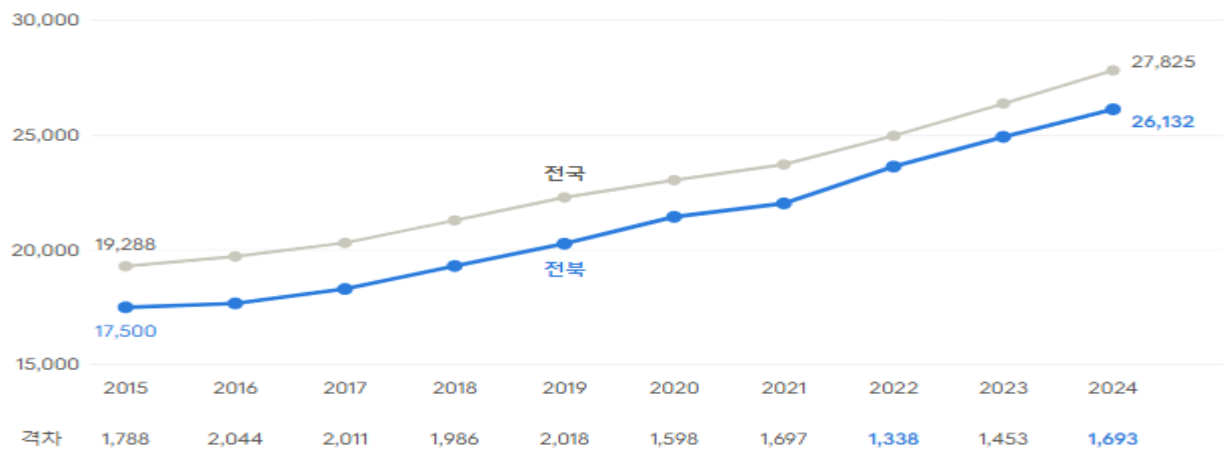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19,288	19,714	20,309	21,288	22,289	23,042	23,726	24,971	26,383	27,825
서울	22,822	23,375	23,976	25,053	26,229	26,428	27,119	28,187	30,382	32,224
부산	18,609	18,637	19,161	20,022	21,096	21,715	22,338	23,730	24,853	26,157
대구	17,939	18,468	18,955	19,891	20,760	21,581	22,197	23,425	24,603	25,784
인천	17,960	18,611	19,297	20,522	21,517	22,338	23,053	24,387	25,421	26,869
광주	18,632	18,837	19,483	20,675	21,759	22,766	23,649	25,203	26,142	27,782
대전	19,568	19,917	20,619	21,756	22,978	23,916	24,774	26,158	27,418	28,753
울산	22,904	22,883	22,973	23,252	24,079	24,671	25,672	27,079	29,378	31,117
세종	23,323	22,605	22,678	22,790	23,515	24,369	25,346	25,854	26,598	28,379
경기	19,096	19,660	20,414	21,488	22,552	23,379	23,962	25,248	26,488	27,914
강원	17,113	17,644	18,305	19,285	20,221	21,294	22,104	23,029	24,041	25,243
충북	17,470	17,894	18,634	19,734	20,770	21,801	22,873	24,181	25,327	26,551
충남	17,704	17,842	18,332	19,292	20,125	21,308	22,047	23,176	24,449	25,610
전북	**17,500**	**17,670**	**18,298**	**19,302**	**20,271**	**21,444**	**22,029**	**23,633**	**24,930**	**26,132**
전남	17,211	17,863	18,433	19,384	20,355	21,395	22,270	23,748	25,444	26,804
경북	17,424	17,28	18,106	18,856	19,655	20,631	21,251	22,426	23,677	24,861
경남	17,690	18,181	18,530	19,217	19,860	20,622	21,262	22,447	23,671	25,057
제주	17,959	18,295	18,731	19,402	19,979	20,835	21,396	22,481	23,718	24,611

1)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개인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지표로 지역주민의 1인당 평균 소득 수준을 나타냄.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 2024년 기준 자료가 최신 공표자료임.

[그림 1] 1인당 연간 개인소득 비교(전국, 전북 / 2015. ~ 2022.)

(단위 : 천원)



가-2. 통계 분석

○ 전북의 1인당 개인소득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음.

2024년 전북의 1인당 개인소득은 2,613만 2천 원으로 **전국 평균** 2,782만 5천 원보다 **169만 3천 원 적었으며, 17개 시·도 중 11위에 머물렀음.**

○ 전북은 지난 10년간 **개인소득은 증가**했으나 **전국과의 격차를 충분히 좁히지는 못함**. 전북의 1인당 개인소득은 2015년 1,750만 원에서 2024년 2,613만 2천 원으로 49.3% 증가해 전국 증가율(44.3%)을 웃돌았음. **전국 대비 수준도** 90.7%에서 93.9%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낮아 소득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2022년을 기점으로 소득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임. 2022년에는 전국 대비 94.6% 수준으로 격차가 133만 8천 원까지 축소되었으나, 2023~2024년 전북의 증가율이 각각 5.5%, 4.8%로 전국 증가율인 5.7%, 5.5%를 밑돌면서 **2024년 격차가 169만 3천 원으로 확대됨.** 이는 장기적인 소득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전국과의 소득 격차를 좁히는 동력이 약화**되었음.

나-1. 최근 10년간 1인당 지역총소득

[표 1] 1인당 지역총소득[1], 2015. ~ 2024.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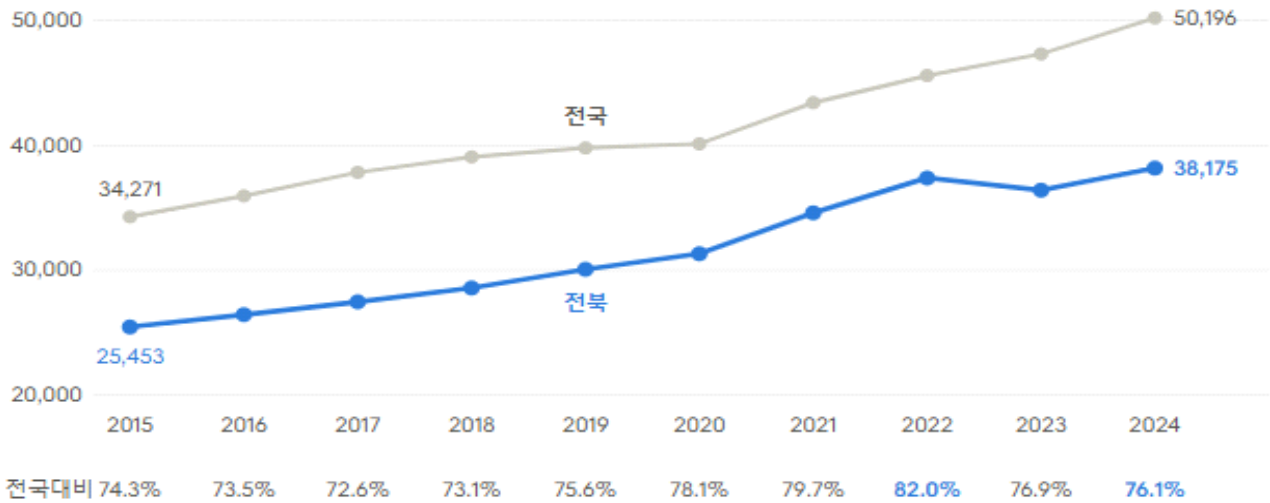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34,271	35,949	37,835	39,070	39,787	40,115	43,415	45,588	**47,310**	**50,196**
서울	45,597	48,496	50,778	52,690	53,758	53,474	59,498	63,778	65,918	69,032
부산	27,678	28,369	28,776	29,617	30,892	31,112	32,832	34,263	35,860	38,448
대구	25,327	26,455	27,681	28,554	29,413	29,509	31,558	34,000	34,402	36,183
인천	28,319	30,331	31,520	32,354	34,160	34,505	37,828	39,748	41,340	43,415
광주	26,602	27,895	29,142	30,657	32,306	33,187	34,787	36,826	37,909	40,415
대전	28,460	29,703	31,906	32,556	34,444	35,367	36,934	39,378	40,857	42,349
울산	50,693	53,523	52,675	53,566	54,941	53,378	57,151	56,854	61,103	66,747
세종	44,268	41,933	41,831	40,267	42,061	41,899	45,005	46,146	47,047	51,144
경기	34,655	36,112	39,929	41,771	40,898	41,282	44,754	47,144	47,641	50,198
강원	25,143	26,610	28,250	29,533	31,044	31,285	33,317	35,422	37,659	39,934
충북	29,959	32,022	33,670	35,374	37,426	37,858	40,982	44,535	45,277	47,313
충남	36,598	38,731	40,111	40,624	41,751	42,810	46,639	48,067	49,650	52,743
전북	**25,453**	**26,438**	**27,467**	**28,576**	**30,072**	**31,318**	**34,592**	**37,379**	**36,405**	**38,175**
전남	35,266	37,384	37,215	36,671	37,012	40,489	40,067	36,035	45,727	52,307
경북	31,613	32,677	33,012	33,825	34,792	34,955	37,956	38,168	40,971	44,310
경남	29,583	30,376	31,183	31,477	32,975	32,777	33,986	35,722	39,184	43,127
제주	29,425	30,966	32,537	32,497	32,250	31,825	36,153	36,865	36,538	39,396

1) 지역총소득을 해당 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금액.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 2024년 기준 자료가 최신 공표자료임.

[그림 1] 1인당 지역총소득 비교(전국, 전북 / 2015. ~ 2024.)

(단위 : 천원)



나-2. 통계 분석

○ 전북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2015~2018년 전국 대비 상대수준이 **74.3%에서 73.1%로 하락했으며,** 2016~2017년에는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함.** 이후 2019~2022년에는 1인당 지역총소득이 증가하면서 전국 대비 상대수준이 82.0%(10위)까지 개선되었으나, **2024년 대구 다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과의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2023년 감소 이후 2024년 회복했으나 전국과의 소득 격차는 오히려 확대됨. 전북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2023년 36,405천 원으로 전년보다 974천 원(2.6%) 감소한 뒤, 2024년 38,175천 원으로 회복함. 그러나 **전국 대비 상대수준은 76.1%(16위)에 그쳤으며**, 전국과의 금액 격차도 2022년 8,209천 원에서 **2024년 12,021천 원으로 3,812천 원 확대됨**.

다-1. 최근 10년간 1인당 GRDP

[표 1] 1인당 GRDP[1], 2014. ~ 2024.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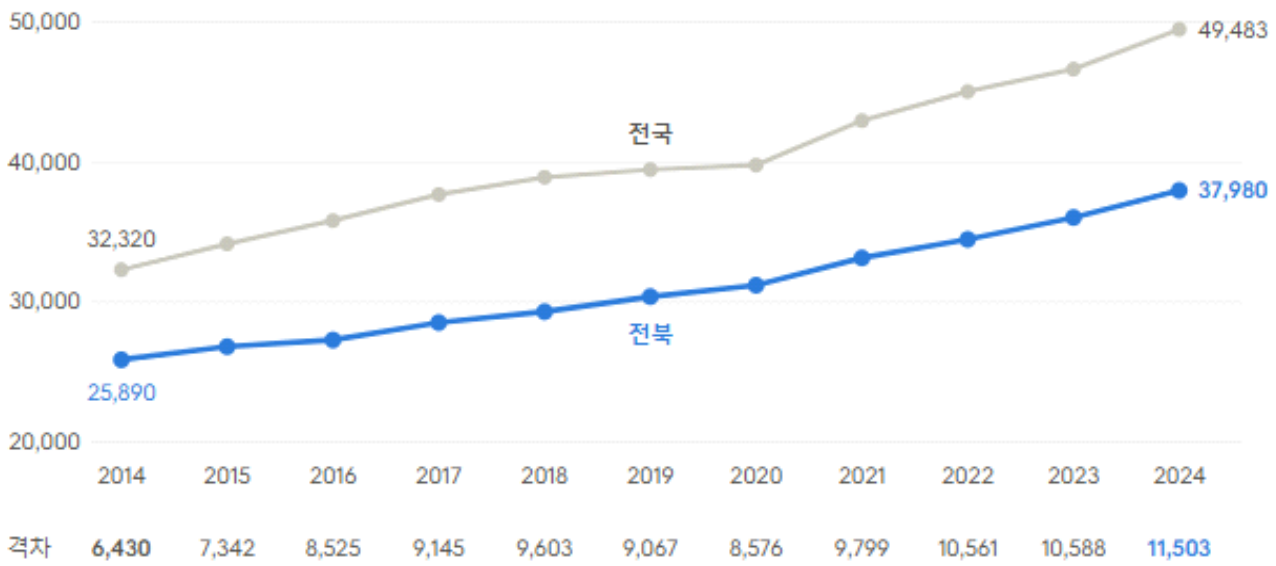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32,320**	**34,169**	**35,825**	**37,690**	**38,922**	**39,467**	**39,789**	**42,963**	**45,045**	**46,640**	**49,483**
서울	36,635	38,911	41,359	43,731	46,547	48,248	49,165	53,373	56,094	58,829	61,215
부산	23,991	25,707	26,800	27,210	28,355	29,436	29,272	31,950	34,465	35,431	37,085
대구	21,114	22,685	23,382	24,170	24,820	25,653	25,928	27,770	29,654	30,664	31,374
인천	26,559	28,376	29,864	31,198	31,688	32,272	32,292	35,388	38,065	39,104	41,187
광주	23,448	24,731	26,248	27,449	28,594	29,807	30,823	32,098	33,497	35,143	37,675
대전	23,047	24,568	26,265	27,281	28,027	29,870	31,276	32,928	34,409	36,174	38,220
울산	63,793	65,408	65,031	66,786	65,897	65,486	59,529	70,889	76,234	80,821	85,194
세종	67,352	53,194	46,767	44,964	41,137	40,597	40,212	42,797	42,207	43,227	44,610
경기	30,249	32,590	34,399	37,146	38,541	38,135	38,890	41,392	42,903	43,155	46,996
강원	26,351	27,608	29,380	31,200	32,267	33,780	33,945	36,350	37,797	40,749	42,563
충북	33,496	36,656	39,848	43,254	46,002	46,777	46,462	49,519	52,252	53,827	56,328
충남	47,563	49,568	51,891	55,839	56,126	54,857	56,448	62,474	64,469	64,310	67,758
전북	**25,890**	**26,827**	**27,300**	**28,545**	**29,319**	**30,400**	**31,213**	**33,164**	**34,484**	**36,052**	**37,980**
전남	39,322	40,834	42,473	43,582	44,086	44,535	45,339	52,489	54,179	55,892	59,177
경북	40,839	40,916	41,820	43,005	43,129	42,598	42,263	44,957	46,243	48,791	52,298
경남	31,316	32,739	34,005	33,985	34,291	35,355	34,325	35,661	38,612	42,638	46,550
제주	27,766	30,275	32,389	34,134	33,673	33,545	32,404	33,861	35,999	38,570	39,914

1) 지역내총생산(GRDP)을 해당 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금액.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 2024년 기준 자료가 최신 공표자료임.

[그림 1]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전북 비교(2014. ~ 2024.)

(단위 : 천원)



다-2. 통계 분석

○ 전북의 1인당 GRDP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과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전북의 1인당 GRDP는 2014년 25,890천 원에서 2024년 37,980천 원으로 12,090천 원(46.7%) 증가함. 그러나 전국은 같은 기간 32,320천 원에서 49,483천 원으로 17,163천 원(53.1%) 증가하여 전북의 증가율을 상회함. 이에 따라 전국 대비 **전북의 상대수준은 80.1%에서 76.8%로 하락해** 지역 내 생산 기반의 **상대적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전국과의 **금액 격차는 1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2014년 6,430천 원이었던 전국과 전북의 1인당 GRDP 격차는 2024년 11,503천 원으로 5,073천 원 확대됨. 특히 2021년 이후 전국의 1인당 GRDP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격차가 2021년 9,799천 원에서 2024년 11,503천 원으로 확대됨. 이는 전북의 생산 규모가 전국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전북의 1인당 GRDP는 2024년 37,980천 원으로 **17개 시·도 중 14위 수준임.** 전북보다 낮은 지역은 대구(31,374천 원), 부산(37,085천 원), 광주(37,675천 원)이며, **전북은 전국 평균의 76.8% 수준에 머물고 있음**. 반면 충남(67,758천 원), 울산(85,194천 원), 전남(59,177천 원) 등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지역별 산업구조와 생산성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라. 1인당 경제지표 총평

○ 종합적으로 전북은 **생산 규모가 지역 소득 증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주민의 **개인소득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향후에는 단순한 생산 규모 확대를 넘어 지역 기업의 부가가치 제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소득을 높여 생산성과 주민소득 간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이차전지·반도체 소재·케미컬 등 전략산업의 성과가 **지역 기업의 성장과 고용, 주민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6. 창업기업 및 가젤기업 통계

가. 지역별 창업기업 현황

[표 1] 지역별 창업기업 현황(전국), 2016. ~ 2025.

(단위 : 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1,190,177	1,256,267	1,344,366	1,285,259	1,484,667	1,417,973	1,317,479	1,238,617	1,182,905	1,135,561
서울	240,617	249,581	289,280	262,970	309,896	276,758	249,175	230,141	218,106	219,138
부산	72,442	75,142	75,496	74,132	86,597	82,845	74,768	68,332	62,293	59,068
대구	49,924	50,295	51,313	51,445	55,782	53,211	49,701	48,347	44,782	42,074
인천	68,527	75,594	79,350	79,719	97,059	96,818	84,878	78,930	76,212	73,773
광주	31,763	33,377	35,627	35,065	39,333	35,615	33,267	31,648	29,297	26,699
대전	31,063	31,953	32,967	33,628	39,330	35,500	33,699	33,013	31,191	30,105
울산	24,499	24,833	23,080	22,760	25,388	21,939	22,663	20,928	18,785	17,565
세종	9,562	10,392	9,737	8,846	10,555	9,420	8,915	8,237	8,068	7,329
경기	321,234	344,860	378,899	361,001	431,992	440,584	399,091	369,562	361,284	353,950
강원	34,694	35,629	36,335	35,468	41,330	38,080	38,614	35,854	33,385	31,886
충북	34,382	34,656	35,704	36,830	40,749	39,195	38,234	36,639	34,280	33,273
충남	46,162	49,836	51,567	51,032	58,116	57,188	57,643	52,074	49,548	48,255
전북	**37,040**	**45,253**	**48,441**	**44,073**	**46,748**	**41,813**	**41,223**	**43,367**	**43,975**	**36,972**
전남	37,526	42,683	45,682	42,854	46,390	41,687	40,012	40,602	39,025	32,820
경북	54,948	56,951	57,272	56,002	58,749	56,457	56,296	55,853	52,713	47,476
경남	74,318	73,530	71,525	69,496	75,084	70,679	69,926	66,306	61,917	58,471
제주	21,476	21,702	22,091	19,938	21,569	20,184	19,374	18,784	18,044	16,707

※ 출처 : 국가데이터처,「지역별 창업기업 수」

나. 통계 분석

○ 2025년 전북 창업기업은 36,972개로 **전년보다 15.9% 줄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으며,** 이는 10년 전(2016년 37,040개)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창업기업 수 증가세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창업기업 수가 감소하던 2023년과 2024년에 전북은 증가하여 전국 대비 비중이 3.72%(10년 중 최고)까지 상승했으나, **2025년 한 해에만 창업기업 수가 7,003개 급감하면서 전국 대비 비중도 3.26%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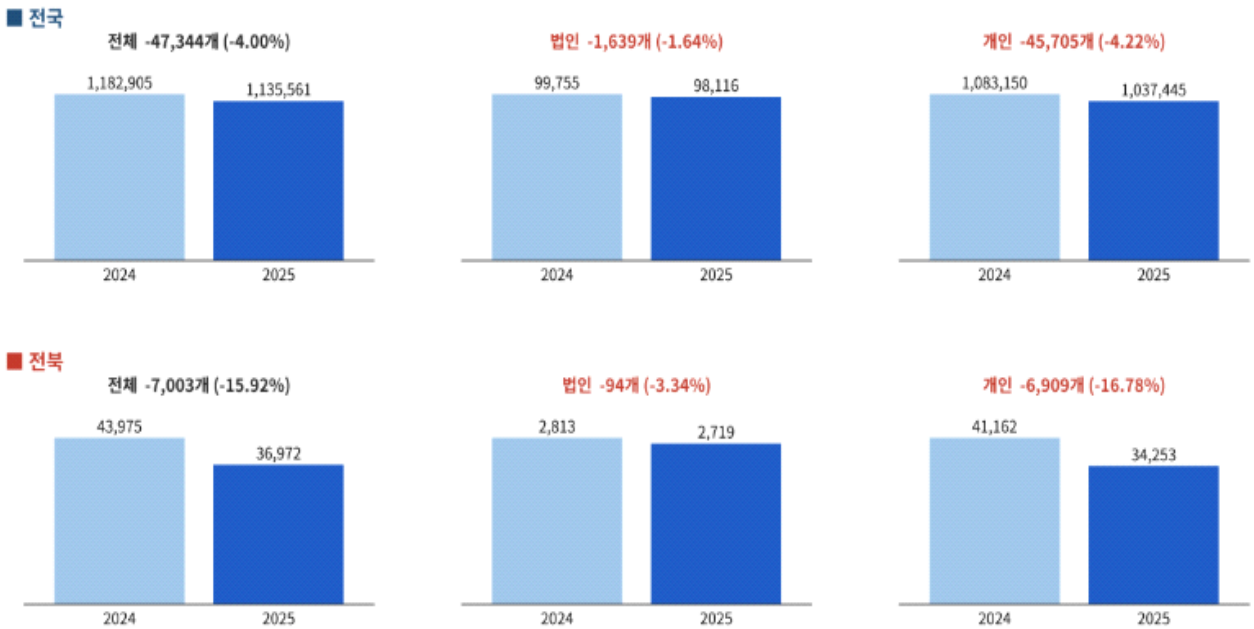
[표 2] 전국, 전북 창업기업 세부현황, 2024. ~ 2025.

(단위 : 개)

구분	2024			2025		
	전체	법인	개인	전체	법인	개인
전국	1,182,905	99,755	1,083,150	1,135,561	98,116	1,037,445
전북	43,975	2,813	41,162	36,972	2,719	34,253

※ 출처 : 국가데이터처,「지역별 창업기업 수」

[그림 1] 전국, 전북 창업기업 수 비교(2024. ~ 2025.)



○ 2025년 **전국 창업기업 수**는 113만 5,561개로 **전년 대비 4.0% 감소**하였으며, **법인 창업은 1.6%, 개인 창업은 4.2% 각각 감소**하였음.

○ 반면 **전북은** 전체 창업기업 수가 3만 6,972개로 **전년 대비 15.9% 감소**하였으며, **법인 창업은 3.3%, 개인 창업은 16.8% 감소**하는 등 전국보다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남. 특히 전북 전체 창업기업 감소분의 **98.7%가 개인 창업에서 발생**하여 **개인 창업 부문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 이에 따라 예비창업자 발굴 및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지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지원사업의 성과를 창업기업 수뿐만 아니라 매출, 고용 창출, 컨설팅, 실적 등으로 다각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원사업의 이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다. 지역별 가젤기업 현황

[표 1] 지역별 가젤기업[1] 현황(전국), 2015. ~ 2024.

(단위 :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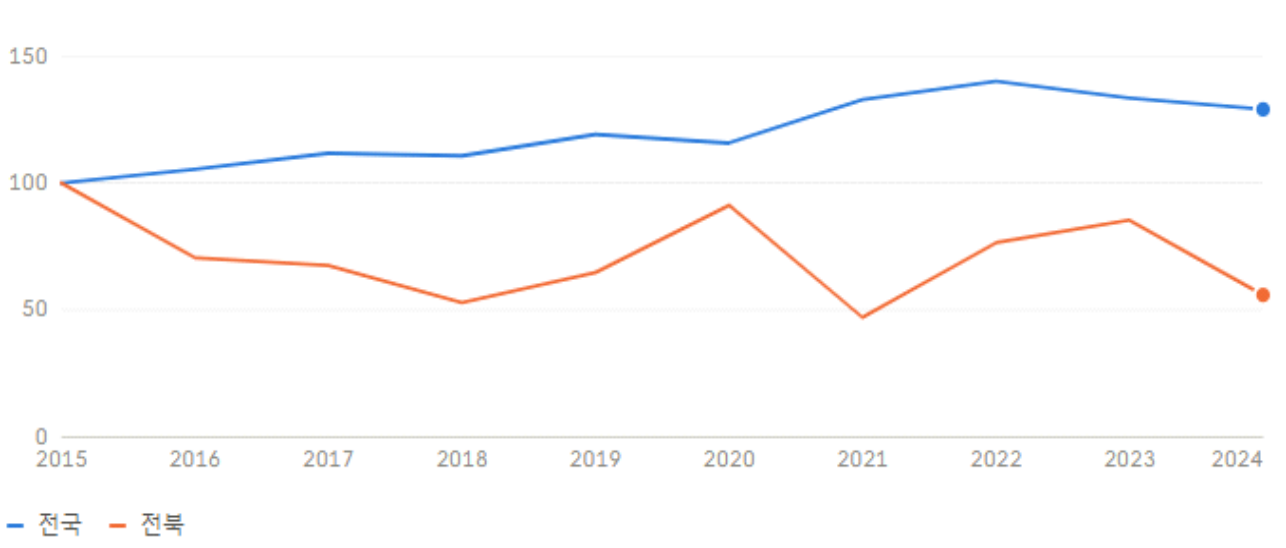
시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1,049	1,106	1,172	1,161	1,249	1,214	1,394	1,470	1,400	1,353
서울	301	318	366	415	427	428	492	552	531	496
부산	55	62	58	42	51	55	65	67	73	85
대구	34	28	29	36	39	28	31	40	37	42
인천	40	51	50	65	57	40	62	61	69	57
광주	15	28	31	20	28	25	21	29	23	27
대전	24	27	25	27	40	33	34	34	37	30
울산	30	28	17	16	17	21	15	18	26	26
세종	5	3	5	4	5	8	9	5	5	4
경기	268	315	325	303	326	330	419	387	330	320
강원	12	16	11	14	21	15	20	21	18	17
충북	33	36	30	30	35	32	45	44	33	37
충남	47	37	65	42	50	47	51	50	44	56
전북	**34**	**24**	**23**	**18**	**22**	**31**	**16**	**26**	**29**	**19**
전남	27	19	17	27	35	44	25	18	24	29
경북	52	43	49	44	48	37	35	52	39	35
경남	63	63	65	47	39	32	43	54	71	63
제주	9	8	6	11	9	8	11	12	11	10

1) 고성장기업* 중 사업자등록 후 5년 이하인 기업

*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 수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기업생멸행정통계」

[그림 1] 최근 10년간 가젤기업 수 지수[1] 전국, 전북 비교(2015. ~ 2024.)



1) 지수= (해당연도 가젤기업 수 ÷ 2015년 가젤기업 수) × 100

라. 통계 분석

○ 전국 가젤기업 수는 2015년 1,049개에서 2024년 1,353개로 **304개(29.0%) 증가**하였음. 2022년 1,470개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400개, 2024년 1,353개로 2년 연속 감소하였음.**

○ 전북의 가젤기업 수는 2015년 34개에서 **2024년 19개로 15개(44.1%) 감소**하였음. 같은 기간 **전국은 29.0% 증가한 반면, 전북은 감소**하여 전국과 상반된 추세를 보였음.

○ 최근 10년간 가젤기업 수가 감소한 지역은 **전북(-44.1%)**, 울산(-13.3%), 경북(-32.7%), 경기(-11.2%), 세종(-20.0%) 등이었으며, **전북의 감소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전북은 창업기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및 판로 확대 등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고성장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7. 시도별 제조업체 현황

가. 제조업 사업체 현황

[표 1] 시도별 제조업 현황, 최근 5년간 2020.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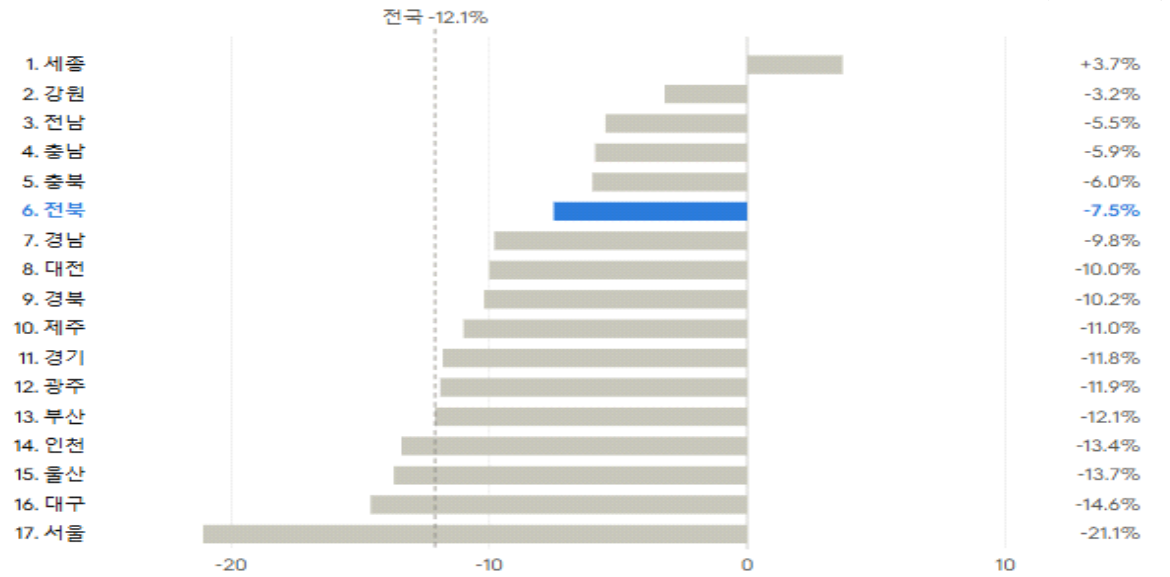
(단위 : 개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률 (2020→2024)
전국	**579,645**	**579,050**	**586,532**	**537,580**	**509,467**	**－12.1%**
서울	78,642	76,870	75,641	67,269	62,032	－21.1%
부산	38,222	38,105	38,067	35,062	33,609	－12.1%
대구	33,258	32,690	32,445	30,025	28,408	－14.6%
인천	33,657	33,574	33,961	30,869	29,156	－13.4%
광주	11,535	11,572	11,661	10,711	10,166	－11.9%
대전	11,049	11,047	11,151	10,302	9,939	－10.0%
울산	10,235	10,025	10,282	9,313	8,836	－13.7%
세종	1,764	1,841	1,949	1,870	1,830	+3.7%
경기	184,016	184,432	187,354	171,187	162,358	－11.8%
강원	10,497	10,682	10,805	10,426	10,161	－3.2%
충북	18,488	18,644	19,318	18,189	17,375	－6.0%
충남	24,423	24,704	25,584	24,019	22,992	－5.9%
전북	**16,219**	**16,384**	**16,667**	**15,570**	**15,002**	**－7.5%**
전남	17,079	17,417	18,103	16,993	16,143	－5.5%
경북	37,730	37,897	38,816	35,501	33,867	－10.2%
경남	49,208	49,462	51,033	46,864	44,369	－9.8%
제주	3,623	3,704	3,695	3,410	3,224	－11.0%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 제11차 개정 기준(2020.~2024.)

[그림 1] 최근 5년간 제조업 사업체 전국, 전북 비교(2020. ~ 2024.)

(단위 : %)



나. 통계 분석

○ 전북 **제조업분야 사업체 수**는 2020~2022년 증가하다가 **202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됨**. 전북은 2020년 16,219개에서 2022년 16,667개로 448개(2.8%) 증가했으나, 2023년 15,570개, 2024년 15,002개로 감소함. 특히 **2022~2024년 1,665개(10.0%) 감소하여 최근 사업체 기반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임.

○ 2020~2024년 전북 제조업 사업체 수는 7.5% 감소해 전국 감소율(12.1%)보다 낮은 수준임. 전북은 2020년 16,219개사에서 2024년 15,002개사로 1,217개사 감소함. 같은 기간 전국은 579,645개사에서 509,467개사로 70,178개사 감소함. 전북의 감소율은 **전국보다 4.6%p 낮아 5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음**.

○ 시·도별로는 제조업 사업체 감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2020~2024년 전국적으로 제조업 사업체 수가 감소한 가운데, 서울은 21.1% 감소해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대구(-14.6%), 울산(-13.7%), 인천(-13.4%) 등도 전국 감소율을 웃돌면서 **대도시권 소재 제조업분야 사업체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졌음**. 반면 세종은 3.7% 증가했고, 강원(-3.2%), 전남(-5.5%), 충남(-5.9%), 충북(-6.0%) 등은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전북(-7.5%)도 전국보다 감소율이 낮은 지역에 해당함.

○ 다만 전**북은 2022년 이후 감소세가 뚜렷해 제조업 기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020~2022년 사업체 수가 증가한 뒤 2023~2024년 감소로 전환된 만큼, 단순한 5년 누적 증감률만으로 지역 제조업의 안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제조업 사업체 감소 원인을 업종별·규모별로 분석하고, 기존 제조기업의 경영 안정과 기술 고도화, 신규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8. 폐업 법인사업자 현황

가. 지역별 폐업 법인사업자 현황

[표 1] 지역별 폐업 법인사업자[1] 현황(전국), 2016.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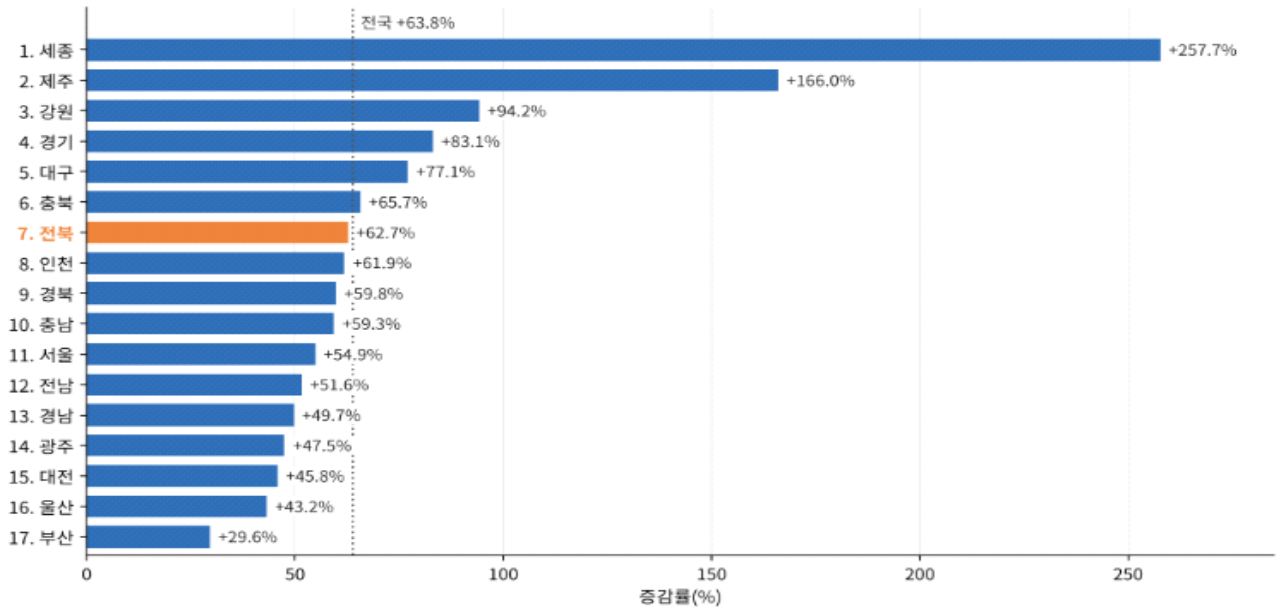
(단위 :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0년 증감률
전국	50,630	69,600	70,362	69,667	69,587	67,547	65,983	67,656	75,668	82,931	+63.8%
서울	15,182	21,479	23,175	22,152	21,744	20,228	19,238	19,602	21,516	23,512	+54.9%
부산	3,076	3,852	3,837	3,717	3,738	3,797	3,592	3,726	3,927	3,988	+29.6%
대구	1,567	2,270	2,127	2,237	2,174	2,076	2,095	2,110	2,401	2,775	+77.1%
인천	2,469	3,551	3,316	3,265	3,600	3,303	3,203	2,973	3,641	3,998	+61.9%
광주	1,457	1,873	2,009	1,779	1,837	1,997	1,755	1,765	1,992	2,149	+47.5%
대전	1,276	1,674	1,745	1,619	1,497	1,491	1,548	1,658	1,724	1,861	+45.8%
울산	821	1,103	1,173	1,268	1,029	1,009	956	1,024	1,171	1,176	+43.2%
세종	156	241	328	315	423	413	381	397	467	558	+257.7%
경기	12,953	17,668	17,072	17,472	17,627	17,402	17,728	17,973	20,804	23,717	+83.1%
강원	934	1,332	1,244	1,279	1,312	1,421	1,507	1,485	1,680	1,814	+94.2%
충북	1,290	1,898	1,695	1,931	1,763	1,683	1,645	1,817	1,923	2,138	+65.7%
충남	1,860	2,405	2,637	2,433	2,439	2,604	2,437	2,638	2,847	2,963	+59.3%
전북	**1,493**	**1,929**	**1,780**	**1,936**	**1,951**	**1,971**	**1,994**	**2,006**	**2,142**	**2,429**	**+62.7%**
전남	1,495	2,025	1,892	1,825	1,901	1,905	1,852	2,008	2,132	2,266	+51.6%
경북	1,875	2,464	2,519	2,512	2,601	2,462	2,478	2,520	2,714	2,996	+59.8%
경남	2,288	3,118	2,977	3,004	3,078	2,874	2,780	2,993	3,313	3,426	+49.7%
제주	438	718	836	923	873	911	794	961	1,274	1,165	+166.0%

1) 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를 의미함.

※ 출처 : 국가데이터처, 「폐업자 현황」

[그림 1] 시도별 법인사업자 폐업 수 10년 증감률, 2016. ~ 2025.



나. 지역별 폐업 법인 통계 분석

○ 전국 법인사업자 폐업 수는 2015년 50,630개에서 2024년 82,931개로 **63.8%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 75,668개에서 **2024년 82,931개로 1년간 9.6% 증가함.**

○ 전북의 법인사업자 폐업 수 10년 증감률은 +62.7%로 17개 시도 중 7위이며, 전국 상위권에 해당함.

○ 전북은 2015년 1,493개에서 2024년 2,429개로 62.7% 증가해 전국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2024년 전년 대비 폐업 법인사업자 증가율은** 세종(19.5%), 대구(15.6%), 경기(14.0%), **전북(13.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은 전국 증가율(9.6%)을 3.8%p 상회함.**

○ 이에 따라 **전북은 업종별·규모별 폐업 현황과 기업 경영 애로를 분석**하고, 경영위기 징후가 있는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경영 컨설팅, 금융·보증 지원 및 사업전환 지원 등을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과 사업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9. 시도별 연구개발비 현황

가. 연구개발비 현황

[표 1] 최근 5년간 시도별 연구개발비 현황, 2020.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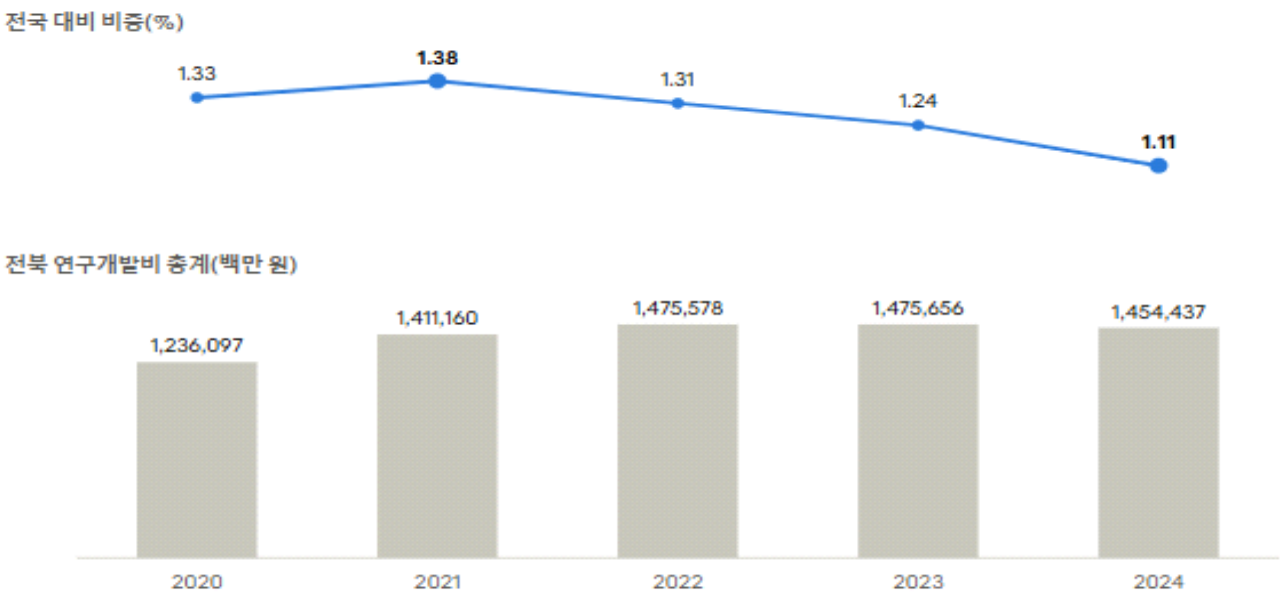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93,071,686	102,135,244	112,646,008	119,074,025	131,046,205
서울	14,431,991	16,204,342	17,688,535	18,871,242	19,969,505
부산	1,696,834	1,762,737	2,037,676	2,002,375	2,198,837
대구	1,364,107	1,487,642	1,578,436	1,589,075	1,662,584
인천	2,936,629	3,226,992	3,602,927	3,603,118	3,680,375
광주	953,946	1,108,895	1,129,290	1,101,612	1,127,983
대전	8,873,691	9,442,797	10,379,115	11,085,166	10,770,710
울산	1,067,196	1,189,961	1,307,878	974,694	992,737
세종	611,544	653,391	751,287	744,997	729,526
경기	47,045,127	51,957,126	57,702,830	61,098,109	72,046,182
강원	555,090	685,902	763,520	794,487	780,636
충북	1,921,720	2,130,661	2,487,439	2,425,902	2,337,391
충남	3,665,088	3,632,957	4,116,387	4,979,398	4,648,072
전북	**1,236,097**	**1,411,160**	**1,475,578**	**1,475,656**	**1,454,437**
전남	704,142	814,256	946,446	897,717	946,458
경북	2,687,056	2,775,075	3,195,310	3,841,239	3,859,915
경남	3,089,817	3,408,036	3,255,519	3,341,548	3,597,233
제주	231,611	243,313	227,835	247,691	243,625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연구개발활동조사」

[그림 1] 최근 5년간 시도별 연구개발비 현황과 전국 대비 비중, 2020. ~ 2024.

(단위 : %, 백만원)



나. 통계 분석

○ 전북의 연구개발비는 2020~2022년 증가했으나, 2023년 정체 이후 **20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전북 연구개발비는 2020년 1조 2,361억 원에서 2022년 1조 4,756억 원으로 2,395억 원(19.4%)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2024년에는 1조 4,544억 원으로 감소함. 이는 **최근 전북의 연구개발 투자가 정체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전북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전국보다 낮아 전국 대비 비중이 축소**됨. 2020~2024년 전북 연구개발비는 1조 2,361억 원에서 1조 4,544억 원으로 17.7% 증가했으나, 전국은 93조 716억 원에서 131조 462억 원으로 40.8% 증가함. 이에 따라 전국 연구개발비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약 1.33%에서 2024년 약 1.11%로 하락해 전국 대비 투자 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함.

○ 전북은 **전략산업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아울러 투자 규모뿐 아니라 GRDP 대비 연구개발비, 기업 연구개발비 비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연구개발 관련 고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연구개발 투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10. 신재생에너지 생산 통계

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표 1]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합계(전국), 2020. ~ 2024.

(단위 : t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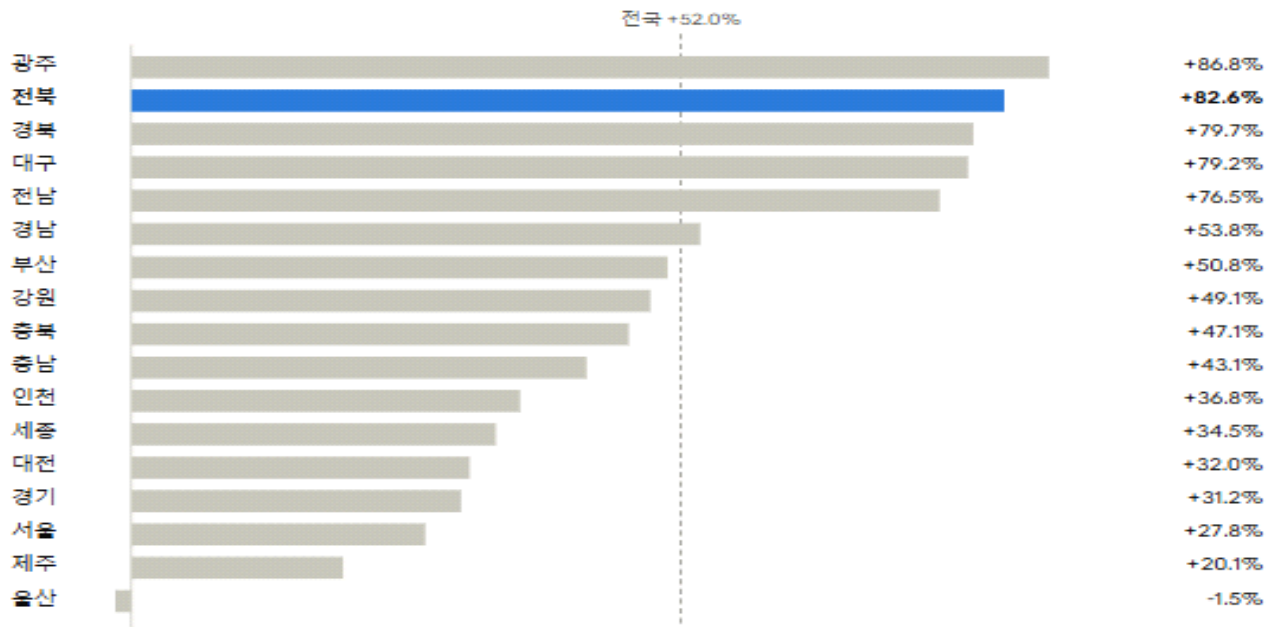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률 (2020→2024)
전국	**12,378,065**	**14,000,317**	**15,706,206**	**17,058,307**	**18,812,997**	**+52.0%**
서울	303,099	325,737	317,023	319,589	387,408	+27.8%
부산	189,363	213,516	236,408	269,206	285,473	+50.8%
대구	149,874	184,664	179,814	244,372	268,582	+79.2%
인천	489,348	595,688	586,824	615,596	669,423	+36.8%
광주	97,865	99,072	128,439	156,925	182,860	+86.8%
대전	90,625	91,966	114,634	111,260	119,649	+32.0%
울산	493,628	501,111	480,459	470,923	486,078	-1.5%
세종	73,803	84,544	90,157	107,440	99,270	+34.5%
경기	1,554,853	1,664,252	1,782,795	1,869,584	2,040,005	+31.2%
강원	1,306,481	1,558,778	1,730,425	1,769,330	1,948,427	+49.1%
충북	720,895	697,775	851,656	1,013,944	1,060,320	+47.1%
충남	1,764,287	1,985,783	2,163,189	2,191,494	2,524,577	+43.1%
전북	**1,760,693**	**2,116,947**	**2,539,588**	**2,981,914**	**3,215,470**	**+82.6%**
전남	1,225,665	1,465,050	1,754,851	1,921,768	2,163,480	+76.5%
경북	925,025	1,080,720	1,288,507	1,405,487	1,662,183	+79.7%
경남	651,123	710,771	782,019	919,878	1,001,738	+53.8%
제주	581,437	623,944	679,417	689,595	698,055	+20.1%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주: 신·재생에너지 합계 =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단위 toe는 석유환산톤

[그림 1]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증감률(2020→2024)

(단위 : %)



다. 전북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표 2] 전북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2020. ~ 2024.

(단위 : t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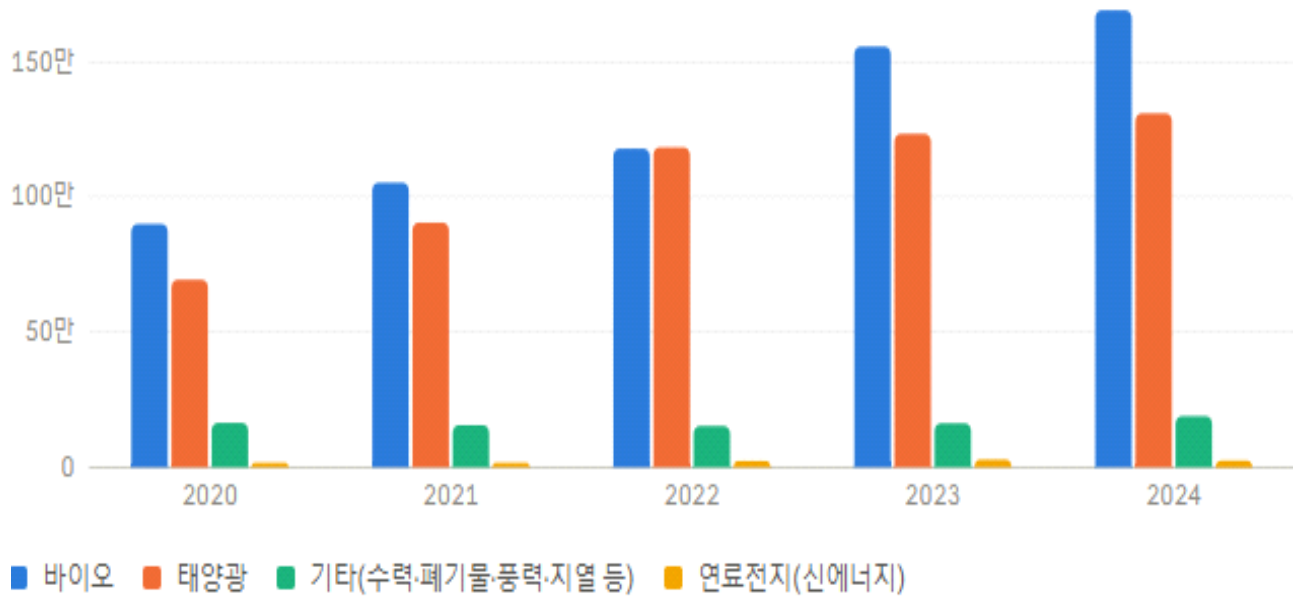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률 (2020→2024)
신재생에너지(합계)	**1,760,693**	**2,116,947**	**2,539,588**	**2,981,914**	**3,215,470**	+82.6
재생에너지(소계)	**1,758,844**	**2,114,538**	**2,515,875**	**2,953,270**	**3,189,603**	+81.3
바이오	900,217	1,053,063	1,178,969	1,556,521	1,690,782	+87.8
태양광	694,095	905,410	1,183,907	1,233,799	1,309,467	+88.7
수력	60,872	50,892	45,345	53,863	73,680	+21.0
폐기물	52,645	50,321	47,277	52,480	58,908	+11.9
풍력	27,948	31,080	34,440	30,601	28,494	+2.0
지열	21,015	21,717	23,817	23,775	25,938	+23.4
태양열	1,248	1,215	1,216	1,198	1,223	-2.0
수열	804	841	904	1,033	1,112	+38.3
해양	-	-	-	-	-	-
신에너지(소계)	**1,850**	**2,409**	**23,713**	**28,644**	**25,867**	+1,298.2
연료전지	1,850	2,409	23,713	28,644	25,867	+1,298.2
IGCC	-	-	-	-	-	-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주: 신·재생에너지 합계 =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단위 toe는 석유환산톤

[그림 2] 전북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2020~2024)

(단위 : toe)



나. 통계 분석

○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20년 176만 693toe에서 2024년 321만 5,470toe로 증가하여 82.6%의 증가율을 기록함.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 52.0%보다 30.6% 높은 수준**으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21만 5,470toe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함. 특히 전북은 2020년 충남에 이어 2위였으나, 2021년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재생에너지 원별 생산량은 바이오가 169만 782toe로 가장 많았으며, 태양광 130만 9,467toe, 수력 7만 3,680toe, 폐기물 5만 8,908toe 순으로 나타남. 특히 **바이오와 태양광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약 93.3%를 차지하여 생산량이 두 에너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증가율은 전년 대비 7.8%로 전국 증가율 10.3%보다 낮았고, **전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감소함.** 따라서 향후에는 발전설비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된 **에너지의 지역 내 활용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기업 유치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미래 신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비해 송전선로 등 전력계통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생산 전력의 원활한 송전과 신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함께 송전망 확충 및 전력계통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 전력 활용도를 높여 재생에너지 생산이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 건설수주액 통계

가. 건설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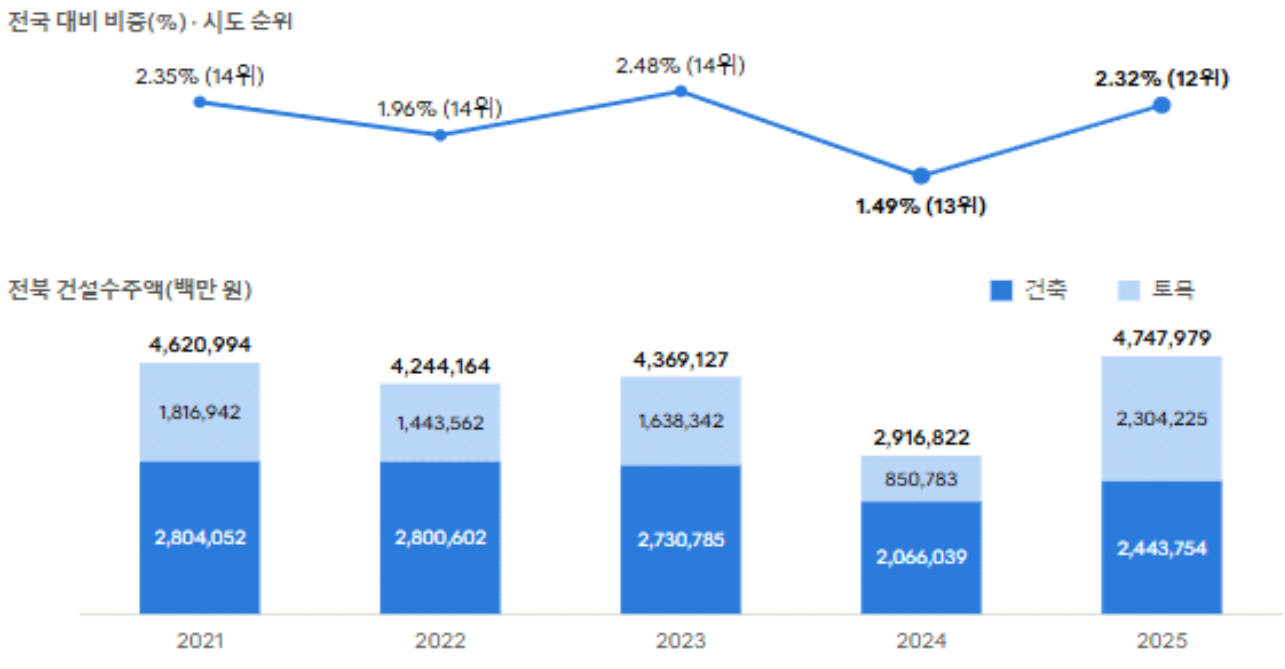
[표 1] 지역별 건설수주액 현황, 2021. ~ 2025.

(단위 : 백만원, 경상)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감률 (2021→2025)
전국	**196,447,736**	**216,036,034**	**176,427,078**	**195,428,438**	**204,996,562**	**+4.4%**
서울	21,015,600	26,287,940	20,774,861	32,440,141	48,881,995	+132.6%
부산	7,785,577	13,094,154	10,664,944	11,831,443	15,572,648	+100.0%
대구	9,026,690	4,857,788	2,632,094	2,524,052	4,155,391	-54.0%
인천	14,867,156	10,741,198	8,550,732	12,620,678	10,470,476	-29.6%
광주	3,778,514	2,965,873	6,919,827	2,456,692	1,156,065	-69.4%
대전	6,337,956	8,091,404	5,929,660	6,733,000	5,703,372	-10.0%
울산	4,806,590	5,767,186	12,374,775	5,653,429	5,272,341	+9.7%
세종	2,535,406	1,653,388	1,163,582	1,463,893	1,248,238	-50.8%
경기	67,454,724	74,028,729	58,104,195	69,199,599	68,638,490	+1.8%
강원	5,823,199	6,871,445	4,942,609	6,973,318	5,075,165	-12.8%
충북	8,097,711	9,674,027	5,878,072	7,556,555	8,162,602	+0.8%
충남	11,823,283	13,694,633	9,450,688	13,532,801	7,393,187	-37.5%
전북	**4,620,994**	**4,244,164**	**4,369,127**	**2,916,822**	**4,747,979**	**+2.7%**
전남	8,979,153	8,368,993	6,112,109	5,004,309	4,394,871	-51.1%
경북	10,188,370	12,014,285	9,664,178	6,408,065	5,480,520	-46.2%
경남	7,998,831	11,404,238	7,265,018	6,836,956	8,053,170	+0.7%
제주	1,307,982	2,276,589	1,630,607	1,276,685	590,052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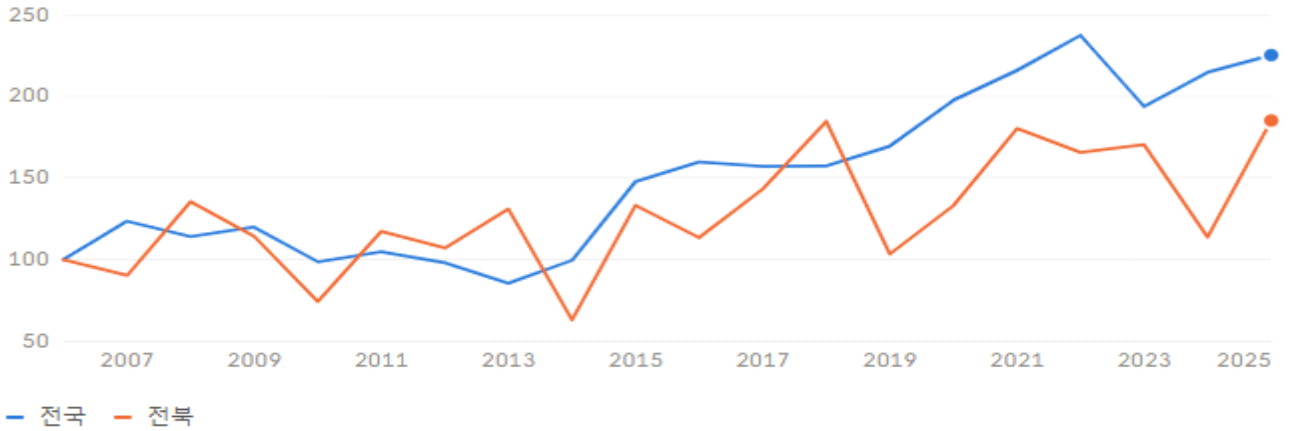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 전북 건설수주액과 전국 대비 비중, 2021. ~ 2025.



[그림 2] 20년간 건설수주액지수[1], 전국과 전북 비교, 2006. ~ 2025.

지수(2006년=100)



1) 지수= (해당 연도 수주액 ÷ 2006년 수주액) × 100, 경상가격 기준

나. 통계 분석

○ 전북의 건설수주액은 2021년 4조 6,210억 원에서 2025년 4조 7,480억 원으로 2.7% 증가함.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 4.4%보다 1.7% 낮은 수준임.** 연도별로는 2022년 4조 2,442억 원, 2023년 4조 3,691억 원으로 소폭 회복했으나, 2024년에는 2조 9,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3.3% 감소함.** 이후 2025년에는 4조 7,4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2.8% 증가해 큰 폭의 반등**을 보임.

○ 전북의 전국 건설수주액 대비 비중은 2021년 2.35%에서 2022년 1.96%로 하락한 뒤, 2023년 2.48%로 상승함. 2024년에는 1.49%로 낮아졌으나, 2025년에는 2.32%로 회복함. 시·도 순위도 2024년 13위에서 2025년 12위로 한 단계 상승하면서 전국 추세와 움직이면서도 연도별 변동 폭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며 **2025년의 반등이 지속적인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함.

○ 최근 20년간 전국 건설수주액 지수는 2006년 100에서 2025년 약 224로 상승한 반면, **전북은 약 185로 상승하여 전국보다 증가 폭이 작게 나타남.** 특히 전북은 연도별 변동 폭이 크고 2019년 이후 전국 지수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등 **전국 대비 상대적인 증가세가 낮은 수준**을 보임.

12. 주택보급률 및 주거 환경 통계

가-1. 시도별 주택 보급률

[표 1] 최근 5년간 전국 주택보급률, 2020. ~ 2024.

(단위: 천호, 천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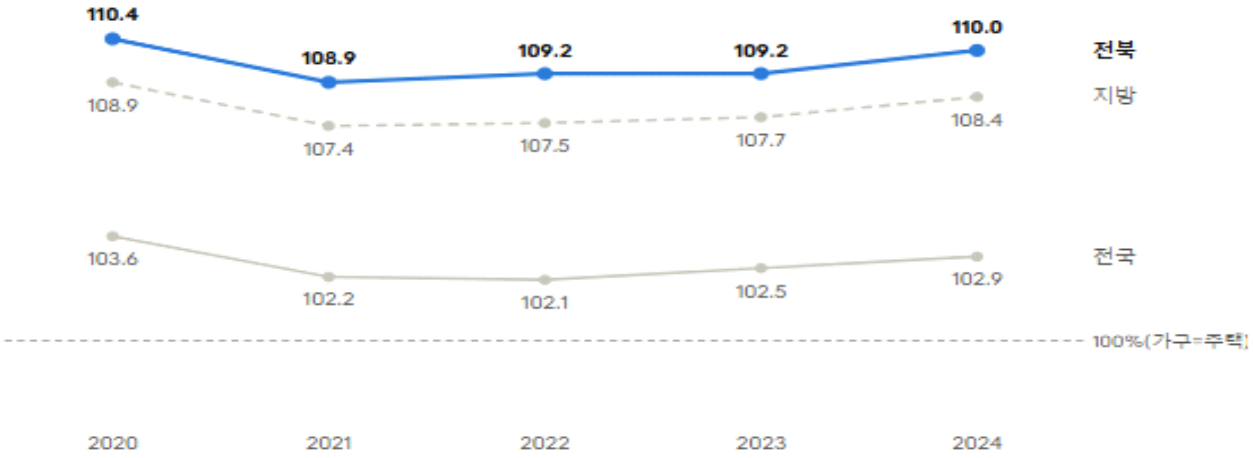
시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가구수**	**20,926.7**	**21,448.5**	**21,773.5**	**22,073.2**	**22,294.4**
	주택수	**21,673.5**	**21,917.2**	**22,236.9**	**22,623.9**	**22,939.8**
	보급률	**103.6**	**102.2**	**102.1**	**102.5**	**102.9**
수도권	가구수	10,227.9	10,521.1	10,718.5	10,883.9	11,019.7
	주택수	10,027.2	10,183.9	10,357.8	10,573.7	10,719.6
	보급률	98.0	96.8	96.6	97.2	97.3
지방	가구수	10,698.8	10,927.4	11,055.0	11,189.3	11,274.7
	주택수	11,646.3	11,733.2	11,879.1	12,050.2	12,220.2
	보급률	108.9	107.4	107.5	107.7	108.4
서울	가구수	3,982.3	4,046.8	4,098.8	4,141.7	4,159.5
	주택수	3,778.4	3,811.9	3,839.8	3,878.5	3,907.7
	보급률	94.9	94.2	93.7	93.6	93.9
부산	가구수	1,405.0	1,431.4	1,447.8	1,462.4	1,470.6
	주택수	1,460.1	1,462.6	1,485.6	1,505.4	1,507.0
	보급률	103.9	102.2	102.6	102.9	102.5
대구	가구수	985.8	1,000.9	1,010.8	1,033.2	1,043.7
	주택수	1,005.8	1,008.0	1,025.4	1,067.8	1,099.7
	보급률	102.0	100.7	101.4	103.3	105.4
인천	가구수	1,147.2	1,183.6	1,212.7	1,242.2	1,268.1
	주택수	1,134.8	1,154.3	1,187.8	1,231.0	1,255.4
	보급률	98.9	97.5	97.9	99.1	99.0
광주	가구수	599.2	615.7	623.3	627.6	628.6
	주택수	640.2	643.6	655.7	661.9	669.1
	보급률	106.8	104.5	105.2	105.5	106.4
대전	가구수	631.2	640.1	646.5	654.8	658.8
	주택수	620.2	621.0	628.1	631.3	649.0
	보급률	98.3	97.0	97.2	96.4	98.5
울산	가구수	444.1	451.4	454.0	458.1	462.3
	주택수	489.3	490.1	492.3	497.4	497.6
	보급률(%)	110.2	108.6	108.4	108.6	107.6
세종	가구수	139.1	145.3	154.0	156.4	158.9
	주택수	149.3	156.2	162.7	165.9	172.0
	보급률	107.3	107.5	105.6	106.1	108.2
경기	가구수	5,098.4	5,290.7	5,407.0	5,500.0	5,592.1
	주택수	5,113.9	5,217.8	5,330.2	5,464.2	5,556.6
	보급률	100.3	98.6	98.6	99.3	99.4
강원	가구수	661.0	674.7	684.9	698.4	702.6
	주택수	731.4	742.0	753.2	762.6	771.0
	보급률	110.6	110.0	110.0	109.2	109.7
충북	가구수	678.9	695.6	704.9	720.2	727.0
	주택수	766.1	776.9	786.5	801.2	815.1
	보급률	112.8	111.7	111.6	111.2	112.1
충남	가구수	892.2	915.6	931.4	948.6	964.5
	주택수	994.9	1,006.0	1,027.6	1,059.2	1,084.0
	보급률	111.5	109.9	110.3	111.7	112.4
전북	**가구수**	**755.6**	**772.5**	**777.7**	**786.8**	**788.6**
	주택수	**834.1**	**841.1**	**849.0**	**859.3**	**867.3**
	보급률	**110.4**	**108.9**	**109.2**	**109.2**	**110.0**
전남	가구수	761.5	777.4	784.6	793.2	799.0
	주택수	857.8	868.6	881.7	892.9	903.2
	보급률	112.6	111.7	112.4	112.6	113.0

시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경북	가구수	1,131.8	1,156.6	1,166.3	1,166.6	1,174.6
	주택수	1,306.0	1,315.6	1,320.7	1,319.7	1,343.7
	보급률	115.4	113.7	113.2	113.1	114.4
경남	가구수	1,350.2	1,379.0	1,392.6	1,404.5	1,415.8
	주택수	1,509.7	1,517.0	1,522.6	1,532.2	1,546.3
	보급률	111.8	110.0	109.3	109.1	109.2
제주	가구수	263.1	271.2	276.2	278.3	279.7
	주택수	281.4	284.7	288.0	293.2	295.5
	보급률	107.0	105.0	104.3	105.3	105.7

※ 출처 : 국가데이터처,「주택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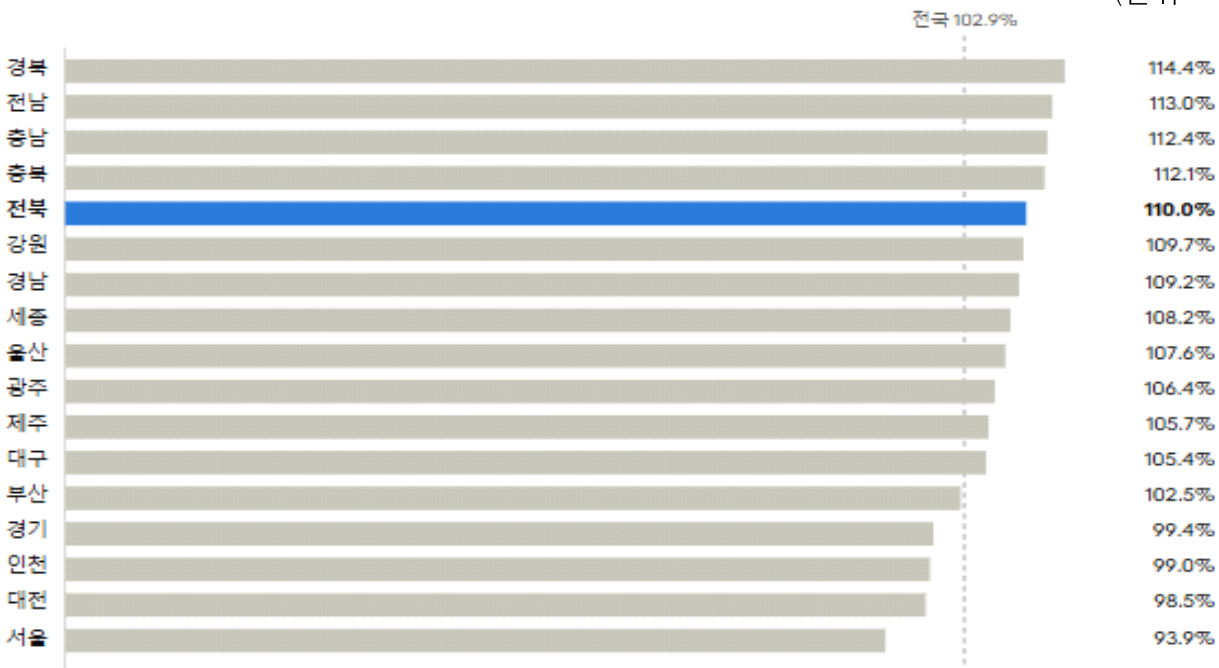
[그림 1] 전북·지방·전국 주택 보급률 추이, 2020.~2024.

(단위 : %)



[그림 2] 2024년 시도별 주택보급률

(단위 : %)



가-2. 통계 분석

○ 전북의 주택보급률은 2020년 110.4%에서 2024년 110.0%로 0.4% 하락했으나, 2024년 전국 주택보급률 102.9%보다 7.1% 높으며, **지방 평균 108.4%보다도 1.6% 높은 수준임.**

○ 전북의 일반가구 수는 2020년 75만 5,600가구에서 2024년 78만 8,600가구로 4.4% 증가한 반면, 주택 수는 83만 4,100호에서 86만 7,300호로 4.0% 증가함. 가구 수와 주택 수가 모두 증가했으나 가구 수 증가율이 주택 수 증가율을 소폭 웃돌면서 **주택보급률은 110%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었음.**

○ 전북의 주택보급률은 2024년 110.0%로 전국 평균(102.9%)을 상회하고, 2020년 이후에도 109~1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주택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보급률은 정체**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빈집 활용과 노후주택 정비를 병행하고,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수요와 지역별 주택 수급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나-1. 최근 10년간 노후주택비율

[표 1] 전국 노후주택비율 현황, 2016.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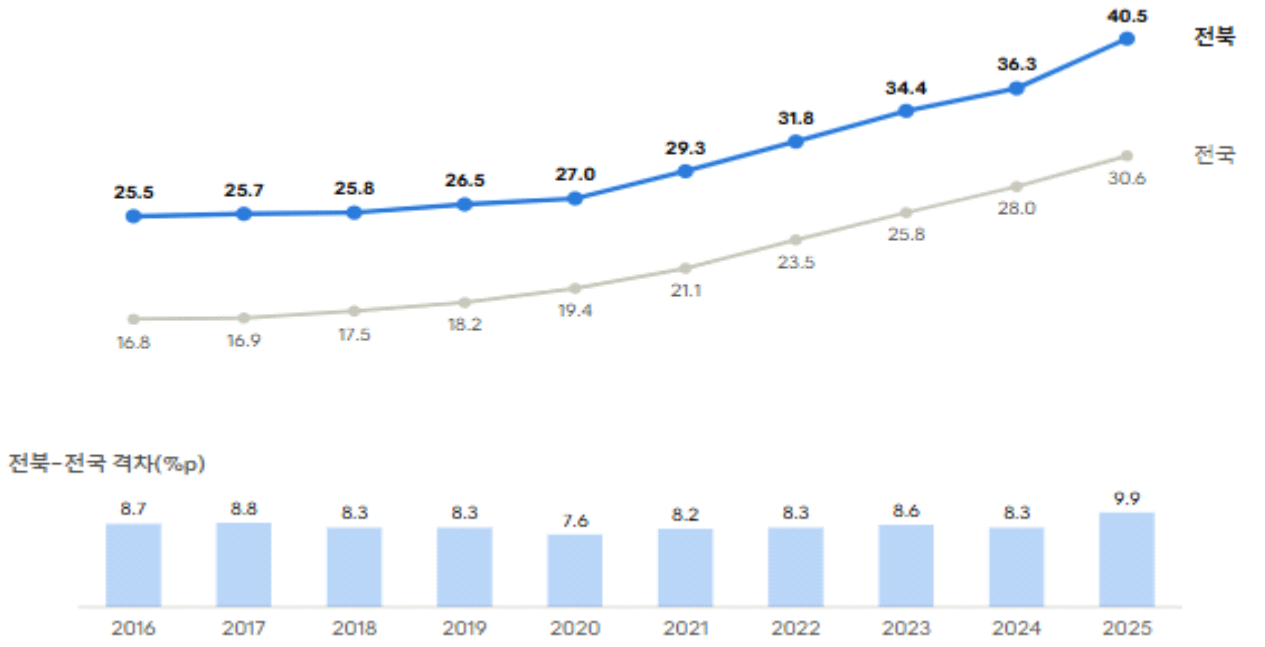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16.8	16.9	17.5	18.2	19.4	21.1	23.5	25.8	28.0	30.6
서울	14.7	14.9	17.6	18.7	19.5	21.2	23.6	26.0	28.3	29.9
부산	21.9	21.9	22.8	23.8	24.1	25.3	27.8	30.1	32.1	34.8
대구	16.3	16.4	17.0	18.1	18.7	20.4	23.9	26.5	29.4	32.6
인천	12.1	12.8	13.5	15.4	18.8	22.5	25.0	27.4	30.1	31.6
광주	14.4	14.7	15.8	16.4	17.7	19.8	23.4	25.4	28.9	31.1
대전	14.4	14.8	15.2	17.0	19.2	22.9	26.4	31.6	36.5	40.0
울산	11.0	11.5	12.2	12.5	15.0	18.5	23.3	26.1	29.5	32.4
세종	8.8	7.5	6.7	6.2	6.5	7.0	7.1	7.2	7.5	7.8
경기	8.1	8.2	8.5	9.0	10.4	11.5	13.2	15.7	17.9	20.7
강원	23.1	23.2	23.4	23.5	24.6	26.6	28.7	30.7	32.4	35.6
충북	20.6	20.6	20.5	20.8	22.4	24.6	26.8	29.3	30.9	34.1
충남	20.8	20.3	19.9	19.9	20.8	22.0	23.1	24.2	25.7	28.2
전북	**25.5**	**25.7**	**25.8**	**26.5**	**27.0**	**29.3**	**31.8**	**34.4**	**36.3**	**40.5**
전남	33.5	33.6	33.7	34.1	35.6	36.7	38.9	41.4	42.8	45.6
경북	26.9	26.8	26.9	27.0	28.8	30.7	33.1	35.7	37.7	40.4
경남	20.6	20.5	20.7	21.3	22.7	24.5	27.5	30.0	32.3	35.1
제주	21.8	20.8	20.5	20.6	22.0	23.5	25.9	27.7	29.0	31.3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1] 노후주택비율(전국, 전북 2016. ~ 2025.)

(단위 : %)



나-2. 통계 분석

○ 전북의 노후주택비율은 2016년 25.5%에서 2025년 40.5%로 15.0%p 상승함. 같은 기간 전국은 16.8%에서 30.6%로 13.8%p 상승하여, **전북의 노후주택비율 상승 폭이 전국보다 1.2%p 컸음**. 전북은 10년 기간 내내 전국 평균보다 높았음.

○ 전북과 **전국의 격차는** 2016년 8.7%에서 2020년 7.6%로 축소되었으나, 이후 다시 **확대되어 2025년에는 9.9%에 달함**. 특히 2021년 이후 전북의 노후주택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국과의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임.

○ 전북의 노후주택비율은 2025년 40.5%로 **전국 평균(30.6%)보다 9.9%p 높으며, 전남(45.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특히 2021년 29.3%에서 **2025년 40.5%로 11.2%p 상승해 최근 노후주택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노후주택의 **안전점검과 개보수 지원, 빈집 정비 및 활용,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북 내에서도 시·군별 노후주택 분포와 주택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1. 최근 10년간 빈집 비율

[표 1] 전국 빈집비율, 2016.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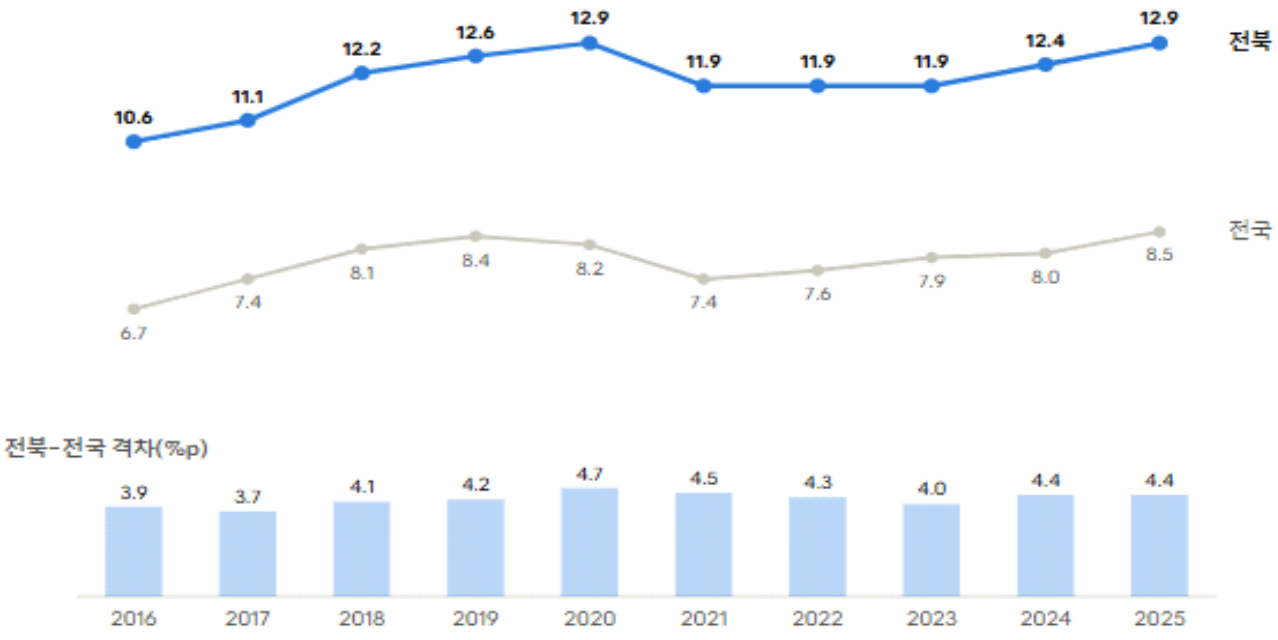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6.7**	**7.4**	**8.1**	**8.4**	**8.2**	**7.4**	**7.6**	**7.9**	**8.0**	**8.5**
서울	3.3	3.3	3.2	3.2	3.2	3.2	3.2	3.4	3.2	3.9
부산	7.3	7.9	8.1	8.8	8.9	7.9	8.4	8.6	9.1	9.5
대구	4.9	5.6	5.2	5.1	4.8	4.4	5.2	6.5	7.1	7.7
인천	5.5	5.9	6.5	6.5	6.4	6.0	6.6	7.5	7.4	7.7
광주	5.9	6.6	7.2	7.5	7.7	6.2	7.1	7.2	7.9	8.8
대전	5.5	5.6	6.1	6.0	5.4	5.2	5.1	4.9	5.6	6.3
울산	5.8	7.2	7.7	8.5	7.7	7.4	7.4	7.6	7.5	8.0
세종	11.7	13.7	12.0	12.4	10.5	9.2	8.2	8.5	9.2	8.7
경기	4.4	4.9	6.0	6.4	6.1	5.3	5.6	5.9	5.8	6.0
강원	9.7	10.6	12.0	13.4	13.1	12.3	12.1	12.2	12.5	13.4
충북	9.9	10.5	12.3	12.4	12.0	10.8	10.4	10.6	11.0	11.7
충남	10.3	11.4	12.7	12.7	12.3	11.1	11.4	12.2	12.3	12.7
전북	**10.6**	**11.1**	**12.2**	**12.6**	**12.9**	**11.9**	**11.9**	**11.9**	**12.4**	**12.9**
전남	13.5	14.3	15.3	15.5	15.2	14.3	14.5	14.5	15.0	15.2
경북	10.7	12.2	12.9	13.3	12.8	11.8	11.5	11.7	12.5	13.2
경남	8.6	10.1	10.7	11.6	11.6	10.6	10.3	10.1	10.3	11.1
제주	10.4	12.9	14.0	15.1	14.2	13.0	12.7	13.5	14.2	14.6

※ 출처 :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1] 빈집 비율(전국, 전북 2016. ~ 2025.)

(단위 : %)



다-2. 통계 분석

○ 전북의 빈집비율은 2025년 12.9%로 **전국 평균(8.5%)보다 4.4%p 높은 수준이며,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음**. 2016년 10.6%에서 2025년 12.9%로 **2.3%p 상승하여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 빈집비율은 2016년 6.7%에서 2025년 8.5%로 1.8%p 상승함. 전북은 같은 기간 2.3%p 상승해 전국보다 상승 폭이 0.5%p 크게 나타남. 특히 전북은 2021~2023년 11.9%에서 정체되었다가 2024년부터 다시 상승해 2025년에는 분석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2020년과 동일)을 기록함.

○ 전북과 전국의 격차는 2016년 3.9%p에서 2020년 4.7%p까지 확대된 후 2025년 4.4%p를 기록함. **전북은 분석 기간 내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어, 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안전에 위협이 되는 빈집은 정비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청년·귀농귀촌 주거나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3. 미분양 주택 수

가. 최근 10년간 미분양 주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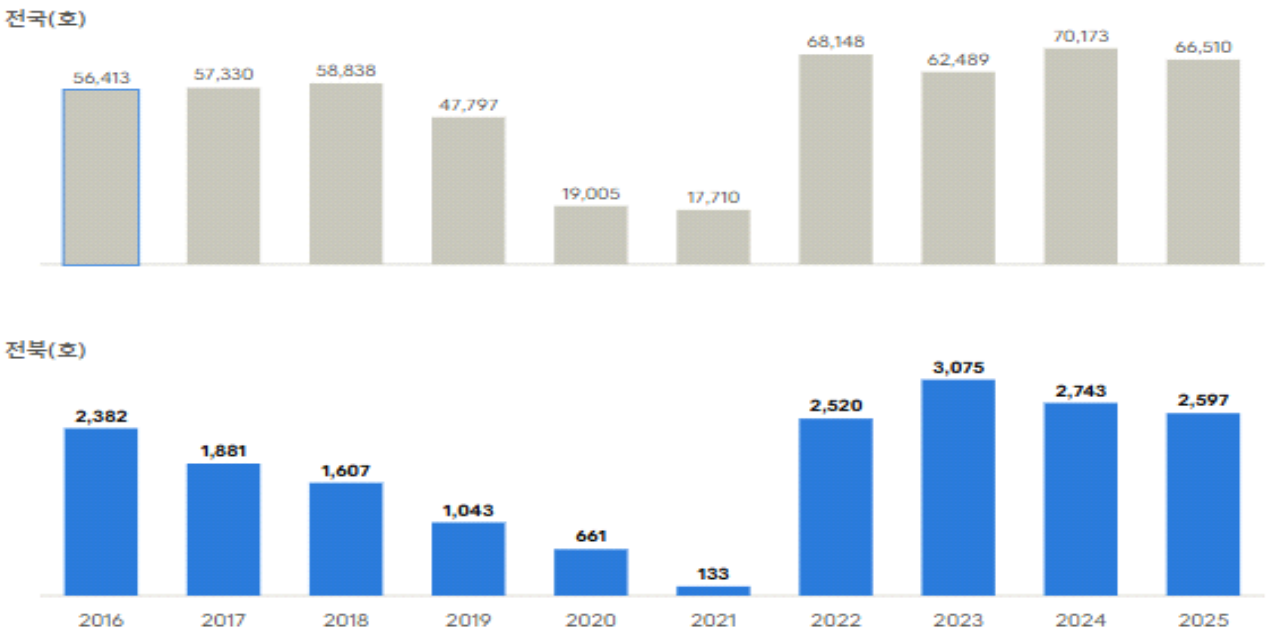
[표 1] 미분양 주택 수, 2016. ~ 2025.

(단위 : 호)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국	56,413	57,330	58,838	47,797	19,005	17,710	68,148	62,489	70,173	66,510
수도권	16,689	10,387	6,319	6,202	2,131	1,509	11,076	10,031	16,997	15,883
지방	39,724	46,943	52,519	41,595	16,874	16,201	57,072	52,458	53,176	50,627
서울	274	45	27	151	49	54	994	958	957	939
부산	1,171	1,920	4,153	2,115	973	949	2,640	2,997	4,720	7,541
대구	915	126	362	1,790	280	1,977	13,445	10,245	8,807	5,962
인천	3,053	1,549	1,324	966	466	425	2,494	3,270	3,086	1,927
광주	554	707	58	148	31	27	291	596	1,242	1,404
대전	644	759	1,183	724	638	460	3,239	894	2,319	1,677
울산	481	855	997	1,269	468	397	3,570	2,941	4,131	1,987
세종	0	0	0	0	0	30	6	122	61	42
경기	13,362	8,793	4,968	5,085	1,616	1,030	7,588	5,803	12,954	13,017
강원	3,314	2,816	5,736	5,945	3,115	1,648	2,648	4,001	4,408	2,943
충북	3,989	4,980	4,560	1,672	273	304	3,225	3,442	2,192	2,400
충남	9,323	11,283	7,763	5,569	2,510	1,012	8,509	5,484	3,814	8,140
전북	**2,382**	**1,881**	**1,607**	**1,043**	**661**	**133**	**2,520**	**3,075**	**2,743**	**2,597**
전남	1,245	627	1,663	1,857	1,059	2,163	3,029	3,618	3,598	2,715
경북	7,421	7,630	8,995	6,122	2,154	4,386	7,674	8,862	6,987	5,118
경남	8,014	12,088	14,147	12,269	3,617	1,879	4,600	3,682	5,347	5,451
제주	271	1,271	1,295	1,072	1,095	836	1,676	2,499	2,807	2,650

※ 출처 : 국가데이터처, 「미분양주택현황」

[그림 1] 미분양 주택 수(전국, 전북) 2016. ~ 2025.



나. 통계 분석

○ 전북의 미분양 주택은 2025년 말 2,597호로 전국(66,510호)의 3.90%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많음. 2016년 2,382호에서 2025년 2,597호로 9.0%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17.9%)보다는 낮은 수준임.

○ 전북 미분양 주택은 2016년 2,382호에서 2021년 133호로 5년 연속 감소해 분석 기간 중 가장 적었으나, **2022년 2,520호로 전년의 약 19배로 급증함**(같은 해 전국은 17,710호에서 68,148호로 약 3.8배).

이후 2023년 3,075호로 분석 기간 중 가장 많았고, 2024년 2,743호, 2025년 2,597호로 2년 연속 줄었으나 여전히 **2016년보다 많은 수준이 4년째 이어지고 있음**.

○ 전북은 2022년 이후 **미분양이 2,500~3,000호 수준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고, **2025년 기준 주택보급률(110.0%)과 빈집비율(12.9%)이 모두 전국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지역별 주택 수요를 고려한 신규 공급 조절과 분양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전북의 준공 후 미분양 현황을 별도로 점검하고 미분양 주택의 임대 전환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2026년 8월 기준(국가데이터처, 미분양주택현황) 전북의 미분양 주택수**는 **1,528호로 2025년(2,597호) 대비 41.2% 감소**하였음.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택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14. 도로포장률 통계

가. 도로포장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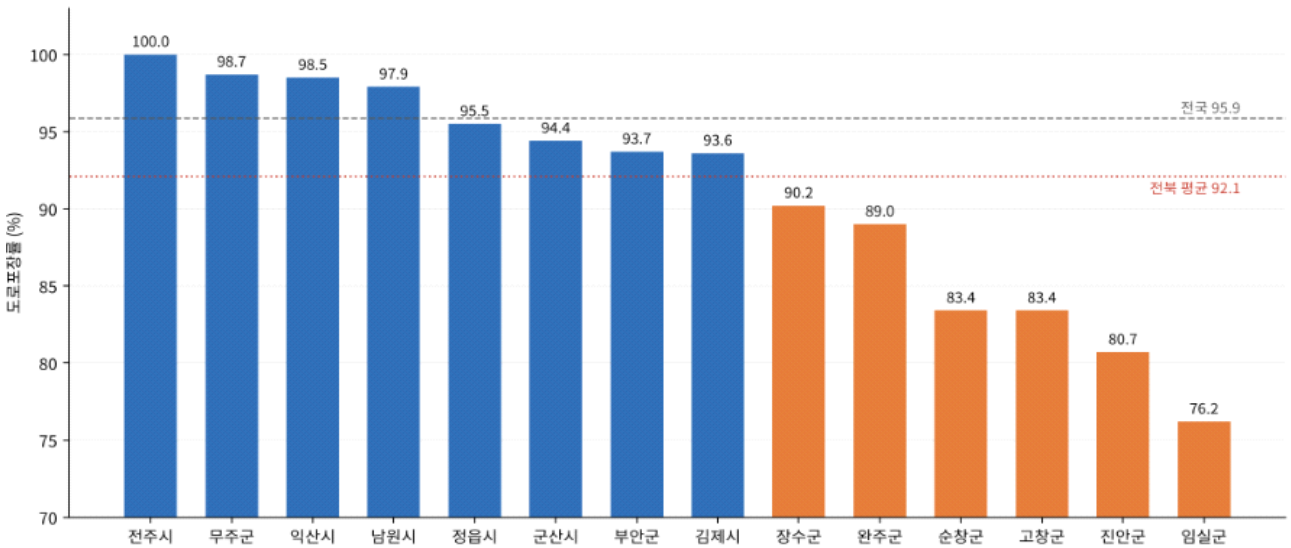
[표 1] 도로포장률, 2023 ~ 2025.

(단위 : %, m)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도로 포장률	포장도로	전체 개통로	도로 포장률	포장도로	전체 개통로	도로 포장률	포장도로	전체 개통로
전국	95.4	102,205.1	107,149.1	95.7	102,846.7	107,457.3	95.9	103,436.3	107,852.1
서울	100.0	8,369.2	8,369.2	100.0	8,374.3	8,374.3	100.0	8,390.2	8,390.2
부산	98.3	3,466.4	3,524.6	98.4	3,477.6	3,535.8	98.4	3,520.9	3,579.0
대구	99.0	3,321.6	3,355.5	98.8	2,916.1	2,950.0	99.7	2,944.5	2,954.3
인천	98.0	3,302.7	3,369.3	98.0	3,296.6	3,363.3	98.0	3,301.5	3,368.2
광주	100.0	1,895.8	1,895.8	100.0	1,908.0	1,908.0	100.0	1,925.2	1,925.2
대전	100.0	2,184.9	2,184.9	100.0	2,193.7	2,193.7	100.0	2,197.7	2,197.7
울산	98.4	2,338.8	2,375.9	98.4	2,342.7	2,379.9	98.4	2,349.2	2,386.3
세종	100.0	362.2	362.2	100.0	362.2	362.2	100.0	365.0	365.0
경기	98.6	14,750.9	14,966.4	98.8	14,875.7	15,054.1	99.0	14,932.2	15,078.4
강원	92.0	8,009.6	8,706.7	92.6	8,214.7	8,871.2	92.8	8,292.7	8,931.4
충북	94.0	6,090.4	6,482.3	94.1	6,159.3	6,542.3	94.2	6,183.2	6,562.5
충남	97.1	7,124.5	7,339.5	97.5	7,354.6	7,545.7	97.6	7,365.2	7,546.7
전북	**89.4**	**6,971.0**	**7,797.2**	**90.7**	**7,102.3**	**7,834.0**	**92.1**	**7,281.4**	**7,903.7**
전남	94.3	9,201.9	9,754.2	94.6	9,246.4	9,778.5	94.5	9,252.8	9,794.8
경북	91.4	11,333.7	12,404.7	91.7	11,365.5	12,388.9	91.9	11,449.0	12,462.8
경남	93.4	10,608.0	11,361.7	94.0	10,783.4	11,476.4	94.0	10,809.1	11,503.8
제주	99.1	2,873.4	2,898.9	99.1	2,873.4	2,898.9	99.1	2,876.5	2,902.0

※ 출처 : 국가데이터처, 「도로포장률」

[그림 1] 2025년 전북 시도별 도로포장률



나. 통계 분석

○ 전국 도로포장률은 2023년 95.4%, 2024년 95.7%, 2025년 95.9%로 매년 조금씩 상승했으며, 포장도로는 102,205.1km에서 103,436.3km로 1,231.3km 늘었고, 전체개통로는 107,149.1km에서 107,852.1km로 703.0km 늘어남.

○ 2025년 도로포장률은 서울·광주·대전·세종은 도로포장률이 100%이며, 대구(99.7%)·부산(98.4%)·울산(98.4%)·인천(98.0%)도 98% 이상으로 특별시·광역시의 도로포장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전남(94.5%)·충북(94.2%)·경남(94.0%)·강원(92.8%)·**전북(92.1%)**·경북(91.9%)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음.**

○ 미포장도로가 도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 2025년 미포장도로 4,416km 중 경북(1,014km)·경남(695km)·강원(639km)·**전북(622km)**·전남(542km) 등 **5개 도의 미포장도로가 3,512km로 전체의 79.5%를 차지함.**

○ 전북은 도로포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미포장도로도 622km에 달하는 만큼**, 미포장도로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인 **포장 및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2025년 기준 전북 시군별 도로포장률은 전주시(100.0%), 무주군(98.7%), 익산시(98.5%) 등은 높은 포장률을 보인 반면, **임실군(76.2%), 진안군(80.7%), 순창군·고창군(각 83.4%)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 향후 시·군별 미포장도로의 위치와 이용 현황, 포장률 변동 원인을 확인하고, **교통량·주민 생활 및 영농 활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포장**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예산·정책분석을 위한

통계 자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1.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통계

가. 방문자

[표 1] 전북 연간 방문객 수 ('21년 ~ '25년)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방문자수(명)	83,176,444	94,470,258	96,051,949	96,296,204	**102,129,580**
전년대비 증감률(%)	-0.8	13.6	1.7	0.3	**6.1**

※ 출처 : 한국관광 데이터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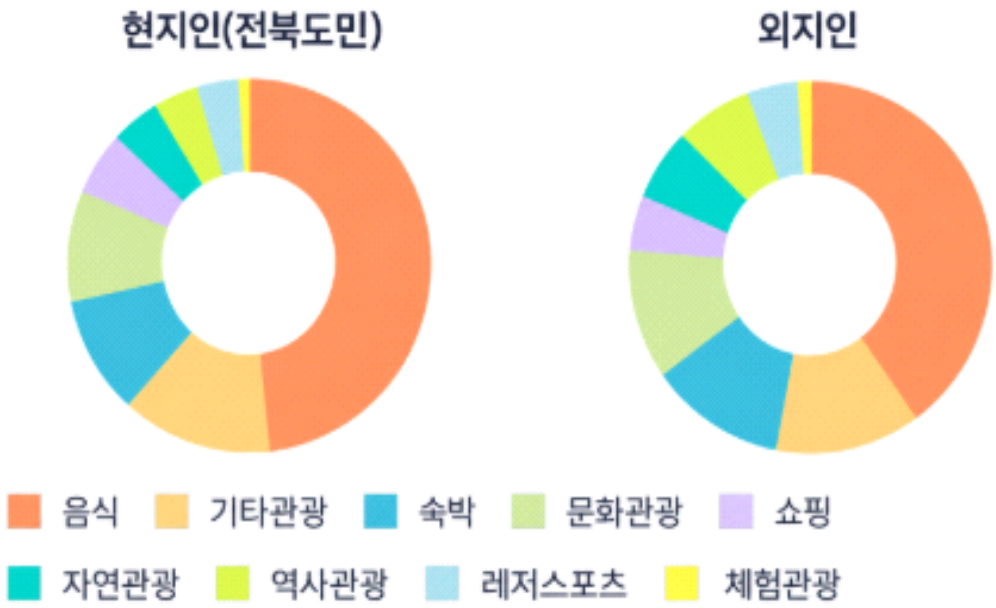
[표 2] 전국 목적지 유형별 검색량 ('25년)

(단위: 건)

구분	음식	쇼핑	문화관광	숙박	기타관광	역사관광	레저스포츠	자연관광	체험관광
서울	26,388,400	16,489,845	12,165,090	7,679,757	6,196,170	1,469,743	813,361	282,140	262,254
전남 광주	10,394,950	1,692,924	2,770,142	2,622,325	3,186,073	1,000,857	970,022	1,333,232	127,486
부산	10,456,734	4,696,945	3,070,232	2,846,447	2,410,907	767,786	617,240	1,568,442	189,353
대구	7,142,708	2,407,338	2,029,972	1,042,090	1,228,566	223,440	326,676	248,275	93,750
인천	12,929,740	4,571,368	3,538,199	3,084,826	7,514,727	492,455	1,404,965	2,146,583	202,321
대전	5,845,884	2,101,593	1,293,448	782,152	1,151,996	62,625	179,420	240,000	34,535
울산	3,258,472	753,629	893,668	597,132	895,442	160,517	232,058	449,307	31,804
세종	1,925,732	87,945	519,938	128,858	309,896	36,375	148,324	42,246	11,433
경기	74,472,999	24,577,545	17,793,016	7,880,279	6,914,834	2,752,736	10,817,225	3,116,912	1,311,386
충북	6,650,059	1,008,576	1,467,553	1,769,956	2,622,906	563,866	1,737,801	639,964	173,747
충남	10,309,903	1,661,651	2,429,629	2,792,100	2,507,602	1,447,506	1,170,428	2,524,806	400,445
경북	8,600,650	1,027,040	2,424,553	2,831,803	2,554,430	2,127,614	1,388,157	1,625,797	318,719
경남	9,999,987	2,344,514	2,873,813	2,448,895	2,592,225	1,594,721	1,425,500	1,240,738	254,293
전북	6,156,655	691,307	1,539,113	1,635,536	1,756,160	862,315	553,617	777,861	134,042
강원	12,182,970	1,961,098	3,245,712	7,520,835	2,887,327	1,249,483	2,408,894	3,624,142	230,126
제주	5,287,750	490,387	1,203,348	2,269,364	1,427,480	116,592	573,670	1,703,670	154,922

※ 출처 : 한국관광 데이터랩

[그림 1] 현지인(전북도민) / 외지인 관심지점 비교 ('25년)



[표 3] 전북 숙박 일수별 방문자 추이 (외지인 기준)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무박	42,732,330	47,746,884	49,243,574	51,303,092	55,333,662
1박	8,903,688	10,372,145	10,879,010	10,875,010	10,733,635
2박	2,847,120	3,287,042	3,414,890	3,404,645	3,408,050
3박 이상	2,437,925	2,772,228	2,641,718	2,649,643	2,652,558

※ 출처 : 한국관광 데이터랩

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

[표 4] 전북 대표관광지

(단위: 명)

구분	관광지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주	경기전	447,847	658,935	659,107	627,732	**694,768**
	전주동물원	723,715	754,484	542,678	613,132	**768,027**
군산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91,780	268,402	479,084	454,751	**588,662**
	선유도	2,333,496	2,464,890	2,480,511	1,830,151	**1,886,157**
익산	왕궁보석테마관광지	64,614	104,869	225,521	252,364	**145,238**
	미륵사지	331,668	571,988	912,910	1,647,221	**1,751,245**
정읍	구절초테마공원	392,478	534,556	320,737	332,579	**461,948**
	내장산국립공원	822,713	922,205	859,959	2,048,591	**2,206,914**
남원	광한루원	586,333	774,735	685,319	877,530	**776,186**
	지리산국립공원	1,290,750	1,039,542	966,953	3,763,467	**3,227,019**
김제	김제스파힐스컨트리클럽	92,254	88,562	79,662	80,411	**76,731**
	벽골제관광지	79,998	366,931	214,558	321,245	**374,512**
완주	대둔산케이블카	177,490	240,889	217,712	246,399	**208,017**
	모악산도립공원	182,779	3,212,257	1,488,788	1,624,250	**1,675,241**
진안	마이산	580,542	734,868	1,152,782	854,971	**171,714**
	데미샘자연휴양림	40,537	39,031	64,704	79,006	**90,777**
무주	무주리조트(레포츠)	610,954	1,069,984	1,063,225	984,389	**980,554**
	덕유산국립공원(구천동)	636,123	773,830	767,664	1,281,215	**1,133,301**
장수	장수누리파크	40,504	36,894	107,847	229,752	**255,490**
	방화동가족휴가촌	62,496	79,872	76,561	98,909	**107,679**
임실	임실치즈테마파크	1,415,691	1,671,819	2,368,039	2,159,021	**2,304,210**
	전북119안전체험관	119,250	132,523	125,786	124,186	**118,953**
순창	강천산군립공원	742,682	826,782	727,485	430,369	**439,133**
	화문산휴양림	29,911	39,529	11,428	11,834	**50,346**
고창	고창읍성	177,725	433,830	397,176	305,667	**402,196**
	석정온천관광지	225,476	268,598	431,013	447,856	**465,976**
부안	줄포만갯벌생태공원	56,337	47,849	59,729	137,940	**267,437**
	변산반도국립공원(내소사)	371,937	430,976	457,868	1,404,268	**1,416,369**

※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다. 통계 분석

○ **전체 방문객 추이 : 연간 방문객 1억명 돌파**

방문객 규모 성장 : 전북자치도의 연간 방문자 수는 ‘21년 약 8,318만명에서 ’25년 약 1억213만명으로 5년간 약 2.8%(1,895만명)증가하며 ‘방문객 1억명 시대’를 개막함.

연도별 성장 기조를 보면 ‘22년 전년대비 13.6%의 급격한 회복세를 기록한 후 ’23년(1.7%)과 ‘24년(0.3%)동안 잠시 정체기를 거쳤으나, ’25년 들어 전년 대비 6.1% 재상승하며 성장동력을 회복함.

○ **미식·체류 중심 관광수요를 체험형 콘텐츠와 연계하는 전략 필요**

‘25년 목적지 검색량 분석 결과, 음식(43.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타관광(12.4%), 숙박(11.6%), 문화관광(10.9%)순으로 나타남. 특히 음식과 숙박 관련 검색 비중이 높아 미식과 체류 중심의 관광 수요가 두드러짐.

반면 체험관광은 1.0%, 레저스포츠는 3.9%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여, 관광객의 관심을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 먹거리와 숙박을 지역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발굴·강화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함.

○ **주요 관광지 방문객 편중 및 방문객 감소 관광지에 대한 대응 필요**

’25년 주요 관광지 방문객 현황을 보면 지리산국립공원(약 322만명), 임실치즈테마파크(약230만명), 내장산국립공원(약220만명), 선유도(약188만명), 미륵사지(약175만명) 등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반면 익산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진안 마이산, 장수 방화동가족휴가촌** 등 **일부 관광지는 방문객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감소 원인과 관광객 유인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광지별 콘텐츠 경쟁력, 시설 노후도,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점검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자원 재정비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 관련 통계

가. 국가유산 현황

[표 1]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황 ('25년)

(단위: 건)

구분	서울	전남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국가지정유산)																		
국보	162	27	9	4	1	-	2	-	14	14	13	34	**11**	60	18	-	-	369
보물	765	238	65	90	29	11	11	5	218	91	102	136	**117**	394	194	7	-	2,473
사적	70	50	6	11	20	1	6	1	70	22	19	52	**44**	103	57	7	2	541
명승	3	34	2	-	1	-	1	-	6	26	10	3	**12**	19	15	9	-	141
천연기념물	12	64	7	2	15	5	3	2	21	46	24	19	**38**	73	46	51	64	491
국가무형유산	31	13	4	-	5	-	-	-	13	3	4	4	**9**	10	15	5	48	164
국가민속문화유산	46	42	2	6	-	2	3	1	24	11	21	26	**14**	104	13	9	-	324
소계	1,089	468	95	113	70	19	26	9	366	213	193	274	**245**	763	358	88	114	4,503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234	142	24	14	11	23	7	2	107	54	33	79	**93**	67	67	26	-	983

※ 출처 : 국가유산청, 「2025 통계로 보는 국가유산」

[표 2] 시도지정·등록문화유산 현황 ('23년)

(단위: 건)

구분	서울	전남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시도지정유산)																		
시도유형문화유산	599	317	232	106	80	60	46	21	375	196	352	238	**280**	519	923	41	-	4,385
시도무형유산	57	80	25	17	31	25	8	5	72	47	22	57	**68**	53	41	25	-	633
시도기념물	32	229	44	17	59	46	45	9	184	60	130	152	**123**	124	225	11	-	1,590
시도자연유산	9	10	8	3	3	1	-	1	6	21	7	17	**14**	34	48	17	-	199
시도민속문화유산	35	57	19	6	3	2	2	-	14	4	20	27	**36**	150	21	82	-	478
소계	732	693	328	149	176	134	101	36	651	328	531	491	**521**	880	1,258	276	-	7,258
(시도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21	-	10	-	13	6	1	1	26	2	10	8	**14**	5	6	11	-	134

※ 출처 : 국가유산청,「2025 통계로 보는 국가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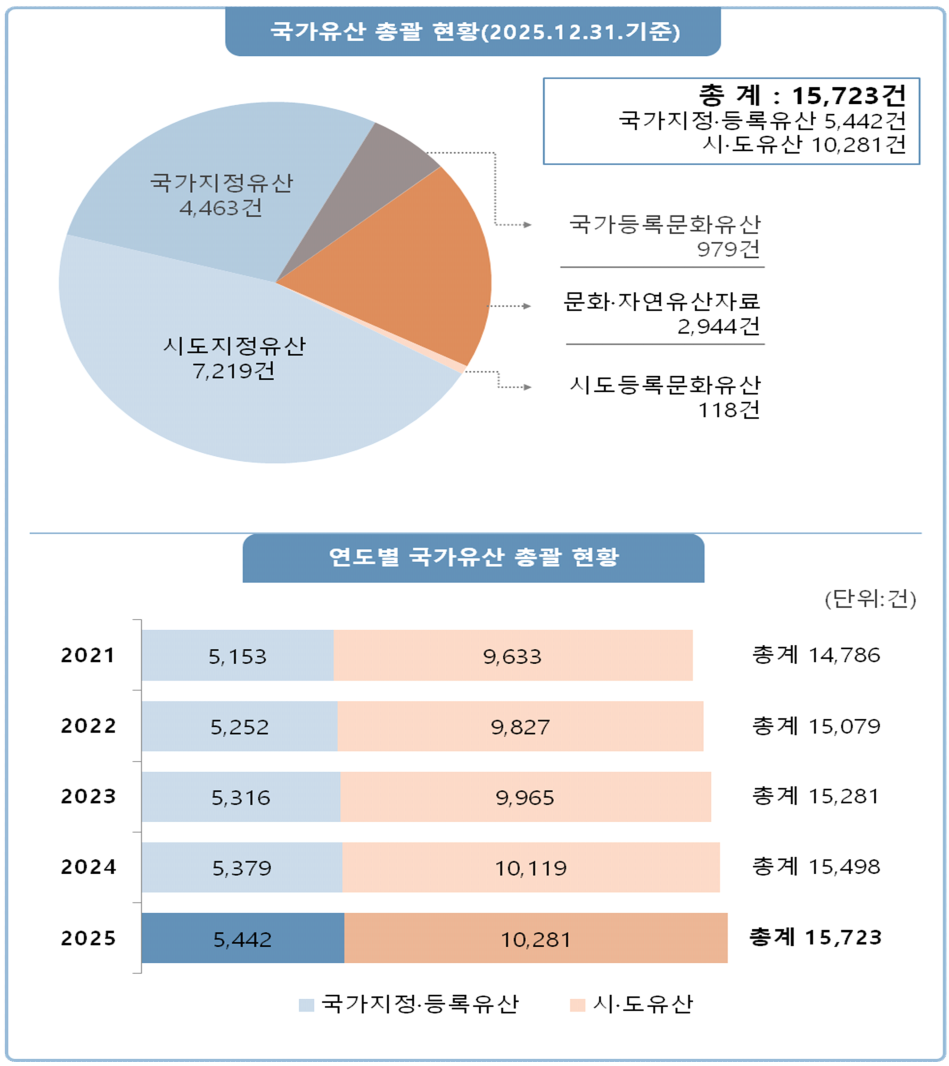
[표 3] 문화재 자료 현황 ('23년)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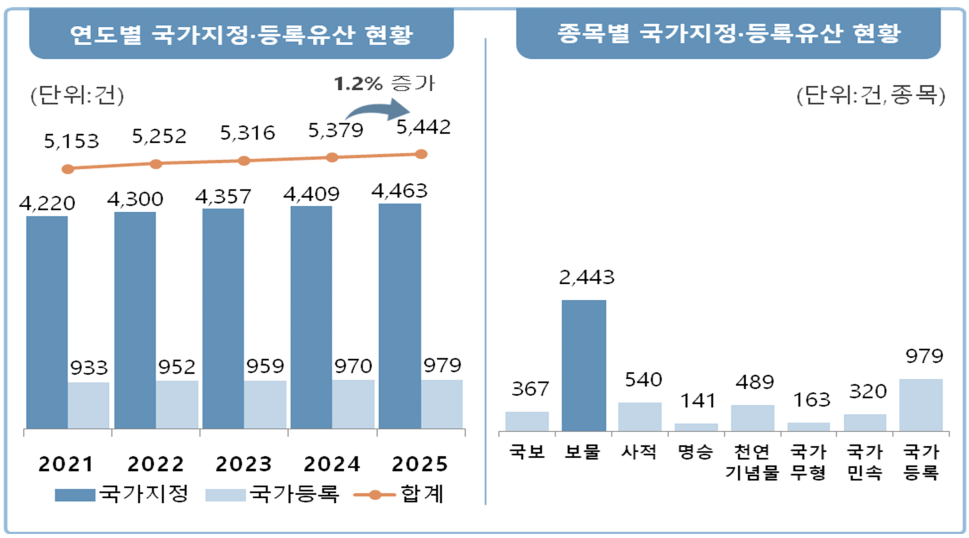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문화유산자료)																			
문화유산자료 및 자연유산자료	83	127	66	26	31	63	34	14	193	149	95	314	**160**	251	585	699	10	-	2,900

※ 출처 : 국가유산청,「2025 통계로 보는 국가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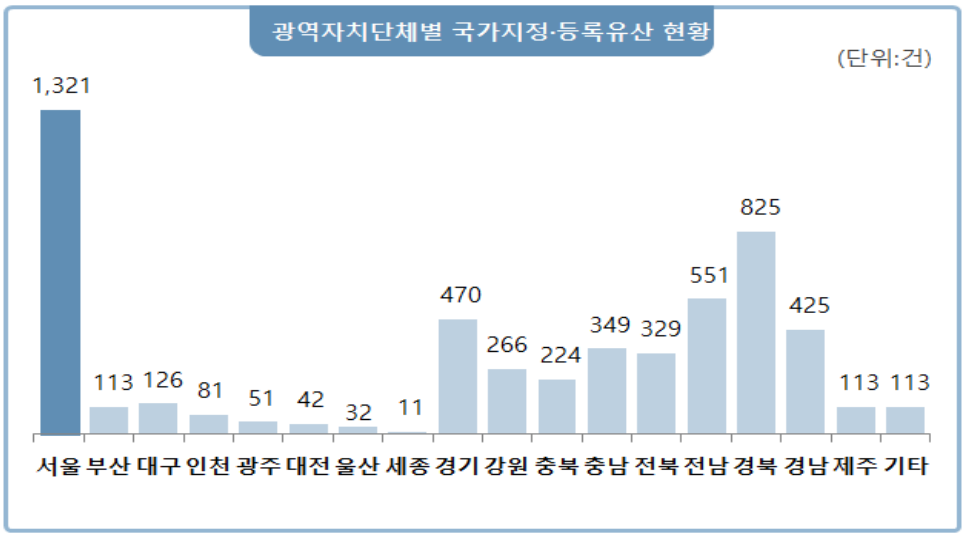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재 및 연도별 총괄 현황 ('12 ~ '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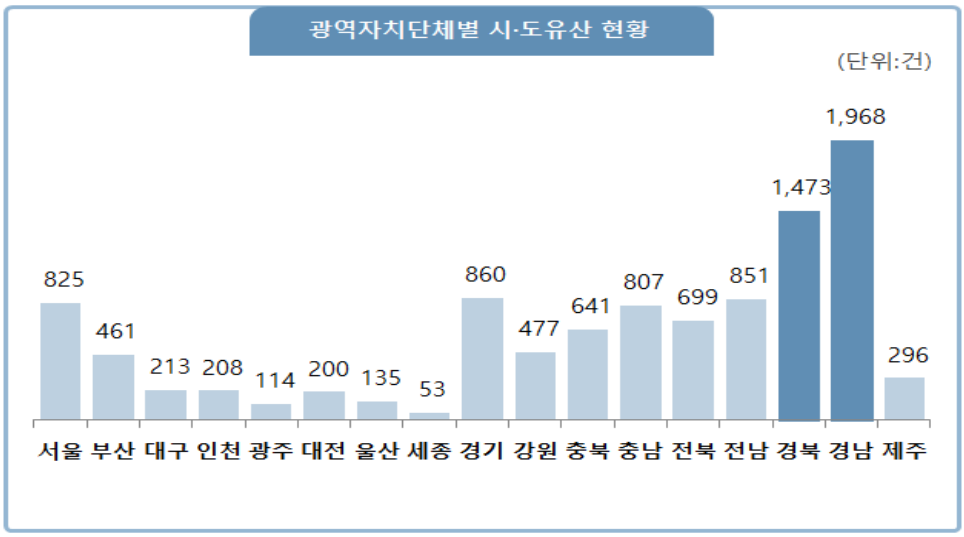


[그림 2] 시·도 문화재 현황 ('21년 ~ '25년)



[그림 3] 시도별 문화재 현황 ('23년)





나. 통계 분석

○ **국가유산 증가에 따른 지역 단위 보존·관리 강화 필요**

전북의 국가유산은 총 1,028~1,033건 수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7위에 해당하는 풍부한 역사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국가지정유산 245건 중 사적(44건, 전국8.1%), 명승(12건, 8.5%), 천연기념물(38건, 7.7%)등 자연·역사 경관 자원의 비중이 높은편으로 근대문화유산 중심의 국가등록문화유산(93건)은 전국 4위로 지정유산 대비 등록유산이 매우 높은편임.

시·도무형유산 68건은 전국 3위(전국의 10.7%)를 기록하여 전통무형문화의 보존 가치가 매우 높으며, 시·도 민속유산(36건) 및 문화유산자료(160건, 전국6위)등도 지역 내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지역별 국가유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 정책 마련**

전국 4위 수준인 국가등록문화유산(93건)의 노후화 방지 및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 정비 예산이 필요하고, 전국 3위인 시·도무형유산의 전승자 지원, 전승교육관 활성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연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국가유산 보수·정비 및 활용 성과를 고려한 예산 배분 필요**

국가유산의 보수, 정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산의 노후도와 훼손 위험, 보수 시급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고 아울러 미륵사지, 경기전 등 국가 유산을 지역 관광 및 체류형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안전지수 통계

가. 지역 안전지수

[표 1] '25년 분야별 지역 안전지수 1등급 지역 (광역)

구 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특·광역시 (8개)	서울	울산	세종	부산	세종	세종
도 (9개)	경기	경기	전남	경기	경기	경기

※ 출처 : 행정안전부, 「지역 안전지수」

나. 지자체 분야별 안전 등급

[표 2] '25년 특별·광역시 분야별 안전 등급 (8개소, 1등급일수록 안전)

구 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서울특별시	1	4	3	2	2	2
부산광역시	3	5	5	1	4	4
대구광역시	4	3	3	3	3	5
인천광역시	2	2	2	5	5	4
광주광역시	4	3	4	4	3	3
대전광역시	2	2	4	2	4	2
울산광역시	5	1	2	3	2	3
세종특별자치시	3	4	1	4	1	1

※ 출처 : 행정안전부, 「지역 안전지수」

[표 3] '25년 도 분야별 안전 등급 (8개소, 1등급일수록 안전)

구 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경기도	1	1	4	1	1	1
강원특별자치도	3	3	3	4	4	4
충청북도	3	3	3	3	2	2
충청남도	4	2	3	4	3	3
전북특별자치도	3	4	2	2	3	3
전라남도	5	5	1	3	4	5
경상북도	4	4	2	3	3	4
경상남도	2	3	4	2	2	3
제주특별자치도	2	2	5	5	5	2

※ 출처 : 행정안전부, 「지역 안전지수」
(안전수준) 시/도, 시/군/구 비교 그룹 내에서 해당연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 (1등급일수록 안전)

[표 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안전지수 등급 현황 ('17년 ~ '25년)

구 분	교통사고	화재	범 죄	생활안전	자 살	감염병
'25년	3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24년	3	4	2	3	2	2
'23년	4	3	1	2	2	3
'22년	3	3	1	3	3	3
'21년	3	3	2	2	3	2
'20년	3	3	1	2	4	3
'19년	3	4	2	2	3	3
'18년	4	3	2	2	4	3
'17년	3	4	1	2	3	4

※ 출처 : 행정안전부, 「지역 안전지수」

[표 5]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지역 안전지수 등급 현황 ('25년)

구 분	교통사고		화재		범 죄		생활안전		자 살		감염병	
	'24	'25	'24	'25	'24	'25	'24	'25	'24	'25	'24	'25
전주	2	2	3	3	4	4	2	2	2	2	[2]	2
군산	3	3	3	4	3	3	3	3	3	3	3	4
익산	3	3	4	4	3	3	4	3	4	4	4	3
정읍	4	5	5	5	2	2	5	4	3	4	4	4
남원	5	5	4	5	1	1	4	4	4	5	3	4
김제	5	4	5	5	1	1	5	5	3	3	4	5
완주	3	3	2	2	4	4	2	1	3	2	2	1
진안	4	3	5	4	1	1	5	5	1	3	1	3
무주	3	4	4	2	2	2	4	4	1	4	2	3
장수	5	4	3	3	1	1	5	4	2	4	4	1
임실	4	3	3	3	1	1	5	3	4	2	2	3
순창	3	5	3	3	1	1	4	3	3	3	4	3
고창	4	4	4	3	3	2	3	3	2	5	3	4
부안	3	3	4	3	2	3	4	2	5	4	4	3

※ 출처 : 행정안전부, 「지역 안전지수」

다. 통계 분석

○ **지역안전지수 평가 및 주민참여 중요성 확대**

'25년 지역안전지수는 실제 사고 발생 현황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예방 활동까지 종합하여 지역의 안전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발생 수준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과 주민의 예방 활동도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안전시설 확충과 함께 안전교육, 안전신고 활성화, 자율방범 활동 지원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전북 지역안전지수의 분야별 변화 추이 및 취약 분야 개선 필요**

최근 9년간('17~'25년) 전북의 분야별 평가를 살펴보면, 교통 분야는 3등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범죄 분야는 4차례 1등급을 기록한 반면, 화재분야는 4차례 4등급 이하(취약등급)에 머무르는 등 분야별 편차가 나타남. 특히 화재분야는 취약 등급이 반복되고 있어 화재 발생 위험요인과 예방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군별 안전 취약 분야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필요**

'25년 기준 정읍, 남원(각 5개 분야), 김제(4개 분야)가 다수 취약등급(4~5등급)을 기록하여 집중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됨. 지자체별 위험요소와 취약 유형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산 배분 및 집중 지원이 요구됨.

○ **취약 분야 중심의 예산 편성 및 사업효과 점검 필요**

향후 예산 심의 시 화재 취약 시·군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 화재예방 사업의 예산과 지원 실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살, 감염병 분야의 등급이 하락한 지역은 관련 예방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실제 사고 발생 현황, 예산 집행률 및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4. 안전관리 통계

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국	806	780	777	775	774
서울특별시	1,287	1,268	1,263	1,255	1,251
부산광역시	923	885	879	872	865
대구광역시	857	832	797	793	790
인천광역시	896	871	880	887	896
광주광역시	919	884	877	871	861
대전광역시	891	887	885	883	884
울산광역시	816	794	789	785	781
세종특별자치시	676	656	661	668	670
경기도	1,227	1,187	1,186	1,191	1,194
강원특별자치도	354	344	342	340	338
충청북도	586	561	560	559	561
충청남도	517	498	499	501	501
전북특별자치도	**537**	**512**	**508**	**503**	**499**
전라남도	412	403	400	396	394
경상북도	483	468	465	461	457
경상남도	633	596	591	588	584
제주특별자치도	584	552	549	545	541

※ 출처 : 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나. 소방서 1개소당 담당주민수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국	224,517	218,890	213,856	211,641	211,229
서울특별시	380,378	377,135	375,441	373,273	371,982
부산광역시	304,580	301,619	274,447	272,217	270,133
대구광역시	298,177	295,461	263,884	262,625	261,448
인천광역시	294,838	296,731	272,492	274,637	277,451
광주광역시	288,322	286,210	283,847	281,684	278,403
대전광역시	290,450	289,214	288,443	287,831	288,146
울산광역시	186,932	185,111	183,944	183,008	181,991
세종특별자치시	185,948	191,796	193,263	195,343	195,983
경기도	387,584	388,269	389,452	380,408	381,393
강원특별자치도	85,472	85,361	84,878	84,320	83,806
충청북도	133,119	132,922	132,789	132,598	133,042
충청남도	132,454	132,690	133,132	133,536	133,547
전북특별자치도	**137,450**	**136,124**	**116,984**	**115,913**	**114,990**
전라남도	91,640	82,623	82,010	81,310	80,870
경상북도	138,243	123,833	121,634	115,063	113,933
경상남도	157,818	149,113	147,780	146,745	145,790
제주특별자치도	169,190	169,540	168,813	167,592	166,198

※ 출처 : 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다. 소방안전교육 이수율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국	10	13	18	21	23
서울특별시	7	7	6	7	7
부산광역시	5	10	17	22	25
대구광역시	11	9	20	17	19
인천광역시	20	24	23	18	15
광주광역시	7	13	18	20	23
대전광역시	5	8	22	19	21
울산광역시	8	18	27	28	28
세종특별자치시	5	10	11	12	14
경기도	12	16	23	29	31
강원특별자치도	10	12	15	23	32
충청북도	6	10	21	20	20
충청남도	8	12	19	21	23
전북특별자치도	**13**	**17**	**16**	**20**	**22**
전라남도	8	11	16	23	30
경상북도	6	10	20	21	25
경상남도	9	13	22	25	26
제주특별자치도	17	28	35	39	44

※ 출처 : 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소방안전교육 : 이동체험차량, 체험관방문, 체험교실, 출장교육, 야외체험행사, 체험캠프, 주말 119아카데미 소방안전교육 실적 등

라. 통계 분석

○ **소방 서비스 담당 부담 완화**

전북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21년 537명에서 '25년 499명으로, 소방서 1개소당 담당 주민 수는 13만 7,450명에서 11만, 4,990명으로 감소함. 이는 소방 인력 및 소방서 확충 등으로 소방 대응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국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임.

○ **소방안전교육 확대에 따른 주민 안전의식 제고**

전국 소방안전교육 이수율은 '21년 10%에서 '25년 23%로 상승했으며, 전북도 '21년 13%에서 '25년 22%로 증가함. 이동체험차량과 체험관 운영 등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가 주민 안전 의식 제고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5. 화재관련 통계

가. 화재발생 현황

[표 1] 전국 화재 총괄현황 ('24년 ~ '25년)

(단위: 건, 명, 백만원)

연도		화재(건)	인명피해(건)	사망(건)	부상(건)	재산피해(피해액)
2025년		**38,344**	**2,736**	**346**	**2,390**	**2,350,213**
2024년		37,614	2,402	308	2,094	783,898
전년대비	건수	730	334	38	296	1,566,315
	비율 (%)	1.9	13.9	12.3	14.1	199.8

※ 출처 :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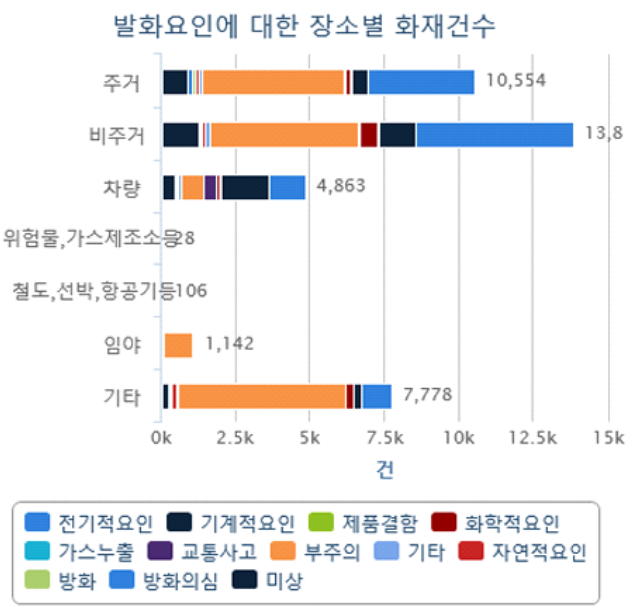
[표 2] 전국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 ('24년 ~ '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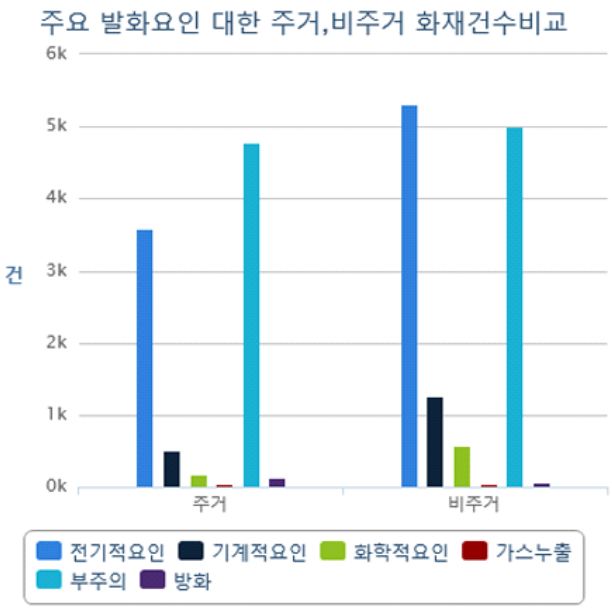
(단위: 건, 명, 백만원)

구분	계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제품 결함	가스 누출	화학적 요인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자연적 요인	방화	방화 의심	미상
2025	**38,344**	**11,239**	**33,630**	**153**	**131**	**1,133**	**429**	**17,173**	**408**	**346**	**317**	**280**	**3,093**
2024	38,857	10,588	3,823	183	141	966	400	16,923	497	346	371	325	3,051
전년 대비 (건수)	-513	651	29,807	-30	-10	167	29	250	-89	0	-54	-45	42
전년 대비 (%)	-1.3	6.1	779.7	-16.4	-7.1	17.3	7.3	1.5	-17.9	0.0	-14.6	-13.8	1.4

※ 출처 :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그림 1] 전국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 ('24 ~ '25)





[표 3] 시도별 화재현황 ('24 ~ '25)

(단위: 건, 명, 백만원)

구분	2025년					2024년					증감률(%)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합계	38,344	2736	346	2,390	235,214	37,614	2,402	308	2,094	788,947	1.0	1.1	1.1	1.1	3.0
서울	5,875	401	43	358	27,310	5,654	328	23	305	21,587	1.0	1.2	1.9	1.2	1.3
부산	2,416	134	29	105	10,605	2,281	105	19	86	5,911	1.1	1.3	1.5	1.2	1.8
대구	1,257	109	12	97	44,189	1,205	106	11	95	9,959	1.0	1.0	1.1	1.0	4.4
인천	1,292	100	12	88	18,720	1,318	145	12	133	72,818	-2	-31.1	1.0	-33.8	-74.3
광주	725	73	8	65	123,252	688	51	9	42	6,111	1.1	1.4	-11.1	1.5	20.2
대전	885	52	6	46	9,435	821	58	8	50	7,226	1.1	-10.3	-25	-8	1.3
울산	853	84	9	75	9,090	708	44	4	40	8,375	1.2	1.9	2.3	1.9	1.1
세종	222	18	1	17	3,400	211	19	3	16	4,202	1.1	5.3	-66.7	1.1	-19
경기	7,708	675	66	609	371,537	7,931	570	88	482	366,405	-2.8	1.2	0.8	1.3	1.0
강원	1,845	169	16	153	23,897	1,900	134	12	122	26,481	-2.9	1.3	1.3	1.3	-9.8
충북	1,323	112	15	97	39,559	1,340	131	16	115	37,544	-1.3	-14.5	-6.3	-15.7	1.1
충남	2,086	89	13	76	366,871	1,911	94	19	75	36,027	1.1	-5.3	-31.6	1.0	10.2
전북	**2,027**	**83**	**17**	**66**	**17,973**	**2,075**	**86**	**16**	**70**	**26,913**	**-2.3**	**1.0**	**1.1**	**-14.2**	**-33.2**
전남	2,511	92	8	84	36,567	2,554	91	15	76	27,075	-1.7	1.0	-44.7	1.1	1.4
경북	3,129	284	60	224	1,164,998	2,932	214	26	188	84,320	1.1	1.3	2.3	1.2	13.8
경남	3,624	229	28	201	74,031	3,485	193	88	171	33,876	1.0	1.2	1.3	1.2	2.2
제주	566	32	3	29	8,778	600	33	5	28	9,117	-5.7	1.0	-40	1.0	1.0

※ 출처 :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나. 통계 분석

○ **전국 화재 발생 및 피해 규모 증가**

’25년 전국 화재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9%증가에 그친 반면 재산피해액은 2,350,213백만원(약2조 3,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99.8%(약3배) 폭증했음. 이는 건축·구조물 화재의 높은 피해 비중과 함께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액 확대가 전체 재산피해 급증에 영향을 미쳤고, 전년 대비 주거시설 화재는 증가하고 비주거시설 화재는 감소한 만큼, 주택 화재 예방과 건축물 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 예산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주의·전기적 요인 중심의 화재 예방 강화**

발화요인별로는 부주의 17,173건, 전기적 요인 11,239건으로 두 요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특히 기계적 요인은 전년 대비 779.7%, 전기적 요인은 6.1% 증가해 전기·기계 설비의 안전점검과 부주의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재산피해 편차와 대형 화재 대비 필요**

화재 발생건수는 경기(7,708건), 서울(5,875건), 경남(3,624건)순으로 많았으며, 재산피해는 경북 약 1조1,650억원, 경기 약 3,715억원, 충남 약3,669억원으로 나타남.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규모를 고려한 지역별 예방 대책이 필요함.

○ **전북 화재 피해 감소세 유지 및 예방 정책 강화**

전북의 ‘25년 화재는 2,027건으로 전년 대비 2.3%감소했으며, 인명피해는 83명, 재산피해는 약180억원으로 각각 3.5%, 33.2%감소함. 전국적인 화재 피해 증가와 달리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기·기계 설비 점검과 취약시설 화재 예방을 지속하고 관련 예산 집행 실적 및 예방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6. 체육시설 통계

가. 체육시설

[표 1]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4년 말 기준)

시설항목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3,254	15,580,376	1,908	5,697,505	1,011	5,271,498	1,314	13,150,683	1,236	2,606439
육상경기장	3	249,613	3	144,597	5	708,147	10	1,305,232	2	470,278
축구장	74	926,990	33	513,730	39	702,769	34	1,068,675	25	317,524
하키장	1	183,879	1	18,310	1	50,760	2	255,935	-	-
야구장	23	335,191	11	402,148	16	544,293	9	842,329	11	199,546
싸이클경기장	1	10,672	1	31,861	1	46,972	1	59,356	-	-
테니스장	76	441,534	41	305,712	32	441,537	40	943,919	20	101,018
씨름장	-	-	2	3,687	3	9,197	1	6,188	1	234
마을체육시설	2,538	9,898,608	1,576	2,152,163	760	966,216	989	2,425,278	1,043	515,572
체육관	166	1,859,036	38	528,928	36	447,573	51	2,494,946	29	362,891
(구기체육관)	51	668,283	4	114,089	4	30,683	4	327,698	3	55,000
(투기체육관)	1	12,817	2	6,893	4	5,725	3	357,431	1	1,576
(생활체육관)	114	1,177,935	32	407,946	28	411,165	44	1,089,317	25	306,315
전천후게이트볼장	31	25,484	15	264,045	13	27,110	78	393,009	45	35,019
수영장	99	728,974	28	381,283	20	295,875	28	1,208,302	10	108,509
롤러스케이트장	14	61,954	13	65,240	6	40,440	5	50,288	2	22,542
사격장	-	-	1	6,009	1	191,300	1	95,837	-	-
국궁장	8	38,874	3	11,733	3	21,186	8	100,241	3	40,891
양궁장	-	-	1	20,576	3	43,059	2	13,061	1	45,109
승마장	-	-	2	27,381	3	37,049			1	26,084
골프연습장	33	192,186	7	4,942	1	7,519	4	160,634	2	30,626
조정카누장	-	-	1	25,252	-	-	-	-	-	-
요트장	-	-	1	138,561	-	-	-	-	-	-
빙상장	3	36,540	2	116,524	1	3,693	1	441,659	1	4,117
설상경기장	-	-	-	-	-	-	-	-	-	-
기타시설	161	521,756	111	244,847	33	125,409	47	1,267,699	30	137,592

시설항목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696	2,175,999	463	4,953,772	181	1,560,973	5,029	58,957,064	3,032	17,936,983
육상경기장	-	-	6	319,484	1	400	40	4,366,821	33	1,904,302
축구장	14	536,398	28	1,775,842	13	241,232	279	9,332,550	76	1,883,699
하키장	-	-	-	-	-	-	3	44,017	2	38,157
야구장	7	5,788	5	110,196	7	71,427	81	1,845,961	27	820,332
싸이클경기장	1	59,499	-	-	-	-	1	25,456	1	82,346
테니스장	8	194,841	19	263,473	8	110,581	230	2,279,138	78	993,321
씨름장	-	-	1	308,269	-	-	12	179,374	5	17,366
마을체육시설	557	366,023	263	517,305	50	68,644	2,566	10,837,762	2,114	3,311,451
체육관	25	368,969	23	644,415	27	276,105	377	10,435,201	123	2,498,827
(구기체육관)	8	51,698	7	136,299	2	4,610	189	4,908,288	44	1,210,266
(투기체육관)	-	-	-	-	-	-	5	605,841	10	98,926
(생활체육관)	17	317,271	16	507,116	25	271,495	183	4,921,072	69	1,189,635
전천후게이트볼장	22	296,061	27	168,106	14	26,439	408	3,193,559	231	1,061,580
수영장	19	43,771	16	460,601	7	17,444	135	1,106,232	37	583,200
롤러스케이트장	2	25,728	2	18,300	9	27,016	52	621,924	9	257,318
사격장	-	-	1	3,700	-	-	1	98,061	7	94,267
국궁장	5	1,780	4	49,699	3	23,717	57	614,221	33	387,848
양궁장	1	320	1	103,117	-	-	6	40,040	4	140,234
승마장	1	5,215	-	-	-	-	1	39,318	2	40,423
골프연습장	-	-	-	-	-	-	11	439,990	10	266,273
조정카누장	-	-	-	-	-	-	2	1,013,565	1	4,191
요트장	-	-	-	-	-	-	1	593	2	23,370
빙상장	1	13,439	-	-	1	526,468	10	1,876,586	8	512,645
설상경기장	-	-	-	-	-	-	-	-	4	462,500
기타시설	29	158,987	59	94,698	34	48,266	710	5,903,570	185	1,790,328

시설항목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2,735	11,621,210	2,425	14,071,325	1,418	17,416,574	4,350	21,517,224	5,376	15,711,318
육상경기장	17	1,011,100	17	1,898,359	14	1,071,246	29	2,211,107	22	1,645,018
축구장	43	1,452,397		1,452,397	97	3,241,934	92	3,019,174	78	2,363,609
하키장	2	43,662		14,063	2	266,289	2	221,560	-	-
야구장	17	1,466,345		591,066	24	523,721	31	1,222,569	32	987,123
싸이클경기장	1	64,948		-	1	33,013	1	28,017	-	-
테니스장	35	701,433		611,459	55	1,459,258	51	658,537	67	807,671
씨름장	7	264,253		63,444	8	1,540	12	26,537	9	27,284
마을체육시설	2,259	1,410,372		3,306,481	787	1,663,420	3,553	4,713,082	4,317	3,004,848
체육관	61	1,189,145		2,408,334	105	2,847,443	97	2,655,173	121	2,108,633
(구기체육관)	18	310,702		1,099,146	30	933,059	43	842,655	34	803,240
(투기체육관)	3	18,623		98,989	1	660	6	124,634	5	126,339
(생활체육관)	40	859,820		1,210,199	74	1,913,723	48	1,687,883	82	1,179,055
전천후게이트볼장	106	755,472		1,072,636	153	1,274,207	267	1,735,584	98	195,154
수영장	26	757,360		754,082	28	819,523	26	646,075	40	729,700
롤러스케이트장	7	132,611		48,614	7	543,944	7	217,304	14	313,760
사격장	3	127,721		9,746	1	130,701	1	57,614	4	172,983
국궁장	13	114,852		153,436	15	192,923	32	469,254	22	296,137
양궁장	3	84,092		-	2	102,448	1	3,269	1	79,969
승마장	-	-		25	5	224,359	2	44,126	3	432,229
골프연습장	3	19,571		-	3	21,790	4	71,805	3	38,569
조정카누장	3	120,158		-	-	-	2	33,447	-	-
요트장	1	3,100		8,541	1	2,146	2	41,507	1	1,400
빙상장	1	16,568		30,892	1	49,520	-	-	2	96,944
설상경기장	-	-		722,563	-	-	-	-	-	-
기타시설	106	1,294,419		899,370	84	2,348,519	100	2,544,053	955,729	955,729

시설항목	경 남		제 주		전 국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3,513	21,479,991	661	4,356,807	38,602	234,065,740
육상경기장	32	2,588,712	15	702,374	249	20,596,790
축구장	175	4,237,781	22	830,328	1,163	33,897,030
하키장	1	32,725	-	-	18	1,169,357
야구장	38	999,287	8	234,659	373	11,201,981
싸이클경기장	1	54,396	-	-	11	496,536
테니스장	101	1,045,880	-	53,999	915	11,419,958
씨름장	7	225,111	1	1,950	73	1,134,434
마을체육시설	2,260	2,831,200	490	891,709	27,850	48,877,134
체육관	132	4,534,334	35	642,969	1,530	36,302,920
(구기체육관)	58	1,201,165	17	220,993	559	12,917,875
(투기체육관)	4	33,207	1	1,643	48	1,493,303
(생활체육관)	70	3,299,962	17	420,333	923	21,891,742
전천후게이트볼장	211	896,272	38	557,350	2,000	11,977,087
수영장	36	744,392	2	16,982	579	13,272,657
롤러스케이트장	20	176,965	2	19,000	184	2,637,651
사격장	4	116,033	-	-	26	1,083,972
국궁장	48	404,163	5	21,969	285	2,942,923
양궁장	2	67,917	-	-	28	743,211
승마장	2	163,259	-	-	24	1,065,286
골프연습장	10	63,864	1	23,140	92	1,340,909
조정카누장	1	666	-	-	10	1,197,279
요트장	5	95,800	-	-	15	315,018
빙상장	3	19,832	-	-	36	3,475,427
설상경기장	-	-	-	-	4	462,500
기타시설	350	1,122,170	24	140,363	2,676	14,214,848

[표 2] 시도별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수 ('24년 말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	111.1	117.9	125.4	129.3
서울특별시	110.8	115.8	124.3	128.7
부산광역시	103.4	109.7	121.8	121.3
대구광역시	107.9	114.9	117.3	120.3
인천광역시	115.4	118.8	126.2	128.0
광주광역시	127.4	135.1	141.7	142.6
대전광역시	119.5	130.2	143.0	147.3
울산광역시	117.4	122.4	111.4	133.1
세종특별자치시	100.3	98.5	106.3	118.3
경기도	106.0	114.9	124.0	128.2
강원특별자치도	122.3	122.5	133.8	136.6
충청북도	117.4	125.3	121.2	134.2
충청남도	109.6	120.7	125.9	129.6
전북특별자치도	**119.9**	**123.4**	**137.2**	**137.3**
전라남도	118.5	124.7	130.0	134.0
경상북도	105.8	118.8	124.3	130.4
경상남도	110.7	111.7	119.4	121.0
제주특별자치도	136.8	150.7	154.2	146.5

※ 출처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나. 통계 분석

○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시설 공급 수준**

전북의 인구 10만 명당 체육시설 수는 '24년 137.3개소로 전국 평균 129.3개소보다 8개소 많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 4위 수준으로 인구 대비 시설 공급수준이 높은 편임.

○ **지역별 시설 분포 및 노후도 고려한 예산 배분 필요**

전북의 체육시설은 마을체육시설 787개소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시설 수가 많더라도 지역별 분포와 시설 상태에 따라 이용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향후 예산 심의 시 신규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별 시설분포, 노후도, 이용률 및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시설의 효율화에 대한 예산 투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자연재난 발생 현황

가. 시도별 피해 현황

('24년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ha)

피해항목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피해액	910,713	414	2,300	1,907	1,305	56	15,901	40
총이재민(세대)	6151	57	255	28	61	-	250	2
총이재민(명)	13,028	92	472	50	103	-	505	2
건물 피해액	34,337	162	796	90	183	-	4,961	6
선박 피해액	122	-	-	-	-	-	-	-
농경지 면적(ha)	35,273	-	0.04	2.38	0.68	-	5.93	0.06
농경지 피해액	36,214	-	1	102	24	-	235	0.3
농작물 면적(ha)	862,905	2	114.26	86.36	60.88	25.34	287.91	32.68
농작물 피해액	117,285	5	833	136	259	20	680	34
공공시설 피해액	253,933	51	591	1,438	67	-	8,242	-
사유시설 피해액	468,819	194	78	141	770	35	1,780	-

피해항목	경기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피해액	417,860	11,476	59,178	213,179	**72,810**	43,579	36,946	32,150	-
총이재민(세대)	1,122	6	251	1,446	**1,333**	968	179	192	-
총이재민(명)	2,194	14	480	2,800	**3,972**	1,590	295	457	-
건물 피해액	4,732	333	1,059	14,505	**3,314**	2,798	1,034	538	-
선박 피해액	66	-	-	8	**21**	-	7	18	-
농경지 면적(ha)	118.80	32,015	69.91	2,752	**115.76**	56	133	2	-
농경지 피해액	559	267	2,896	20,179	**4,213**	2,395	5,203	133	-
농작물 면적(ha)	1,745.89	640,361	1,536	171,554	**9,271**	27,136	2,189	8,444	-
농작물 피해액	10,186	793	4,201	44,314	**13,517**	18,896	4,632	18,691	-
공공시설 피해액	22,788	1,168	22,971	105,471	**38,974**	14,085	25,097	11,471	-
사유시설 피해액	379,526	8,913	28,050	28,699	**12,949**	5,402	971	1,297	-

※ 출처 : 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

나. 통계 분석

○ **전북의 재산피해 규모 및 지역별 비교**

전북의 자연재난 총피해액은 72,810백만원으로 전국 총피해액 910,713백만원의 약8%차지하며, 경기도(417,860백만원), 충남(213,179백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임. 특히 공공시설 피해액(38,974백만원, 전국 15.3%)과 농작물 피해액(13,517백만원, 전국 11.5%), 농경지 피해액(4,213백만원, 전국 11.6%)등 공공 인프라와 농업 부문에 피해가 크게 집중되어, 해당 분야의 예방 및 복구사업 예산 적정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북 이재민 발생 규모와 주거 안정 지원 필요**

전국 이재민 13,028명 중 전북 이재민은 3,972명(30.5%)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하천 범람과 침수 등으로 주택 및 생활 기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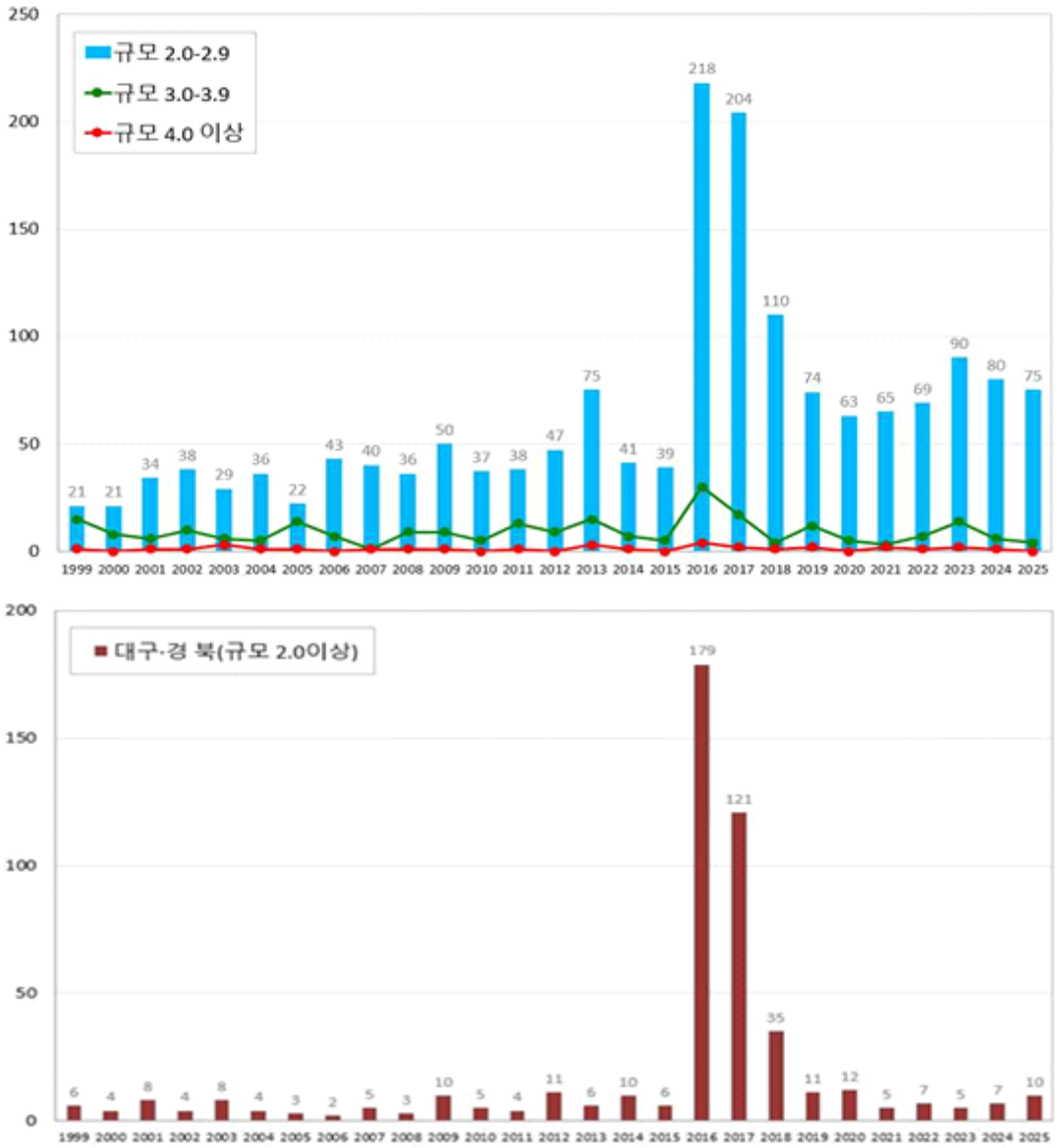
농어촌 마을 인근의 하천 침수·토사 유출로 침수 피해 세대(1,333세대)가 다수 발생한 걸로 나타나는데 이는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의 주거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며, 향후 예산심의 시 임시 주거시설확보, 구호 물품 지원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 반영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피해 규모와 이재민 발생을 고려한 재난 대응 예산 편성**

전북은 전국 피해액 3위, 이재민 수 1위로 나타나 재산피해와 주민 생활 피해가 모두 큰 지역임. 이에 따라 2027년 예산 심의 시 재해 취약 시설 정비, 재난 대응체계 강화, 이재민 구호 및 복구 지원 예산이 피해 특성과 연계해 편성할 필요가 있음.

8. 지진 관련

가. 국내 지진 발생 현황(1999년~2025년)(규모 2.0이상)



※ 출처 : 기상청, e-나라지표「2025 지진연보」

○ 국내 지진발생 경향은 2016~2017년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두 지진의 여진이 잦아들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3년에 소폭 증가했다가 다시 2025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짐.

- 2016년 이후 급증하였던 경북 지역의 지진 발생 횟수는 2019년 이후 여진이 줄어들면서 2016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지역 구분에 따른 연도별 지진 발생 횟수(규모 2.0 이상)

구분 / 연도	내륙										해역			합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북한	동해	남해	서해	
1999	0	6	3	0	0	6	2	**1**	0	2	10	1	6	37
2000	1	4	4	1	2	1	0	**1**	0	6	1	1	7	29
2001	1	8	4	3	2	2	1	**4**	0	1	3	2	10	41
2002	1	4	5	5	5	2	2	**1**	0	4	5	2	13	49
2003	0	8	5	1	1	0	1	**0**	0	0	5	3	14	38
2004	2	4	2	0	3	2	0	**1**	1	4	5	10	8	42
2005	0	3	0	2	0	1	2	**0**	0	3	7	9	10	37
2006	0	2	4	0	4	3	2	**2**	0	5	13	6	9	50
2007	0	5	2	1	2	6	3	**0**	0	7	13	0	3	42
2008	4	3	2	0	2	0	0	**1**	0	11	6	5	12	46
2009	1	10	2	1	2	0	0	**3**	0	13	5	9	14	60
2010	1	5	5	2	0	0	0	**1**	0	10	7	7	4	42
2011	0	4	2	0	0	2	1	**0**	0	10	10	10	13	52
2012	0	11	1	1	2	1	1	**4**	0	7	9	7	12	56
2013	1	6	1	1	2	0	3	**0**	0	7	15	5	52	93
2014	2	10	0	2	0	0	0	**1**	1	7	7	7	12	49
2015	1	6	2	1	1	1	1	**1**	0	3	8	12	7	44
2016	1	179	6	1	6	1	0	**1**	1	23	15	12	6	252
2017	0	121	3	5	5	1	2	**2**	0	25	20	18	21	223
2018	1	35	4	2	1	2	4	**2**	0	13	18	13	20	115
2019	4	11	0	0	5	0	2	**0**	2	21	16	11	16	88
2020	2	12	2	6	1	1	1	**2**	0	20	7	3	11	68
2021	1	5	0	2	7	0	1	**5**	0	16	10	4	19	70
2022	1	7	4	2	2	0	5	**0**	0	20	11	12	13	77
2023	2	5	2	2	2	4	2	**3**	0	37	21	6	20	106
2024	1	7	2	1	3	0	0	**5**	0	31	11	14	12	87
연평균('99~'24)	1.1	18.5	2.6	1.6	2.3	1.4	1.4	**1.6**	0.2	11.8	9.9	7.3	13.2	72.8
2025	2	10	1	1	3	0	3	**2**	0	21	8	14	14	79

※ 출처 : 기상청, e-나라지표「2025 지진연보」

나. 통계 분석

○ **전국 지진 발생 추이와 전북의 상대적 증가세**

전국 규모 2.0이상 지진은 '25년 79건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했으나, 장기 연평균 72.8건보다 높은 수준임. 반면 전북은 최근 5년간('21년~'25년) 총 15건으로 연평균 3건이 발생해 장기 연평균 1.6건의 약 1.9배를 기록함.

이에 지진 발생이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도 전북은 연도별 발생 건수의 변동이 커 지속적인 관측과 대비가 필요함.

○ **지진 피해에 대비한 문화유산 및 공공시설 안전관리**

전북에는 국가·시도 유산 1,028건을 비롯한 역사·문화 자산과 공공시설이 분포해 있어 지진 발생시 시설물의 균열, 파손 등 피해 예방이 중요함. 특히 문화유산과 노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내진 성능 확보를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지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검토**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유산 안전점검 및 보강, 지진 대피 시설 정비와 주민 대피 훈련 관련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업별 추진 실적과 내진 보강 진행 상황을 점검해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산·정책분석을 위한
통계 자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교육위원회



1.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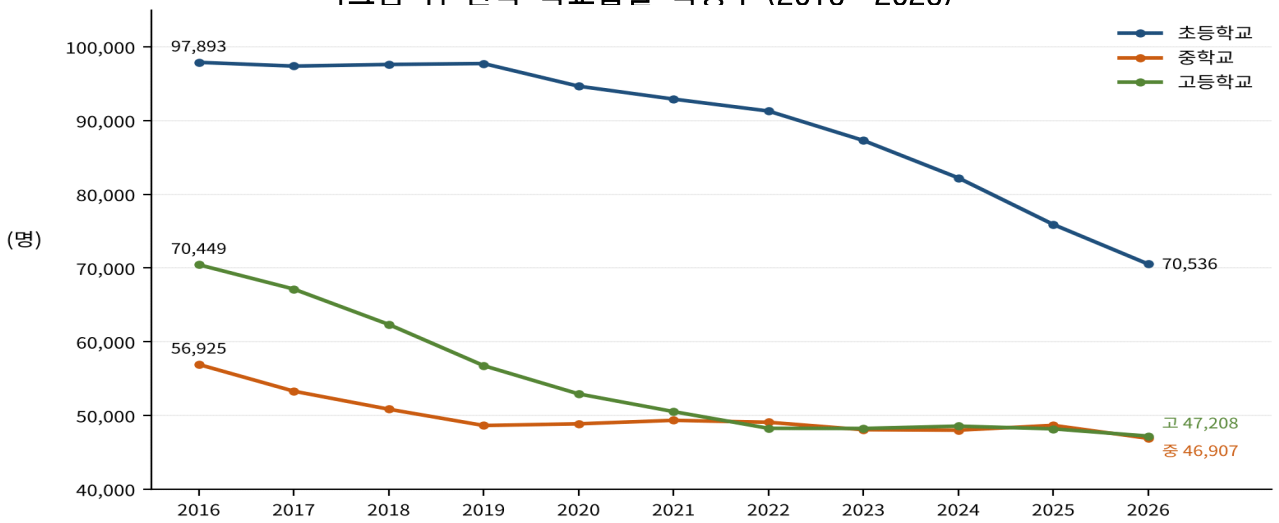
[표 1] 연도별 전북 학생수 (2016~2026)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초등학교	97,893	97,383	97,606	97,731	94,661	92,912	91,290	87,298	82,224	75,909	70,536
중학교	56,925	53,303	50,859	48,648	48,873	49,347	49,084	48,073	48,012	48,665	46,907
고등학교	70,449	67,149	62,354	56,769	52,932	50,532	48,265	48,244	48,562	48,191	47,208
계	**225,267**	**217,835**	**210,819**	**203,148**	**196,466**	**192,791**	**188,639**	**183,615**	**178,798**	**172,765**	**164,651**

※ 출처: 전북교육청 「2026년 교육행정자료」

[그림 1] 전북 학교급별 학생수 (2016~2026)



○ **전북 초·중·고 학생은 10년 동안 4명 중 1명꼴로 줄었음**

- 초·중·고 학생 수는 225,267명(2016) → 164,651명(2026)으로 26.9% 줄었음.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한 해에만 8,114명(4.7%)이 줄어 감소 폭이 커지고 있음

○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 추이가 전국보다 빠름**

- 2016~2026년 초등학생 수가 전북은 97,893명 → 70,536명(↓28.0%), 전국은 2,672,843명 → 2,219,370명(↓17.0%)으로 전북이 11.0%p 빠름

○ **학생수 감소가 학교급을 따라 이동함**

- 2016~2020년은 중학생(↓14.1%)과 고등학생(↓24.9%)이, 2021~2026년은 초등학생(↓24.1%)이 집중적으로 줄었음
- 지금의 초등학생 감소는 2027년 이후 중학교로, 2030년대에는 고등학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2. 학급당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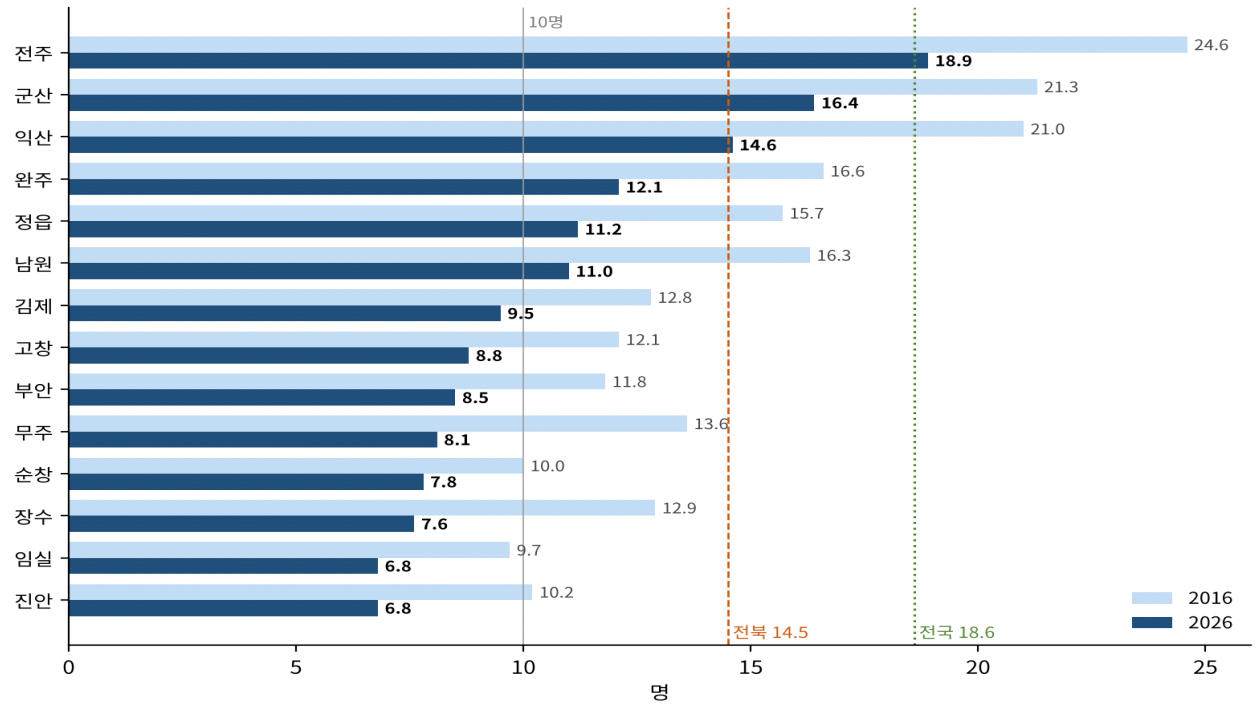
[표 2] 전북 시·군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016 → 2026)

(단위: 명)

시군	학생수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전주	38,399→30,789 (↓19.8%)	1,559→1,626 (↑4.3%)	24.6→18.9 (↓23.2%)
군산	15,626→11,578 (↓25.9%)	734→705 (↓4.0%)	21.3→16.4 (↓23.0%)
익산	16,180→10,401 (↓35.7%)	770→710 (↓7.8%)	21.0→14.6 (↓30.5%)
완주	5,072→3,740 (↓26.3%)	305→309 (↑1.3%)	16.6→12.1 (↓27.1%)
정읍	5,380→3,426 (↓36.3%)	342→306 (↓10.5%)	15.7→11.2 (↓28.7%)
남원	4,267→2,560 (↓40.0%)	262→232 (↓11.5%)	16.3→11.0 (↓32.5%)
김제	3,610→2,324 (↓35.6%)	281→244 (↓13.2%)	12.8→9.5 (↓25.8%)
고창	2,097→1,376 (↓34.4%)	173→157 (↓9.2%)	12.1→8.8 (↓27.3%)
부안	2,075→1,238 (↓40.3%)	176→145 (↓17.6%)	11.8→8.5 (↓28.0%)
무주	1,072→573 (↓46.5%)	79→71 (↓10.1%)	13.6→8.1 (↓40.4%)
순창	1,174→806 (↓31.3%)	117→104 (↓11.1%)	10.0→7.8 (↓22.0%)
장수	993→494 (↓50.3%)	77→65 (↓15.6%)	12.9→7.6 (↓**41.1%**)
임실	1,033→619 (↓40.1%)	106→91 (↓14.2%)	9.8→6.8 (↓30.2%)
진안	915→612 (↓33.1%)	90→90 (0.0%)	10.2→6.8 (↓33.1%)
계	97,893→70,536 (↓**27.9%**)	5,071→4,855 (↓**4.3%**)	19.3→14.5 (↓**24.7%**)

※ 출처: 전북교육청 「2026년 교육행정자료」

[그림 2] 전북 시·군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비교 (2016 vs 2026)



○ **전북 초등학생은 10년간 28% 줄었지만 학급 수는 4%만 줄어, 학급당 학생 수가 크게 낮아졌음**

- 초등학생은 97,893명(2016년) → 70,536명(2026년)으로 27.9% 줄었으나, 학급은 5,071개 → 4,855개로 4.3% 줄어드는 데 그쳤음. 그 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19.3명 → 14.5명으로 24.7% 낮아졌음

○ **도내 격차는 10년 새 더 벌어짐**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전주(24.6명 → 18.9명)와 가장 적은 지역(2016년 임실 9.7명, 2026년 진안·임실 6.8명)의 격차가 2.5배 → 2.8배로 커졌음
- 감소 폭이 가장 큰 장수는 초등학생이 50.3%, 학급당 학생 수가 41.1% 줄어 10년 만에 학생이 절반으로 줄었음

○ **교육부는 2026년 6월 10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2015년부터 적용해 온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면·도서·벽지 60명 이하, 읍 초120명·중고180명 이하, 도시 초240명·중고300명 이하)을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에 자체 기준 마련을 맡겼으나, 전북교육청은 새 교육감 취임 이후 공식 기준을 발표하지 않음(2026. 10. 현재)**

- 폐지 전 권고기준으로 보면 전북의 기준 미달 학교는 351교(2016, 45.9%) → 414교(2026, 55.8%)로 증가함
- 교육부는 학교 통합 지원금을 최대 초등 75억원, 중등 130억원으로 늘리고, 교육혁신선도지역 40곳(인구감소지역 30곳, 비수도권·접경지역 등 10곳)에 지역당 연 20억원씩 최대 5년간(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전북의 자체 기준 수립이 늦어지면 공모 대응과 재정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다른 시·도는 이미 조례로 근거를 마련했으나 전북은 공백 상태임**

- 2026. 10. 현재 10개 시·도교육청이 적정규모학교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며, 전북에는 해당 조례가 없음
- 교육부 권고기준 폐지에 대응해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규모 기준, 통합 절차(학부모·지역 의견 수렴 방식), 통합학교·잔류 소규모학교 지원, 시·군 농촌유학 조례와의 연계를 담아야 함

3. 전북 학교의 소규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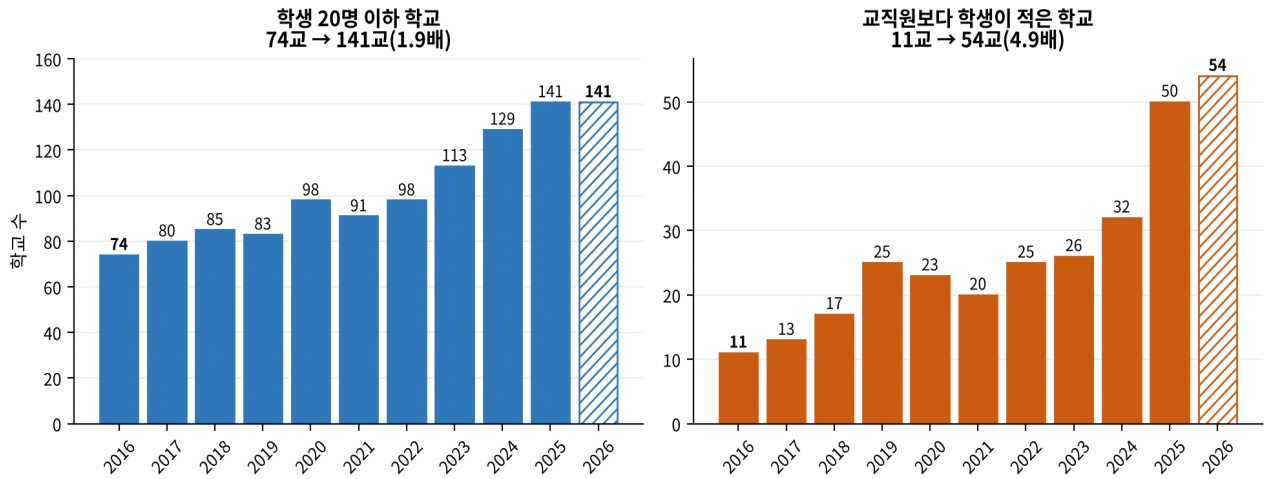
[표 3] 연도별 전북 소규모학교 지표 (2016~2026)

(단위: 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전체 학교 수(초·중·고)	764	766	766	766	769	768	770	768	760	750	742
학생 60명 이하 학교	278	280	276	284	301	306	312	315	316	322	309
학생 20명 이하 학교	74	80	85	83	98	91	98	113	129	141	141
교직원보다 학생이 적은 학교	11	13	17	25	23	20	25	26	32	50	54
1학년 0명 초등학교	7	10	12	13	16	12	24	28	42	29	23
학교당 평균 학생수(명)	295	284	275	265	256	251	245	239	235	230	222

※ 출처: 전북교육청「교육데이터 허브」(2016~2025),「EDSS 에듀데이터서비스」 학교 수 · 학생 · 교원 · 행정직원 수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6)

[그림 3] 학생 20명 이하 학교와 교직원보다 학생이 적은 학교 (2016~2026)



○ **학교는 22교 줄었는데 학생 60명 이하 학교는 31교 늘어, 전북 학교 10교 중 4교가 학생 60명 이하임**

- 학생 60명 이하 학교는 2016년 278교(전체 764교 중 36.4%)에서 2026년 309교(742교 중 41.6%)로 늘었음

○ **전교생이 20명도 안 되는 학교가 10년 만에 1.9배로 늘었으며, 141교 가운데 140교가 초·중학교임**

- 2016년 74교에서 2026년 141교(초등 84교, 중학교 56교, 고등학교 1교)로 늘었음
- 2016~2022년 6년 동안은 24교 늘었으나, 2022~2026년 4년 동안 43교가 늘어 증가 속도가 빨라짐. 특히 초등학교는 49교(2022) → 84교(2026)로 4년 만에 1.7배가 되었음
- 초등학교는 2025년 88교에서 2026년 84교로 처음 줄었지만, 중학교는 48교에서 56교로 한 해에 8교가 늘어 소규모화가 중학교로 옮겨 가고 있음

○ **교직원보다 학생이 적은 학교가 10년 만에 11교에서 54교로 4.9배 늘어, 전북 학교 100교 중 1교꼴(1.4%)에서 7교꼴(7.3%)이 되었음**

- 2016년 11교에서 2026년 54교로 늘었음. 2024년 32교에서 2025년 50교로 한 해에 18교가 늘어 최근 증가가 특히 빠름
- 초등학교가 4교 → 30교(7.5배)로 증가를 주도했고, 중학교는 6교 → 24교(4.0배), 고등학교는 1교 → 0교가 되었음
-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100교 중 7교(30교, 7.4%), 중학교는 100교 중 12교(24교, 11.7%)가 학생보다 교직원이 많음

[표 4] 2026년 학교 단위로 소규모학교 지표 비교

(단위: 교)

구 분	초등학교 (404교)	중학교 (206교)
학년마다 한 반뿐인 학교	246 (60.9%)	81 (39.3%)
두 학년 이상이 한 교실(복식학급)	70 (17.3%)	-
학년당 평균 학생 5명 이하	133 (32.9%)	40 (19.4%)
모든 학년이 5명 이하	71 (17.6%)	29 (14.1%)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년이 있는 학교	55 (13.6%)	7 (3.4%)
1학년 0명	23 (5.7%)	4 (1.9%)
1학년 5명 이하	171 (42.3%)	47 (22.8%)
학년마다 한 반뿐인 학교의 학생 수(명)	8,234 (전체의 11.7%)	1,543 (전체의 3.3%)

※ 출처: 전북교육청 「2026년 교육행정자료」 학년별 학급 수 · 학생 수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학년마다 한 반'은 일반학급이 초등 6개 이하, 중학교 3개 이하인 학교

○ **전북 초등학교 5교 중 3교는 학년마다 한 반뿐이어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6년 동안 반이 바뀌지 않음**

- 2026년 초등학교 246교(60.9%)가 학년마다 한 반이며, 이 가운데 70교는 학생이 모자라 두 학년 이상이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복식학급을 운영함

○ **전북 초등학교 10교 중 6교가 학년마다 한 반뿐인 작은 학교지만, 이 학교들에 다니는 학생은 초등학생 100명 중 12명에 불과함**

- 학년마다 한 반인 초등학교는 246교(60.9%)이고 학생은 8,234명(11.7%)이며, 나머지 158교(39.1%)에 초등학생의 88.3%(62,302명)가 다니고 있음
- 중학교도 학년마다 한 반인 학교가 81교(39.3%)이지만, 여기에 다니는 학생은 1,543명으로 전체 중학생의 3.3%임

○ **한 학년의 학생이 평균 5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가 3교 중 1교이며,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년이 있는 학교도 55교임**

- 학년당 평균 학생이 5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133교로, 모둠 활동이나 단체 체육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규모임
- 학년당 5명 이하 초등학교는 김제 19교, 익산 18교, 정읍·고창 각 13교, 부안 11교 순으로, 시·군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 **학년 수를 맞춰 비교하면 소규모화는 초등학교가 더 심각하고, 다음 차례는 중학교임**

- 학년당 학생 5명 이하인 학교 비율이 초등학교 32.9%, 중학교 19.4%임
- 그러나 1학년이 5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171교(42.3%)에 이르러, 이 학생들이 진학하는 2030년대 초반부터 중학교 소규모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

4. 교원 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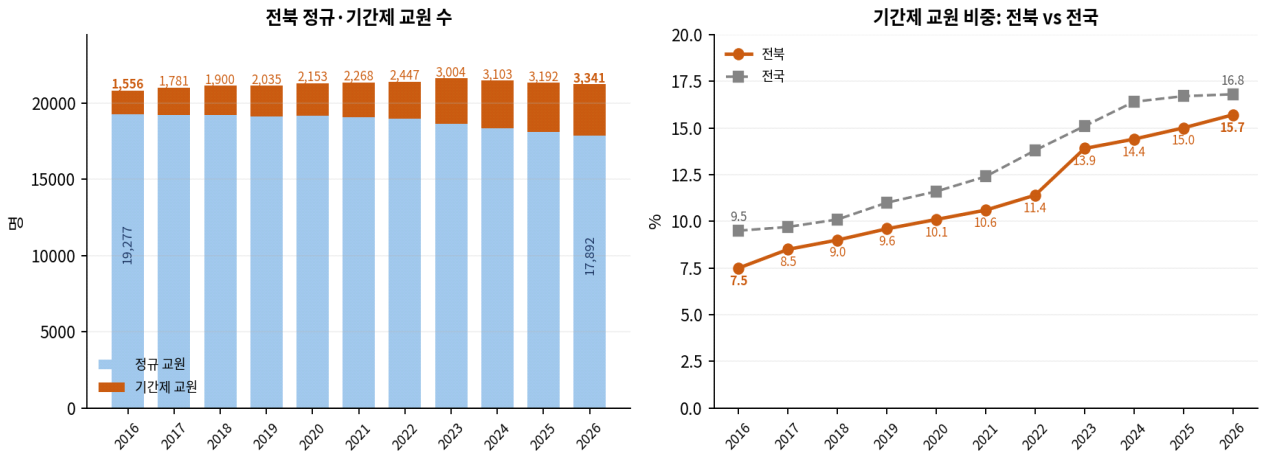
[표 5] 연도별 정규 · 기간제 교원수 (2016 ~ 2026)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정규 교원	19,277	19,237	19,240	19,107	19,165	19,100	18,972	18,621	18,376	18,135	17,892
기간제 교원	1,556	1,781	1,900	2,035	2,153	2,268	2,447	3,004	3,103	3,192	3,341
기간제 비중(전북)	7.5	8.5	9.0	9.6	10.1	10.6	11.4	13.9	14.4	15.0	15.7
기간제 비중(전국)	9.5	9.7	10.1	11.0	11.6	12.4	13.8	15.1	16.4	16.7	16.8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그림 4] 정규 · 기간제 교원 수



[표 6] 학교급별 정규 · 기간제 교원 변화 (2016 → 2026)

(단위: 명, %)

학교급	정규 교원	기간제 교원	기간제 비중 (전북)	전국 비중 (2026)	전북 – 전국
유치원	2,071 → 1,694 (↓18.2%)	184 → 611 (↑232.1%)	8.2 → 26.5	17.5	+ 9.0%p
초등학교	7,870 → 7,868 (0.0%)	132 → 248 (↑87.9%)	1.6 → 3.1	7.0	- 3.9%p
중학교	4,105 → 3,957 (↓3.6%)	563 → 978 (↑73.7%)	12.1 → 19.8	21.7	- 1.9%p
고등학교	4,937 → 4,045 (↓18.1%)	613 → 1,332 (↑117.3%)	11.0 → 24.8	25.2	- 0.4%p
일반고	3,408 → 2,450 (↓28.1%)	445 → 963 (↑116.4%)	11.5 → 28.2	24.7	+ 3.5%p
특성화고	1,038 → 727 (↓30.0%)	125 → 223 (↑78.4%)	10.7 → 23.5	32.0	- 8.5%p
특수학교	290 → 318 (↑9.7%)	64 → 164 (↑156.3%)	18.1 → 34.0	30.5	+ 3.5%p
계	**19,277 → 17,892 (↓7.2%)**	**1,556 → 3,341 (↑114.7%)**	**7.5 → 15.7**	**16.8**	**- 1.1%p**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 **10년 동안 정규 교원은 1,385명 줄었지만, 기간제 교원은 1,785명 늘어 2배 넘게 많아졌음**

- 정규 교원은 19,277명(2016년) → 17,892명(2026년)으로 7.2% 줄어든 반면, 기간제 교원은 1,556명 → 3,341명으로 2.1배가 되었음
- 줄어든 정규 교원보다 더 많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학생이 26.9% 줄어드는 동안 전체 교원은 20,833명 → 21,233명으로 오히려 400명(1.9%) 늘었음

○ **전북의 기간제 교원 비중은 아직 전국보다 낮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전국보다 빠름**

- 전북의 기간제 교원 비중은 2016년 7.5%에서 2026년 15.7%로 8.2%p 높아져 같은 기간 전국(9.5% → 16.8%, 7.3%p)보다 빠르게 늘었음. 그 결과 2016년 2.0%p였던 전국과의 차이가 2026년 1.1%p로 좁혀졌음

○ **유치원·일반고·특수학교는 기간제 교원 비중이 이미 전국보다 높음**

- 유치원은 교원 4명 중 1명 이상(26.5%)이 기간제로 전국(17.5%)보다 9.0%p 높음. 원아는 44.4%(26,389명 → 14,669명) 줄었는데 기간제는 184명 → 611명으로 3.3배 증가함
- 일반고는 기간제 비중이 28.2%로 전국(24.7%)보다 높음. 2025년 자율형 공립고 전환에 따른 분류 이동을 감안해 일반고와 자율고를 합쳐 보면, 정규 교원은 3,571명 → 3,023명으로 15.3% 줄고 기간제는 457명 → 1,039명으로 2.3배가 되어 기간제 비중이 11.3% → 25.6%로 높아졌음(전국 14.4% → 24.1%)
- 특수학교는 기간제 비중이 34.0%로 전국(30.5%)보다 높음. 2016년에는 전국(23.2%) 보다 5.1%p 낮았으나 10년 만에 역전됨

○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생이 줄어든 만큼 정규 교원을 줄이고, 새로 생긴 수요는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 온 구조임**

- 고등학교는 학생 33.0%(70,449명 → 47,208명) 감소에 맞춰 정규 교원을 18.1% 줄였으나, 기간제는 2.2배로 늘어 전체 교원 수는 5,550명 → 5,377명으로 3.1% 줄어드는데 그쳤음
- 특수학교는 학생이 1,236명 → 1,321명으로 6.9% 늘었는데, 정규 교원은 28명(+9.7%) 늘어난 반면 기간제 교원은 100명(+156.3%) 늘어 학생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도는 기간제 확대가 이루어졌음

5. 이주배경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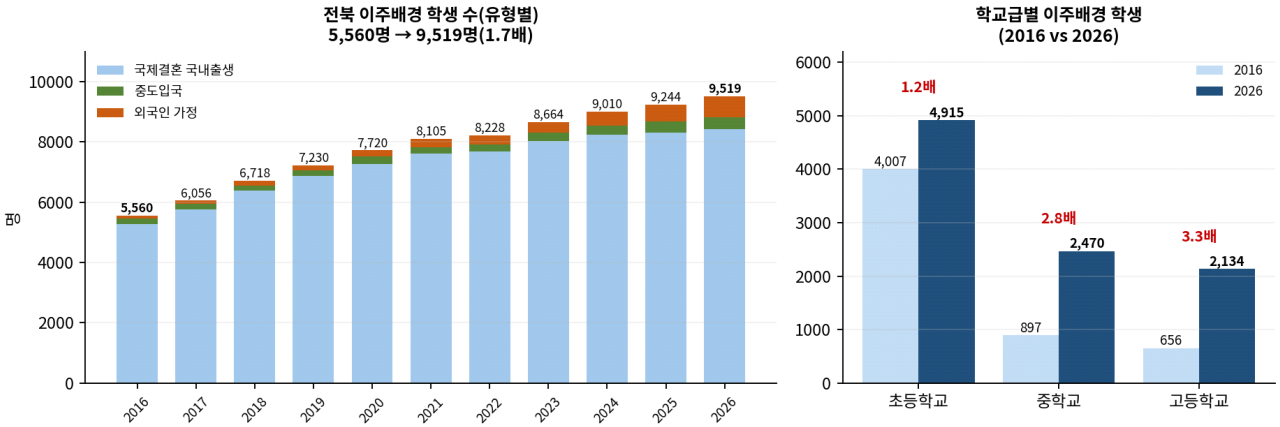
[표 7] 연도별 전북 이주배경 학생수 (2016 ~ 2026)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이주배경 학생	5,560	6,056	6,718	7,230	7,720	8,105	8,228	8,664	9,010	9,244	9,519
국내출생	5,284	5,760	6,385	6,876	7,273	7,613	7,676	8,041	8,237	8,320	8,422
중도입국	176	187	170	190	239	218	248	279	304	363	402
외국인 가정	100	109	163	164	208	274	304	344	469	561	695
전체학생 대비 비율	2.5	2.8	3.2	3.6	3.9	4.2	4.4	4.7	5.0	5.4	5.8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그림 5] 전북 이주배경 학생수 및 학교급별 변화



[표 8] 이주배경 학생수 변화 (2016 → 2026)

(단위: 명)

구 분		전북	전국
학교급별	계	5,560 → 9,519 (↑71.2%)	99,186 → 210,838 (↑112.6%)
	초등학교	4,007 → 4,915 (↑22.7%)	73,972 → 118,655 (↑60.4%)
	중학교	897 → 2,470 (↑175.4%)	15,080 → 53,501 (↑254.8%)
	고등학교	656 → 2,134 (↑225.3%)	9,816 → 37,660 (↑283.7%)
	특성화고	175 → 516 (↑194.9%)	2,997 → 11,824 (↑294.5%)
국내출생		5,284 → 8,422 (↑59.4%)	79,134 → 138,736 (↑75.3%)
중도입국		176 → 402 (↑128.4%)	7,418 → 13,540 (↑82.5%)
외국인 가정		100 → 695 (↑595.0%)	12,634 → 58,562 (↑363.5%)
한국어 지원 수요 (중도입국 + 외국인 가정)		276 → 1,097 (↑297.5%)	20,052 → 72,102 (↑259.6%)
외국인 가정 비중		1.8% → 7.3%	12.7% → 27.8%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 **전북 이주배경 학생 수의 증가율은 전국보다 낮지만, 전체 학생 중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보다 높아짐**

- 전북 이주배경 학생은 10년간 71.2% 늘어 전국(112.6%)보다 증가 폭이 작음. 그러나 전체 학생이 27% 줄어 비율은 2.5% → 5.8%로 2.3배가 되었고, 전국(4.4%)보다 1.4%p 높음

○ **최근 2년간(2024~2026년) 늘어난 이주배경 학생의 3분의 2가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자녀임**

- 2016~2018년 늘어난 1,158명 중 95%가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이었으나, 2024~2026년 늘어난 509명 중 64%(324명)는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자녀로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학생임
- 이처럼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0년간 276명 → 1,097명으로 4배가 되었으며, 증가 속도도 전국(3.6배)보다 빠름
- 특히 외국인 가정 자녀는 100명 → 695명으로 7배 늘었고,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79명 → 498명으로 6.3배 늘어 앞으로 몇 년 안에 중학교·고등학교 진학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전북은 아직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심이지만, 외국인 가정 자녀가 빠르게 늘어 전국과 같은 구조로 바뀌기 시작한 초기 단계임**

- 2026년 전북 이주배경 학생 중 외국인 가정 자녀 비율은 7.3%로 전국(27.8%)의 4분의1 수준이고, 국내출생 비중이 88.5%(전국 65.8%)으로 전국에서 먼저 나타난 외국인 가정 자녀 증가 흐름이 전북에서도 시작된 만큼, 앞으로 한국어 교육 수요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고등학교 이주배경 학생 4명 중 1명이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어, 학업중단 위험이 높은 학교에 집중됨**

- 2026년 전북 고등학교 이주배경 학생 2,134명 가운데 516명(24.2%)이 특성화고에 다님. 전북 특성화고의 학업중단율은 4.58%로 전국(4.08%)보다 높아, 이 학생들이 학업을 끝까지 마치고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함께 필요함

6. 직업계고

[표 9] 연도별 직업계고 학생수 (2016 ~ 2026)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전북 고등학생	70,449	67,149	62,354	56,769	52,932	50,532	48,265	48,245	48,561	48,191	47,206
직업계열 학생	15,408	14,229	12,860	11,022	9,622	8,808	7,954	7,562	7,291	7,207	7,120
직업계열 비중(전북)	21.9	21.2	20.6	19.4	18.2	17.4	16.5	15.7	15.0	15.0	15.1
직업계열 비중(전국)	17.5	17.3	17.2	17.1	16.6	16.0	15.2	14.3	13.8	13.6	13.5

※ 출처: 「EDSS 에듀데이터서비스」

[표 10] 계열별 학생 수 변화 (2016 → 2026)

계열	전북	비고
공업	6,155명 → 3,277명 (↓46.8%)	절반으로 감소
상업	5,513명 → 957명 (↓82.6%)	10년 만에 6분의 1로 감소
농업	2,212명 → 1,374명 (↓37.9%)	-
가사·실업	1,263명 → 1,371명 (↑8.6%)	유일하게 증가
기타 특성화	265명 → 141명 (↓46.8%)	-
직업계열 계	**15,408명 → 7,120명 (↓53.8%)**	**전국 306,273명 → 173,182명(↓43.5%)**
(참고) 고등학생 전체	70,449명 → 47,206명 (↓3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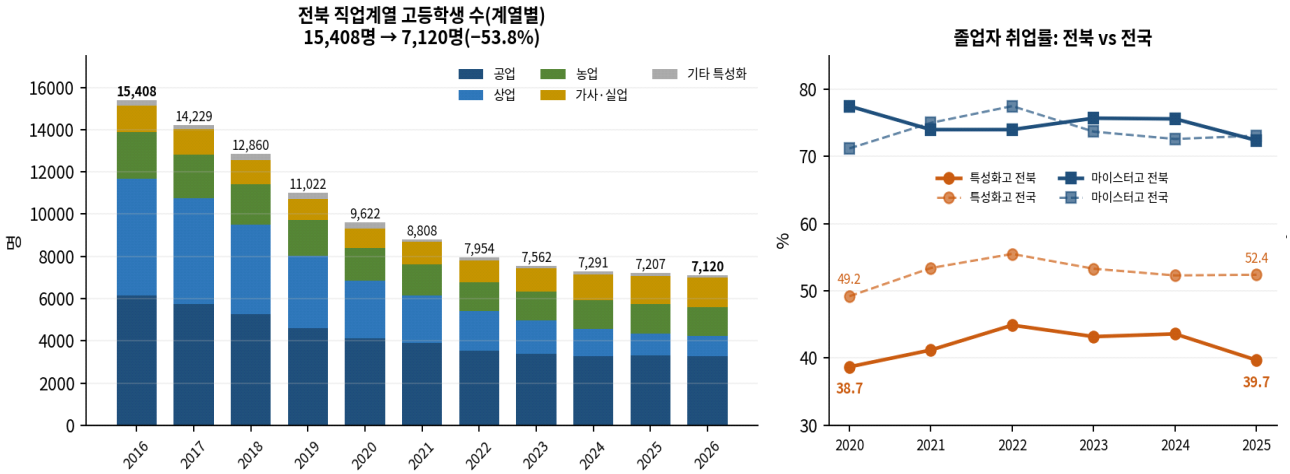
※ 출처: 「EDSS 에듀데이터서비스」

[표 11] 졸업 후 취업 현황 (2020 → 2025)

구분	전북	전국	전북 - 전국 (2025)
직업계고 졸업자	4,054명 → 2,250명 (↓44.5%)	89,998명 → 59,661명 (↓33.7%)	
직업계고 학교 수	37교 → 32교 (↓13.5%)	576교 → 575교 (↓0.2%)	
직업계고 취업률	47.2% → 51.6%	50.7% → 55.2%	↓3.6%p
특성화고 취업률	38.7% → 39.7%	49.2% → 52.4%	↓12.7%p
마이스터고 취업률	77.5% → 72.4%	71.2% → 73.1%	↓0.7%p
특성화고 취업자	567명 → 257명 (↓54.7%)	20,785명 → 11,733명 (↓43.6%)	
마이스터고 취업자	355명 → 275명 (↓22.5%)	3,510명 → 3,199명 (↓8.9%)	

※ 출처: 교육통계 「시도별 직업계고 졸업 후 상황」 · 「시도별 직업계고 학교유형별 취업자 현황」

[그림 6] 전북 직업계고 고등학생 수(2016~2026)와 졸업자 취업률(2020~2025)



[표 12] 특성화고 관련 지표 (2016 → 2026)

지표	전북	전국
특성화고 정규 교원	1,038명 → 727명 (↓30.0%)	22,054명 → 15,518명(↓29.6%)
특성화고 기간제 교원 비중	10.7% → 23.5%	16.2% → 32.0%
특성화고 학업중단율 (2025)	4.58%	4.08%
특성화고 이주배경 학생	175명 → 516명 (2.9배)	2,997명→ 11,824명 (3.9배)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 **직업계열 고등학생은 10년 동안 절반 넘게 줄어, 전체 고등학생 감소 속도보다 훨씬 빠름**

- 전북의 직업계열 학생은 15,408명(2016년) → 7,120명(2026년)으로 53.8% 줄었음
- 같은 기간 전체 고등학생 감소율(33.0%)과 전국 직업계열 감소율(43.5%)보다 모두 빠름
- 그 결과 고등학생 가운데 직업계열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1.9%에서 15.1%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국(13.5%)보다는 높음

○ **상업계열은 10년 만에 6분의 1로 줄었고, 가사·실업 계열만 유일하게 늘어 계열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음**

- 상업계열 학생은 5,513명 → 957명으로 82.6% 줄었고, 공업계도 6,155명 → 3,27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음

- 반면 가사·실업 계열은 1,263명 → 1,371명으로 8.6% 늘었음. 보건·조리·미용 등 서비스 분야로 학생 수요가 옮겨 가는 흐름으로 보이며, 학과 개편이 이 변화를 제때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 **전북 직업계고의 낮은 취업률은 특성화고 때문이며, 마이스터고는 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5년 전북 직업계고 전체 취업률은 51.6%로 전국(55.2%)보다 3.6%p 낮음. 이를 학교 유형별로 나눠 보면 마이스터고는 72.4%로 전국(73.1%)과 비슷하지만, 특성화고는 39.7%로 전국(52.4%)보다 12.7%p나 낮음
- 특성화고 취업률의 전국과의 차이는 10.5%p(2020년) → 12.7%p(2025년)로 오히려 더 벌어졌음

○ **마이스터고 4교가 전북 직업계고 취업자의 절반을 차지함**

- 2025년 전북 직업계고 취업자 540명(특성화고 257명, 마이스터고 275명, 일반고 직업반 8명) 가운데 275명(50.9%)이 마이스터고 졸업생임
- 특성화고 취업자는 567명(2020년) → 257명(2025년)으로 5년 만에 절반 이하(△54.7%)로 줄었음

○ **특성화고는 학생 수, 교원, 학업 지속 등 여러 지표가 동시에 나빠지고 있음**

- 특성화고 정규 교원은 10년간 30.0% 줄고 기간제 교원 비중은 10.7%에서 23.5%로 높아졌음
- 학업중단율은 4.58%로 전국(4.08%)보다 높고, 학업 지원이 더 필요한 이주배경 학생은 175명 → 516명으로 2.9배 늘었음. 취업률이 낮은 문제를 이러한 교육 여건과 함께 보아야 함

7. 특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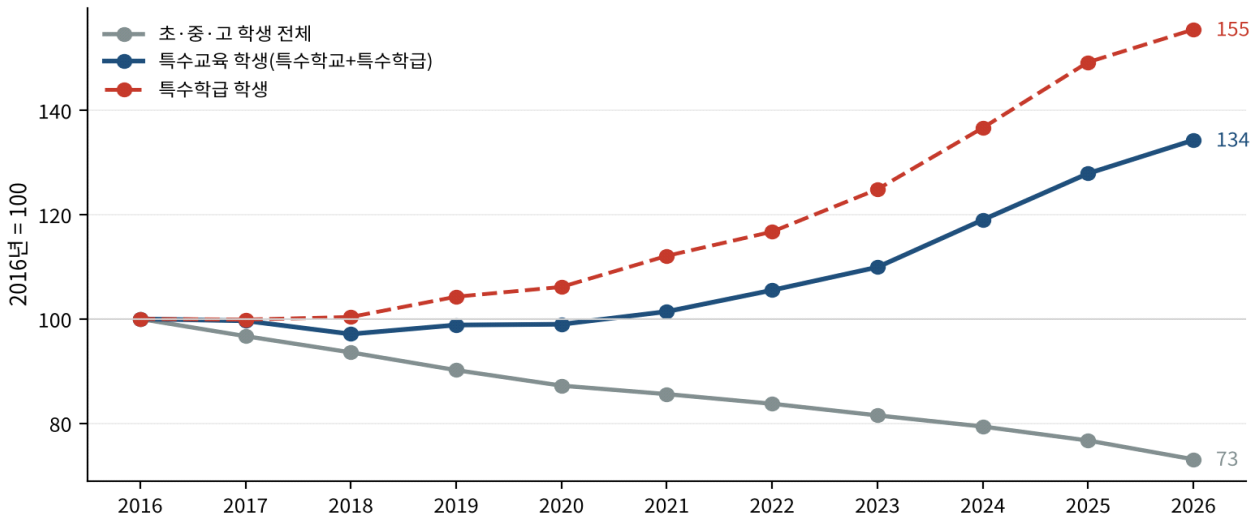
[표 13] 특수교육 학생 규모 변화 (2016 → 2026)

구분	전북	전국
초·중·고 학생	225,267명 → 164,651명 (↓26.9%)	5,882,790명 → 4,837,512명 (↓17.8%)
특수학교 학생	1,236명 → 1,321명 (↑6.9%)	25,502명 → 31,993명 (↑25.5%)
특수학급 학생 (초·중·고)	1,597명 → 2,483명 (↑55.5%)	46,541명 → 67,498명 (↑5.0%)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	2,833명 → 3,804명 (↑34.3%)	72,043명 → 99,491명 (↑38.1%)
학생 100명당 특수교육 학생	1.25명 → 2.29명	1.22명 → 2.04명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전북교육청 교육행정자료(초중고 학생수)

※ 학생 100명당 특수교육 학생 =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학생) × 100

[그림 7] 전북 특수교육 학생 수 증감 비교 (2016~2026)



[표 14] 일반학교 특수학급 규모 변화 (2016 → 2026)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급 수 (전북)	223학급 → 353학급	78학급 → 134학급	50학급 → 72학급
특수학급 학생 (전북)	795명 → 1,482명 (↑86.4%)	397명 → 587명 (↑47.9%)	405명 → 414명 (↑2.2%)
특수학급 학생 (전국)	↑74.9%	↑40.3%	↓2.1%
교원1인당 학생 (전북 / 전국, 2026)	3.9명 / 4.2명	4.0명 / 3.9명	5.3명 / 4.3명
특수학급 설치 비율 (전북)	51.0% → 74.4%	31.6% → 51.5%	25.6% → 35.6%
특수학급 설치 비율 (전국, 2026)	82.3%	69.0%	51.3%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 (전북, 2026)	404교 중 103교	206교 중 100교	132교 중 85교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 특수학급 설치 비율 = 특수학급이 1개 이상인 학교 수 ÷ 전체 학교 수 × 100

※ 특수교사 배치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학생 4명마다 1명(교육감은 50% 범위에서 가감 배치 가능)

[표 15] 특수교사 규모 변화 (2016 → 2026)

구분	전북	전국
특수학교 수	11교 → 11교 (2018~2025년 10교)	170교 → 199교
특수학교 교원	354명 → 482명 (↑36.2%)	8,720명 → 11,983명 (↑37.4%)
기간제 교원 비중	18.1% → 34.0%	23.2% → 30.5%
정규 특수교사 (학교급 전체)	486명 → 623명 (↑28.2%)	12,249명 → 17,641명 (↑44.0%)
정규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학생	5.83명 → 6.11명	5.88명 → 5.64명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 **전체 학생은 10년 동안 4분의 1 넘게 줄었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오히려 3분의 1 넘게 늘었음**

- 전북 초·중·고 학생은 225,267명(2016년) → 164,651명(2026년)으로 26.9% 줄었음. 같은 기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생은 2,833명 → 3,804명으로 34.3% 늘었음
- 그 결과 학생 100명당 특수교육 학생은 1.25명 → 2.2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전국(2.04명)보다 많아졌음.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 수요가 함께 줄지는 않으며, 특수교육은 오히려 늘어나는 분야임

○ **특수교육 학생이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몰리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 빠르게 늘고 있음**

- 10년 동안 특수학교 학생은 6.9%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특수학급 학생은 55.5% 늘어 전국 증가율(45.0%)보다 높았음. 그중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795명 → 1,482명으로 86.4% 늘었음. 이 학생들이 몇 년 안에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므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수요도 곧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특수교육 학생이 늘어난 만큼 정규 특수교사를 늘리지 않아, 전국과 반대로 교사 1인당 학생이 늘었음**

- 10년 동안 전북 정규 특수교사는 28.2% 늘었지만, 전국은 44.0% 늘었음
- 정규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학생은 전국이 5.88명 → 5.64명으로 줄어든 반면, 전북은 5.83명 → 6.11명으로 늘었고, 부족한 인력은 기간제로 채워 왔음. 특수학교 기간제 교원은 64명 → 164명으로 2.6배가 되었고, 그 비중(34.0%)은 전국(30.5%)보다 높음

8. 학생 정신건강

[표 16] 연도별 중 · 고등학생 우울감과 스트레스 (2016 ~ 2025)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우울감 경험률	전북	27.5	27.2	27.1	30.9	28.3	27.7	29.5	28.6	30.4	26.4
	전국	25.5	25.1	27.1	28.2	25.2	26.8	28.7	26.0	27.7	25.7
	차이 (%p)	+2.0	+2.1	0.0	+2.7	+3.1	+0.9	+0.8	+2.6	+2.7	+0.7
스트레스 인지율	전북	38.7	40.6	40.9	42.6	37.9	41.0	43.3	40.0	46.1	42.6
	전국	37.4	37.2	40.4	39.9	34.2	38.8	41.3	37.3	42.3	41.3
	차이 (%p)	+1.3	+3.4	+0.5	+2.7	+3.7	+2.2	+2.0	+2.7	+3.8	+1.3

※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KOSIS「우울감 경험률」,「스트레스 인지율」)

※ 2026년 조사 결과는 아직 공표되지 않음

※ 우울감 경험률: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

※ 스트레스 인지율: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학생의 비율

[표 17] 성별 · 학교급별 전국 비교

(단위: %)

지표	지역	전체 (2025년)	성별 (2025년)		학교급 (2024년)	
		중·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우울감 경험률	전북	26.4	23.5	29.6	32.7	28.1
	전국	25.7	21.7	29.9	27.9	27.5
	차이 (%p)	+0.7	+1.8	-0.3	+4.8	+0.6
스트레스 인지율	전북	42.6	34.8	50.9	45.9	46.4
	전국	41.3	32.9	50.3	41.3	43.4
	차이 (%p)	+1.3	+1.9	+0.6	+4.6	+3.0

※ 출처: 성별은 KOSIS, 학교급별은 교육데이터 허브 외부수집 자료실(2025년 학교급별 자료는 미공개)

[표 18] 상담 인력 전국 비교

구분	전북	전국
정규 전문상담교사 수	66명 (2016) → 266명 (2026), 4.0배	1,771명 → 4,773명, 2.7배
상담교사 1인당 학생 (2026)	681명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음)	1,123명
학교 100교 당 상담교사 (2026)	초 27.9명, 중 44.7명, 고 47.0명	초 30.4명, 중 49.1명, 고 50.4명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 정규 교원만 집계했으며, 기간제 상담교사와 교육지원청 Wee센터 인력은 빠져 있음

○ **전북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는 10년 내내, 우울감은 10년 중 9년 동안 전국보다 높았음**

- 2016~2025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매년 전국보다 0.5~3.8%p 높았음. 우울감 경험률은 같았던 2018년을 빼고 매년 0.7~3.1%p 높았음
- 한 해 차이만 보면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는 해도 있지만, 10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높게 나온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움

○ **2025년에는 수치가 낮아졌지만, 한 해 결과만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름**

- 2025년 전북 우울감 경험률은 26.4%로 전년(30.4%)보다 4.0%p, 스트레스 인지율은 42.6%로 전년(46.1%)보다 3.5%p 낮아졌음. 그러나 전국보다 높은 상태는 그대로이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17개 시도 중 서울과 함께 4~5번째로 높음
- 2020년(코로나19 첫해)에도 크게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진 적이 있으므로, 2026년 결과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함

○ **전국과의 격차는 중학생과 남학생에서 더 크게 나타남**

- 2024년 전북 중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32.7%로 전국(27.9%)보다 4.8%p 높았고, 2016년(25.4%)보다 7.3%p 높아졌음. 고등학생의 격차(0.6%p)보다 훨씬 큼
- 2025년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전국과 비슷하지만, 남학생은 우울감(+1.8%p)과 스트레스(+1.9%p) 모두 전국보다 높음. 다만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 자체는 여학생(50.9%)이 남학생(34.8%)보다 훨씬 높음

○ **전북은 학생 수에 비해 상담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학교 수로 보면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가 여전히 많음**

- 정규 전문상담교사는 10년 동안 4배가 되어 1인당 학생 681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여건이 좋음. 그러나 학교 100교당 상담교사는 초 27.9명, 중 44.7명, 고 47.0명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보다 적음
-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교마다 상담교사를 두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의 학생이 순회 상담이나 Wee센터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임. 상담 인력이 늘었는데도 정신건강 지표가 나아지지 않은 이유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음

9. 학업중단

[표 19]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2016 ~ 2025학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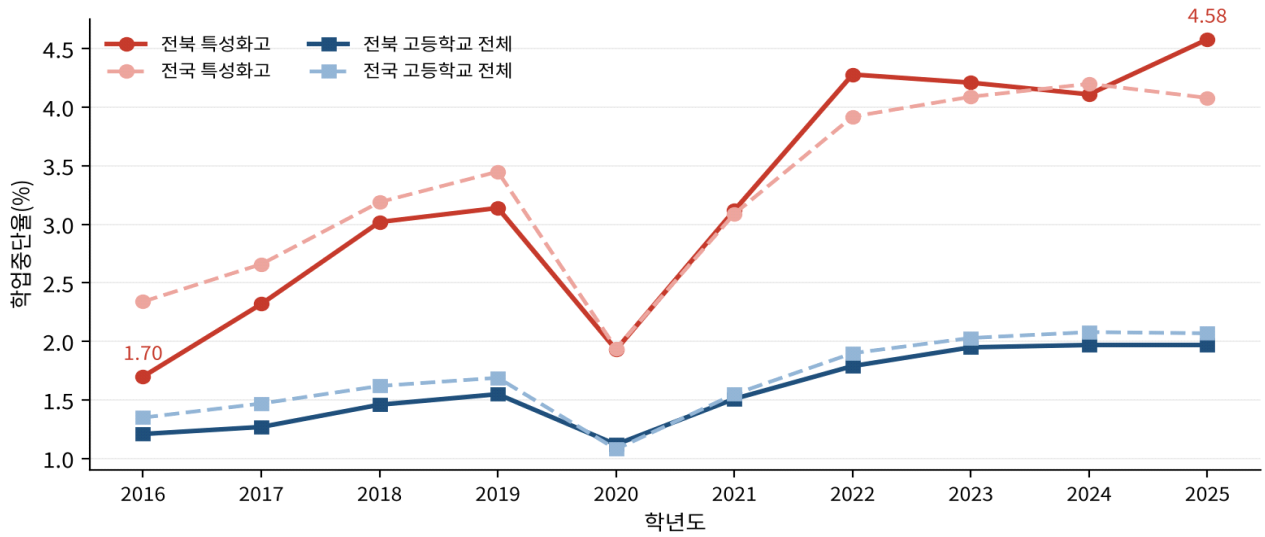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북	고등학교	1.21	1.27	1.46	1.55	1.12	1.51	1.79	1.95	1.97	1.97
	일반고	1.11	1.04	1.11	1.29	0.98	1.25	1.42	1.63	1.55	1.67
	특성화고	1.70	2.32	3.02	3.14	1.93	3.12	4.28	4.21	4.11	4.58
전국	고등학교	1.35	1.47	1.62	1.69	1.08	1.55	1.90	2.03	2.08	2.07
	일반고	1.19	1.26	1.34	1.38	0.95	1.30	1.59	1.70	1.75	1.79
	특성화고	2.34	2.66	3.19	3.45	1.94	3.09	3.92	4.09	4.20	4.08
전북 고교 중단자 (명)		854	851	909	882	593	765	863	939	959	951
	일반고 (명)	568	506	508	541	402	496	545	632	608	572
	특성화고 (명)	223	277	325	291	154	227	279	261	245	279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전국 값 대조는 KESS 테마통계「연도별 학업중단률(1999-2025학년도)」

※ 학업중단율 = 해당 학년도 중단자(다음 해 4월 1일 조사) ÷ 해당 연도 4월 1일 재적 학생 × 100

※ 2020학년도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줄어든 해임

[그림 8] 고등학교 · 특성화고 학업중단율 (전북 vs 전국)



[표 20] 2025학년도 학업중단 사유 (전북)

(단위: 명)

구분	유예	장기결석 정원외 관리	면제	자퇴	퇴학·제적	계
초등학교	28	68	131	-	-	227
중학교	46	127	50	-	-	223
고등학교	0	0	1	943 (99.2%)	7	951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 **전북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전국보다 조금 낮지만, 10년 동안 1.6배로 높아져 전국과 같은 속도로 오르고 있음**

- 전북 고교 학업중단율은 1.21%(2016학년도) → 1.97%(2025학년도)로 0.76%p 높아졌음. 같은 기간 전국은 1.35% → 2.07%로 0.72%p 높아졌음. 학생 수가 31.6% 줄었는데도 중단자는 854명 → 951명으로 오히려 늘었음
- 고교 중단자의 99.2%가 자퇴로, 학생이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는 2020학년도를 빼고 매년 전국보다 낮았지만, 특성화고는 2022학년도부터 전국보다 높아, 전북 고교 전체 학업중단율이 전국보다 낮은 것은 일반고 덕분임

○ **특성화고는 10년 전 전국보다 학업중단율이 낮았으나 2022학년도부터 전국을 앞질렀고, 학생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중단자는 늘었음**

- 전북 특성화고 학업중단율은 2016학년도 1.70%로 전국(2.34%)보다 0.64%p 낮았음. 그러나 2022학년도(4.28%)부터 전국보다 높아졌고, 2025학년도에는 4.58%로 2016학년도의 2.7배가 되었음
- 같은 기간 특성화고 학생은 13,083명 → 6,090명으로 53.5% 줄었는데, 중단자는 223명→279명으로 25.1% 늘었음. 특성화고 학생은 전북 고교생의 12.6%지만 고교 중단자의 29.3%를 차지함

○ **초·중학교에서는 장기결석으로 학적을 정원외로 관리하는 학생이 학업중단의 큰 부분을 차지함**

- 2025학년도 전북 중학교 학업중단자 223명 중 127명(57%)이 장기결석으로 정원외 관리된 학생임. 이 항목을 따로 집계한 2023학년도 81명에서 2024학년도 130명으로 늘었음
-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이므로, 학교 밖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함. 초등학교 중단자의 대부분(131명)은 해외 출국 등에 따른 면제임

○ **학업중단과 정신건강 문제는 서로 관련이 있음**

- 성평등가족부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026.4)에서 학교를 그만둔 이유 1위는 심리·정신적 문제(32.4%)였음. 전북 학생의 정신건강 지표가 전국보다 나쁜 만큼(8번 주제), 학업중단 예방 사업과 정신건강 지원을 연계해 볼 필요가 있음

10. 학교 시설

[표 21] 연도별 전북 학교 건물 노후도와 안전등급

(단위: 동,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전체 건물	5,046	5,037	5,017	5,006	4,989	4,928	4,879	4,813	4,726	4,646	4,550
30년 이상	1,997	2,028	2,064	2,079	2,105	2,145	2,184	2,161	2,289	2,376	-
ㄴ 비율	39.6	40.3	41.1	41.5	42.2	43.5	44.8	44.9	48.4	51.1	-
40년 이상	973	1,040	1,103	1,135	1,142	1,185	1,250	1,310	1,345	1,358	-
ㄴ 비율	19.3	20.6	22.0	22.7	22.9	24.0	25.6	27.2	28.5	29.2	-
C등급 이하	331	978	1,146	1,259	1,151	1,017	1,144	1,266	1,247	1,182	1,096
ㄴ 비율	6.6	19.4	22.8	25.1	23.1	20.6	23.4	26.3	26.4	25.4	24.1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전북교육청 교육데이터 허브「정기안전점검 C등급 이하 학교 건물 현황」

※ 2026년 30년 · 40년 이상 건물의 시도 통계는 2026년 12월 말 공개 예정

[표 22] 2026년 안전등급 비교 (전북 vs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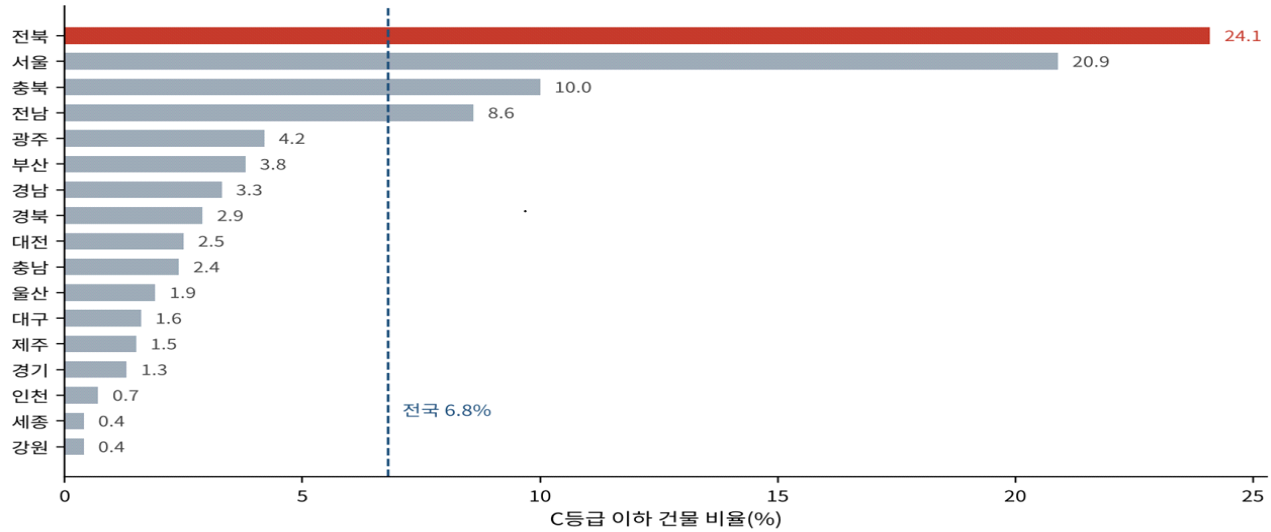
(단위: 동, %)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A등급	961	22,942	494	11,278	181	5,307	286	6,357
B등급	2,493	32,906	1,183	16,365	585	7,652	725	8,889
C등급	1,094	3,968	600	1,993	283	1,099	211	876
D·E등급	2	78	0	28	2	19	0	31
계	4,550	59,894	2,277	29,664	1,051	14,077	1,222	16,153
C등급 이하 비율	24.1	6.8	26.4	6.8	27.1	7.9	17.3	5.6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시도 유초중등 교육통계 「79. 지역별 구조적 안정성 등급 현황」

※ A등급: 문제없음, B등급: 경미한 결함, C등급: 보수 필요, D · E등급: 사용 제한 검토

[그림 9] 시 · 도별 C등급 이하 건물 비율(2026)



[표 23] 전북 시 · 군별 안전등급 비교 (2026)

(단위: 동, %)

시·군	전체 건물	A등급 비율	C등급 이하 건물	C등급 이하 비율 (2025 → 2026)
계	4,550	21.1	1,096	25.4 → 24.1
전주	707	25.2	123	18.8 → 17.4
군산	426	22.3	113	28.6 → 26.5
익산	572	19.9	142	25.4 → 24.8
정읍	433	18.9	102	24.8 → 23.6
남원	369	17.3	103	29.6 → 27.9
김제	321	24.3	63	16.8 → 19.6
완주	291	31.6	61	23.2 → 21.0
진안	185	16.8	52	26.3 → 28.1
무주	162	21.6	34	31.2 → 21.0
장수	159	23.3	29	18.2 → 18.2
임실	155	14.8	54	36.9 → **34.8**
순창	204	21.1	52	25.0 → 25.5
고창	299	13.7	92	32.3 → 30.8
부안	267	18.0	76	31.5 → 28.5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시도 유초중등 교육통계 「79. 지역별 구조적 안정성 등급 현황」

[표 24] 지역 규모별 C등급 이하 비율 (2026)

(단위: 동, %)

지역 규모	전북 건물	전북 C등급 이하	전북 비율	전국 비율	전북 ÷ 전국
중소도시	1,723	322	18.7	4.3	4.4배
읍·면 지역	2,704	722	26.7	7.0	3.8배
도서벽지	123	52	42.3	5.8	7.3배
계	4,550	1,096	24.1	6.8	3.6배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시도 유초중등 교육통계 「79. 지역별 구조적 안정성 등급 현황」

○ **전북 학교 건물의 절반 이상이 지은 지 30년이 넘었고, 40년 넘은 건물은 10년 사이 40% 늘었음**

- 30년 이상 된 건물은 1,997동(2016년) → 2,376동(2025년)으로 늘어, 전체 건물 중 비율이 39.6% → 51.1%로 높아져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음

- 같은 기간 전체 건물은 5,046동→4,646동으로 7.9% 줄었는데, 40년 이상 된 건물은 973동→1,358동으로 39.6% 늘어 10동 중 3동(29.2%)이 됨. 새 건물로 바꾸는 속도보다 건물이 낡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함

○ **2026년 현재 전북은 C등급 이하 건물 비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전국의 3.6배임**

- 2026년 전북 학교 건물의 24.1%(1,096동)가 C등급 이하로 전국(6.8%)의 3.6배이며,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음(2위 서울 20.9%, 3위 충북 10.0%)
- 전북 건물은 전국의 7.6%인데, 전국 C등급 이하 건물 4,046동 가운데 27.1%가 전북에 있음. 반대로 A등급 비율은 21.1%로 전국(38.3%)의 절반 수준임

○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물의 상태가 특히 나쁨**

- 2026년 C등급 이하 비율은 초등학교 26.4%, 중학교 27.1%로 전국(6.8%, 7.9%)의 3.4~3.9배이고, 고등학교는 17.3%로 상대적으로 낮음(전국 5.6%)
- A등급 비율도 중학교가 17.2%로 전국(37.7%)의 절반에 못 미침. 가장 위험한 D등급 2동은 모두 중학교 건물임

○ **노후 건물과 C등급 건물은 군 지역에 몰려 있으며, 임실군이 가장 심각함**

- 2026년 C등급 이하 비율은 임실(34.8%), 고창(30.8%), 부안(28.5%), 진안(28.1%), 남원(27.9%) 순으로 높고, 전주(17.4%)가 가장 낮음
- 2025년과 비교하면 14개 시·군 중 10곳에서 C등급 이하 비율이 낮아졌으나, 김제(16.8%→19.6%), 진안(26.3%→28.1%), 순창(25.0%→25.5%)은 높아졌음

○ **도서벽지 학교 건물은 10동 중 4동이 C등급 이하로, 전국의 7배가 넘음**

- 2026년 전북 도서벽지 학교 건물 123동 중 52동(42.3%)이 C등급 이하로, 전국 도서벽지(5.8%)의 7.3배임
- 읍·면 지역(26.7%)도 전국(7.0%)의 3.8배이고, 중소도시(18.7%)도 전국(4.3%)의 4.4배여서 전북은 어느 지역 규모에서나 전국보다 크게 나쁨. 학생 수가 적어 시설 투자가 뒤로 밀리기 쉬운 도서벽지와 읍·면 지역 학교에 대한 우선 투자 원칙이 필요함

자치현안 정책포커스 제10호

총괄	임 선 영	입법정책담당관
기획검토	형 영 주	자치현안지원팀장
작성	최 정 우	자치현안지원팀
	이 은 빈	자치현안지원팀
	유 형 용	자치현안지원팀
	진 영 휘	자치현안지원팀
	조 승 연	자치현안지원팀

정책포커스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